



#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2 ~ 2013.2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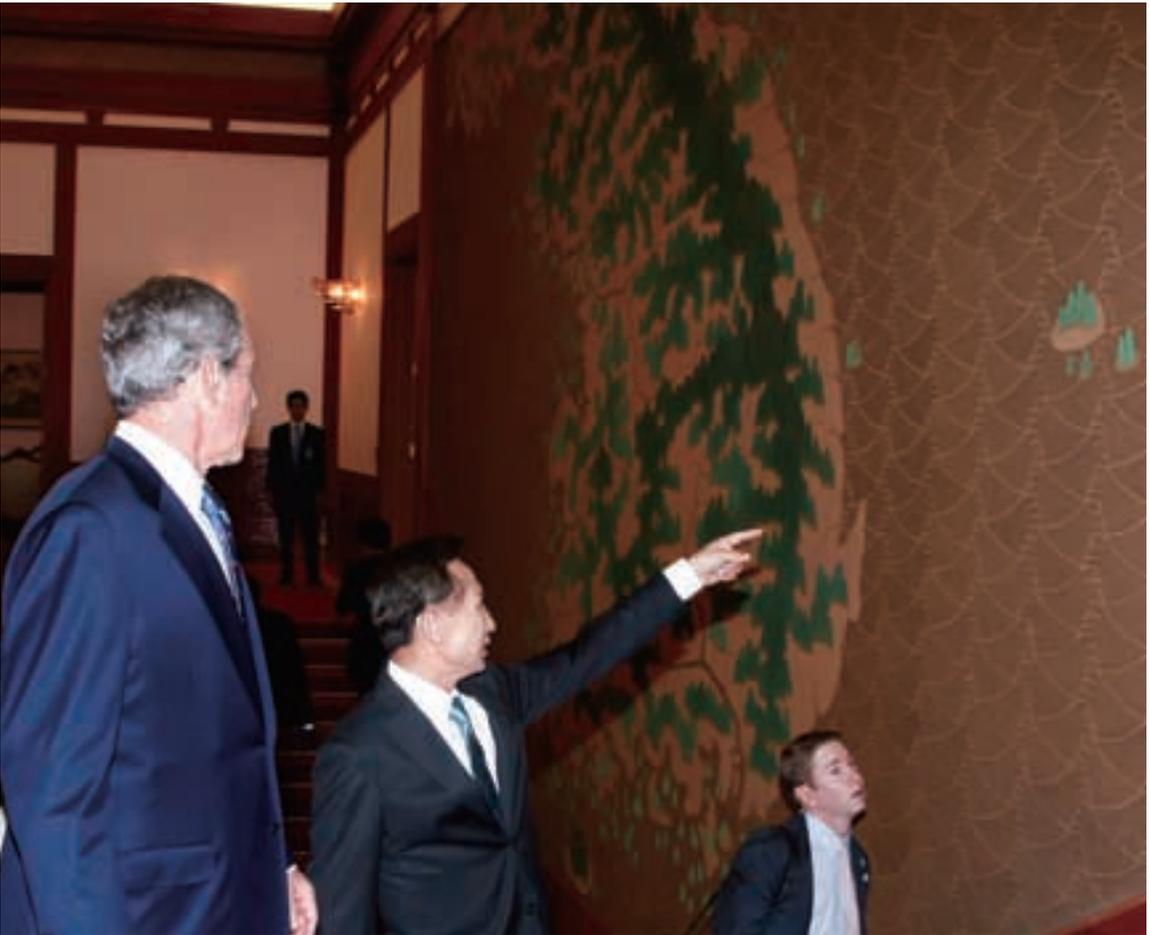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434-01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04



①

① 2008. 04. 19 한·미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②

② 2008. 08. 06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독도 관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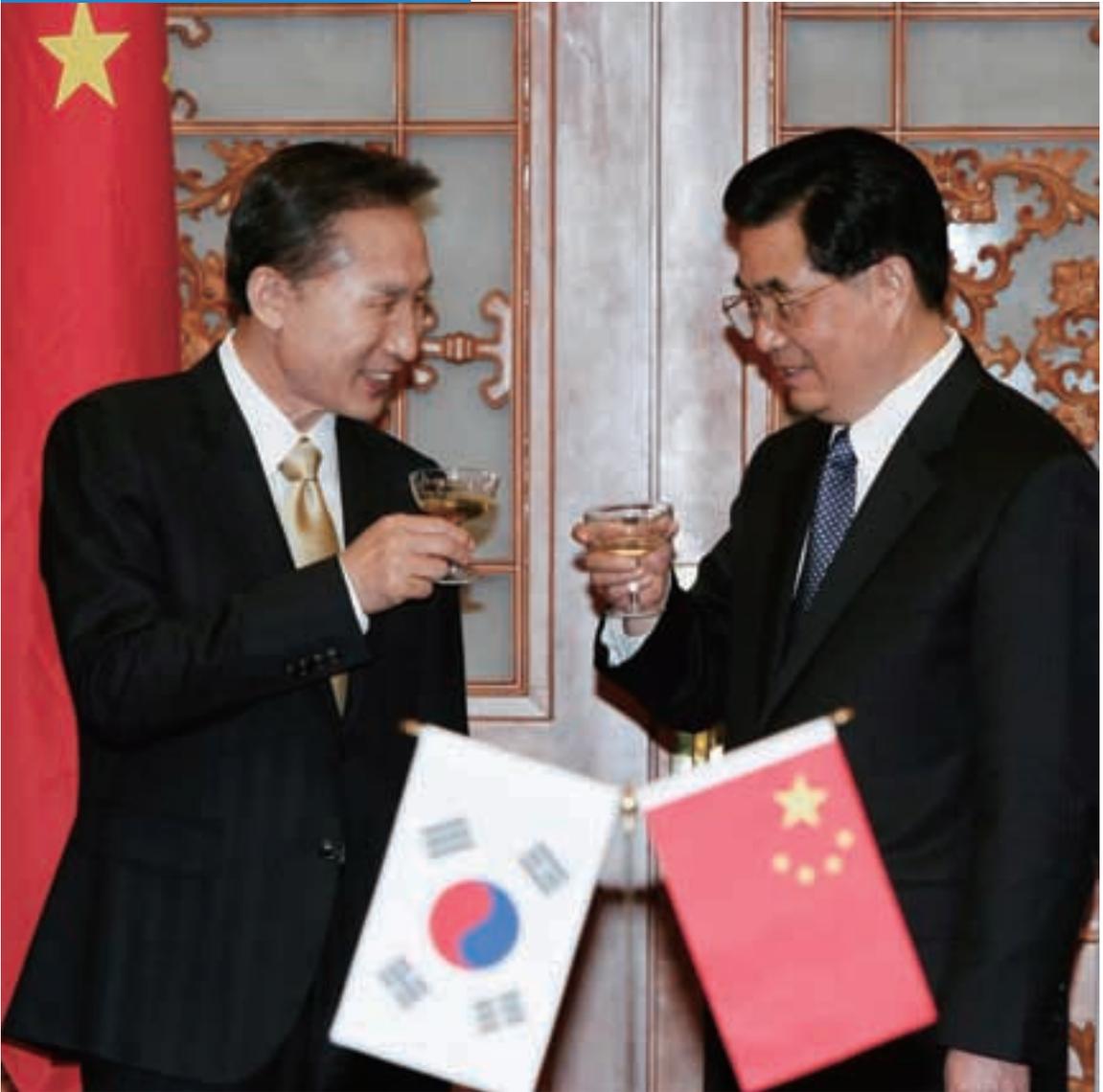
- ①
- ②

① 2009. 11. 19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② 2011. 10. 13 미국 국빈방문(미의회 연설, 워싱턴)



2011. 10. 13 미국 국민방문(국민만찬,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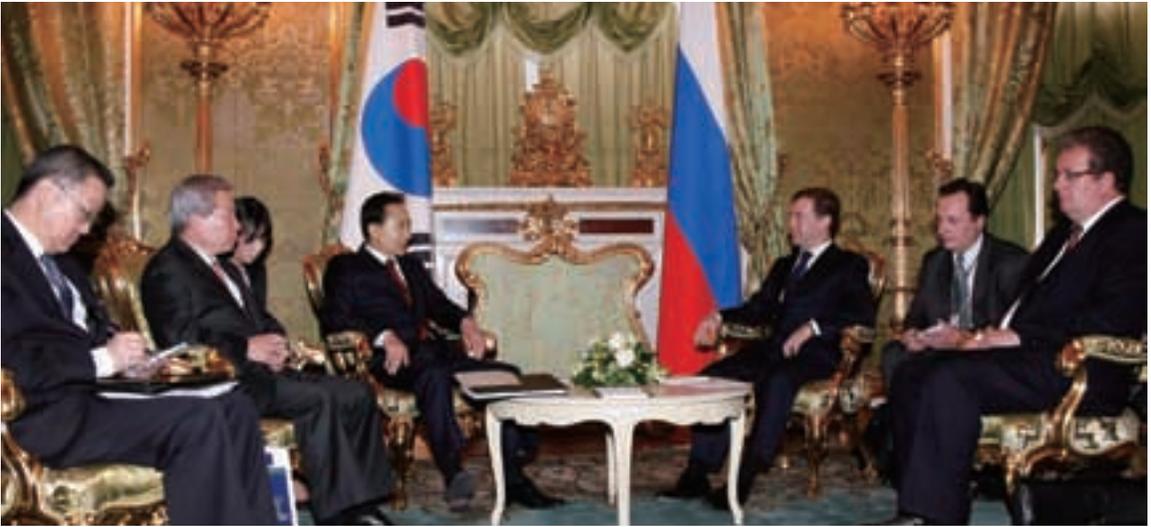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① 2008. 05. 27 중국 국민방문(북경)
- ② 2008. 05. 28 원자바오 중국총리 회담(북경)
- ③ 2008. 05. 30 쓰촨성 지진피해지역 방문



- ①
- ②
- ③

① 2008. 04. 21 일본 방문(도쿄)  
 ② 2010. 05. 29 하토야마 일본 총리 방한  
 ③ 2011. 05. 21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후쿠시마 이재민 피난소 방문)



- ❶ 2008. 09. 29 러시아 공식 방문(모스크바)
- ❷ 2011. 11. 02 한·러 대화 폐막식 참석(상트페테르부르크)
- ❸ 2012. 09. 08 APEC 계기 한·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



①

① 2010. 05. 29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제주)

②

② 2012. 08. 10 독도 방문



- ❶ 2012. 11. 08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아디뿌르나 훈장수여식, 발리)
- ❷ 2010. 01. 25 인도 국민방문(뉴델리)
- ❸ 2009. 10. 21 베트남 국민방문(하노이)



- 1
- 2
- 3
- 4

- 1 2009. 03. 05 호주 방문(캠버라)
- 2 2009. 05. 12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아스타나)
- 3 2009. 05. 10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타슈켄트)
- 4 2009. 06. 01 한·ASEAN 특별정상회의(제주)





- |   |   |
|---|---|
| ① | ② |
| ③ |   |

- ① 2012. 05. 15 미얀마 국민방문(아웅산 국립묘지 참배, 양곤)
- ② 2012. 05. 15 미얀마 국민방문(아웅산 수처여사 면담, 양곤)
- ③ 2012. 05. 15 미얀마 국민방문(네피도)



- ①
- ②
- ③

① 2010. 10. 29 제13차 ASEAN+3 정상회의 참석(베트남 하노이)  
 ② 2012. 11. 10 태국 공식방문(방콕)  
 ③ 2009. 10. 25 제4차 EAS정상회의 참석(태국 방콕)



- ① 2010. 10. 06 한·EU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벨기에 브뤼셀)
- ② 2010. 11. 11 메르켈 독일 총리 방한
- ③ 2011. 05. 13 프랑스 공식방문(파리)



- 1
- 2

1 2012. 02. 05 터키 국민방문(총리 주최 오찬, 이스탄불)  
2 2012. 09. 09 그린란드 방문(일루리사트 기후변화 현장 방문)



- |   |   |
|---|---|
| ① | ② |
| ③ |   |

- ① 2011. 05. 11 덴마크 국빈방문(국빈만찬, 코펜하겐)
- ② 2010. 10. 04 제8차 ASEM정상회의 참석(벨기에 브뤼셀)
- ③ 2012. 09. 11 노르웨이 방문(오슬로대학 연설, 오슬로)



- ①
- ②
- ③

① 2011. 03. 13 UAE 공식방문(아부다비)  
② 2010. 07. 01 멕시코 국민방문(멕시코시티)  
③ 2011. 07. 07 DR콩고 국민방문(킨샤샤)



- 1
- 2
- 3
- 4
- 5
- 6

- ❶ 2012. 02. 08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나드리아 축제 개막식 참석, 리야드)
- ❷ 2012. 06. 23 콜롬비아 국빈방문(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보고타)
- ❸ 2011. 07. 10 에티오피아 국빈방문(가레 아레나 마을 봉사활동)
- ❹ 2008. 11. 21 페루 국빈방문(리마)
- ❺ 2012. 06. 22 칠레 공식 방문(산티아고)



- 1
- 2 3

- ❶ 2008. 04. 16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면담(뉴욕)
- ❷ 2008. 11. 15 제1차 G20 정상회의 참석(워싱턴)
- ❸ 2008. 11. 23 APEC 정상회의 참석(페루 리마)



# THE SEOUL SUMMIT

Shared Growth Beyond Crisis





1 2 3 2010. 11. 12 서울 G20 정상회의



- |   |   |
|---|---|
| 1 | 2 |
| 3 |   |

- ❶ 2009. 07. 10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이탈리아 라퀼라)
- ❷ 2009. 09. 23 유엔총회 기초연설(뉴욕)
- ❸ 2009. 12. 18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덴마크 코펜하겐)



- |   |   |
|---|---|
| 1 |   |
| 2 | 3 |
| 4 |   |

- 1 2012. 06. 20 GGI 국제기구화 서명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2 2010. 12. 09 발리 민주주의포럼 공동주제(인도네시아 발리)
- 3 2011. 03. 12 UAE 아크부대 방문
- 4 2012. 06. 20 Rio+20 정상회의의 기조연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①

① 2011. 11. 30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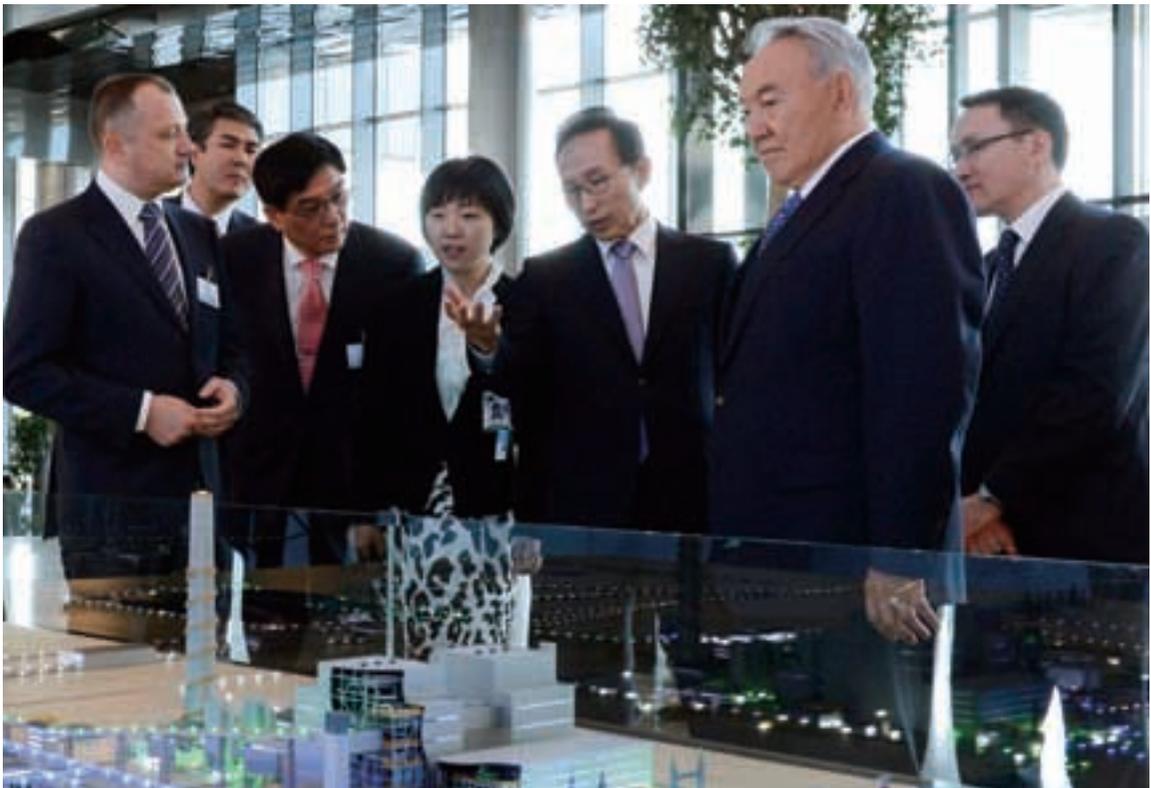
②

② 2009. 05. 07 통합해외봉사단(WFK, World Friends Korea) 통합발대식



- ①
- ②

① 2010. 10. 06 한·EU FTA 서명 후 기념촬영(벨기에 브뤼셀)  
② 2012. 06. 25 한·콜롬비아 FTA 타결 서명식(콜롬비아 보고타)



①

① 2011. 03. 14 UAE 원전부지 기공식(UAE 바라카)

②

② 2012. 09. 13 발하쉬 화력발전소 화상 착공식(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1
- 2

1 2011. 07. 06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남아공 더반)  
2 2011. 07. 06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남아공 더반)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하금열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간사위원

이동우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

- 김대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 이달곤 대통령실 정무수석
- 정진영 대통령실 민정수석
- 박인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 노연홍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 박범훈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 최금락 대통령실 홍보수석
- 안광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 장다사로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 김명식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 유명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 이중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 김영수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제순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정길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간사위원

박형준 前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관 前 대통령실 홍보수석

-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
- 곽승준 前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김태호 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 류우익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 박재완 前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백용호 前 대통령실 정책실장
-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장관
- 윤진식 前 대통령실 정책실장
- 임태희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

※ 가나다순

편찬실무

(대통령실)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 김종열 선임행정관
- 김도형 행정관
- 윤정식 행정관

- 고제신 행정관
- 맹석인 행정관
- 이경만 행정관

- 김 건 행정관
- 박태현 행정관
- 조인철 행정관

## ∞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

###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2권 경제 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 3권 경제 ②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 5권 통일·안보 원칙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회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8권 고용·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봉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어록·인사

집필·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운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급락 홍보수석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석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02-3704-9827)  
편집·집필 협력 (주)사사연  
인쇄·제본 삼화인쇄주식회사

##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미,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기름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군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아리'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기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솨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정책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로도 펴낼 예정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백서의 운문·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 세계외교의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호흡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추구하기 위한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상을 제시하고 지난 5년간 이의 실현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안보위협, 다양화와 글로벌화, 국익과 가치의 동시추구 현상,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력이 신장되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익의 글로벌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익 창출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국제무대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배경으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세계와의 공존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외교 비전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곧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지구적 관심사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구상 실현을 위해 이명박정부는 우선, 활발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통적인 우호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미국의 신뢰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미국과는 동맹미래비전 채택, 전략권 전환시기 조정, 미사일 지침 개정, 한·미 FTA 발효 등을 통해 기존 정치·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문화 및 범세계적 사안 등으로 동맹차원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다원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켰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을 통해 실질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하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러시아와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설정하고 실질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아시아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2009년부터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하고,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남아시아와 중앙아를 포괄하는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EU와는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FTA 출범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나아가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들과 에너지·자원 및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개발협력, 핵안보와 같은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 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경제 분야에서, 2012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안보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레바논, 아이티 등 총9개 임무단에 600여 명 이상을 파견하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는 기여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2011년 개발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부산 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적극 추

---

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인 EU, 미국, ASEAN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자 세계 GDP의 약 60%,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 중앙아, 중남미 등 세계 각지의 에너지·자원 부국과는 에너지·자원 외교를 펼침으로써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주개발률을 3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격을 좌우하고 문화의 힘이 국가브랜드의 품격을 결정하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적극적 문화외교를 전개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한류의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프랑스 외규장각도서 반환 등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서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외교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FTA 확대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백서의 첫번째 권인 본 책이 이명박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5년간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외교안보수석 천 영 우





## 04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권두 확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051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052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2. 아시아 시대의 도래	
3. 민주주의·인권의 확산과 딜레마	
제2장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056
제1절 글로벌 코리아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 천명	056
제2절 한국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058
제3절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059
제4절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역량 구축 외교 추진	061
제3장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064
제2편 한·미 전략동맹 강화	067
제1장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068
제1절 한·미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 및 방향	071
제2절 동맹 미래비전 채택	072
1. 채택 경과	
2. 주요 내용	
3. 채택 의의	



<b>제2장</b>	<b>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b>	075
제1절	한·미 간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	077
제2절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가는 길	080
	1.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관계 조기 구축	
	2.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관계 격상	
<b>제3장</b>	<b>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강화</b>	086
제1절	전략권 전환시기 조정 및 동맹현안 점검·관리 체계 확립	087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088
	1.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및 방위비 분담	
	2. 확장역지 제도화	
	3. 미사일지침 개정	
제3절	외교·국방 협의 시스템 체계화	092
제4절	미국 의회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협력 강화	093
제5절	감동으로 다가간 감사의 마음 :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096

### 제3편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099

<b>제1장</b>	<b>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b>	100
제1절	이명박정부의 대중 정책 배경	100
제2절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101
제3절	한·중 정상(급) 교류	103
	1. 한·중 정상 간 교류	
	2. 한·중 정상급 간 교류	
	3. 고위인사 교류	
제4절	한·중관계 발전 현황	109
	1. 정치·안보 협력 확대	
	2. 경제·통상 협력 심화	
	3.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4.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b>제2장</b>	<b>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b>	114
	제1절 배경	114
	제2절 한·일 정상외교	116
	1. 자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8~2009):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과 '한·일 신시대' 개척	
	2. 민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9~2012):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추구	
	제3절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	121
	1. 칸 총리 담화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3. 조선왕조도서 반환 실현	
	제4절 독도 영토주권 수호	124
	제5절 경제협력·인적교류 증진	126
	제6절 동일본 대지진 계기 협력	128
	제7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129
	1. 한·일 역사공동연구	
	2.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b>제3장</b>	<b>신실크로드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b>	131
	제1절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강화	133
	1.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러시아	
	2.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제2절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136
	1. 교역·투자 확대	
	2. 신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한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협력 강화	
	3.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추구	
	제3절 문화·학술·인적 교류 확대	142



<b>제4편</b>	<b>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강화</b>	145
<b>제1장</b>	<b>신아시아 외교 추진</b>	146
제1절	아시아를 품은 글로벌 외교	146
제2절	한·일·중 협력 강화 및 제도화	149
	1.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2.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제3절	한·ASEAN 협력관계 심화	153
	1. 한·ASEAN 관계: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2. ASEAN+3 / EAS: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연출자로 각인	
제4절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162
	1.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방위적 강화	
	2.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3.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강화 기반 마련	
	4. 기타 동남아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제5절	서남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외교 강화	175
	1.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2. 호주·뉴질랜드 등 대우방국 외교 내실화	
	3.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안정화와 재건 지원	
	4. 여타 서남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	
	5. 태평양도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제6절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확대	182
	1. 카자흐스탄	
	2.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4. 키르기즈 공화국 및 타지키스탄	
<b>제2장</b>	<b>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b>	192
제1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192
	1. 한·EU 협력의 방향 제시	
	2.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3. EU의 북한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 강화	
	4. 한·EU FTA 발효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5. 글로벌 이슈에서 EU와 파트너십 확대	



제2절 주요 유럽국들과 협력체계 구축	200
1. 유럽 지역 핵심국들과의 가치협력 외교를 통한 우리 국가의 위상 제고	
2. 신 북방 외교: 'New Frontier'를 향하여	
3.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4.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 터키와의 유대 강화	
5. 중·동부 유럽의 전략 거점 폴란드와 협력 관계 확대	
<b>제3장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b>	<b>221</b>
제1절 중동·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221
1. 중동·아프리카의 부상	
2. 중동·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3.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제2절 중남미 외교	239
1. 추진 배경	
2.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	
3. 경제·통상·자원협력 강화	
4. 지역협력 외교	
<b>제4장 지역 협력 외교</b>	<b>253</b>
제1절 APEC	253
1. 제16차 APEC 정상회의(2008.11.22~23, 페루 리마)	
2. 제17차 APEC 정상회의(2009.11.14~15, 싱가포르)	
3. 제18차 APEC 정상회의(2010.11.13~14, 일본 요코하마)	
4. 제19차 APEC 정상회의(2011.11.12~13, 미국 호놀룰루)	
5. 제20차 APEC 정상회의 (2012.9.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2절 ASEM	262
1. 제7차 ASEM 정상회의(2008.10.23~25, 중국 베이징)	
2. 제8차 ASEM 정상회의(2010.10.4~5, 벨기에 브뤼셀)	
3. 제9차 ASEM 정상회의(2012.11.5~6, 라오스 비엔티엔)	



<b>제5편</b>	<b>글로벌 리더십 구현</b>	267
<b>제1장</b>	<b>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b>	270
<b>제2장</b>	<b>G20 정상회의 개최</b>	274
제1절	G20 정상회의 출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275
1.	G20 정상회의 출범 및 한국의 참여	
2.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2008년 11월)	
3.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2009년 4월)	
4.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9월)	
5.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2010년 6월)	
제2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282
1.	정상회의 개최 준비	
2.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과	
제3절	서울정상회의 이후(제6차~7차 정상회의)	290
1.	제6차 깐느 정상회의(2011년 11월)	
2.	제7차 멕시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2012년 6월)	
<b>제3장</b>	<b>핵안보정상회의 개최</b>	293
제1절	개최 배경: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294
제2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과정	296
제3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98
제4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및 우리 기여	303
<b>제4장</b>	<b>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b>	312
제1절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312
1.	레바논 동명부대	
2.	아이티 단비부대	
3.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4.	유엔 임무단 옵저버 및 참모장교 파견	
제2절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참여	320
1.	아프가니스탄 PRT 및 오쉬노부대	
2.	청해부대	
3.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b>제5장</b>	<b>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b>	329
	제1절 국제인권메커니즘 강화에 대한 기여	330
	제2절 북한인권 및 세계인권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330
	제3절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	332
	제4절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335
<b>제6장</b>	<b>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b>	337

## 제6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341

<b>제1장</b>	<b>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b>	342
<b>제2장</b>	<b>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b>	345
	제1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345
	제2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5개년 계획 수립	346
	제3절 정책 이행체제의 선진화 및 공고화	348
<b>제3장</b>	<b>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b>	349
	제1절 양자 개발협력 전략적 체계적 추진	349
	1. 지역별 ODA 지원 전략	
	2.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범정부 통합 지원전략 수립	
	3. 한국형 ODA 모델의 구축	
	제2절 UNDP 등 개발기구와의 협력 강화	354
	제3절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	356
	1.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적 지원 원칙의 준수	
	2. 긴급구호 등 인도지원 활동의 강화	
	제4절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358
<b>제4장</b>	<b>핵심성과</b>	359
	제1절 선진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359
	제2절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개발의제의 확산	361
	1. G20 개발의제의 대두 및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2. G20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기여	
	제3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한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364
	1. 부산총회 개최 배경	
	2. 부산총회의 성과	
	3.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역할	



제4절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369
1.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 공약의 성실한 이행	
2.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	
3. 시민사회의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파견	

## 제7편 경제·통상 실리외교 강화 375

제1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376
제1절 한·미 FTA 발효	380
1. 한·미 FTA 추진 경과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3. 한·미 FTA의 발효 후 효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4. 한·미 FTA의 향후 과제	
제2절 한·EU FTA 발효	387
1. 한·EU FTA 추진 경과	
2. 한·EU FTA의 주요내용	
3. 한·EU FTA 이행	
4. 한·EU FTA 발효 후 효과	
제3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	393
1. 한·중 FTA 협상 진행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3.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4.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 선언	
제4절 신흥경제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402
1. 한·인도 CEPA 발효	
2. 한·페루 FTA 발효	
3.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4.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5. 한·콜롬비아 FTA 협정 가서명	
6.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진행	
7. 한·베트남 FTA 협상 진행	
8. 기타 FTA 협상 진행 상황	



<b>제2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b>	416
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416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여건 및 국제에너지·자원 시장 현황	
2.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3.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자원 외교 성과	
제2절 정상급 에너지·협력 외교의 주요 성과	423
1. 중동·아프리카 지역	
2.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3. 중남미 지역	
4. 아시아·대양주 지역	
5. 북미 및 유럽 지역	

## **제8편 선진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 및 외교역량 강화** 433

<b>제1장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b>	434
제1절 한류 확산 및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강화	434
1. 지속적인 한류 확산 지원	
2. 한식세계화	
3.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4. 외교관계 수립기념 문화행사	
제2절 UNESCO 외교 강화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441
1. 대UNESCO 외교 강화	
2. UNESCO 유산 등재 확대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촉진	
3. 국외 문화재 환수 노력 강화	
제3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외교 강화	447
<b>제2장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b>	450
제1절 재외국민 보호 강화	450
1.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2.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제2절 해외진출 국민의 편익 증진	458
1. 영사서비스 강화	
2.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제3절 재외선거제도 실시	460
1. 추진 배경	
2. 추진 성과	
제4절 호혜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462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b>제3장 국립외교원 출범</b>	466
제1절 배경 및 추진과정	466
제2절 국립외교원의 역할과 기능	468
<b>제9편 향후 과제</b>	471
제1장 국제질서 전망	472
제2장 향후 과제	475
1. 안보·통일외교	
2. 안정·평화외교	
3. 번영·기여외교	
4. 민·관 협력 강화	
5. 맺음말	
<b>부록</b>	483
[부록 1] 정책일지	484
[부록 2] 집필참여자	488



# 제1편

# 총론

-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 제2장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 제3장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 제1장

#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이명박정부가 일한 2008년부터의 5년 기간은 세계정치 지형에 새롭고도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초래된 시기였다.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금융·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 질서는 물론 정치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가 촉발되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세계 핵 비확산 레짐(regime)을 위협하며 중동과 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이라크 전쟁(2005) 이후 국가들 간의 대규모 전쟁은 잦아들었으나, 테러조직들의 테러행위는 날로 빈번하여지고 잔인하여져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및 이란 핵문제의 긴장 고조와 함께 세계 안보질서의 불예측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체에너지 시장의 확보경쟁이 각국의 주요 안보과제로 등장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몇 년 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해상수송로의 확보 경쟁, 영토 갈등, 과거사 갈등은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 차원의 경제발전과 안보질서의 안정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년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의 취약성과 불예측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 과정에 북한이 일으킨 각종 대남 군사도발과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북한의 불법 및 돌발 행동에 대한 제재와 대처방안을 놓고 각국들은 저마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명박정부 시기에 일어난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몇 가지 이슈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던졌는지 평가하여 보도록 한다.

## 1.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극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세계 금융·재정위기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여 오던 세계경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 정치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 자유진영을 제1세계, 공산진영을 제2세계, 비동맹권을 제3세계로 부르던 세계의 구분 기준도 더욱 와해되었다. 미국과 유럽 세력으로 대표되는 서구 선진 국가들이 세계경제 위기의 발원지로 지목됨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래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창함에 있어서 제1세계의 권위와 정당성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또한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공산권 세력의 대표주자격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정치이념과 제도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중심과 변방을 나누던 시대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또한 방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과거 제3세계로 일컬어졌던 나라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G7 또는 G8으로 일컬어지던 선진 경제권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 질서의 최고 협의체는 G20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G20에 새로 합류한 신흥 경제권에 BRICs,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가 복잡하여지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G8의 문제해결 능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제경제 질서의 다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안보 영역에서도 일어났다. 소수의 강대국이 세계 안보질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따르기만 하던 양상을 벗어나, 다수의 국가가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는 형태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동과 동아시아와 같은 첨예한 안보긴장과 역내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은 세계 최강국 미국 외에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 2. 아시아 시대의 도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는 다극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급속한 부상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각국 경제성장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2030년경에는 아시아의 경제규모가 G7을 넘어서고 G20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의 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대표 주자격인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세계 총생산량(GDP)의 1.6%에 불과하였던 중국 경제의 비중은 20년 만에 9.4%까지 높아졌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현재 미국 총생산량(GDP)의 40% 남짓한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경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새로운 아시아의 등장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의 강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질서를 현상유지(status quo) 차원에서 관리하던 과거의 자세를 탈피하여, 항공모함·최신예 전투기·미사일·인공위성 정찰 능력의 강화를 위한 예산과 역량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군사력의 대외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및 한국과 과거사 문제 및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을 경우, 미·중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계적인 미군 철군계획을 확정하고 그간의 중동 우선 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귀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외교를 강화하고 영향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안보질서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협의체에서의 영향력 경쟁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여 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할 확대를, 중국은 자신이 주요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ASEAN+3의 역할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미·중 양국이 각기 상대방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포괄적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시장 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여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 3. 민주주의 · 인권의 확산과 딜레마

20세기의 막바지에 반세기 가까이 세계질서를 양분하였던 냉전구도가 종식되자 많은 사람들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이념대립으로 점철된 역사가 종언을 고한 만큼 이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장 거대한 공산국가였던 소련이 1991년 12월 31일 해체되면서 12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 떨어져 나옴으로써(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2008년 조지아의 회원탈퇴로 현재는 10개국,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 후 준회원국 지위 유지) 공산권 세력의 약화가 본격화되었고, 동유럽의 대다수 국가들도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 지위로부터 탈피하면서 민주화와 시장경제화의 대열에 빠르게 합류하였다.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동아시아에도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어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정치개혁과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나아가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민혁명으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은 2011년 들어 이집트·리비아·시리아 등으로 급속히 번져 나갔으며, 이들 나라의 시민들이 기존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중동은 물론 세계 정치질서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다.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이들 나라에서의 시민운동은 세계화·정보화로 인하여 전 세계의 생활권이 통합되어 가는 가운데 실시간에 걸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현상이지만, 당면한 국제질서에 여러 도전요인과 과제를 자아내고 있다. 우선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이 자칫 이러한 흐름이 자국에 영향을 미쳐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우리로서는 북한의 신 지도부가 주민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면서 퇴행적인 대외정책을 펼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국들과 중국 간의 이견 역시 국제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이식된다고 하여서 국민들의 의식과 정치적 관행, 그리고 경제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진통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그 과정에 국가 간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 제2장

#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 제1절 글로벌 코리아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 천명

국제사회에 널리 각인된 이명박정부의 Global Korea(성숙한 세계국가) 비전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 기여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G20정상회의(2010년),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세계개발원조총회(2011년)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참가국 간에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던 현안에 대하여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인 행보는 그야말로 새로운 Global Korea의 출현을 알리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지구촌 미래의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녹색성장(Green Growth) 비전을 국가의 중추적 발전 모토로 천명하였고(2008년), 글로벌 차원에서 이의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치하는 한편(2010년), 세계 각국에게 녹색성장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신설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다(2012년).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에 한국이 뛰어 들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변방에 머물면서 선진국들이 짜 놓은 규범과 규칙의 틀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국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리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중(2008.2.25)



제사회가 당면한 안보 갈등,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는데 있어 핵물질의 감축과 안전한 관리, 자유무역의 확대와 보호무역 철폐 등 모두가 공감하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정한 선진국은 과거처럼 물리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걸쳐서도 풍부하고 다양한 역동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매력과 설득력을 한껏 확산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국가이익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國格)과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뜻한다.

## 제2절 한국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는 상호의존의 취약성을 내포한다. 어느 한 국가에 의하여 촉발된 위기가 해당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의 위기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적시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이내 뒤처지고 만다. 더욱이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외 안보·경제 환경에 크게 영향 받는 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이명박정부의 5년 동안 한국이 확장한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위기의 혹독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기존의 ASEAN 10개국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하여 미국, EU 27개국, 인도,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완성시킴으로써 47개국에 걸친 전방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협상 중인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협정까지 실현될 경우 세계 총생산(GDP)의 80% 경제권에 걸친 자유무역지대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기조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G20 국가들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소말리아 해역 등에 파병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국제 수요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인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염두에 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향점은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하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의 경우 지난 5년 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의 협력관계가 특히 강화되었는데, 한국으로서 제2의 중동 진출 붐을 맞이하고 있다. 2009년 12월 400억 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발전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첫 가동한지 30년 만에 원전을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자원이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로서는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FTA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61%가 우리 경제 영토가 된 셈입니다. 한때 세계 번방에 위치한 '은둔의 나라' 한국이

한 세기 만에 세계적인 통상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7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1.10.17)



해외에 수출하는 재고를 이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도시 및 인프라 구축·국방협력 등을 강화하였으며, 카타르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IT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를 확충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들과의 각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들 나라들과의 경제 및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켰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 10개국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과의 협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 제3절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을 마주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이들 이웃 나라들과 어떠한 외교를 펴야 하는가의 문제는 곧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그만큼 이들 주변국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는 일차적 과제에 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으며, 한미 동맹은 이러한 안보목표를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다. 이명박정부의 한미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대한 미국과의 확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에 걸쳐 핵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리즘 근절, 평화정착과 경제재건, 인도적 지원, 불법행위 차단 등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 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공조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였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완성시킴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제반 분야에 걸친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정부 동안 구축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역시 양국 간 협력을 크게 심화시켰다. 이미 제1의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중국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는 한편 군사대화·전략대화·문화교류·인적교류를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표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여러 번, 그리고 긴밀하게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함으로써 북한문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으며, 장래 한중관계의 비전에 대하여도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는 한미관계의 발전과 강화가 한중관계의 발전과 상충되지 않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구축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한·중, 한·일, 한·러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래도록 논의되어 오다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매년 지속하는 것으로 정례화 시키면서 그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상호 반목과 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 경제구조의 차이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던 한·중·일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설득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활성화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역내 제반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해법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에 3국이 함께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체결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조치는 ASEAN 10개국과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통화스왑 조치와 연계되어 더욱 강력 한 금융대응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한·중·일 협력관계의 정착, ASEAN과의 협력 강화, 호주·뉴질랜드와의 관계 강화, 중앙아시아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주창한 신아시아 외교의 외연과 깊이가 확대되었다.

이상 기술한 대외관계의 성과들은 아마도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들의 공식적인 외교활동에 더하여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기능이 극대화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국가 현안일수록 최고 수뇌부 차원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상이 상대방 국가의 정상들과 얼마나 긴밀한 신뢰관계를 맺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연이어 상대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 맺



우리 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 협력 의지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에게 필요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 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2009.11.4)



은 최고 수준의 신뢰관계는 한미 양국 간 민감하고 어려운 현안을 푸는 데 있어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곤 하였다. 미국지명위원회(U.S. Board on Geographic Names)의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의 연기 결정, 한미 FTA의 타결,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등 중요한 결정들의 이면에는 하나같이 한미 정상들 간의 신뢰와 교감이 뒷받침되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긴밀한 친분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솔직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국가 정상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각국이 표방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제4절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역량 구축 외교 추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의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펴 왔다. 북한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핵무기의 추가적 보유와 핵물질·핵기술의 확산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이며, 둘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과 신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이다.

북한이 2009년 4월 5일과 2012년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이러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신속하게 나왔으며(각각 2009.4.13, 2012.4.16),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하여는 기존의 UN안보리결

의안 1718호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북제재안인 UN안보리결의안 1874호가 도출되었다(2009.6.12).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발발 즉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전면적 참여를 선언하였다. PSI는 핵무기 및 핵물질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하여 2003년 결속된 국제공조체제로, 노무현정부 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정식 참여를 계속 미뤘다가 2006년에 이은 2009년의 잇따른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비로소 95번째 나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는 이명박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2010.5.24)에 이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UN안보리 의장성명이 도출되었다(2010.7.9).

이렇듯 북한이 핵무기와 이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외교적·경제적 조치를 주도하여 왔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린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하여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조치들을 이끌어내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과 경제 제재 조치를 꺼려하여 온 중국마저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이명박정부 및 UN과 긴밀하게 공조하였다.

그간의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북한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노력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감대와 공조 아래 추진되었다. 대북 경제지원이 한창이던 기간 중에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는가 하면(1999.6.15, 2002.6.29), 첫 핵실험(2006.10.9) 및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8.31, 2006.7.5)를 강행하는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수위를 오히려 높였다. 또한 북한에 지원한 현금·쌀·비료 등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쓰이지 않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남과 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계획과 구체적으로 맞물리는 포괄적 타협안을 제시하였다(그랜드 바겐).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고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 도발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을 계기로 우리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고(적극적 억지전략),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는 확고하게 대응하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 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북한이 기존 태도를 고수한 채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아가던 남북관계의 비정상적 고리를 끊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북한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던 주민들이 점차 장마당을 통하여 식량과 물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일반 주민은 물론 당국 차원에까지 남한사회를 동경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동조하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드러나지 않은 변화는 중동에서 시작되어 베트남과 미얀마에까지 불고 있는 세계적인 개방과 변화의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북한의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1983년)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여 불법 무기거래 단절·민주화와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미얀마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었으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 문제를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현상관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대신, 세계 역사의 조류에 부합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대북정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을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진출시킴으로써 다음 정부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개진할 수 있는 지렛대를 구축하였다.

## 제3장

#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반세기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나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달성한 일련의 성취와 성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사상 일곱 번째로 달성한 쾌거이다. 또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세계 외교의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간 연례 정상회의 체제를 제안하고 실현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도약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의제의 설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안보, 경제, 개발 이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은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상승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저마다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출경쟁력, 노동생산성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줄곧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온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갖가지 도전요인도 많다. 남북한 간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안보의 취약성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념 갈등, 정치적 분열상, 경제적 양극화, 대외경제 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이 그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의 튼튼한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는 미래 세계질서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권의 항배에 관계없이 국가의 발전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나가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돌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제반여건을 축적하여 나가는 외교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는 중요 국가전략에 대한 일관성과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혁신이 어우러짐으로써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편

# 한·미 전략동맹 강화

- 제1장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 제2장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 제3장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강화

## 제1장

#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한·미 동맹은 지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화·지식정보화·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문제의 부각,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변화에 수반되는 국제질서의 변동, 인간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 등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복합적 도전에 대처하여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보다 가시화되어나가면서 한·미 동맹을 비롯, 우리의 외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였던 시기로, 이명박정부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하여 5대 국정지표중 하나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21세기 창조적 한·미 동맹'을 제시하였다.

이명박정부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한·미 동맹'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안보·군사전략 변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적인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1세기 도전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무엇에 대한 동맹인지')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 비전('무엇을 위한 동맹인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출범 직후부터 한·미관계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 및 북한·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등을 통한 상호 공동번영 추구,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미 동맹의 건설적 역할과 입지 제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 공동이익의 확대·발전으로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동맹의 효용성과 발전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을 동맹 미래 비전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갔으며, 미국의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8년 정부 출범 당시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였던 점을 감안, 한·미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회복하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 격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신설 등을 조속히 완결지어 동맹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2008년 말 미 대선 및 신행정부 출범과정에서부터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한 바,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나갔다.

이러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대북 정책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바, 한·미 양국은 2009년 중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하여 찰떡공조로 평가받은 긴밀한 조율을 통하여 대처하는 한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및 추가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과 김정일 사망 및 3대 세습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여 나갔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여나가는 노력도 지속 경주하여 나간 바, 양국 간의 제고된 신뢰와 공조를 기반으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 6월 양국 정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시 기존 2012년 4월 17일로 되어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전략권 전환 시기에 맞춘 포괄적인 동맹현안 점검 및 관리 계획(전략동맹 2015)을 채택·이행하여나감으로써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전략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억지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한·미 간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여타 수단으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랜 현안이던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미 간 4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2012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서명된 한·미 FTA의 발효를 실현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1차 회의부터 참석하고,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함으로써 국제경제·안보·개발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입지를 명실상부하게 신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명박정부의 전략적인 대미외교의 추진의 결과로 구축된 현재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로 미측으로부터도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11회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두터운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시의 적절하게 조율하여 온 정상외교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 한·미 관계 발전 방향 제시

-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공약
  - 한국 외교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원칙의 하나로 '21세기 창조적 한미 동맹발전'을 제시
  -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합니다."
- 2008년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중 한미동맹 관련 부분
  -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 제1절 한·미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 및 방향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 온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은 과거 군사·안보 분야 중심의 협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하고, 협력의 중심축으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시켜 나가며, 한반도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은 2008년 8월 6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시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양 정상은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래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한·미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되어 나가야 하며,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추진방향과 기본개념 그리고 이러한 전략동맹의 지향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략적 동맹관계란 한·미관계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4.19, 미국 워싱턴 D.C.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 시)

이를 요약하면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란 한국과 미국이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상호의존의 신뢰동맹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동맹 미래비전 채택

### 1. 채택 경과

이러한 한·미 전략동맹 창출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대하여 부시 대통령과 합의한 데 이어, 2008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미 정상 간 협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명박정부는 한·미관계 발전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이자 청사진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하 '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 및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미국 측과 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이 선출된 오바마 대통령 역시 상원의원 재직 시절부터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동맹 미래비전'의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미래비전 채택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공동된 인식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는 1.5트랙(민·관 합동) 협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마침내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게 되었다.

### 2. 주요 내용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정식명칭을 가진 '동맹 미래비전'은 △한·미 동맹의 성과 평가 및 전략동맹의 목표 △한·미 안보협력 △한·미 경제·통상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협력 △범세계적 협력 △협업의 메커니즘 등 총 10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한·미 정상간 정치적 합의문이다. 이러한 미래비전 또는 공동비전은 특히 중요한 국가 간에,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비교적 먼 미래를 상정한 전략적 통찰과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논의 내용과 성과사업을 설명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 또는 공동언론발표문 등과는 차별화된다.

### '동맹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

- 한·미 동맹의 지향점 및 발전기반 평가
  - 한반도·아태지역·세계의 평화·안전·번영된 미래 추구
  - 동맹발전의 기반으로 양국 국민들 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 강조 및 기업, 시민사회, 문화·학술 및 여타 기관 간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과 노력 지속
  -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 평가 및 공동의 가치·상호신뢰에 입각한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추진
- 확장역지를 포함한 공고한 대한 방위공약 강조 및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 도모
  -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 주둔 군사력 등을 통한 지원 확약
-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협력 및 녹색성장·우주 협력·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미래·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을 통한 강력한 실질협력 관계 강화 추진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 한반도의 미래상 창출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미사일 폐기,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무역/투자 자유화 증진 및 역내 국가 간 상호 이해·신뢰·투명성 제고 등 역내 평화·번영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
- 평화 유지, 테러리즘, WMD 확산, 해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인권, 에너지안보, 전염병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및 G20 등 다자 체제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 비전 이행을 위하여 전략대화·SCM 등 기존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 추진

### 3. 채택 의의

'동맹 미래비전'의 채택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개념·목표·이행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질적 도약의 증거로서 한·미관계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 출범 이후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 차원에서 구체적 미래비전으로 정립한 것은 한·미 관계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며, 아울러 한·미관계가 과거 원조국·수혜국 관계에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협력방향을 명기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핵우산·재래식 전력 등을 포함한 '확장역지(extended deterrence)'를 정상 간 채택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확장역지'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에 대하여 핵·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제3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양국 정상이 정식 문서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및 도발 시 공동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정상 차원의 '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통하여 한·미 양국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략동맹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협력의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향후 본격적인 전략동맹 발전 노력 경주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동맹 미래비전' 채택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2009년) 6·16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맹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보 공약에 바탕을 둔 군사동맹의 범주를 넘어, 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범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21세기 전략동맹을 지향합니다. 우리 양국은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를 표방하면서 세계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09.9.21, 미국 뉴욕, 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

#### '동맹 미래비전' 채택에 대한 국내외 평가

•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2.2)

“한·미 양국 간 공유 가치 및 한국의 경제적, 민주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미간 포괄적 협력이 가능하였다. 한·미 동맹 미래비전은 지역·범세계적 이슈 및 새로운 국제안보이슈에 있어 한·미간 협력의 틀을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한·미간 협력의 확대는 한·미 동맹관계의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뜻한다.”

• 세종논평(세종연구소, 2009년 6월 18일자 제143호)

“이번 공동비전 발표를 통하여 한·미 동맹이 완전히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향후 동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동비전은 한·미 동맹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문화일보 오피니언(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9년 6월 18일자)

“어느 때와 같은 ‘공동성명’이 아니라 ‘공동비전’으로 명명된 합의문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변환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폭넓게 자리 잡은 상호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확장역지가 (공동비전에) 명문화됨으로써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흔들림 없는 실질적 대북역지력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정상회담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 제2장

#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총 11차례 개최되었다(2008년 4회, 2009년 3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2012년 1회). 이는 역대 대통령 임기 내 가장 많은 한·미 정상회담 횟수로서 이명박정부 들어 한층 더 긴밀하여진 한·미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역대 최다인 11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정상 간 상호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동맹 개념 및 이를 구체화한 ‘동맹 미래비전’을 제시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한·미 전략동맹 발전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역대 최상의 한·미관계를 이루어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확장억제 제도화,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군사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한편 FTA 발효를 통하여 한·미 동맹이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G20(2010)·세계개발원조총회(2011)·핵안보정상회의(2012) 등을 통한 국제 경제·개발·안보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구축에 협조함으로써 명실상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되었다.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한·미 정상 외교는 미국 내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연도인 2008년을 기점으로 첫 1년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한·미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어진 미국 대선 과정과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인 오바마 대통령 간 신뢰와 우의를 쌓아나가면서 한·미 동맹 발전방향과 대북전략에 대한 상호 생각을 조율하고,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6월 16일 마침내 양국 정상 간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고, 이후 한·미 FTA 발효, 전작권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등 ‘동맹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여 왔다. 특히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정상회의 등에서의 한·미 간 긴밀한 협조는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과 서로 상승 작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한·미관계의 명실상부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란 핵문제 해결 및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공조, 아프가니스탄·이라크·리비아 등지에서의 국가재건사업 지원 등 주요 지역·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및 공조 또한 한·미 동맹이 국제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범세계적 파트너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음을 잘 반증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정상외교 추진 등 이명박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구축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은 미국으로부터도 ‘역대 최상의 한·미관계(stronger than ever)’, ‘미국의 가

#### 이명박정부 한·미 정상회담 개최현황

일시	정상회담 개최 계기	비고
1 2008.4.19	이명박 대통령 방미(실무방미)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추진 합의
2 2008.7.9	G8 정상회의(일본)	
3 2008.8.6	부시 대통령 방한(국민예우)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기본개념 제시
4 2008.11.22	APEC 정상회담(페루)	
5 2009.4.2	G20 정상회의(영국)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6 2009.6.16	이명박 대통령 방미(실무방미)	‘동맹 미래비전’ 채택
7 2009.11.19	오바마 대통령 방한(공식실무방한)	
8 2010.6.26	G20 정상회의(캐나다)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2015.12.1) 합의
9 2010.11.11	G20 정상회의(한국)	국제경제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협조체제 구축
10 2011.10.13	이명박 대통령 방미(국민방미)	13년 만의 국민방미, 의회합동연설
11 2012.3.25	핵안보정상회의(한국)	국제안보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협조체제 구축

장 가까운 동맹이자 최상의 친구(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and greatest friends)',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now even far beyond)', '한·미관계의 황금시대(golden age)' 등 최고의 찬사로 표현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제1절 한·미 간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

2008년 당시에는 국내외적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신뢰 구축에 대한 요구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급속한 국력 신장과 세계화 진전 등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드높았다. 즉 북한이라는 불확실성 요소 관리 및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 창출, 동아시아의 역동적 변화·발전에 따른 역내 국가 간 협력 구조 관리·증진, 새로운 범세계적 도전·위협 대두에 대응할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나가야 할 시대적 요청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2월 11일 오바마 상원의원(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 당선)도 의회발언을 통하여 “한·미관계는 놀라울 만큼 강건하고 성공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한·미관계가 표류(drift)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감안,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곧바로 긴밀하고 다양한 한·미간 협의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상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밝혀 나감으로써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상호간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라는 확신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 나갔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 채널을 확보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상대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장소인 워싱턴 근교의 대통령 휴식처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미 정상간 개인적 친밀감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및 투숙은

#### 미 상·하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 채택

-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창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 의회는 이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 환영의 뜻을 표명
    - 미 하원은 2008년 2월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 투표 의원 38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으며, 미 상원도 2008년 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상·하원 당선 축하 결의안 주요 내용
    - 한·미 양국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와 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오래되고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
    -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평화, 안보, 경제번영, 인권 및 법치주의 증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 중
    -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안 기원
  - 미 의회가 한국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상·하원이 동시에 외국 국가원수의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
- ※ 1996년 이래 상·하원이 동시에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는 2005년 우크라이나 및 1999년 엘살바도르 정도로서 민주선거 개최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하여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한 공동 관심사에도 적극 의견을 같이 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평가하였고, 부시 대통령 또한 “금번 회담은 한·미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고, 그렇게 하였다고 믿는다.”고 평가한 뒤, 동맹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신뢰는 당시 한·미간 논의되었던 다양한 동맹현안들의 진전과 해결로 이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 격상이다. 부시 대통령은 동 회담에서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을 미 의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노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한국의 FMS 지위격상(10.15)으로 이어졌다.

한편 2008년 중 한·미 양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 외에도 부시대통령 방한(8.6) 및 G8 정상회의(일본, 7.9), APEC 정상회의(페루, 11.22) 등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된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여 나갔다. 이와 같은 협력과 신뢰에 힘입어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는 한편 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시켜 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10.17)과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기회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대학생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의 신설(2009년부터 시행)을 실현시키고, 우주·항공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 차세대·첨단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적극 추진하여 나가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한·미동맹 발전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양국 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미국 국방부 산하 지리원(NGA)이 관리하는 해외지명표기 데이터베이스인 GeoNet 상의 독도 영유권 관련 표기가 기존의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로 임의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이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독도 영유권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한·미 양국 정상간 다져온 우의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결과이자, 미국이 한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실질적 성과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내 지지기반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 미측의 독도 영유권 관련 표기 관련 주요 경과

- 주요 경위
  - 2008년 7월 25일 미국 국방부 산하 지리원이 관리하는 해외지명 표기 데이터베이스인 GeoNet상의 독도 영유권 표기가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로 변경
- 당시 미국 측은 영유권 표기를 미 정책(영유권 관련 분쟁에 불관여)에 맞추어 GeoNet상의 표기를 단순히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 표명
  - 우리 측은 상기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을 위하여 외교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노력 경주
  - 2008년 7월 30일 부시 대통령은 동 표기의 원상 복구를 직접 지시함에 따라 동일(7.30) GeoNet 상의 표기가 원래대로 복원됨
- 부시 대통령 방한시 관련 기사(2008.8.6 자 한겨레)
  - 이명박 대통령 '여기가 독도', 부시 '나도 압니다' · 청와대 내 한반도 지도 보며 두 정상 독도 언급
  - “공식 환영행사 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본관 집현실로 이동, 9시 45분부터 세 번째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특히 두 정상은 본관 2층 집현실로 향하면서 1층과 2층 계단 사이 벽에 걸친 대형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최근 미 지명위원회(BGN) 표기 변경으로 논란이 된 '독도'를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독도입니다(This is Tokdo island)'라고 하자 부시 대통령이 웃으면서 '저것인가요? 나도 압니다(Is that? I know)'라고 말하여 눈길을 끌었다.”

## 제2절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가는 길

### 1.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관계 조기 구축

이명박정부는 2008년 미국 대선 초반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진영 주요 인사,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한편 한·미 동맹이나 대북정책 관련 생각을 서로 조율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미 신행정부의 등장에 대비한 선제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가진 9개 통화대상 국가들 중 하나로 한국을 선정, 이명박 대통령과 10여 분간 통화를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두 정상간 통화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배어 나온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미국의 신행정부 또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당초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대북 개입정책 성향으로 인하여 소위 '통미봉남'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적극적 노력의 결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정책 관련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감안, 2009년 2월 클린턴 국무장관의 취임 직후 이루어진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 지역을 선택하였고, 이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이행과 적극적인 관여를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아시아 중시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클린턴 장관의 방한(2.19~20) 계기에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방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미 동맹은 단순한 지역적 협력파트너를 넘어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 및 평화의 추구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하여 큰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또한 한·미 동맹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명박정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동 계기에 양국 간 대북접근 방식에 대하여도 상호 긴밀한 의견조율을 이룸으로써 이후 5년간 펼쳐질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전례 없는 긴밀한 정상외교의 길을 열었다.

## 2.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관계 격상

오바마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09년에만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포함 총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 정상간 유대 및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한·미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최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상호 신뢰는 한·미 양국이 21세기 전략 동맹 달성을 위한 ‘동맹 미래비전’ 채택 및 이의 적극적인 이행을 가능케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역대 최상의 한·미관계를 구축하는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양 정상 간 첫 정상회담은 2009년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전략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핵·미사일 및 대북정책 공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정책관련 한·미간 공조가 확고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FTA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2009년 6월 16일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계기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단독회담 15분, 확대회담 3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각기 통역 1명만을 배석시킨 채 진행한 단독회담을 당초 예정된 시간을 세배 이상 넘겨 50분 동안이나 가짐으로써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동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정상은 역사적인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4.5) 및 핵실험(2009.5.25)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나가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하여 북한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진전,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 타결, 금융위기 극복, 제3차 G20 정상회의(2009.9, 피츠버그)의 성공적 개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자신의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앞뜰인 로즈가든(Rose Garden)에서 개최하고 기자회견 사회를 자신이 직접 맡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틈새 없는 진정한 한·미 동맹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상

정적으로 보여주었다. CNN 등 미국의 5개 TV방송사가 공동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미국 내 주요 일간지(Wall Street Journal, USA Today, Washington Post 등)들이 회견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함으로써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동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미국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검색 계통의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등장하자 두 정상을 ‘로커스 형제(ROKUS Brothers: 한국과 미국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미 동맹과 2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양국 정상간 깊은 우의와 신뢰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후 양국 정상은 2009년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 계기 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맹 미래비전’의 내실 있는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강화,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한·미 FTA의 진전 및 2010년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6·25 전쟁 60주년(2010년)을 계기로 2010년 중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이하 ‘2+2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상 창출과 전략동맹의 미래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대처와 관련하여 한·미 공동대응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의 협조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 등을 감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다.

이어 2010년 11월 11일에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G20 역할 강화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13일~16일간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한·미 간 최상의 전략동맹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되어 왔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회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미국의 경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빈 방문을 접수하였으며, 그것도 1년에 1~2차례 정도 접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11년의 경우 1월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국빈방미, 그리고 6월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국빈방미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결정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또한 한국 대통령 으로서는 13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방미 기간에 맞추어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인준됨으로써 한·미 동맹의 범위는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았다.

2011년 10월 13일에 개최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인준을 평가하고,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이 양측에 가지는 안보적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Pacif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을 더욱 공고히 하여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양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하였음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별도의 소규모 친교만찬을 갖고 양 정상간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였으며, 미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처음으로 펜타곤(미국 국방부)을 방문하여 전쟁지휘 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는 탱크 룸을 시찰하고, 역대 미국을 방문한 외국정상 중 처음으로 파네타 국방장관 등 미국 국방부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방미는 10월 13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 연설을 통하여 한미관계가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로 함축되는 동맹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지난 60년간의 한·미 동맹 및 한·미관계의 비전, 한·미 FTA 인준의 의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인생역정 및 국정철학, 우리 외교정책 등을 밝혔고, 미국 의원들은 기립박수 등 총 45차례의 박수를 보내었다. 특히 연설 도중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현역의원들의 이름 전부를 차례로 호명함으로써 한국민이 결코 미국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하여 금번 연설은 미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역대 외국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연설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방미는 미국 측에서도 “금번과 같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된 행사는 보지 못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지극히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미국 국무부 고위인사)”으로 언급될 만큼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으로 평가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 18일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메르켈 독일총리, 싱 인도총리, 에르도안 터키총리, 캐머런 영국총리와 함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5명중 한 명으로 거론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말한 것을 믿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리라고 확신하며 서로의 관심과 이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현안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우정을 나타냈다.

한편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한은 한·미관계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통하여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일 임기 내 가장 많은 방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자주 방문한 외국 수도가 되었다. 김정일 사후 처음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인 대북정책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동 방한계기에 DMZ 방문(3.25)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 공개 정책연설(3.26)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분단된 한반도도 궁극적으로 독일 통일과 유사하여 질 것이며, 모든 한국민은 결국 자유로운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통일된 한반도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가 평화를 추구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대북·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 대통령 국민 방미(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돈독한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미 의회를 대상으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대통령은 한·미 FTA 우선 처리를 반대하던 맥코넬(McConnell) 미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미 FTA의 조기 비준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화 통화가 있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일 미 상원 지도부는 초당적으로 한·미 FTA 신속 처리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미국 내 한·미 FTA 비준 여건이 성숙되어 미 행정부는 10월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10월 13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일정 이전에 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는 의회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였다.

한편 미국 측은 국민방미한 대통령을 위하여 상·하원 합동연설(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3년 만) 이외에도, 국민 만찬과는 별도로 미 측이 제안한 한식당에서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친교만찬, 오바마 대통령과 차량 동승, 국방부 상 황실 브리핑 등을 특별히 주선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의전 예우는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한·미 전략 동맹 관계와 양 정상의 두터운 우의·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국민방미를 “레드 카펫이 이보다 더 붉은 수 없다.”고 하면서 보기 드문 성공적 방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10월 13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대통령은 인생역정, 국정철학, 우리의 외교정책 및 한·미동맹 비전 등에 관하여 역설하였다. 생중계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미국인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합동연설을 방청한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 (Boehner 하원의장(공화당, 이하 ‘공’) 한·미 FTA 통과한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
- (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상·하 양원이 초당적으로 FTA를 통과시킨 것은 양국경제뿐 아니라 견고한 한·미동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 것
- (Ros-Lehtinen 하원 외무위원장(공)) (연설내용 중) 전쟁에서 누이와 동생을 잃었다는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 매우 감동
- (Camp 하원 세입위원장(공))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미관계의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큰 감동
- (Rangel 하원의원(민주당, 이하 ‘민’), 참전용사) (연설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전용사로 호명하여 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한·미 양국 간 지속된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양국민을 위하여 더욱 번창하는 미래를 기대
- (Coyne 하원의원(민), 참전용사) 이명박 대통령이 호명하여 준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금번 연설은 역대 외국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연설
- (Brady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공))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4명의 참전용사 출신 현직 미의원들을 호명할 때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으며,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 제3장

#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강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 구축·강화 작업은 크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미국 내 한·미 동맹 기반 공고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2007년 2월 이루어졌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게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고, 이를 계기로 동맹현안 점검·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및 확장역지 제도화 등을 통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였으며, '2+2 장관회의' 및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출범 등을 통하여 외교·국방 협의 시스템을 체계화시켰다. 2012년 10월 7일 발표된 '개정미사일지침'은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특히 양국 정상 간 형성된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미 FTA 발효(2012.3.15)는 한·미 동맹의 영역을 기존의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미 의회와 여론 주도층 인사(학계, 전직 고위급 인사 등)들과의 교류 강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및 2009년부터 5개년에 걸쳐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 실시 등을 통하여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국 내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한·미 FTA 관련 내용은 별도로 다루어질 것인 만큼 본 장에서는 동 사안 이외 분야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및 동맹현안 점검·관리 체계 확립

이명박정부는 국가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를 배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작권통제권 전환 시기를 우리의 국가안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하되 제반 안보상황을 평가·점검 하고 이를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한다는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이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한·미 간 동맹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2008년 10월 제4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이하 SCM)'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방향을 기초로 전작권 전환 관련 지속적인 안보상황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당초 전작권 전환 시점인 2012년은 2008년 이후 제기되어 온 북한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등 새로운 정세 변화,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김일성 출생 100주년 및 한·미·중·러 등에서의 리더십 변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적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공감대를 얻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군사지휘구조 측면에서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어 더욱 안정적인 군사지휘구조가 마련되고, 연합작전환경 측면에서 용산기지 이전사업으로 주한미군의 새로운 지휘구조를 위한 시설 및 연합 C4I 체제 등이 준비되며, 필수 정보획득 능력 등 핵심전력이 완비되는 시점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

상기와 같은 안보상황 평가를 전작권 전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한·미 간의 협의는 201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2월부터 한·미 양측의 고위급 인사 협의 계기에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시작되었고,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하여 양측 관계 당국 간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의 공동 검토결과 2015년 말이 전작권 전환의 적기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

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기에 관한 정치적 합의는 곧바로 군사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조치 도출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2010년 7월 2+2 장관회의 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및 제반 동맹현안을 조화롭게 점검·관리하기 위한 포괄 문서인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2010년 10월 제42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략동맹 2015'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춘 포괄적인 동맹현안 점검·관리 계획이 마련되었다.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로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한·미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었다. 즉 전작권 전환에 따른 작전계획 발전, 한·미 연합연습, 필요한 능력 확보 등 군사적 조치사항과 전작권 전환시기에 맞추어 조화롭게 이행되어야 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책임 조정 등의 추진 계획 및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는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긴밀한 한·미관계가 뒷받침된 결과이며, 전략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동맹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및 2012년 3월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갑안 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를 통하여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작권 전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략동맹 2015'를 통하여 마련된 포괄적 동맹현안 점검·관리 계획으로 체계화된 틀 속에서 제반 동맹 현안을 관리하고 협의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제2절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

한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안보정책의 핵심이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공고한 연합방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갔다.

## 1.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및 방위비 분담

2004년 10월 한·미 양국은 향후 주한미군을 2004~2008년간 3단계에 걸쳐 3만 7,5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수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계획은 전 세계 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희망하였던 미국의 입장과 대북억지력에의 차질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상징적 중요성 및 대북억지력의 실질적 확보를 위하여는 충분한 주한미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을 당시 수준(2만 8,500명)으로 유지하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G20 계기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한편 이렇게 확보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에게 안정적 주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연합방위력 강화에 긴요하며, 우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한·미 간 합리적인 방식에서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활동,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에 따른 특별협정(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오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2008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5차례의 고위급 협의를 통하여 2009년 1월 15일 2009년~2013년간 적용될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최종 서명하였다. 제8차 협정에서는 연도별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인상에 상한선(4%)을 두어 예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분담금액의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현금으로 지원되던 군사건설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위비분담제도가 향후 실소요에 기반한 지원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2. 확장억지 제도화

이명박정부는 증대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확장억지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미

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WMD 위협이나 공격에 대하여 핵·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제3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억지'는 1978년 이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보장원칙으로 천명되어 왔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최된 2006년 10월 SCM 공동성명에서는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지'라는 문구가 최초로 포함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제도화된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동맹차원의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0월 제42차 SCM 개최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이하 EDPC)' 설치를 결정,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도화된 틀 내에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미 간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도 함께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상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 상황 하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방안을 협의하고 또 한·미 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2011년 10월 제43차 SCM와 2012년 6월 제2차 '2+2 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확장억지 전략'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12년 10월 개최된 제44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지원할 'EDPC 로드맵'과 맞춤형 확장억지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의 개념과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EDPC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재래식 대북 확장억지 메커니즘으로 발전하여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 3. 미사일지침 개정

이명박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사거리 및 탄두중량 등 분야에 있어 미사일지침을 채택·시행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의 미사일, 즉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지속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과거와는 위협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인식을 갖고, 2010년 9월 이래 2년여에 걸쳐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2년 10월 7일 '개정미사일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을 대외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1년 미사일지침 채택 후 11년 만의 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미사일 지침에 따른 우리의 대북 타격 능력 변화



첫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으며,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사거리를 800km에서 30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지금(500kg)보다 약 3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탑재중량을 2001년 지침 기준 500kg에서 2,500kg까지 5배 확대하였다. 이는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물론 미래 유망 분야인 고성능 무인항공기 개발에 우리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셋째,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하였다. 넷째,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최상의 한·미관계,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개인적 친분, 그리고 동맹 간의 신뢰와 과

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비확산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에도 한·미 간의 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두 번에 걸쳐(2011년 11월 미국 국민 방문,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60년간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미사일지침을 통하여 한국은 북한의 무력공격이나 도발 감행 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하여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하여 나갈 것이다.

### 제3절 외교·국방 협의 시스템 체계화

동맹이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성장하여 가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협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미 동맹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협의채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 수준도 상향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동맹 재조정 과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가면서 현재 최상의 한·미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체계화된 협의 시스템을 통하여 한·미 동맹은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동맹발전의 긴 호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시스템 중 가장 상위의 각료급 협의체는 2010년 7월 21일 최초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다. 2009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중 외교·국방장관 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미국은 동맹국 중 일본·호주 등과만 2+2 회의를 개최하여 왔었다.

2009년 11월 19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최초의 한·미 '2+2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한·미 양국 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는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관계의 발전상과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이 회의는 천안함 폭침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 및 한·미 연합훈련 개최 문제 등 연합방어태세 강화

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 과시하는 한편 한반도 및 역내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이를 계기로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등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처음으로 DMZ를 함께 방문하였으며,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대치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이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 국민과 정부를 위하여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확고한 방어를 제공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12년 6월 14일에는 제2차 ‘2+2 장관회의’가 개최됨으로써 2+2 협의 시스템이 양국 간 동맹 미래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협약하는 포괄적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2+2 장관회의’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김정은 체제 출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년 한·미 양국 내 대선 및 중국·러시아 지도부 교체 등 유동적 한반도·지역 안보정세 하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지역정세 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는 한반도 이슈에 있어 한·미 간 공조뿐만 아니라 21세기 아태시대에 한·미 양국이 지역·범세계 영역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갈 것인지 등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틀에서의 협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 제43차 SCM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군사안보 분야 협의 채널(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 실무단(SAWG), EDPC 등)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KIDD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2 장관회의’ 및 SCM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시스템 체계화는 현안의 원만한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미국 의회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협력 강화

이명박정부는 한·미 전략동맹이 양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 의회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미 의회 내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미 의회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한·미 FTA 미 의회 인준과정을 통하여 미 의원들 대다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 및 이를 통한 소중한 대 의회 네트워크 구축은 앞으로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 의회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주요 관심사 관련 활동을 보면 2008년 2월 미국 상·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미국 의회가 외국 국가원수의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동 결의안이 상원 및 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들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한 것은 동 결의안에 대한 초당적이고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원 결의안에 공동제안자로 참여한 에드 타운(Ed Town) 의원(민주당, 뉴욕)은 취임축하 관련 의회발언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한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였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의 의지를 환영하며 이명박정부와 협력하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2008년 10월 미 의회는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NATO+3(일본,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과 같이 번거로운 무기 구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더 빠르고 저렴하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FMS 지위 격상이 가능하였던 배경에는 양국 대통령간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신뢰가 큰 힘이 되었다. 미 하원 버만(Berman) 외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로스레티넨(Ros-Lehtinen) 외무위 간사도 동 법안이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21세기 민주주의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9년에도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 및 법안의 통과가 있었는데, 6월 미국 하원은 '남북관계 결의안'을 채택, △북한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행위 즉각 중단, △9·19 공동성명에 따른 핵 폐기 및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동 결의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시점에 맞추어 채택됨으로써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된 입장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7월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법'이 미 상·하원을 반대표 없이 통과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표문을 통하여 2009년 7월 27일을 '한국전 정전 기념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지정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으로 당일 모든 연방정부 관청 및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조기를 조기 게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국 대

통령 명의 '한국전 정전 기념일' 지정 공표는 지난 1988년 한국전 정전 35주년을 맞아 당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처음 발표된 후 2003년까지 거의 매년 실시되다가 2003년 이후로 여사한 발표가 없었는데, 2009년부터 다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2010년에는 하원 '재미한인 공로 인정 결의안', 상·하원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북한 규탄 결의안', '6·25전쟁 발발 60주년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더불어 상원의원 10명 및 하원의원 101명의 오바마 대통령 앞 한·미 FTA 지지 서한 송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천안함 폭침 관련 미국 상원 및 하원은 2010년 5월 각각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상원 및 하원의원 12명은 개별적으로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각각 발표하는 등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 상·하원은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의회 추수감사절 종료 직후 신속 발의(12.1)되어 초당적 지지 하에 채택(12.2)된 것으로 천안함 사태 관련 상·하원 결의에 이어 한미관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 의회는 6월 23일 '한국전 발발 60주년 기념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펠로시(Pelosi) 하원의장 주관으로 한국전 60주년 기념 미 의회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펠로시 의장은 "미국이 한·미간 우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참전용사를 기리고 전몰용사들을 기억하면서 한·미간 우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였다.

2011년에는 역사적인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의회 합동 연설 실시, 하원 국군포로·전사납북자 결의안 채택 등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10월 12일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언론들도 초당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진 동 법안 통과는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상·하원 양원에서의 한미 FTA의 신속한 통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방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보에너(Boehner) 하원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합동연설에 대하여 매우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의 자유로운 국민들이 함께 하고 공유하는 가치에 충실할 경우 이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내용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미 동맹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정부분야에서의 교류는 양국 학계·전직 고위급 인사 등 주요 여론 주도층 인사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서도 지속되었다. 특히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 등 전직 미 대통령들의 방한은 한·미관계를 더욱 확고히 뿌리 내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가치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동 인사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 교수, 새모어(Gary Samore)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이사장, 아인혼(Robert Einhorn)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등의 방한도 이루어졌던 바, 동 인사들 중 상당수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외교정책 및 한반도·동북아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제5절 감동으로 다가간 감사의 마음 :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사업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이명박정부는 한·미 민간교류를 통한 우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거 한국에서 근무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미국 평화봉사단원(Peace Corps Members)의 재방한 사업을 2008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직 한국 근무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을 재차 방문하여 과거 자신의 봉사지를 시찰하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지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단원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친구들(Friends of Korea)’ 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당시의 소중한 추억과 인연을 간직하며 한국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등 한미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민간 외교관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방미 계기에 이루어진 ‘코리아 소사이어티’ 만찬 연설시 한·미 우호협력의 역사를 써온 대표적인 공로자로 미국 평화봉사단을 거론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에서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가슴에 미국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심어주었다고 언급하는 등 계기시마다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의 한국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여 왔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10년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도와 참전한 외국 출신

• 2012년 6월 26일 (화)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 상기행사' 계기(자료: 나눔뉴스 2012.6.29 기사)

【Caroll Leslie Crumbacher】

-“공병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당시 도로, 다리, 공장 등이 모두 파괴되었던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지평리 전투를 상기하는 행사까지 개최한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용사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70~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강한 군대를 육성한 한국군을 보니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진정으로 존경심과 외경심을 느낍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하여 말하고 가슴 깊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Clemence R. Mendoza】

-“당시 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후 원산 전투 등 한반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하여 보면 중공군과 북한 공산군이라는 적뿐만 아니라 몹시도 추운 겨울 날씨와도 힘겨운 사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하여졌던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변한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엔 지평리 전투 상기행사를 위하여 한국을 찾은 모든 참전용사들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전 용사(유족)들에게 방한초청 등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6·25 전쟁기간 동안 총인원 178만 9,000여 명이 참전하여 13만 7,000여 명의 인명손실을 입은 미국의 기여가 매우 컸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12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미국 측 참전용사 42명을 초청한 다과회 자리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을 대표하여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켰던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길 기대한다.”면서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11일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한·미관계는 혈맹으로서 6·25 전쟁기간 동안에 한국을 위하여 싸워준 미국 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 이국땅에서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미국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민을 대표하여 직접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평화봉사단원과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사의 표명에 대하여 미국 측 인사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과거 기여에 대하여 이렇게 높게 평가하여 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감동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 평화봉사단과 6·25 참전용사들은 한·미 양국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 제3편

#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 제1장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 제2장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
- 제3장 신실크로드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 제1장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 제1절 이명박정부의 대중 정책 배경

우리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와 냉전 종식의 시대적 배경 하에 북방외교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와 외교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전환점으로 천안문사태(1989년) 이후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개혁·개방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던 바, 이러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여 같은 해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수교 이래 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제반분야에서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다.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양 국민 간 인적교류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양국 간 교류·협력의 발전 추세에 따라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당시 설정한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어 나갔다.

한편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한·중 양국을 둘러싼 정세는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북핵 문제는 그 해 6월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시료 채취 등 검증과 관련하여 합의를 못하는 등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국내에서는 200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4세대 지도부 집권 2기가 출범하였다. 미국에서도 2008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한편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도 2008년에는 9.0%라는 한 자릿수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되었고, 2012년에는 7%대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한·중관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위기와 중국 경제침체 속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감소되었고, 중국에 투자한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2007년 공식 종료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 국민들의 대중국 감정을 악화시켰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내 혐한정서도 늘어나고 있다

## 제2절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이명박정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바탕을 둔 한·중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투자 대상국이며, 활발한 인적교류와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문화적으로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다. 이명박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한·중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대중외교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과 연결시키고, 한·중 국민 간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중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중국의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급속한 부상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동아시아, 국제무대로 확대시켜나갈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과 대중외교 기조 하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이 그리고 긴밀하게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과 북한 문제 등 지역정세 등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왕이(王毅) 특사의 방한, 박근혜 특사의 방중 등 양국 특사를 상호 교환하였고,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중 시 합의된 공동성명을 통하여 양국은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중국은 한국, 인도, 파키스탄 3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한·중간 외교 및 국방전략 대화를 출범시켜 양국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사안에 대하여도 긴밀히 협의·협력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한·중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관계가 확대·심화하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양국 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을 해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탈북자 문제, 역사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을 원활히 관리하여왔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가 일부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유대감,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극복하면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양국 간의 연간 교역은 2011년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인적교류는 2011년 653만 명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정상교류를 포함한 양국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나가고,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는 물론, 의회·정당 간 교류도 확대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여 나갔다. 특히 양국 외교부 및 국방부 간 차관전략대화, 국방부 핫라인 개설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꾸준히 진전시켜 나갔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양국 교류·협력에 있어 문제점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 제3절 한·중 정상(급) 교류

### 1. 한·중 정상 간 교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8년부터 11차례의 정상회담과 각종 다자회의 참석 계기에 12차례 회동 등 총 23회의 만남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한·중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체제구축,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담은 한·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후 칭다오를 방문하여 중국 진출 우리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중국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귀국길에 이명박 대통령은 쓰촨성을 방문하여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격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활동은 중국인들의 대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중 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쓰촨성 대지진 1주년을 맞아 지진피해 지역 어린이 20명을 청와대로 초

####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간 정상회담

일자	회담	장소
2008. 5.27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베이징
2008. 8. 9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계기	베이징
2008. 8.25	胡錦濤 주석 국빈방한 계기	서울
2009. 4. 3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	런던
2009. 9.23	UN 총회 참석 계기	뉴욕
2010. 4.30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계기	상하이
2010. 6.27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	토론토
2010.11.11	G20 금융정상회의 계기	서울
2012. 1. 9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베이징
2012. 3.26	胡錦濤 주석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서울
2012. 5.14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베이징

## 한·중 공동성명 주요내용(2008.5)

- 한·중관계 발전
  -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 구축
  -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 간 교류 강화
- 경제통상협력 확대
  -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연구보고서의 조정·보완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 경제협력 강화(이동통신, 석유비축, 자원공동개발, 신재생에너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협력, 금융분야 등)
  - 2010년 상하이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 인적·문화 교류 강화
  - 청소년 상호 초청 규모 확대
  - 사증간소화 조치 적극 검토
-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노력 경주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협력
  - 유엔 관련 협력
  - 한·중·일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교류 지속

청하여 이들을 위로하였다.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폐막 다음날 후진타오 주석이 국민방한한 계기에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한·중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한·중관계의 발전 비전과 협력 범위를 설정하고, 양국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개최와 2010년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등 정치, 경제, 인적·문화교류 분야 등에 관한 34개항의 구체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2010년 4월 30일 상하이 엑스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규모인 상하이 엑스포 개최를 축하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중국이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문화·경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준데 감사를 표하였다.

2010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진전을 평가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

## 한·중 공동성명 주요내용(2008.8)

### • 정치 분야

-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방문 및 접촉 유지
-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 2008년 내 개최
- 한·중 교류·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 추진
-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 활성화
-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가속화

### • 경제 분야

- 2010년 양국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 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
-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협력 강화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 적극 검토
- 친환경적·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협력

### • 인적·문화 교류 분야

-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
- 한·중 교육교류 약정 개정을 통하여 정부 초청 장학생 확대
- 양국 문화계, 언론계, 우호도시, 학술계, 민간단체 간 교류 활성화

### • 지역 및 국제협력

- 6자회담 틀 내에서 협력 강화, 9·19 공동성명 전면적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 ASEAN+3,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긴밀한 협력 유지

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양국 간 신뢰 구축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 지원 및 남북군사 실무회담 개최 등이 남북관계의 분위기 개선과 한반도 정세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평가하였다.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두 번째 국빈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김정일 사망 이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기 위한 각 분야별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의회·정당 간 고위급 교류 강화, 2015년 양국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 목표 설정, 한·중 FTA 협상 조속 개시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중

사회보장협정 협상 개시, 수교 20주년 및 한·중 우호교류의 해 기념행사 성공개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 조속 체결 추진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재천명하는 한편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은 2008년 이래 세 번째 방한이었으며, 두 정상간 10번째 회담이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관계 20년을 회고하여 볼 때 향후 20년의 발전 전망도 매우 희망적이라고 하고, 양국이 보다 가까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차원에서 진행 중인 전략대화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계획 중이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 중국 국민 방문시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 방문

2008년 5월 중국 국민 방문 계기 중국 내 대규모 지진 참사지역인 쓰촨성(四川省)을 외국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방문, 이재민에 대한 위로 및 복구 지원의사를 표명하여 중국 정부 및 언론으로부터 감사와 찬사를 받았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 황이엔롱 쓰촨성 부성장 등은 지진 피해지역 방문 및 지원의사에 대하여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참사지역 이재민들은 길가에 모여 대통령 차량대열을 카메라로 찍고 손을 흔드는 등 높은 관심과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간이학교 방문 시에는 초등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아울러 지진 발생 1주년인 2009년 5월에는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 20명을 방한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격려행사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이 쓰촨성 방문 시 끌어 안아준 사

진이 보도되어 전 중국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주인공도 포함되어 화제가 되었다.

격려행사 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 곤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건강히 성장하여 국가에 유용한 인재가 되기를 당부”하는 한편 연설 이후 허리를 굽혀 아이들에게 직접 간식을 나누어 주는 등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 측 참석 어린이 대표는 ‘이명박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낭독을 통하여 “대지진이 비록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대통령 할아버지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하여 매우 큰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열심히 고향을 재건하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이러한 한·중 정상 간의 빈번한 교류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정상간 교류를 통하여 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2. 한·중 정상급 간 교류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2008년부터 9차례의 양자회담과 각종 다자회의 참가계기 7회 회동 등 총 16회의 만남을 가졌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한·일·중 3국은 2008년 12월 13일 최초로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2009년 런던 개최 G20 정상회의에서의 상호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를 환영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공식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현황 및 전망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방

###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 총리 간 회담

일자	회담	장소
2008.12.13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후쿠오카
2009. 4.11	ASEAN+3 계기	파타야
2009.10.10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베이징
2010. 5.28	원자바오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서울
2010.10. 5	ASEM 계기	브뤼셀
2011. 5.22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도쿄
2011.11.18	ASEAN+3 계기	발리
2012. 5.13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베이징
2012.11.19	ASEAN+3 계기	프놈펜

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군사·안보 분야 고위급 교류 확대, ‘한·중관계 발전 전문가 공동연구’ 지속 추진, 주다론헤출장소 및 주제주중국영사사무소 개설, 민간 교류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5년 양국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환경·녹색성장·원자력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양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상호지지, G20서울 정상회의 및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협조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제9차 원자력 공동위 개최 등 원전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향후 중국 원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 향후 경제회복 및 출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중국 측의 이해와 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2년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중 FTA, 양국 간 투자 확대, 금융협력, 사회보장협정, 여수엑스포 등 주요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밖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일·중 3국 간 정상회의 및 ASEAN+3 계기 양자회담을 통하여 수교 20주년, 한·중 FTA 등 양국 간 주요현안, 한·중관계 발전 방안,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양국 총리간의 회담은 2008년 9월 한승수 국무총리의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참석, 2010년 5월 원자바오 총리 방한, 2011년 4월 김황식 국무총리 보아오 포럼 참석 등 계기에 세 차례 이루어졌다.

### 3. 고위인사 교류

한·중 양국은 각계 고위층 인사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차세대 지도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지도자들과의 유대·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방한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한·중 FTA 체결,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에 기여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국 측이 제안한 한·중 간 교역 확대(2010년 양국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자고 하였다. 시진핑 부주석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여 'V자형'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양국이 금융, 물류, 환경보호, 하이테크, 저탄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및 '중국방문의 해', 2012년 여수 엑스포 및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와 동 계기 고위인사 교류 강화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0월 방한한 리커창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방안, 한반도정세 및 지역·국제문제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북한문제와 관련, 리 부총리는 북측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리커창 부총리 방한 시 한·중 양측은 통화스왑 확대,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고용허가제, 신선농산물 수출검역 협력 등 4개 MOU를 서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2009년 4월 리창춘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2011년 6월 왕치산 상무부총리, 2012년 7월 멩젠주 공안부장 등 고위인사들이 방한함으로써 한·중 상호신뢰 및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왕양 광동성 당서기, 후춘화 하북성장, 왕민 요녕성 당서기 등 중국 주요 지방 지도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도모하였다.

## 제4절 한·중관계 발전 현황

### 1. 정치·안보 협력 확대

이명박정부는 과거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중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 한·중 양국은 남북한 분단상황, 한·미동맹, 북·중관계, 미·중관계 등 역대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대화 채널 확대 및 소통 증진을 통하여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제고 및 역내 평화 증진에 기여하여 오고 있다.

2008년 이래 4차례 개최된 양국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양자관계, 역내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아울러 2011년부터 매년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신뢰를 증진함과 아울러 2012년 7월 양국 국

방부간 핫라인 개설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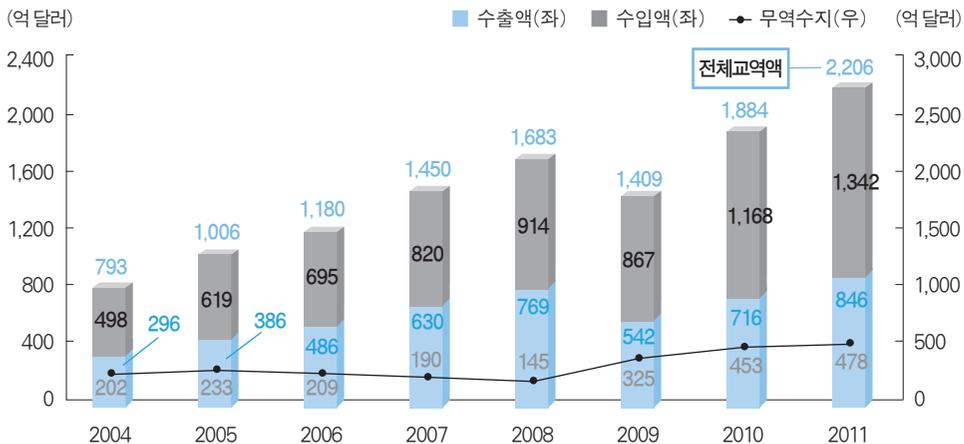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3.26) 및 연평도 포격 도발(11.23) 등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한·중관계가 지속 발전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정부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함은 물론, 한·중관계발전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등 민간부문에서 상호 이해증진 및 소통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 2. 경제·통상 협력 심화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입 대상국이다. 양국 교역액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1년에는 2,2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2년 양국 수교 당시 64억 달러의 교역 규모가 20년 만에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12년 1월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2015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대중국 투자 누계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4만 4,586건, 502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누계 규모는 2009년 이후 투자액이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 37억 4,000만 달러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해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후진타오 주

### 한·중 교역 현황



※ 자료: 한국무역협회

구분		2008	2009	2010	2011
대한 투자	건수	389	538	616	403
	금액	3.3(2.9)	1.6(4.1)	4.1(3.2)	6.5(4.8)
대중 투자	건수	3,278	2,113	2,286	2,179
	금액	48.6(13.2)	26.8(8.7)	44.1(12.8)	48.7(11.0)
현지법인수		1,297	734	909	828

※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수출입은행

석은 중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문화 · 인적 교류 분야 협력

한·중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는 2011년에는 650만 명으로 약 50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2년 10월 현재 양국 간 매주 운항하는 항공편수도 한국 7개 도시 중국 30개 도시 간 총 837편에 이른다.

또한 2011년 말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6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중 1위를 차지하며, 중국내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이 약 6만 8,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중 1위이다. 이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 국민의 상호방문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영사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양국 내 체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적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영사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중국 내에서도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영화, 드라마, K-POP 등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중국어 학습 열기로 대표되는 한풍(漢風)이 확산되는 등 쌍방향 문화교류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다양한 문화 ·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중국 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양 국민 간 우호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중국의 문화, 관광, 언론, 경

제·통상, 공안·출입국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차세대 지도자를 방한 초청하는 ‘미래지향 교류사업’, 중국청년 대표단 방한 초청사업 등을 통하여 양 국민 간의 우호·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한·중 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중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5월 한·중 간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 이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 특별교류사업을 통하여 5,000여 명 이상의 양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 청소년 간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중 양국 학계 인사들 간 학술회의,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4.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이명박정부는 한·중 간 역사인식 문제,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 인터넷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써 중국 내에서 양 국민 간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 국민 간 유대를 보다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및 비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중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하여 2011년 10월 중국내 대표적 SNS 신랑(新浪)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블로그를 정식 개설하고 일반 중국인들의 대한국 우호정서 함양 및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QQ 통신 웨이보를 추가 개통하고, 중국내 파워블로거 방한 초청 행사 및 언론인 초청 간담회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터넷 및 SNS상에서 표출되는 반한 감정을 완화하고 친한 감정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어 전공 한국 대학생을 교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지란지교(芝蘭之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친화화하고, 한국 내 유학생들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012년을 ‘한·중 우호교류의 해’

로 정하고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美好友誼, 幸福同行)’을 표어로 설정하였다. 양국 정부는 20주년 기념 개·폐막식 행사를 비롯, 한·중 경제공동위, 한·중 경제포럼, 한·중 과학 기술협력주간, 한·중 영화주간, 한·중 서예명가전, 한·중 청소년체육교류대회, 한·중 여성 지도자포럼 등 45개의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와 민간 차원의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신년 메시지를 교환하였으며, 수교기념일(8.24)에는 양국 정상 및 총리, 외교장관 간 수교 20주년 기념 메시지를 동시에 교환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수교 기념 리셉션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베이징에서 개최된 기념 리셉션에서도 최고위급 인사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포함,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한·중 양국 정부가 서로를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2년 수교 2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양 국민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이 가일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장

#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

### 제1절 배경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좋은 분위기에서 우호 관계가 돈독하여지다가도 과거사에 기인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체 국면으로 후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하였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하여는 역내 주요국인 한·일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정부의 대일외교는 한·일 양국관계 발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 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 등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기조 하에, 이념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대일 외교를 추구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외교 목표로 주창한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향한 균형적 실용외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교 기조 하에 이명박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화·인적교류, 북한 문제 등 실

질적·전략적 협력 분야를 부단히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처하여왔다.

무엇보다 이명박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일 양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해 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가 양국 간 성숙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 하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역사공동연구’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직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상 상호 방문 및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 총 19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형성된 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온 결과, 2011년 양국 간 교역액이 1,0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인적교류는 201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양 국민 간 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부터 매년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는 양 국민 간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최대의 문화축전으로 발전하였다.

미래지향적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칸 총리 담화를 발표하였고, 조선왕조도서 반환 등 과거사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이명박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회의 전반적 보수우경화 경향의 심화와 함께 과거로 회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독도 도발을 계속 자행하는 등 역사퇴행적인 행태를 보였고, 양국 관계는 또다시 정체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 국토의 동단인 독도 방문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우리의 단호한 영토주권 수호의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일본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 제2절 한·일 정상외교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한·일 양국 정상은 총 19회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한·일 양국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였으며 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 1. 자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8~2009)

#### :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과 ‘한·일 신시대’ 개척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하여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우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양국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규모를 2009년 7,200명, 2012년까지는 1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이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을 가진 뒤 2개월 후인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이부스키 방문 이래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었다. 4월 20~21일간의 공식 실무방일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를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하여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8년 9월 후쿠다 총리의 사임에 따라 아소 타로 총리가 취임한 이후 약 1년간의 재임기간 중 총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양국 정상은 빈번히 만나며 상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활발히 전개되었는 바, 2009년 1월 11일 아소 총리가 방한하였고,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답방하였다. 이는 양국 정상이 2008년 정상회담 시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경제협력 및 대북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009년 대한상의 신년인사회(2009.1.5)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다양한 이익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은  
두 나라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의 젊은이들은 이미 과거의 장벽을 허물며 국경 없는 친구가 되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동북아 평화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반목과 충돌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3·1운동이 천명하였던 '동양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3주년 3·1절 기념사(2012.3.1)

나는 이 같은 유럽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에는 어떤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성찰이 공유되어야 하는지,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유럽의 역사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초이자  
오늘날 유럽을 하나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도  
평화를 향한 인류 보편의 윤리와 도덕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르웨이 방문 시 오슬로 대학 연설문(2012.9.1)



또한 양국 정상은 2008년 10월 베이징 ASEM 정상회의 계기를 비롯, 12월 후쿠오카 한·일·중 정상회의,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2009년 4월 파타야 ASEAN+3 정상회의 등 총 4차례에 걸쳐 다자회의 계기에 회동하였다. 4월 1일 런던 개최 G20 정상회의에 이어 4월 11일 태국 파타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009년 1월 방한 시 아소 총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한·일 정상회담 개최 현황(2008~2012)

	일시 및 장소	계기	일본 정상	비고(특기사항)
2008	2.25(월) 서울	대통령 취임식	후쿠다 야스오	• 서틀외교 활성화 합의
	4.21(월) 도쿄	대통령 공식실무방일	후쿠다 야스오	• 워킹홀리데이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 •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 상호 교류 실시
	10.24(금) 베이징	ASEM 정상회의	아소 타로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 첫 정상회담
	12.13(토) 후쿠오카	제1차 한·일·중 정상회의	아소 타로	
2009	1.12(월) 서울	일본 총리 방한	아소 타로	• 사상 최초로 일본 주요 재계 지도자 등이 동행
	4.1(수) 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	아소 타로	
	4.11(토) 파타야	ASEAN+3 정상회의	아소 타로	
	6.28(일) 도쿄	대통령 방일	아소 타로	
	9.23(수) 뉴욕	UN총회	하토야마 유키오	• 국민주당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2010	10.9(금) 서울	총리 방한	하토야마 유키오	• 총리 취임 후 양자차원 첫 해외방문
	5.29(토) 제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하토야마 유키오	
	6.26(토) 토론토	G20 정상회의	칸 나오토	• 이명박 대통령과 칸 총리간 첫 정상회담
	10.4(월) 브뤼셀	ASEM 정상회의	칸 나오토	
	11.14(일) 도쿄	APEC 정상회의	칸 나오토	
2011	5.22(일) 도쿄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칸 나오토	
	9.21(수) 뉴욕	UN총회	노다 요시히코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간 첫 정상회담
	10.19(수) 서울	총리 방한	노다 요시히코	• 총리 취임 후 양자차원 첫 해외방문 • 조선왕조도서 일부(5책) 반환 • 통화스왑 확대(700억 달러)
	12.18(일) 교토	대통령 실무 방일	노다 요시히코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 합의
2012	5.13(일) 베이징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노다 요시히코	

중소기업 간 협력강화 등 양국 경제협력,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상호협력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의 재계 지도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실천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하였다.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총리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당일 일정으로 방일하여 짧은 기간에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회담을 개최하고, 긴급한 북한 핵문제, 양국 간의 경제협력문

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산업협력, 특히 중소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 2. 민주당 정부 시기 정상외교(2009~2012)

### :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추구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 민주당은 9월 9일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고, 9월 16일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민주당 집권 이전부터 민주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5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내 정권교체라는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3일 유엔 총회 계기에 하토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총리 취임 3주 후인 10월 9일 양자 차원에서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는 확

### 하토야마 총리 방한

2009년 10월 하토야마 총리 내외 방한 시 한류 팬으로 알려진 총리 부인 미유키 여사의 '한국 사랑'이 한국 내 화제가 되었다. 양국 정상 내외 오찬 시 미유키 여사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가족을 중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두 정상 간 가족의 유대감이 오찬 시 화제로 올랐다.

오찬 중에는 한식이 제공되었고, 견배주로 정상 외교에 서는 처음으로 막걸리가 나왔는데, 사실 순서상 와인도 중간에 한번 나왔다.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 내외가 "와인은 되었다. 막걸리로 계속 식사를 하겠다."고 하여서 막걸리가 주요 반주가 되었다.

물냉면도 제공이 되었는데, 하토야마 총리 내외가 상당

히 냉면이 맛있다고 즐겨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비빔냉면을 사실 더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바로 하토야마 내외도 비빔냉면을 시식하였다.

오찬에 앞선 환담 시 미유키 여사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비슷한 문화와 활발한 인적 교류를 하여 왔다. 특히 한국말은 듣기도 좋고 말할 때도 어감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미유키 여사는 한국말을 상당히 많이 하였으며, "괜찮아요. 매운데 밥 주세요." 등 능숙하게 한국말을 구사하였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 세계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여러 문제를 진전시켜 나갈 용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의 뒤를 이어 2010년 6월 취임한 칸 나오토 총리와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계기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자 현안, 북한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간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 2010년이 새로운 한·일 우호협력 100년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칸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 총리는 2010년 8월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총리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이를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4차례의 회동 및 정상회담을 통하여 천안함 사태,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칸 총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태 논의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2011년 9월 출범한 노다 내각과도 정상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우호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0월 양자 차원에서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2월 일본 교토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다 총리 방문 시 양국은 한·일간 금융·통화 협력을 위하여 통화 스왑을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양국 정상은 정상간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양국 간 실질협력을 내실화하고 북한문제 관련 한·일 및 한·미·일간 공조를 견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011년 10월 노다 총리 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한·일관계의 근간’임을 언급하고, 일본이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교토를 방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평생의恨을 지고 사는 나약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이는 양국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 제3절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

### 1. 칸 총리 담화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로서 한·일 양 국민 간 감정 악화 및 이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정부는 일본 민주당 신정권 출

#### 칸 총리 담화(주요 내용)

- 금년은 한·일관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의 해임.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후 36년에 걸친 식민지배가 시작됨.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한국인들은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
- 저는 역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며,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솔직하게 되돌아 보고자 함. 또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임. 식민지배가 초래한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하여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함.
-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여 갈 것임. 또한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성실히 실시하여 갈 것임. 일제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조선왕조의례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 내 반환하고자 함.
- 일본과 한국은 2,000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 오늘날 양국 간 교류는 매우 重層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 국민 간의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 없이 강함. 양국의 경제관계 및 인적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경제적 유대는 매우 공고하여졌음.
- 한·일 양국은 이제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되었음. 이는 양국관계뿐 아니라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역내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구축 등 범세계적 과제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하여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임.
- 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확고하여지는 것을 希求하며 양국의 미래를 열어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決意를 표명함.

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과거사 반성을 담은 칸 총리 담화 발표를 이끌어 냈다. 칸 총리 담화는 과거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 담화 및 2005년 8월 고이즈미 총리 담화와는 달리 한국만을 대상으로 사과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최초의 총리 담화였다. 칸 총리 담화는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의 식민지배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솔직한 과거사 반성과 함께 문화재 반환 등 과거사 현안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표명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과거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고자 기대하였으나, 이후 일본 사회의 전반적 우경화 추세, 빈번한 내각 교체, 민주당 내 정치 리더십 부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일본 국내정국 불안으로 안타깝게도 조선왕조도서 반환 이외에 과거사 현안의 가시적인 진전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 측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한·일간 해석상 분쟁을 청구권 협정 제3조 상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11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공동 번영과 역내 평화·안보를 위하여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면 풀 수 없다. UN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인권·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과 노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간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외교사안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여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40분 이상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인도적 문제임을 강조한 데 이어 3·1절 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동 서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2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평생 마음에 아픈 상처를 갖고 살아온 할머니들은 이제 80대 후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품은 한을 살아생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일본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3주년 3·1절 기념사(2012.3.1)

저는 일본 정부가 평생 마음에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여러분께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한·일 간의 다른 어떤 외교 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상 정상회담에서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전례 없는 일이고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인도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UN과 미국 의회도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마음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하면, 일본은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양심의 부채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일본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자, 양심을 가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는 편지(2012.3.1)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7회 8·15 광복절 경축사(2012.8.15)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위  
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2012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시 성폭력 근절 및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 마련을 위하여 국  
제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  
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국 뉴저지 Palisades Park 및 뉴욕 Nassau County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건립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국제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3. 조선왕조도서 반환 실현

칸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로서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한·일 도서반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1년 12월 조선왕조도서 총 1,205책(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이토 히로부미 반출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의 반환이 완료되었다. 이토 히로부미 반출도서는 1906-1909년간, 의궤류는 1922년에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약 100년 만에 반환된 것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제4절 독도 영토주권 수호

독도는 신라가 512년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한반도 침탈을 위하여 벌인 러·일 전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편입하였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가 되찾은 독도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오늘날까지 독도를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응하였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2008.7),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해설서 발표(2009.12), 그릇된 역사관에 기초한 ‘자유사(自由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문부성 검정 통과(2009.4),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초등학교 교과서(2010.3), 중학교 교과서(2011.4) 및 고등학교 교과서(2012.3)의 검정 통과,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2012.7) 등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이 같은 일본 측의 독도영유권 훼손기도에 대하여 외교부 대변인 항의 논평·성명 발표, 외교부장관의 주한일본대사 초치·항의 및 근본적 시정 촉구 등을 통하여 단호히 대응하였다.

2011년 7월 우리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한 일본 외무성 직원의 공무탐승 이용 자제조

#### 독도 관련 일본비판 해외 언론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여 왔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백서가 급변 독도 방문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Wall Street Journal(2012.8.13)
-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복속하기로 한 1905년 내각 결정을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일본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작하였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 미국 Huffington Post, Alexis Dudden 교수 기고(2012.9.14)
- 육일승천기 등장과 전쟁범죄 축소교육 및 일본 각료의 신사 참배는 일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 팽창정책의 최초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의하여 더욱 악화된 것이다.  
- 네덜란드 Het Financieele Dagblad(2012.9.22)
-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진 적이 결코 없다.  
- 프랑스 L'Express(2012.9.27)
- 오늘날 민주주의 산업국가 중 주변 모든 이웃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한·중·일 간 영토분쟁이 격화된 것은 독일과 달리 아직 어두운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 때문이다.  
- 독일 FAZ(2012.10.6)

치, 8월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 일본의 새로운 유형의 공세적 조치에 대하여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을,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였다. 총리실 산하 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방시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국토의 동단인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 및 환경 보존 필요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수호하다가 순직한 이들의 순직비에 헌화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 경비대원들과의 간담회(독도 주민 김성도·김신일 부부와 손자손녀도 참석)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비대원들에게 “우리 국토의 가장 동단에 있는 독도를 잘 지켜 달라.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이 되도록 잘하여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 경비도 철저히 하고 환경도 지키고 두 가지 다 잘하여야 한다.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 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부는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제안하고,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우리 측에 송부하는 등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노다 총리의 부당한 서한을 일본 측에 반송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후 계속된 일본 측의 독도 분쟁지역화를 위한 일련의 시도에 대하여 일본 측의 의도를 견제하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이명박정부의 대응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국내의 홍보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 현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과 성의가 부족한 태도 등에 대하여 일본과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었다. 세계 유명 언론들도 독도 문제가 일본의 한반도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문제임과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지적하는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 제5절 경제협력·인적교류 증진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하여 오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제3국 자원·인프라 분야에서 한·일 기업 간 전략적 투자 및 제휴 확대 등 양국 기업 간의 상호의존적 협력이 진전되었다. 이명박정부 기간 중 양국 간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 283억 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액은 2011년 397억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양국 간 교역량은 2008년 892억 달러에서 2011년 1,080억 달러로 크게 늘어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이 증가하였고,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가 개선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균형 있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점은 의의가 크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한·일 양 국민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2008년 476만 명이었던 양국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사상 최초로 500만 명

### 한국의 대일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일수출	265.3 (10.4)	263.7 (△0.6)	282.5 (7.1)	217.7 (△22.9)	281.8 (29.4)	397.1 (40.9)
대일수입	519.3 (7.3)	562.5 (8.3)	609.6 (8.4)	494.3 (△18.9)	643.0 (30.1)	683.0 (6.2)
무역수지	△253.9	△298.8	△327.1	△276.6	△361.2	△285.9
총교역액	784.6 (8.3)	826.2 (5.3)	892.1 (8.0)	712.0 (△20.2)	924.7 (29.9)	1,080.2 (16.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일본은 우리의 수출 3위, 수입 2위, 교역 2위국/우리는 일본의 수출 3위, 수입 6위, 교역 3위국

### 한·일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건), 총신고기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일본의 대한투자	21.1 (584건)	9.9 (470건)	14.2 (460건)	19.3 (370건)	20.8 (422건)	22.8 (499건)	26.4 (1~6월) (294건)	309.0 (12,011건)
한국의 대일투자	2.9 (390건)	8.0 (460건)	6.4 (376건)	4.2 (347건)	3.4 (355건)	2.6 (263건)	2.97 (1~3월) (87건)	45.2 (4,028건)

※ 자료: 지식경제부/수출입은행

※ 2011년 외국의 대한투자국 중 일본은 2위국 / 한국의 해외투자국 중 일본은 15위국

### 한·일 인적교류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8)
방한 일본인	234 (△4.0)	224 (△4.4)	238 (6.2)	305.3 (28.4)	302.3 (△0.1)	328.9 (8.8)	246.3 (23.4)
방일 한국인	212 (31.9)	260 (22.8)	238 (△8.4)	158.7 (△33.4)	244.0 (53.8)	165.8 (△32.0)	134.7 (19.5)

※ 자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을 돌파하여 546만 명을 기록하였다. 한·일 양국은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한·일 양 국민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2008년 476만 명이었던 양국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사상 최초로 500만 명을 돌파하여 546만 명을 기록하였다. 한·일 양국은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양 국민 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굳건한 한·일관계 구축의 초석을 만들기 위하여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나갔다. 양국

은 미래지향적 관계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양국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인식 하에 한·일 취업관광사증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매년 한·일 양국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 양국민간 최대 문화축전인 ‘한·일 축제 한마당’ 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측면 지원하였다.

양국 간 인적교류의 증가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다. 2011년 11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일본 국민대상)’에서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2.2%로 2007년 10월의 54.8%에 비하여 7% 이상 증가하였고, 한·일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58.5%로 2007년 10월의 49.9%에 비하여 8%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국가’에 있어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로 증진된 실례이다.

## 제6절 동일본 대지진 계기 협력

일본이 2011년 3월 11일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해일 사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명박정부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재해 지원과 관련 긴밀히

###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21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원자비오 중국 총리, 칸 나오토 일본 총리와 함께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시를 함께 방문하였다.

3국 정상은 아즈마 종합운동공원 내 실내체육관에 차려진 후쿠시마 이재민 피난소 앞에서 이 지역 농산물인 체리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함께 시식하였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에 대하여 커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나토리시의 주민회관을 방문, 피해 복구가 한창인 작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으며,

피해 현장에 헌화 및 묵념을 통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도 하였다. 또한 이재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피해지역에서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품을 찾는 일본인 부부를 만나 위로하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염원하는 ‘We are friends(우리는 친구)’라는 문구를 새긴 부채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천영우(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협이하여 양국 간 우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 동북지방 부흥·관광 파트너십 채택, 원자력 안전 협력, 방재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동일본대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 및 국민들의 뜻을 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동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아 일본 언론 기고에서 다시 한 번 일본 국민을 위로하고 복구에 힘쓰는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선린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일구어 나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제7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

한·일 양국의 과거 역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통된 이해와 비전은 양국 간 성숙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명박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학자들 간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일관계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한·일 역사공동연구’와,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 학자 간 모임인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내실 있게 시행하였다.

### 1. 한·일 역사공동연구

2007년 6월 종료된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에 이어, 2007년 6월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가 출범하였다.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와 비교 시 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의 3개 분과위원회에 추가하여 교과서 소그룹이 설치된 점이 특징이다.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2009년 12월 활동을 종료하고, 2년 6개월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를 2010년 3월 공개하였다.

한편 한·일 양국 정상은 2011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고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역사공동연구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2.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은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상을 확립하기 위한 한·일 양국 학자들의 모임인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공식 출범한 이후 1년 반 동안의 공동연구 활동을 거쳐, 2010년 10월 양국관계의 장기 비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양국 정상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일관계를 식민·피식민 관계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긴밀한 정치·경제 협력을 통하여 대등한 파트너로 발전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규정하면서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일 양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생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 한·일관계의 미래상이다.

한편 201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의 합의에 따라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가 2011년 12월 공식 출범하였다.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는 제1기 공동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인적네트워크의 확산, 지식문화미디어 교류, 원자력·에너지협력, 복합안보질서, 경제질서, 기술협력, 환경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화해 노력</li> <li>•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li> <li>• 교류 네트워크 다층화</li> <li>• 캠퍼스 아시아 실현</li> <li>• 동아시아 지식은행</li> <li>• 멀티미디어 협력</li> <li>• 해저터널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생 복합 네트워크 강화</li> <li>• 대북 정책 공조</li> <li>• 안전 보장 협력의 강화</li> <li>• 신아시아 질서 공동구축</li> <li>• 지구적 안보 협력</li> <li>• 에너지 환경 협력</li> <li>•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생 번영 네트워크 구축 연구</li> <li>• 포괄적 FTA 체결</li> <li>• 금융질서 안정화 협력</li> <li>• 금융질서 장기발전 협력</li> <li>• 정보통신 협력</li> <li>• 개발 협력</li> <li>• 환경사업 기회 확대</li> </ul>

## 제3장

# 신실크로드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한반도·동북아의 안보 문제와 교역·통상 및 과학·기술,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양국의 폭넓은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한 3각 협력 사업 진전의 어려움과 세계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2008년경에는 협력 발전이 다소 답보되는 국면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이와 같은 한·러관계의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안보,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미래 분야 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의 심화 △3대 신실크로드 비전(철도·에너지·녹색)을 통한 실질협력 발전 동력 강화 △정상·고위급 외교 및 한·러대화 출범을 통한 전략적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5년간 총 8회의 양국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등 정상간 교류가 정례화되고, 고위급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러시아는 한국, 미국, 중국, EU 등 일부 주요 국들과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연설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만남은 아시아의 동쪽과 유럽의 서쪽이 만나고, 태평양의 서편 이 대서양의 동편과 조우하는 유라시아 시대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러시아가 건설적 기여를 하도록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였으며,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제시하여 한·러 실질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신실크로드 비전(철도, 에너지, 녹색)'은 한·러 경제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태평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철의 실크로드',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원개발 기술력·경험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에너지 실크로드',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접목하여 제2의 녹색혁명으로 나아갈 '녹색 실크로드'는 단순한 구상에만 머물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및 러시아 경제현대화 사업 참여, 우리 기업의 연해주 농장 진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수준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는 양국 간 실질협력 이 에너지·자원, 우주·항공, IT, 농수산업,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경제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민·관·산·학간 포괄적 대화체인 한·러 대화를 출범시켜 최고위급 및 각계 주요인사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러시아 거점도시 행사 개최 등 저변 확대 및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경주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2012년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 신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정착하고 러시아 정부가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경제현대화 정책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제1절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강화

## 1.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중요한 척도인 '정상간 교류' 측면에서 지난 5년 동안 한·러 양국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첫 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2008년 첫 방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G8, G20 등 다자외교의 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쳐 한·러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한·러관계 증진을 위한 정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번째 방러를 계기로 2008년 9월 한·러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군사동맹국이 아닌 국가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로서 한·러 양국이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상호방문 6회를 포함한 총 8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러시아 정상외교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와의 정상외교 정례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매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주요 실질 협력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관심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명박정부 5년간 양국 협력 관계는 에너지·자원,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러시아 경제현대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등 정치·경제·안보의 제반 분야를 포괄하

### 한·러 정상회담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정상회담 개최 계기	비고
1	2008.7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2	2008.9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공식방문	
3	2009.7	이탈리아 라퀼라 G8 정상회의 계기	
4	2010.9	아루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 계기	메드베데프 대통령 주최 정책포럼
5	2010.11	메드베데프 대통령 국빈방한	제1차 한·러 대화 출범(서울 개최)
6	2011.11	제2차 한·러 대화 참석 계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개최
7	2012.3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8	2012.9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 매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

이명박 대통령과 매드베데프 대통령의 신뢰와 우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010년 9월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개최된 정책포럼 참석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러시아 방문이다.

매드베데프 대통령이 두 달 후인 2010년 11월 G20 참석을 위하여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박 대통령은 매드베데프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제포럼을 빛내주기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정상방문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양국 정상 간의 우정과 친분이 더욱 깊어진 계기가 되었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는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협력의 수준도 질적으로 크게 격상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러시아 외교정책 수행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한국을 아태지역 국가들내 호혜적 협력 발전 대상국으로 명시하였다.

양국 간에는 한·러 외교장관 회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등 정부 간 정례 협의체뿐 아니라 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 민간 협력 채널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협의체들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 및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8년 9월 러시아 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출범한 '한·러 대화'는 그 규모와 의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러 대화는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정치·경제·학술·문화계 유력인사들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는 사실상 최대 규모의 민간 협의체이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의 해에 서울에서 출범한 제1차 한·러 대화에는 양국에서 약 3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201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 대화에는 양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학계 등에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차 및 2차 한·러 대화 폐막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여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직접 청취하였다. 이처럼 한·러 대화는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채널로 부상하였다.

## 2. 한반도 평화 · 안정을 위한 협력

이명박정부는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과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의 주도적 기여를 목표로 러시아 정부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중요한 계기마다 러시아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대하여 ‘북핵 불용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실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strategic interest)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이익과 상호보완적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고 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게 탄도 로켓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보리결의 1874호 채택에 찬성하였다. 러시아는 2011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하여서도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사건의 경우에서 이명박정부는 러시아와 신속히 협의하여,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준엄하게 비판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한 당일(3.16) 외교부 논평을 통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3.26)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행위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러시아는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제2절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1990년 수교 이래 한·러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기반하여 경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2008년 한·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 실질협력은 에너지·자원, 우주·항공, 농·수산업, IT, 경제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2008년 러시아 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은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실크로드 비전'을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하였고, 동 기조 하에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한·러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 11월 국민방환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해운협정,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등 2개의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었고 9건의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이와는 별도의 자리에서 양국은 에너지·자원, 수산, 세관, 산업·인프라 등 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체결된 한시적 근로협정의 발효로 2012년 1월부터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의 체류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되고, 연간 노동 쿼터도 폐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내 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 2010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은 양국 실질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은 푸틴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향후 한·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동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 3대 실크로드 비전(2008.9.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 연설)

- 철의 실크로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로의 대동맥 건설
- 에너지 실크로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건설 경험을 결합하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 녹색 실크로드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접목하여 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연결하는 녹색벨트 구축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주요 전략사업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의지를 재 확인하였으며, 상호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하여 일반인 사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양국 정상간 노력으로 만들어진 호혜적인 협력 기반 하에 한·러 간 실질협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 1. 교역·투자 확대

한·러 교역 규모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2008년 180억 9,000만 달러이었던 양국 간 교역액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2009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어 2011년에는 211억 5,000만 달러로 한·러 교역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1992년 수교 당시 1억 9,000만 달러와 비교하여 무려 111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국이며, 2011년 103억 달러이었던 대러시아 수출액은 2015년에는 2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000년까지 주로 의류나 영상기기에 치중하였던 수출 품목은 2005년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건설장비 위주로 전환되었다. 수입도 크게 늘어, 수교 당시 7,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대러 수입이 지난해에는 57억 9,000만 달러로 약 83배 급증하면서 한국은 러시아의 14대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대부분 원유, 석탄, 가스 등 천연에너지 자원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투자진출도 괄목하게 신장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러시아 방문은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및 투자 활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방문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푸틴 총리(현 대통령), 마트비엔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현 상원의장)과 연쇄적으로 면담을 갖고,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공장 준공 등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러시아 최초의 한국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 공장이 2010년 9월 준공되었으며, 준공식에는 푸틴 총리가 직접 참석하

한·러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16.6	23.4	38.6	51.8	80.9	97.5	41.9	77.6	103.0
수입	25.2	36.7	39.4	45.7	69.8	83.4	57.9	98.9	108.5
총교역	41.8	60.1	78.1	97.5	150.7	180.9	99.8	176.5	211.5

※ 자료: 한국무역협회

였다. 특히 현대자동차 공장은 외국 자동차 메이커 중 최초로 러시아내 전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동반진출 협력사와 함께 약 5,000여 명의 현지 신규 고용을 창출한 바, 푸틴 총리는 준공식에서 동 프로젝트를 양국 간 성공적 경제협력 모델로 크게 환영하였다.

이 외에도 롯데 그룹은 아시아 지역 호텔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에 진출하여 모스크바에 2007년 백화점, 2010년 호텔을 건립한 데 이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제2의 호텔 건립을 검토 중이다. 또한 KT&G는 러시아내 초슬림 담배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모스크바 남쪽 칼루가주에 담배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46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2008년 밀어닥친 전 세계적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진출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1년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약 250여 개이며, 이중 50개 업체가 대기업 및 은행, 200여 개가 은행 및 중소기업이다. 2011년 한국의 대러 투자 누계는 27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2. 신실크로드 비전 실현을 위한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협력 강화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66.4%(한반도의 51배)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18.2%에 불과하며, 극동지역만 별도로 살펴볼 경우 러시아 전체 지역총생산(GRP: Gross-Regional Domestic Product)의 1/17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미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극동시베리아지역은 석유·가스, 석탄, 목재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의 통로로서의 지정학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준비사업을 블라디보스토크와 인근지역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대통령 취임식 직후 서명한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동 지역 개발을 담당할 별도 부서로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이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전개될 곳이기도 하다. 2010년 야로슬라블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명박 대통령은 ‘미래 러시아의 융성은 시베리아로부터 비롯된다’는 18세기 러시아의 대학자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굴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안보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극동시베리아 진출은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직접적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치·안보 지형 변화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교역·투자 확대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지역 간 협력은 2008년 이래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1년 극동지역과의 교역액은 93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50.2%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치고 극동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자료: 러 연방관세청). 이와 함께 4,000만 달러 규모의 연해주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 공장 설립, 인천공항공사의 하바롭스크 공항현대화 사업 참여, 계통건설의 하바롭스크 아파트 건설사업 수주 등 우리 기업들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투자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공장 건설의 경우 2012년 APEC에서 러시아 정부는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동 사업을 성공적인 외국 투자 유치 사례로 적극 홍보하였다.

### (2)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러시아가 한·러 간 가스·전력·물류 협력을 위하여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송전망·철도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을 연계한다는 경제 협력 사업을 의미하며, 이명박정부의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의 핵심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과 한국의 자원 인프라 개발 기술력·경험,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하여 극동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러시아의 이해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우리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상호이익을 창출하여내는 협력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러시아를 매개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 경제를 돕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지닌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러

시아 측에 동 사업을 제안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 간 2017년부터 25년간 연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 경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MOU 체결을 기점으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스도입을 위한 기술적·상업적 조건에 대하여 협상 당사자인 우리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사 간 실무협상을 통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11년 8월 러·북 정상회담 시에는 북한도 가스관 연결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양국 정상 간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향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및 경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러시아의 사할린-II 광구에서 생산한 천연가스(LNG)가 도입(20년 간 연 150만 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과 TSR-TKR(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 종단철도) 연계 사업도 남·북·러 모두에게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3국 간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3) 농업 협력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 경영체계를 접목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우리 영농기업의 연해주 진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 기업의 극동지역 농업분야 진출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제2차 한·러 대화 참석차 방러한 계기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양국 간 농수산업 협력 증대를 위한 한·러 농업협력 MOU 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래 크게 확대되어 현재 아그로상생, 에코호즈 등 10여 개의 기업이 연해주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콩, 벼, 밀, 옥수수등 약 4만 톤 규모). 한편 한·러 농업협력 MOU는 2012년 5월 카잔에서 양국 농업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 3. 실질협력 확대 · 심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추구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러시아가 동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아·태 진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러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점차 심화시켜 왔다. 2008년 4월 이소연 씨가 러 우주선(소유즈)을 이용한 우주비행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였고, 우주발사체(KSLV-1, 나로호) 협력사업 추진,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등 양국 간 우주·과학 기술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나로호 사업은 한·러 간 우주협력의 중요한 사례이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투자로서 그 동안 한·러 우주 협력을 통하여 전수 받은 과학첨단기술 및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한·러 경제현대화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11월에는 우리 지식경제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러시아와 경제현대화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경제현대화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효율, IT, 의료, 우주기술,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한·러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 한·러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업 상담회가 개최되었고, 경제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스킨코보 혁신단지에 한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나로호 개발 개요 및 발사 현황

- 100kg급 소형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 사업기간: 2002-13년, 총사업비: 5,205억 원(본사업 5,025억 원, 3차 발사 180억 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간 공동 개발
  - 시스템 설계 · 조립 · 발사운영: 공동 수행
  - 발사체 1단은 러시아 개발, 발사체 2단은 국내 개발
- 1·2차 실패원인에 대한 개선 · 보완 조치 이행 후 3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러 흐루니체프사 간에 합의(2011.12)
  - 1차 발사(2009.8)는 페어링 미분리로 궤도진입 실패, 2차 발사(2010.6)는 발사체 1단 비행 구간에서 통신두절 후 폭발

### 제3절 문화·학술·인적 교류 확대

이명박정부 하에서 한·러 간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의를 통하여 양국은 사증면제 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한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원 설립 협정 추진 합의를 통하여 러시아는 한국에 문화원을 개설하고, 우리는 주러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 양국 간 인적 교류 현황은 14.4만 명으로 한·중, 한·일 등 다른 국가와의 인적 교류 현황과 비교할 때 아직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향후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호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국 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진출기업과 근로자들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사회보험료 이중납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러시아 전역에서는 약 80여 개의 오페라·발레·연극 등 문화공연, 유물전시회, 한국 상품전 및 한식홍보행사 등이 개최되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민간 주도의 포괄적 대화채널인 ‘한·러 대화’가 출범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산·학·민·관을 아우르는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최근 단기·일회적 행사 중심의 교류를 탈피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러 공공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한·러 간 교류 협력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러시아 ‘거점도시사업’의 정례적 개최, 친한 네트워크 구

#### 러 거점도시행사 개요 및 현황

- 개요: ‘거점도시 사업’은 한·러 간 교류 협력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무·경제·문화 종합행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무역·투자 설명회, 한국영화제 및 문화공연, 기업·교민 간담회 등 정무 외에 더욱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 개최 현황(2008년~현재)
  - 2008년 예카테린부르크(11월), 모스크바(11월)
  - 2009년 카잔(6월), 로스토프-나-도누(11월)
  - 2010년 노보시비르스크(6월)
  - 2011년 니즈니 노보고로드(6월), 캄차트카(9월)
  - 2012년 로스토프-나-도누(5월), 블라디보스토크(6월), 칼리닌그라드(11월)

축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서의 'Korea Society(가칭)' 발족 추진 등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주변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현지밀착형 공공외교 강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한·러 수교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1904년 2월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함대의 공격 시 항복요구를 거부하고 자폭한 러시아 순양함 바라크호의 함대旗, 러시아 국기 등 관련 유물 14점을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 9개 도시 순회하여 전시하였다. 바라크호 유물의 러시아 도착행사에 메드베데바 여사(영부인)도 참석하였다. 인천시는 러시아 측의 바라크호 유물 대여 요청에 따라 2010년 11월 2년간 유물을 러시아 측에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4편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 강화

- 제1장 신아시아 외교 추진
- 제2장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 제3장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 제4장 지역 협력 외교

## 제1장

# 신아시아 외교 추진

### 제1절 아시아를 품은 글로벌 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계기에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증진을 기조로 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하였다.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는 물론이고,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면서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첫 해에 미·중·일·러 4개국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한·일·중 3국 정상 간 협의체제도 강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면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남태평양 등 아시아 내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가 그간 이룩한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나누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증진시키고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도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였다.

첫째, 경제, 자원, 인구 등 각 영역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점을 감안하였다. 신아시아 외교가 태동한 2008년 당시 이미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전 세계 GDP의 4분의 1, 교역의 4분의 1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시장이었으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둘째,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중추적 동반자 외교(pivotal partnership diplomac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가 속한 지역인 아시아의 이웃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공동의 협력을 추구하여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여,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하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은 품격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아시아 권역별 통합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공동체가 출범하면서 지역 단위 협의체의 협력과 통합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던 ASEAN+3, EAS 등 아시아 지역의 다자협의체의 협력도 이에 발맞추어 가속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다자 차원의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화두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이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지역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아시아외교를 전개하여 왔다. 첫째, 아시아 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유사 입장국가(like-minded)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3월 호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한·호·인니 3국이 아·태지역에서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역내 지역협력 및 G20, APEC, EAS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아시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어 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응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나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여 나갈 수 있는 고유의 독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FTA 체결확대 및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국가들과 ‘맞춤형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시아 지역 내에 천연자원 부족들과는 호혜적인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증진에 주력하는 한편 2010년 1월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고, 2012년 베트남과는 FTA 협상이, 인도네시아와는 CEP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지속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주요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교역, 투자, 서비스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유무상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대아시아 기여외교를 증대하여 나갔다. 이미 2008년 당시 이명박정부는 ODA 전체의 33%를 아시아 지역에 할당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원조 규모를 증액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단계에 맞춰 다양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나갔다.

신아시아외교의 성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당초 ASEAN+3 회의 계기에 개최되어 오던 3국 정상회의를 2008년부터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데 기여하였고, 2010년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청사진인 ‘VISION 2020’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설립함으로써 3국 협력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명박정부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한·ASEAN FTA 체제 완결, 한·ASEAN 센터 설립,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을 통하여 ASEAN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2012년에는 ASEAN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타에 주ASEAN 상주대표부를 설치함으로써 ASEAN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ASEAN+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협의체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역내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안보·경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 인구의 1/5이 밀집하여 있는 서남아 지역에서는 특히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2010년 1월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함으로써 전면적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 뉴질랜드와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는 물론 세계금융협력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우리

의 글로벌 어젠다 추진에 있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그간 소원하였던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도서 국가들과 외교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자원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풍부한 에너지·자원, 견조한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는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와의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협력은 최근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IT,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유·무상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국가들의 산업 다변화 전략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2절 한·일·중 협력 강화 및 제도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지역 통합이 국제무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3국 협력 의장국 順에 따라 한·일·중 순으로 표기).

한·일·중 3국 협력은 3국 간 공동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협력체로 발전하여 왔다. ASEAN+3 계기 한·일·중 3국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3국 정상회담의 순환개최를 정례화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3국 협력을 보다 내실있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한·일·중 3국 협력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역내 지역통합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5, GDP의 1/5, 교역액의 1/6을 차지하고 있고, 3국을 합친 경제규모는 NAFTA, EU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크다. 경제 협력을 통한 3국의 공동 발전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일·중 3국 협력을 통한 역내 안정과 번영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다.

강대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 경제·안보적 상호 의존과 경쟁 구도가 공존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일·중 3국 협력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지역협력 메

#### 한·일·중 3국 관련 주요 통계(2011년 기준)

- 인구: 15억 2,000만 명(전 세계 인구 21.6%)
- GDP: 14조 77억 달러(전 세계 GDP 20%)
  - NAFTA(약 17조 달러), EU(약 16조 달러)에 이어 세계 3번째
- 교역액: 5조 8,169억 달러(전 세계 교역량 17.6%)

커니즘의 하나이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상하이협력기구(SCO),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아시아에서도 권역별 지역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아시아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 및 일본 정부와 함께 지난 5년간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1.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무엇보다 3국 협력의 주요 성과는 한·일·중 3국 간 별도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반 분야의 협력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국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시 3국 정상 간 조찬 회동을 시작으로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2004년부터 ASEAN과는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외하여 온 결과 2008년부터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총 5차례의 한·일·중 3국 간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어 향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세계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일 및 한·중 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에 합의함으로써 금융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한·일·중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 '한·일·중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일·중 공동발표문' 등을 채택하였다.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2009.10.10,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일·중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이 채택되

있으며,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3국 협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발전을 위한 상설 사무국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3국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2010.5.29~30, 한국 제주)에서 이명박정부는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은 '3국 협력 VISION 2020'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가속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등의 신규협력사업을 승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를 확인하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개최된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2011.5.21~22, 일본 도쿄)에서는 '재난관리 협력 문서' 및 '원자력안전 협력 문서' 등을 채택하고 동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1년 12월에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일·중 청소년 미래포럼'을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미래세대 간의 교류기반을 확대하였다. 2012년 개최될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과 중국의 지지와 협력도 확보하였다.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2012.5.13~14, 중국 베이징)에서는 3국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연내에 3국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과 '농업 협력 부속문서'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를 채택하고, 공공외교 협력,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추진 등 3국 협력의 범위가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되었다.

3국 간에는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약 60개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에는 제1차 3국 농업 장관회의(2012.4.14~15, 한국 제주)가 개최되고, 3국 교육장관회의 및 산업장관회의의 신설도 논의되는 등 3국 간 협의체 증설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 분야별 3국 협력 주요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경제·통상	한·중·일 FTA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11년 종료, 3국 FTA 협상을 개시 준비 작업 착수 합의(2012년 제5차 3국 정상회의 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양자 간 투자협정을 3국으로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상호 투자 확대 목적,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 시 체결
환경	한·중·일 황사대응 공동협력사업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네트워크, 황사 방지 및 통제 공동연구
	순환경제시범단지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친화형 산업단지
문화	한·중·일 문화서툼	영화, 유물, Youth Festival, 음악, 현대미술 등 다양한 주제의 문화행사 개최
교육	CAMPUS Asia	3국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학술교류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	3국 정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소장 인사들 간 미래지향적 대화체
	한·중·일 3자 협력 포럼	3국 외교안보 국책기관 (한국 외교안보연구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간 학술교류 사업
청소년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매년 3국 간 순회 개최, 각국 청소년 100명씩 참여, 문화체험, 산업연수, 청소년 교류 활동
민간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3국 정상회의의 계기 3국의 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3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한·중·일 30인회	3국 주요 언론기관 공동주최, 3국의 정치원로·경제인·석학 간 민간 정책 포럼

## 2.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이와 같이 3국 협력이 분야별로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감에 따라 다양한 협의체 및 협력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상설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중·일 정상도 동의하였다. 2009년 12월 이명박정부는 3국 협력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설치할 것을 중·일 측에 공식 제의하였고, 2010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MOU'를 채택하였다. 2010년 12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이 체결되고 2011년 5월 17일 발표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1년 9월 1일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하였다.

3국 협력 사무국은 다양한 분야의 3국 간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3국 협력 사업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3국 협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3국 협력의 실적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3국 협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사무국 웹사이트 운영 등 3국 협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등 주요 협의체 참여,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10.15, 신라호텔) 개최, △한·중·일 3국 의회 포럼(Trilateral Parliamentary Forum) 제안, △재난관리 상시연락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관리 모의 도상 훈련 추진 등 3국 협력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국 협력 사무국의 서울 유치에 이명박정부가 역내 중·일 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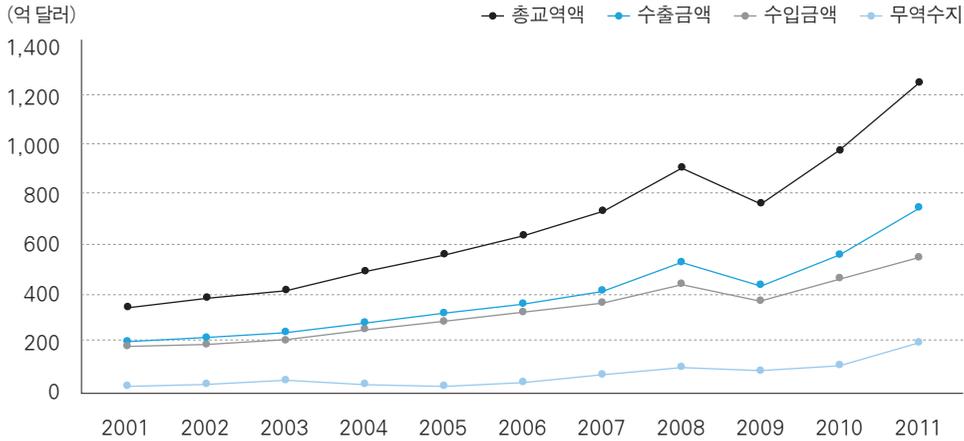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3국 간 별도 정상회의 정례화 및 사무국 설립 등 3국 협력의 발전 과정에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시된 이래 1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3국 협력은 다방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 협력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3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여 나갈 것이다.

### 제3절 한·ASEAN 협력관계 심화

#### 1. 한·ASEAN 관계: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2009년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외교’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기존의 주변 4국 중심 외교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외교로 지평을 확대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신아시아외교’를 통하여 경제규모 10위권의 국력에 걸맞게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여 나가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신아시아외교’의 핵심인 한·ASEAN 관계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우선, 2009년에는 ASEAN과의 대화상대국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된 데 이어 한·ASEAN FTA가 발효되었으며, 2010년에는 한·ASEAN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1년에는 한·ASEAN 교역 규모가 1,2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ASEAN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ASEAN은 미국에 이어 제2의 해외투자대상지역이며(투자액 61억 달러), 중동지역에 이어 제2의 건설수주대상이 되었다(건설수주액 128억 달러).

## 실태조사 체감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엇보다도 한·ASEAN 관계 발전사에 있어 2009년은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2일간 ASEAN 10개국 정상 및 ASEAN 사무총장을 초청, 제주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지난 20년간의 한·ASEAN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측 간 실

### 대ASEAN 3대 정책문서 내용

- 개발협력
  - 대ASEAN ODA 규모 2015년까지 2배 확대(2015년까지 3억 9,500만 달러로 확대)
  -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확대(2015년까지 ASEAN 연수생 총 7,000명 초청,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1만 명 파견)
  - 기후변화 대응지원 확대(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09~2012년간 1억 달러 지원)
  - 개발경험 공유 확대 등
- 저탄소 녹색성장
  - 녹색성장 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협력
  -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고화
- 문화·인적 교류
  - 2012년까지 연간 초청 장학생 수를 2배 확대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전문역량 강화
  - 문화유산 보존 협력체제 구축
  - 쌍방향 관광 증진 및 관광 분야 협력 강화

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ASEAN과의 구체 협력방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대ASEAN 3대 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한·ASEAN 투자협정은 9월에 발효되어 한·ASEAN FTA 체제가 완결되었다.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는 ASEAN 10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였다(참석 정상: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응웬 쩌 중' 베트남 총리,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 총리, '부이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모하마드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 '폐인 세인' 미얀마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리 쉐룽' 싱가포르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당시, 한국과 ASEAN 10개국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ASEAN 전통 오케스트라는 전통 음악과 전통 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곡을 창작, 11개국 정상 앞에서 화려한 공연 무대를 펼쳤으며, 이후에도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 하에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로서 매년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정상회의의 계기 진행된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바베큐 꼬치를 구워서 각국 정상들에게 대접하는 모습, 김윤옥 여사가 직접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동반하여 서귀포의 명소를 둘러보던 모습 등은 ASEAN 회원국 정상들의 신뢰와 마음을 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ASEAN 실질협력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

#### 한·ASEAN 협력기금

- 한국 정부는 한·ASEAN 협력 강화의 목적 하에 1989년 한·ASEAN 부분 대화체제 발족 시 연 1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통하여 한·ASEAN 협력기금을 설립하였다.
- 한·ASEAN 협력기금은 한·ASEAN 간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계기로 2010년부터 연간 500만 달러로 기금이 대폭 증액되었다.
- 대표적인 기금 사업으로는 한·ASEAN 환경협력사업단의 환경협력사업, 대검찰청 마약과의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사업 등이 있으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80여 개의 사업 시행을 통하여 민간 차원의 한·ASEAN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동 기금 사업 중 한·ASEAN 환경협력사업단이 추진하여온 '동남아시아 해안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은 환경 분야 학자들의 연구 역량 향상 및 ASEAN 국가의 젊은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향상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ASEAN 국가의 산림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산림 분야의 첫 국제기구인 한·ASEAN 산림협력기구 설립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2011년 한·ASEAN 정상회의의 시 외교장관 간 서명한 한·ASEAN 산림협력협정은 2012년 8월 발효되었다.

바, 2009년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계기에 한·ASEAN 협력기금을 2010년부터 연간 50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한·ASEAN 협력기금은 한·ASEAN간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며 한·ASEAN 간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하여 양자 간 실질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선진기술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한국문화 알리기에 주력하여 한류와 함께 ASEAN국가들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를 통하여 한·ASEAN 간 인적교류는 한층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2011년 ASEAN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은 124만 명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체 외국인의 12.6%를 차지하였고, ASEAN을 방문한 한국인은 306만 명으로서 ASEAN 방문 외국인 수 전체의 26.2%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간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ASEAN 센터라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설립되었다.

한국과 ASEAN 정상들은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ASEAN 센터 공식 출범을 환영하고, 한·ASEAN 통상·투자 증진 및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 협력 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ASEAN 정부 차원에서 계속 협력하여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한·ASEAN 센터는 2009년 3월 출범한 이후 무역투자 세미나 개최,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 상품 부문별 전시회 개최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상호 투자를 촉진하여 왔으며, 또한 아세안문화관광축제, 사진전과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연간 70여개의 사업을 수행하여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ASEAN 센터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나라 내에서 ASEAN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ASEAN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기존에 우리의 대 ASEAN 외교가 우리 기업과 상품의 ASEAN 시장 진출 및 투자, 그리고 한류와 한식의 세계화 등 일방통행의 성격이 강하였던 반면, 한·ASEAN 센터는 한국 내에서 ASEAN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따뜻한 이웃이자 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도 각인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ASEAN 센터는 양측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과 ASEAN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향후 아세안상공회의소 및 아세안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한·ASEAN 교류 협력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한·ASEAN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2년에는 ASEAN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우리나라의 주ASEAN 대표부가 설립됨으로써 교

## 한·ASEAN 특별정상회의

2009년 3월 인도네시아 국민 방문 계기 유도요노 대통령은 “IMF 당시 여타국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를 떠났지만 한국기업들은 끝까지 남아 고통을 함께 한 진정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찬사를 보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둔 중요한 시기로 해외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고려,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를 위하여 특별히 별도 오찬을 가지면서 정상 간의 각별한 우의를 다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기념 행사로 한·ASEAN 11개국의 79개 전통악기만으로 구성된 ‘한·ASEAN 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과 ASEAN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

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찬사와 기립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폐막일에 ASEAN 정상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식오찬을 개최하고 직접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숯불 화덕에서 바베큐 꼬치를 구워 일일이 나누어 주는 등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이에 ASEAN 정상들은 “정말 특별하였다.”고 찬사를 극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우의를 다졌다.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ASEAN 10개국 정상을 최초로 국내에 초청하여 개최한 대규모 행사로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외교의 핵심지역인 ASEAN과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주ASEAN 대표부 개설은 한·ASEAN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ASEAN의 10개 대화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캐나다, EU) 중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주ASEAN 대표부를 개설한 나라가 되었다. 주ASEAN 대표부는 △ASEAN 관련 정례 협의체 참석·지원, △한·ASEAN 협력사업 관리, △ASEAN 및 동아시아 지역 협력 동향 파악, △ASEAN 관련 포럼 및 세미나 참석·지원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한·ASEAN 협력 업무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ASEAN 대표부는 ‘한·ASEAN 센터’와 함께 대ASEAN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양대축으로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아시아외교를 구현하는데 외교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정부의 대ASEAN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ASEAN 국가들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에 대한 지원으

로 확대·심화되었다. 그 동안 ASEAN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ASEAN 내부적으로는 개발격차가 공동체 출범에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에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선언’을 채택하고, 6개 우선협력분야(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농업)에 합의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시범사업 실시,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2013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14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하였다.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개발을 지원하여 ASEAN 회원국들 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ASEAN 국가들 간의 연계성 확대를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한·ASEAN 관계는 ASEAN 내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양자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2년 11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5차 한·ASEAN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신아시아 외교’가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정상들은 양측 간 교역 규모가 5년 전보다 약 2배 증가된 1,250억 달러를 기록하고, 당초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한 교역 1,500억 달러 달성은 그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2012년 10월 ASEAN 한국 대표부의 출범을 환영하였다. 한편 ASEAN이 2015년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ASEAN 연계성 강화’ 사업과 관련, ASEAN 정상들은 이명박정부의 범부처 태스크 포스 출범 및 ASEAN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와의 협력 계획에 대하여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ASEAN 회원국 내부의 개발격차 해소와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연계성 사업은 도로·통신 등 인프라 구축, 법·제도 측면의 조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 ASEAN+3 / EAS: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연출자로 각인

ASEAN+3(한·중·일)는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초청된 것이 계기가 되어 ASEAN+3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당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협력체였던 APEC의 대처능력 부재, IMF의 부적절한 대응 등에 실망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ASEAN+3 국가 정상들이 13개 회원국 간 금

융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ASEAN+3 체제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후 ASEAN+3 국가들은 정치·안보, 농업, 보건, 노동, 문화, 관광 등 20개가 넘는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급에서부터 각료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화된 협의채널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3는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는 당초 이명박정부의 주도로 출범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2002년 제안한 26개 사업의 하나로 ASEAN+3 회원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총 16개국으로 2005년 11월 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태국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제12차 ASEAN+3 정상회의와 제4차 EAS 정상회의가 2009년 10월 22~23일간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및 참여국 정상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회원국 간 신속한 비상식량 지원을 위한 ASEAN+3 비상 쌀 비축제 협정(APTERR), 기후변화, 재난 관리 등 주요 협력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ASEAN+3 식량안보 및 바이오에너지 협력에 관한 성명', 'EAS 재난관리 성명'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ASEAN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 역내 G20 참여국과의 공조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관련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와 안보리 결의 이행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ASEAN+3 정상회의와 제5차 EAS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제1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신속한 통화스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의 발효를 환영하는 등 분야별로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ASEAN+3가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제5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이 공식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굳건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 제안을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참여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9년 12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관련 회의에서는 미·러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참여 문제가 부상하였고, 2010년 4월 하노이 개최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미·러의 EAS 가입을 권고하였다.

제1차 EAS 정상회의부터 초청국(guest)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러시아에 비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EAS의 가입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 증가, 2008년 ASEAN 현장 발표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논의의 가속화 등 아태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 EAS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미국은 EAS 가입을 전후로 '미국 외교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요성, 아시아 회귀(rebalance) 정책' 등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과 EAS 차원에서 미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EAS의 확대 등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과 통합 논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협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는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제1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점검 및 미래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EAVG II는 ASEAN+3 회원국을 대표하는 현인들로 구성되어 그간의 ASEAN+3 협력성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ASEAN+3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4차 ASEAN+3 정상회의와 제6차 EAS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ASEAN+3 정상들은 2012년이 ASEAN+3 정상회의 출범 1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지난 15년간의 ASEAN+3 협력을 되돌아보고, 향후 ASEAN+3가 나아갈 방향을 재고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EAVG II의 출범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EAVG II가 창의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제6차 EAS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재난 대응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이어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한 높은 국제적인 관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온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차원의 제3차 재난구호훈련(DiREx: Disaster Relief Exercise)을 이명박정부가 실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ARF 회원국들은 역내 재난구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난구호훈련(DiREx)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 훈련은 2009년 미국과 필리핀, 제2차 훈련은 2011년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명박정부는 2013년 상반기중 제3차 훈련을 위하여 현재 공동 주최국인 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같은 역내 필수 협력사업에서

적극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갈 예정이다.

2012년 11월 19~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ASEAN+3 1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와 제7차 EA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SEAN+3 특별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15년간의 협력활동을 점검하고 미래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출범한 EAVG II는 201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그간의 ASEAN+3 협력성적을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금융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따른 새로운 도전요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ASEAN+3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가 2012년 11월 프놈펜 개최 ASEAN+3 15주년 특별정상회의에 보고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ASEAN+3 협력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협력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어 ASEAN+3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7차 EAS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 기후변화 및 재난 관리 등 글로벌 이슈,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정세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오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EAS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EAS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문제를 우선 의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여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WTO DDA 협상의 진전, 지역차원의 경제통합,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EAS 1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공식협상 개시를 환영하고, 한·일·중 3국 FTA 협상 출범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에서 탄생한 ASEAN+3 협력 체제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EAS는 이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ASEAN+3 체제와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출범, EAS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EAVG II, 재난구호 훈련 제

안, 글로벌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및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등을 통한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 주도, 한·메콩 외교장관회담 신설(2011.10) 및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제안(2012.11) 등을 통하여 향후 지역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이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제4절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이명박정부는 한·ASEAN, ASEAN+3 및 EAS 등 동남아 지역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ASEAN 10개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6억 명의 인구, 자원 및 높은 경제성장 지속 등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우리에게 있어 정치·외교·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며,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이 경제 침체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며 큰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으로서 동남아 각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이러한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상외교에 힘입어 한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발전하여 오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도 산업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회담 계기마다 국가발전의 경험 공유, 인적 자원 양성 등에 있어 우리와의 협력을 요청하여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동남아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호혜적인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개발경험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1.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방위적 강화

인도네시아는 2억 3,000명이 넘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자원부국·인구대국으로서 지난 5년간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 면적,

##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돈독한 친분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의 우정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유도요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축하사절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이후 양 정상은 2008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 10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워싱턴 정상회의 직후 공교롭게 동시에 브라질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같은 호텔에 체류 중인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의 방을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우의와 신뢰관계는 깊어져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CEO로서 인도네시아 첫 고속도로인 자고라이 고속도로 건설을 진두지휘하였던 인연을 소개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도 1970년대 중반 당시 약혼자였던 영부인 '아니' 여사가 한국 거주 시(초대 주한대사였던 부친과 함께 1년 반 서울 거주) '아니' 여사를 만나러 서울까지 왔던 추억을 소개하면서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갈 때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5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참석차 제주도를 방문하였는데, 6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참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0년 머라뻬 화산 폭발로 국내 정국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두 정상 간 친분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12월 국내정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온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을 위하여 개최 당일 새벽에 발리에 도착하여 저녁에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한 후 말레이시아 1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1박 4일' 해외순방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45명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도요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함으로써 양 정상 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천영우(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GDP 규모 면에서 ASEAN 전체의 약 40%를 점유하는 ASEAN의 중심국가로 post-BRICS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및 대동남아 외교강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외교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경제발전 경험과 선진 경제구조, 고도화된 산업구조 및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지역적 야심이 없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매력적인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필요성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 간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양 정상은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서 양국의 적극적 역할에 공감하며 기기투합하였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였고, 같은 해 6월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여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하였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머라뻬 화산 폭발로 인한 국내정세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는 어려운 결정을 통하여 신의를 지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45명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도요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11월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포럼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공동주재 정상으로 초청하였으며, 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발전과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최고훈장인 '아디뿌르나(Bintang Republik Indonesia Adipurna)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양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상간 각별한 유대관계 속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훈련기 입찰에서 경쟁자로 참여한 타국으로 기울어질듯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승리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이명박정부는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3척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이라는 방산물자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현재 GDP 기준 세계 17위) 진입을 목표로 이른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으로 불리는 중장기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2010년 12월 발리민주주의 포럼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이 '마스터 플랜'의 주파트너로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주기를 요망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1년 2월 대통령 특사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으며, 이후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의 경제협력 실무 T/F 회의를 거쳐 2012년 2월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국'이 자카르타에 개설되었다. 2012년 3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협력 관계의 급속한 발전 성과를 토대로 '2015년 교역액 500억 달러,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라는 교역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국은 2012년 11월 '발리 민주주의의 포럼' 계기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인도네시아 친환경자동차(Green Car) 협력을 위한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친환경차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2월 유도요노 대통령 특사단 방한 시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 협력의 심화·발전 및 경제 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후 3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7월 CEPA 협상을 개시하였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CEPA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GDP 0.13% 증가와 15억 달러의 후생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정부·경제분야 이외에 문화분야 교류 증진을 통하여 양국민 간 실질적 우호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제 1차 한·인도네시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 간 문화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에는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어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 전파 및 한·인니 문화교류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은 2012년 3월 정상회담 시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2013년을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해'로 선포하여 내실 있고 다채로운 수교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베트남은 ASEAN·중국·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석탄과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이명박정부는 ASEAN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주요 협력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베트남과 활발한 정상급 교류를 가졌다. 아울러 이명박정부는 베트남이 추진 중인 개혁개방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 다각적인 한·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20~22일까지 베트남 국민 방문 및 2010년 10월 27~29일까지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방문 시 응웬 밉 쩌엣(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8~10일까지 베트남 국가주석으로서 10년 만에 방한한 쩌엥 떤 상(Truong Tan Sang) 국가주석과 11월 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및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방한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활발한 양국 정상급 교류에 힘입어 한·베트남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상을 반영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쩌엥 주석은 2009년 10월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 한·베트남 FTA 추진 작업반 설치,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2015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 설정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국빈 방문 시 하노이 소재 3개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타운 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베트남의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하여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2011년 11월 쩌엥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방한 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상 주석이 취임 시 제시한 목표인 ‘경제구조와 성장모델 개혁을 통한 베트남의 공업화·현대화’가 한국의 개발경험과도 부합한다는 인식 하에 이에 기초하여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인적자원개발, 고용노동,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하여 한·베 양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의 협력성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후속 협력사업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베트남 측은 또한 양국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활동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우려를 감안,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게 되었다.

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한·베 우호친선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교류와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20년을 지향하는 다양한 상징적 협력 사업도 추진하였다.

2012년 3월 28~29일까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중’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양 정상은 2015년 이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조기 이행하고 향후 목표액 300억 달러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베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12년 8월 한·베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12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또한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 협력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하여 베트남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진출의 기

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양측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원전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사업계약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 3.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강화 기반 마련

미얀마는 2011년 3월 신헌법에 따라 민선 정부를 출범시킨 후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주화·인권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2012년 4월 재보궐선거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실시되고 아웅산 수지 등 야권 인사들이 의회에 진입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대미얀마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명박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에 앞서 그간 소원하였던 한·미얀마 관계개선을 위하여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미얀마를 초청하고, 2011년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2년 들어 미얀마의 급격한 민주화 및 개혁으로 인하여 한·미얀마 양자 관계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5월 14~15일간 전격적인 국빈 방문을 통하여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이후 새로운 양국 관계의 설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미얀마 측으로서는 우리와의 강력한 관계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방문이었다. 동 방문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얀마 정상회담, 아웅산 수지 여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미얀마 방문시 북한의 폭탄테러로 희생된 17명의 우리 고위관료들이 있는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였다. 이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선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측의 개혁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하여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대미얀마 유·무상원조 확대 방침을 전달하고, 미얀마 내 국책연구소(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e, 가칭 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 지원 및 새마을운동 ODA 제공 등 개발경험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얀마 측은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받고, 미얀마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여

러 차례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미얀마 측과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등 상호보완적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미얀마와의 자원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동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확산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폐인 세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얀마와의 부적절한 군사협력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요청하였고 미얀마 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미얀마가 민선정부를 출범시키고 민주화를 지향한 점에서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동 정상회담 시 이명박 대통령은 세인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고 세인 대통령은 답방형식으로 2012년 10월 8-10일간 한국을 국민 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방문 이후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간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및 발전경험 공유,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동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는 미얀마 내 투자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또한 양측은 현재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미얀마 가스전 개발 및 양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에너지·자원 분야 및 공항·상수도 건설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5월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미얀마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개발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얀마의 경제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국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미얀마 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미얀마 내 국책연구소(MDI)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서명하였다. 또한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로 인하여 미얀마에 대한 우리 원조 제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4. 기타 동남아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이명박정부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여타 동남아 국가와의 내실 있는 관계 강화를 위하여 고위급 교류 증대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 (1) 한·태국 협력

태국은 우리나라와 50년이 넘는 우호관계를 맺어온 전통 우방이자 6·25 전쟁 참전국으로, 교역·투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의 일환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태국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4월 및 10월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태국을 방문하였고, 2009년 5월에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아피싯 총리와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하였다. 2011년 8월 취임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공식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2011년 10월 발생한 태국의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하여 우리 측은 대통령 명의의 위로전을 발송하고 약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지원을 하는 등 양국 간 우호친선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잉락 총리 공식방한 시(2012.3.24~25) 개최된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국방·문화·관광·지역경제 등 양국 간 중요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협의를 가지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회의 시 양국 간 수자원관리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8월 양국 정부는 '수자원 관리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우리의 4대강살리기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태국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방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매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은 우리의 수자원 관리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1년 10월 수라퐁 외교장관 방한 시 및 2011년 11월 탁신 전총리 방한 시 한강 이포보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잉락 총리도 2012년 3월 방한 시 한강 홍수통제소, 이포보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4대강살리기사업 및 수자원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국 간 수자원 관리 관련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국방협력 MOU 체결을 통하여 국방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태국 방콕에 우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개설, 태국의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가입을 위한 MOU 체결 등 양국 간 농업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통상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교역이 2011년 139억 달러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5년 내에 교역규모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한·태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우호협력관계 심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31년 만에 태국을 공식방문하였다. 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부대인 21연대를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대표들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였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교역확대를 위하여 '무역경제협력행동계획' 채택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 정상은 태국의 수자원 관리분야에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호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기간 중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태국 경제의 꺾줄인 짜오프라이강과 푸미폰 국왕이 홍수방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랏포 수로를 시찰하고,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2010년 6월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를 통하여 2011년부터 태국에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태국과의 교육·문화 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태국 내 20여 개 대학에 한국어과·한국어 강좌 개설 및 객원교수·강사 파견,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태국 내 51개 중고등학교에도 한국어 교사 파견·한국어 과정 운영비 지원 등 태국 내 한국어·한국학 보급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2011년 방콕 및 칸캔 지역에, 2012년에는 마하사라캄에 세종학당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태국은 2012 여수 엑스포에 적극 참가하여 태국관을 설치하고, 7월 5일 태국의 날을 정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 (2) 한·필리핀 협력

필리핀은 6·25 전쟁에도 참전한 우리의 전통 우방국으로, 한·필리핀 양국은 194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토대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글로리아 아로요(Maria Gloria Macapagal-Arroyo) 필리핀 대통령은 2009년 5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아로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관련 MOU' 및 '농산업복합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MOU' 등이 체결되어 농업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10월 베트남 ASEAN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취임한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개발 협력 강화, 필리핀 내 우리 교민 보호, 북핵 등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필리핀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양국 실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11월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농산업복합단지구축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양국 농업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필리핀이 중점 추진 중인 '필리핀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한 대필리핀 대외원조 협력 전략 수립을 통하여 개발원조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상회담 직후 'EDCF 기본 약정' 및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서명되었다.

한·필리핀 양국 정부는 필리핀 내 약 11만여 명의 한국 교민과 한국 내 5만여 명의 필리핀 교민, 그리고 연간 100만에 달하는 양국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영사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도 지속 협의·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7월 마닐라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고 2012년 5월 한국관광공사 마닐라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문화·관광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 (3) 한·말레이시아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현대건설 재직 시절 페낭대교 건설을 인연으로 말레이시아 국부로 칭송받는 마하티르 전 총리와의 각별한 친분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금년 30주년을 맞이한 동방정책 등에 기반하여 고등교육기관 교류 및 인적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와 각별한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2012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대북 비난 성명 발표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우방국이다.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에 이어 2011년 4월 나집 총리 및 7월 미잔

국왕 방한 등 이명박정부 출범 후 활발한 정상간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2010년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은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후 타당성조사 및 점검회의를 거쳐 연내 FTA 최종점검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은 우리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및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한·말 교역증대뿐 아니라 대말레이시아 투자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정상회담 계기에도 한국이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에너지원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LNG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협력뿐 아니라 석유공사·가스공사와 페트로나스사와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사업 확대를 제의하였다. 한·말 양국은 상호 전략 거점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 이라크, 동남아 지역 탐사·개발과 생산자산 매입 등 공동의 관심사업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라왁 등지에서 구체 신규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계기마다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정성·우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2012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말레이시아 원자력청 ‘연구용 원자로 개조사업’ 수주에 이어 2012년 11월 말레이시아 정부고위대표단이 한국원전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한하는 등 원전 분야에서의 한·말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원전건설 국민수용성 조사 단계를 거쳐 2021년 원전 최초가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원전 협력의 주요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4) 한·싱가포르 협력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동북아 및 동남아의 중견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후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와 4차례 정상회담(2008년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방한, 2009년 11월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 계기, 2010년 6월 상그릴라 대화 계기 공식방문)을 개최하면서 양 정상은 경제·통상, 녹색성장, 문화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는 2008년 11월 22일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 및 양국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당시 글

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 시 경제·통상 협력,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정상회담 후 정상 임석 하에 '한·싱가포르 공동 개발협력 MOU' 및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 MOU'가 서명되었다.

2009년 11월 13일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경제상황과 국제 금융위기 극복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싱가포르 정부의 초청으로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계기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싱가포르측은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 및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간 교역 촉진 등 실질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한국문화원 설립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의 스포츠 협력을 위하여 양국 정상은 2010년 8월 싱가포르 청소년 올림픽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20종목에 102명의 선수를 파견하였다.

##### (5) 한·캄보디아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을 역임하였던 인연이 있는데, 이 같은 양 정상 간 두터운 신뢰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양국 간 교역은 3억 달러에서 5억 3,000만 달러로 1.8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12억 4,000만 달러에서 40억 5,000만 달러로(누계, 승인기준) 3.3배 증가하였다. 우리 기업은 캄보디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봉제업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2011년 신규투자 27건 중 21건), 금융(은행 현지법인 설립 등), 농업 및 농가공 분야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협력은 개발원조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한국의 대 캄보디아 개발원조 누적액은 무상원조 1억 400만 달러(1991~2011년간), 유상원조(EDCF) 3억 4,000만 달러(2001~2011년간)를 기록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양국은 2008년 2월 훈센총리의 방한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캄보디아 증시설립 관련 협력에 합의하였고, 이후 한국은 타당성조사 수행 및 캄보디아 증권거래

소(CSX: Cambodia Securities Exchange) 지분투자를 통하여 2012년 4월 18일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양국은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동 계기 양국은 캄보디아 대테러부대 지원에도 합의한 바, 우리 측은 2009년 6월 캄보디아 측 대테러요원 23명에 대한 수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에는 대테러장비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캄보디아 국민 방문 계기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계기 양측은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 측은 캄보디아 조림대상지 20만 ha에 대한 조림사업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양측은 광물자원 공동개발·기술정보교류 MOU 및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의 불용 군수품을 캄보디아에 제공하기로 한 양측 합의에 따라 우리 측은 2010년 10월 항만 경비정 등 총 30종 352점, 2012년 5월 군용차량, 고무보트 등 총 20종 8,743점을 캄보디아 측에 제공하였다.

#### (6) 한·브루나이 협력

이명박정부는 이슬람 절대세습왕정제 국가인 브루나이와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84년 수교 이래 주로 에너지·자원 분야에 국한되었던 양국 협력관계를 ICT 협력, 관광, 문화·인적 교류, 건설 협력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한·브루나이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브루나이 총리실과의 전자정부구축협력사업, KAIST와 브루나이 국립대학교의 전자정부 고위공무원 교육사업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에 힘입어 우리 한국통신이 브루나이 국가데이터센터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우리 기업 컨소시엄(한국도로공사)이 브루나이의 대규모 신산업단지인 PMB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8월 1일 브루나이경제개발청(BEDB)에서 관리 계약 서명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9년 정상회담 시 우리 측이 2013년 LNG 장기도입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2012년 6월 한국가스공사와 브루나이 BLNG社 간 LNG 도입계약을 갱신하여 향후 5년간 연간 100만 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도 유지·발전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브루나이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독립관을 운영하고 5월 13일을 ‘국가의 날’로 지정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하였다.

## 제5절 서남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외교 강화

서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재발견하고 협력을 강화한 것은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ASEAN과는 비교적 일찍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로 대표되는 서남아·태평양 지역은 객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외교적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 1.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이명박정부는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인도는 인구 12억의 대국으로 최근 연평균 6-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BRICS의 일원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 이전 양국관계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이는 인도가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권과 가까운 외교정책을 펼쳤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신아시아 외교는 이렇듯 다소 소원하였던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낳았다. 이명박정부는 세계강국으로 급부상한 인도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대인도 외교정책은 ① 역내 안보지형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②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통한 실질협력 강화, ③ EAS, UN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공조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인도 국경일(Republic Day)의 주빈자격으로 인도를 국민 방문한 계기에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그간 경제통상 분야에 치중하였던 양국 협력관계를 포괄적,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분야 협의체제 구축,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CEPA를 통한 교역 증진, 2011년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협력 기조는 긴밀한 정상간 교류를 통하여 공고히 지속되어 2011년 7월 '과탈' 인도 대통령의 국민 방문 계기에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어 민간 원전협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사증간소화협정 서명을 통하여 양국 간 비즈니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다. 한편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방한한 '싱' 인도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도 양국이 경제·통상 교류를 넘어서 전

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인도는 2011년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서남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회복을 선도 중이며,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은 우리의 대인도 외교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한·인도 CEPA 체결을 통하여 인도의 거대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고 교역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대인도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부품, 철강, 전자제품 등이 관세철폐나 감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1월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한·인도 양국 간 교역은 약 65% 증가하여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양국 간 투자누계액은 3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CEPA 체결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월 정상회담 시 이명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교역액 목표를 2015년까지 400억 달러로 설정하고, 교역요건 변화를 반영한 CEPA 개선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확대일로의 양국 간 통상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상호투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2011년 7월 및 2012년 3월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은 양국 간 최대 경제협력사업인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합의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중국의 부상 및 변화하는 동아시아 역학관계에 대응, 높아진 경제위상에 걸맞게 주변국과의 실용주의적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역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하여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 중견 강국으로서 대외 위상 제고를 도모하여 왔는 바, 양국은 실제로 G20, EAS, UN 등 주요 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 출신의 '싱' 총리와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 왔으며, 이렇게 형성된 양국 정상간 유대는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 호주·뉴질랜드 등 대우방국 외교 내실화

이명박정부는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전통적인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인 호주·뉴질랜드와도 빈번한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한반도는 물론 제반 지역·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왔다. 이러한 기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첫 해외 방문지로 호주·뉴질랜드를 찾은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호주는 매우 안정된 경제를 가진 국제사회의 중견국가(middle power)이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일련의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에도 큰



(저와) 호주의 러드 총리와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은 오는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러드 총리와 저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하여는 재정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외교상 전례 없이 공식만찬이 끝난 후에도 수행원들을 모두 물린 채 밤늦게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풍부한 자원과 선진기술을 가진 호주, 그리고 아세안 중심국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공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호주·인도네시아 방문 후 라디오 연설(2009.3.1)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성장과 경제적 동력을 유지하여 왔다. 또 1980년대 말 APEC 형성 당시 논의를 주도하는 등 일찍부터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지역협력과 다자주의에 활발하였던 글로벌 중견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에 노력하여 왔다. 한국 역시 지역국가들에게 모범적인 민주화 사례를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양국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안보 문제에서도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안보 차원에서 한국과 호주는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좋은 협력대상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호주를 첫 방문하고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분야에서 안보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정상 간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갔다. 지난 2년간 다자회의(ASEM, G20, EAS, 핵안보정상회의, Rio+20, 발리 민주주의 포럼(BDF)), 공식방한(2011년 4월) 등 계기에 7차례에 걸쳐 한·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무·경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양국 정상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여왔다.

2011년 4월 길라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우리나라 농축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규탄하고, 북한이 국제의무 및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특히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호주는 이명박정부가 2010년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사회에 참여하기로 발표하는 등 GGGI 국제기구화를 위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10월 GGGI가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APEC, EAS 등 다자협력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신아시아 외교 선언 이후 양국은 다자무대에서도 중견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우선 EAS에서는 지역의 경제위기와 비전통적 안보분야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참여국으로서 지역적 이해와 중견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가로 한국·호주·인도네시아 삼자협력을 제안하여 역내 민주주의 확산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뉴질랜드와의 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 3차례 정상회담(2009년 3월 국민 방문, 2010년 7월 키 총리 공식 방한,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의 계기)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깊은 역사적 유대, 민주주의의 이념 공유 및 지역평화·번영에 대한 상호의지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민 방문 계기에 개최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는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양국 간 교육 및 연수분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 교육부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연설을 통하여 △녹색성장 협력, △산림·바이오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IT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새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양국 간 협력과제로 제시하였다.

2010년 7월 키 총리가 답방을 하였을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3월 우리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뉴질랜드를 거쳐 남극으로 첫 항해에 성공한 점을 주목하면서 양국 간 남극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8월 우리 외교장관 방문 계기에 ‘한·뉴 남극협력협정’이 서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 간 남극 지역에서의 과학연구 및 보급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호주·뉴질랜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으로 지역 및 국제이슈 관련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규탄성명 발표, 2012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 비난 성명 발표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호주·뉴질랜드와의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히 추진된 바, 2011년은 한·호 수교 50주년 기념 '한·호주 우정의 해'로, 2012년은 한·뉴 수교 50주년 기념 '한·뉴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학술 교류행사를 통하여 양 국민간 거리가 한층 좁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뉴질랜드와의 관계는 정상간 친분과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더욱 공고하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 3.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안정화와 재건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이의 일환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피해에 시달린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2009년 5월 이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내 병원 및 직업훈련원 운영 등의 재건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10년 7월부터는 파르완주(차리카)에 독자적인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아프간 재건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재건사업은 농업, 교육훈련, 거버넌스, 보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찰훈련센터, 교육문화센터, 병원, 직업훈련원 등 시설 운영과 학교, 보건소, 시범농장 등 건축, 연수생 초청사업, 물자지원 등으로 진행되었다. 직업훈련원을 졸업한 아프간인 200여 명이 전원 취업하고,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아프간 환자들이 바그람과 차리카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120명의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는 등 아프간 내 재건사업은 아프간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위한 역량배양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PRT 재건사업은 아프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능력배양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아프간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아프간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2년 반 동안 성공적으로 활동한 한국의 지방재건팀은 2012년 12월 차리카에 소재한 기지를 아프간 정부가 지역경찰훈련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양한 후, 바그람 기지에서 병원, 직업훈련원 운영, 영외사업(학교, 시범농장, 인도교 건설 등) 등 잔여사업을 수행중이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2014년 말까지 재건활동을 점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손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프가니스탄 속담처럼 우리 PRT는 친구이자 손님으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Korean brothers'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기간에 가장 많은 신뢰를 얻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0년 12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가국 정상회의에서 10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치안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기로 확인하였으며, 원만한 권한이양(transition process)을 돕기 위하여 아프간 군·경찰 양성과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하여 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2011년부터 5년간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1년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ISAF 참가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아프가니스탄 정규군 양성과 아프가니스탄 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런던 아프간 국제회의(2010년 1월), 카불 아프간 국제회의(2010년 7월), 본 아프간 국제회의(2011년 12월), 시카고 정상회의(2012년 5월) 등 아프간 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아프간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간과 유사한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4. 여타 서남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

서남아 국가들은 과거에 내전 등 정세불안정으로 경제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재건과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경제발전의 전망이 밝은 국가들과 통상,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내전종식 후 안정을 되찾고 2010년, 2011년 연속 GDP 성장 8%를 상회하고 있는 스리랑카와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확대를 적극 모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 국빈 방한한 스리랑카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양국 수교 35년에 즈음한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에 이루어진 스리랑카 정상방한으로 양국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스리랑카 정부가 10개년 국가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 전력에너지 확충 사업 및 전자정부 구축 사업 등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국 간 경제 통상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정보화·개발 협력 분야의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전력에너지 분야, 스리랑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최근 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강사 파견 및 교육기관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 협력 증진 등 인적 문화 교류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한편 스리랑카 농촌개발의 모델로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나가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협력도 호혜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2007~2011년 동안 연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의 실질협력도 강화되었는 바,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0년 5월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방글라데시 총리로서는 15년 만에 공식 방한하여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방글라데시 내 한국의 최대 투자사업인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조성 등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유·무상 원조, 고용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 수교 40주년을 맞아 2013년을 ‘한·방글라데시 우정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도와 더불어 서남아 지역의 주요국인 파키스탄과의 협력도 확대되었는 바, 2012년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파키스탄 대통령이 파키스탄 대통령으로서 9년 만에 공식 방한하였다. 양국은 경제·통상, 인프라, 산업, 에너지 및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는데, 특히 향후 파키스탄의 수력 발전 및 수자원 개발, 철도발전 분야에서의 양국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후에는 ‘무상원조기본협정’ 및 ‘철도 개발 및 협력 MOU’가 서명되어 양국간 개발협력 및 철도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내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5. 태평양도서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신아시아 외교의 또 하나의 방향으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

명박정부는 그간 우리 외교 범주에서 소외되었던 태평양 도서국들과 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 등의 분야에서 신규협력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신아시아 외교의 외연 확장을 꾸준히 도모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이명박정부의 주도하에 2011년 5월 31일 서울에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태평양도서국 14개국의 외교장관과 태평양도서국 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회의는 이명박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전체와 개최한 최초이자 최고위급 회의로서 동 지역과의 외교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자원·원양어업 분야에서 도서국과의 향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한 외교장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향후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나가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주문하였다.

양자 차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동 정상회의는 1976년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태평양도서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자원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실질협력관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6절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확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중앙아시아는 더욱 중요한 협력동반자로 대두되었다. 중앙아시아는 21세기에 접어들어 풍부한 에너지·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에너지·자원가격 상승에 따라 BRICS와 함께 떠오르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에너지·자원 협력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3대 실크로드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구상 하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하여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고대 이래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무역통로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안보·교

## 중앙아 지역의 자원 현황

구분	석유(억 배럴)	가스(조m³)	석탄(억 톤)	우라늄(톤)	금(톤)	아연(백만 톤)
카자흐스탄	398(3.2%)	1.82(1.0%)	313(3.8%)	436,620(16.7%)	400(0.8%)	30(13.6%)
우즈베키스탄	6(0.0%)	1.58(0.9%)	·	65,620(2.5%)	5,300(10.6%)	·
투르크메니스탄	6(0.0%)	7.94(4.3%)	·	·	·	·
계	410(3.3%)	11.34(6.1%)	313(3.8%)	502,240(19.2%)	5,700(11.4%)	30(13.6%)
전세계	12,580(100%)	185.02(100%)	8,260 (100%)	2,619,310(100%)	49,800(100%)	220(100%)

※ 2008년, 확인매장량 기준, BP 자료, ( )는 세계 전체매장량 대비 국별 점유율

### 한·중앙아 국가 간 정상회담 실적(2008년 이후)

-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총 6회(2008.2, 2008.8, 2009.5, 2010.2, 2011.8, 2012.9)
- 한·카자흐 정상회담 총 6회(2008.8, 2009.5, 2010.4, 2011.8, 2012.3, 2012.9)
-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총 2회(2008.8, 2008.11)

통·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시아-유럽 간 내륙통로의 요충지이며,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아시아-유럽 대륙횡단철도와도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현대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와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현재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공항건설 및 현대화, 도로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무렵, 국제유가는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여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및 경쟁이 날로 치열하여지는 상황이었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정부는 2007년 4.2%수준이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 40%까지 늘려간다는 계획 하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자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지역은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지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08년 확인매장량 기준, 중앙아시아지역은 전 세계 대비 석유는 3.3%, 가스는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라늄은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중앙아시아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적인 에너지·자원외교, 비즈니스 외교에 나섰다.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는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와도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가졌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40억 달러 규모)과 카자흐스탄의 발취쉬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40억 달러 규모)을 수주하는 등 에너지·자원 외교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 문화권으로서 실크로드 무역을 통한 교류역사만 하여도 천여 년이 넘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프로시아 박화는 7세기경부터 고구려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는 1930년대 강제이주된 고려인 후손들이 약 30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신아시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이러한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여수엑스포 유치 지원 등 우리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서 중앙아시아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BRICS의 경제성장 배후지이자 BRICS와 동반성장이 가능한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협력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연 6-7%대 이상의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여 오고 있다. 1992년 우리는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실질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2년에 비하여 225배 늘어난 약 33억 7,000만 달러의 교역을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은 양국관계 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의 틀 속에서도 추진하여 왔다. 매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명박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단지 에너지·자원 공급지로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생발전하는 장기적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은 한·중앙아시아 포럼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2007년 출범한 이래 2012년까지 총 6차례 개최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통하여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IT, 금융, 보건의료, 농업,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한·중앙아시아 간 새로운 협력 수요와 사업을 발굴하여 왔다. 또한 유·무상원조 협력,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다변화 전략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생발전의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규 협력사업 추진 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하게 되고, 중앙

아시아 국민들이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한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 중앙아 5개국과의 관계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	
외교관계 수립	1992.1.28	1992.1.29	1992.2.7	1992.1.31	1992.4.27	
정상회담	10회	12회	2회	1회	2회	
양국관계	전략적 동반자 (2009.5)	전략적 동반자 (2006.3)	-	-	-	
교역규모 (억 달러/2011)	수출	7.6	17.2	2.4	1.4	0.3
	수입	3.7	0.4	47만 달러	200만 달러	0.7
투자 (2011년 신고액/누계)	30억 1,000만 달러	12억 5,000만 달러	36만 5,000 달러	1억 3,400만 달러	6,300만 달러	
고려인 수(2011)	10만	17만	900	2만	1,700	
재외국민 수(2011)	2,500명	2,500명	280명	800명	150여명	

###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석유매장량 세계 9위, 우라늄과 크롬 2위를 비롯하여 동, 아연, 철광석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권 내외에 달하는 자원부국이다. 또한 매년 연평균 7%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각종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신흥시장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처럼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2009년 5월 한·카자흐스탄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이래 양국은 에너지·자원분야 이외 인플라·플랜트·산업기술 등 다방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우리의 에너지·자원외교와 신(신)아시아 외교 구상의 지평을 확대하여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과 총 6회의 정상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역대 대통령 중 카자흐스탄과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의 관계는 오래된 친구처럼 매우 돈독하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관계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친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매 정상 방문 때마다 공식 정상회담 외의 단독 비공식 만찬, 깜짝 방문 일정들이 관례가 될 만큼 친분이 돈독하였다.

2009년 5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별장 사우나에 초청한 '사우나 회동'은 '사우나 비즈니스', '사우나 외교'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다음날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사우나 회동은 국민을 대접할 때 최고 신

회의 상징으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외에는 사우나에 초청한 정상이 우리 대통령 밖에 없었을 만큼 파격적 외교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양국 정상 간 신뢰는 실질협력 확대로 연결되어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40억 달러 규모) 합의, 탐사자원량이 28억 배럴로 추산되는 잠빌 해상광구 공동 탐사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이러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은 '사우나 비즈니스 외교', '카자흐스탄 대통령 별장으로의 파격예우' 등의 화제를 낳았고, 이는 카자흐스탄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실제로 양국 최대 경협사업이자, 수주금액만 40억 달러가 넘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본래 입찰시 한국건설시업과 타국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중이었으나,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수주 약속을 받아낸 사례로 유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할 때 마다 직접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여 왔으며, 2012년 9월 마침내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식이 양국 정상 참석 하에 거행되어 양국 간 협력을 상징하는 모델케이스가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신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의 자원·에너지 외교는 힘과 탄력을 더욱 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40억 달러)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0년 4월 방한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에 나눈 깊은 대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정상외교의 또 다른 성과인 '잠빌해상 광구 탐사 사업(탐사자원량 28억 배럴)'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유전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IT·수송 3대 벨트협력과 녹색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채택한 ‘한·카자흐스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문화, 환경, 보건 등 전방위 분야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로 양국 내 한·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가 개소되어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구축되었고, 우리 의료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활발하여지면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선진국이 되자면 창의적 발상과 도전 정신으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인 ‘코리아 루트’를 새롭게 개척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도에 양국은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함으로써 연내 2회에 걸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핵 비확산,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개척하여 나갈 분야들을 모색하고 새 발판을 닦는데 노력하였다. 2012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은 원전·광물 협력 심화, 우리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기반 확대 등 신규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대 카자흐스탄 투자액은 3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CIS 국가 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으며, 2008년 7억 달러이던 한·카 교역규모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수교 이래 사상 최고치인 11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산업혁신 발전계획(산업 다변화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아시아 선도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시도하는 카자흐스탄에게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맞춤형 협력외교 전략은 우리나라가 ‘개발협력을 위한 최적의 모델국가’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양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경험 파트너십을 탄탄히 구축하여 오고 있다.

양국은 정부·경제 분야 이외에 문화·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09년 5월 양국 정상은 2010년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로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로 지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동 행사 계기 개최된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은 양국민간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행사에 이어 2012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더욱 풍성한 주제들을 담은 각종 문화, 학술 교류행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교류를 질적으로 한층 성숙한 단계로 끌어 올리고 있

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00여 개의 한류클럽(회원 수 2,300여 명)이 활동할 만큼 한류 열풍이 불고 있으며, 아스타나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높은 수강열기로 수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는 등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호감도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며,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규모로 보면 중앙아시아 최대국가이며, 정치적·경제적·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 핵심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경제통상협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2007년 8억 5,000만 달러 가량이었던 교역규모가 2011년에는 2배 증가하여 17억 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4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제1위의 투자국(2011년 기준, 누적 투자액 12억 5,000만 달러)이 되었다. 또한 금 매장량 세계 5위, 우라늄과 몰리브덴은 세계 11위의 매장량을 지닌 자원부국이다.

양국은 정상간 신뢰와 우의에 기반하여 2008년부터 양국을 번갈아 가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주한 국내외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의리와 신뢰 등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치적,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상회담 개최는 에너지·자원 외교 등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 및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 등이 그 기반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부터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맺어 온 양국 정상 간의 오랜 친분에 기인한 것이었다. 2008년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2011년 8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우리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한 국가를 2차례 국빈 방문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은데, 그만큼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애정 및 협력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2010년 2월, 2012년 9월 등 총 3차례 방한을 하였다. 특히 2012년 9월 방한 시에는 양국 대통령 내외분만 참석하는 별도의 오찬을 갖는 등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우정과 신뢰를 공고히 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온 에너지 자원외교의 성과는 한국과 우즈베키

##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친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의 친분은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 시민증을 수여 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5월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타슈켄트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고 3일간의 전 일정을 동행하는 등 양국 정상 간 친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진심어린 우정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으

며 나도 이런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잘 이뤄지길 바라며, 이번 에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환대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동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5개 신규 유망 석유가스광구 개발 참여 등에 합의하였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스탄 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력사업인 40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화학플랜트 건설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 수르길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및 산업다변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국이 상생 발전하는 바람직한 협력사업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지역의 물류허브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나보이 공항 현대화 및 복합물류 허브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위탁운영한 지 3년 만에 나보이 공항은 흑자로 돌아섰다. 나보이 프로젝트도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에너지·자원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IT, 의료보건 등 제반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증진시켜가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화에 드라마 ‘대장금’의 열풍에서 보여지 듯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최근에는 K-POP 동아리 형성 등 중앙아시아에서 한류 확산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공공외교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2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K-POP 경연대회, 아리랑 파티,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 등이 연이어 개최되고, 한국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악, 무용을 소개하는 각종 공연 프로그램이 열려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투르크메니스탄

이명박정부는 중앙아 내 또 다른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강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8년 국무총리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방한, 2010년 이상득 대통령 특사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활발한 교류를 토대로 2008년 2,200만 달러에서 2011년 2억 4,300만 달러로 4년간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양국 간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분야 실질협력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2009년 12월 우리 기업이 사업수주에 성공한 울로탄 지역 갈키니쉬 가스탈황시설(14억 8,500만 달러)은 2012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현황을 점검할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대표적 협력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베이징)과 11월(서울)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 측과 실질 경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이 중동과 동남아 등지에서 환영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강조하여 우리 기업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에 결정적인 힘을 보탤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진출을 시도한 우리 기업들은 갈키니쉬 가스탈황시설 이외에도 2011년 2월 투르크멘바쉬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주(1억 3,000만 달러), 2012년 5월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사업 수주(5억 3,400만 달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울로탄 가스전 가스탈황플랜트 건설 사업

- 참여기업: LGI-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 계약금액: 14억 8,0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
  - 탈황 처리능력: 연간 100억 입방미터
  - 사업방식: 턴키방식(설계, 수주, 구매, 시공 등 포함)
- ※ 2011년 영국 석유매장량 전문평가기관(Gaffney Cline and Associates)은 투르크메니스탄 울로탄 가스전에 최대 21조m<sup>3</sup>(전 세계 7년 사용량 해당)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발표(2011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은 3조 2,229억m<sup>3</sup>)

#### 4. 키르기즈 공화국 및 타지키스탄

한·키르기즈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아시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2008년 양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오랜 기간 추진 되어오던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2011년)되었고, 양국 간에 직항로(2012년)가 개설 되었으며, 2012-14년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통하여 향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2012년 12월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국 간 문화적, 인적 교류도 발전하고 있다. 2012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키르기즈에서 한국주간', '한국에서의 키르기즈 콘서트 및 영화제' 등 양국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양국민간 우호와 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도 2008년 주타직 대사관을 개설하고, 2012년에는 한·타지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제2장

#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 제1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EU의 국제적인 비중은 EU의 통합 진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EU는 2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4개 G8 회원국과 5개 G20 정상회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전체 47개 참가국중 11개 EU 회원국이 참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EU는 인구 5억 명, GDP 16조 2,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서 세계 상품교역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EU와 인권,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교역·투자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하여 나가면서 지역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과 인권·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명박정부와 EU는 1996년 서명한 한·EU 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여 2010년 5월 10일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 위주의 기존 협력 대상을 정부, 내무사법,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 10월 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관세 인하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나갔다. 또한 한·EU 기본협정과 한·EU FTA 체결을 양대 기둥으로 한·EU 양측은 2010년 10월 제5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EU를 상대로 한 정상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과 EU는 더욱 가까운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의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EU 지도층과 격의 없는 협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EU 간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EU 기본협정’과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 협정을 기초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EU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한국과 EU는 공동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é Manuel Durão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한국과 EU 간 협력관계의 발전에 공헌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제6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요지(2012.3.28)

- 양자관계
  - 2010.10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가
    - 양자적, 지역적, 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2011.7.1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확대 평가
    -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 공감
  - 고위정치대화의 정례적 개최 및 인권·개발협력 분야 협의체 신설
    - 개발협력사업 조율, 원조 효과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추진
  - 과학, 연구, 혁신 분야 협력 확대
    - 학생·연구인력 교류, 그린에너지, 나노기술, ICT 등 분야 협력 강화
- 지역 이슈
  -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철회 및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촉구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진지한 노력 촉구
  - 아프간의 성공적 권한이양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약 이행 촉구
  -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란의 국제적 의무 이행 촉구
  - 시리아 정권의 폭력과 인권탄압을 즉시 중단 촉구
- 세계적 이슈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평가
    - 핵·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 안보 증진

- 최근 EU의 경제 관련 개혁 진전 및 한국의 건전한 경제상황 평가
-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시 구체 결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협력 추진
  - 서울 G20 정상회의 등 과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 협력
- G20 및 Rio+20 정상회의 등 계기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전개
- WTO 도하 개발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위한 노력 및 협상 진전 촉구

## 1. 한·EU 협력의 방향 제시

한국과 EU는 1996년 10월 서명된 기존의 ‘한·EU 기본협력협정(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과 ‘공동정치선언’에서 규정된 한·EU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개정협상을 개시하여 마침내 2010년 5월 한·EU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한·EU 기본협정(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을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기본협정은 한·EU 관계의 향후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동 협정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에 기초하여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상회담과 각료급 연례협의회를 개최하며, 국회와 유럽의회 대표단간 교류 등 고위급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UN, ILO, OECD, WTO, ASEM, ARF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비롯하여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및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국제사회에서 역할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EU 기본협정의 서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인권,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 등 핵심적 가치 실현에 있어 여타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새로운 의제 설정과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글로벌 코리아’의 이미지를 보다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EU 기본협정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 협력의 기초와 범위
  - 협력의 기초가 되는 주요 원칙, 협력의 목적, 구체분야
- 정치대화과 협력
  - 정치대화의 목적 및 방법, WMD 확산 대처, 소형무기 및 경화기 불법거래 방지, 중대범죄 관련 로마문서 지지, 테러행위 억제 등 분야 협력
- 지역 및 국제기구 협력
  - UN·ILO·OECD·WTO 등 지역·국제 회의 및 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 경제개발 분야
  - 무역·투자, 경제정책, 기업협력, 조세, 세관, 경쟁, 정보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운송, 해운, 소비자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 지속가능 발전분야에서의 협력
  - 보건,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업·농촌개발 및 임업, 해양 및 수산업,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협력
- 교육 및 문화분야 협력
  - 문화, 정보·통신, 시청각 및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 사법 및 안보분야 협력
  - 법의 지배, 사법협력, 개인정보 보호, 이주, 불법 마약류 대응, 조직범죄·부패 대응,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대응, 사이버범죄 대응, 법집행 분야 협력
- 기타 분야 협력
  - 관광, 시민사회, 공공행정, 통계분야에서의 협력
- 제도적 틀
  - 기존 협력협정 폐기, 공동위원회 설치·기능, 협정상 의무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방식, 중재재판소 구성·절차

## 2.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1963년 한·EU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한국과 EU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큰 축으로 꾸준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그간의 상황을 반영하여 2010년 10월 6일 개최된 제5차 한·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과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출범에 합의하였다.

EU는 2012년 10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0개 역외 주요국들과 과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동반자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가 EU가 각별한 비중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핵심 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킴으로써 양측은 양자차원의 정치, 경제 등 분

야 협력을 계속 심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과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국제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에 대한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성숙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널리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5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요약 발췌)

- 한국과 EU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담을 우호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상들은 가치 공유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한·EU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 정상들은 지난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어 금번 정상회담 직전 한·EU FTA를 서명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를 통하여 무역 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 요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행위자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한·EU관계에 중요한 진전을 공표하였다.
- 한·EU 기본협정 관련, 정상들은 동 협정이 기후변화 및 개발원조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강화된 한·EU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 2009년 5월23일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희망한 바에 따라 정상들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였다.

### 3. EU의 북한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 강화

이명박정부의 활발한 정상외교로 EU의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상황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또한 더욱 확고하여졌다. EU는 그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계기마다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자제와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왔다.

2009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양측 정상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동의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 한반도 문제 및 북한 인권 관련 EU측 대응

- (천안함) 2010.5 Ashton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 규탄 성명 발표
- (연평도) 2010.11 Ashton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 성명 발표
  -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북한의 긴장고조행위 자제 및 정전협정 이행을 촉구, 우리 대통령의 자제요청 환영
- (김정일 사망) 2011.12 Ashton 고위대표 및 Buzek 유럽의회 의장 명의 성명 발표
  - Ashton 고위대표, 북한 새 지도부가 긴장완화, 대화추구, 과거 공약 이행, 경제상황 개선 등 추진하길 희망
  - Buzek 의장,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촉구
-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2012.3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대변인 성명
  - 내달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발표에 대하여 깊이 우려
  - 북한의 국제적 의무 특히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위반
  -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도 저해
  -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고 상호 신뢰 구축조성을 재개할 것을 촉구
- (미사일 발사) 2012.4 Ashton 고위대표 및 Schulz 유럽의회 의장 성명 발표
  - Ashton 고위대표,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와 자제를 촉구
  - Schulz 의장,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와 개혁을 촉구
- (탈북자 문제) 2012.5 유럽의회 탈북자 관련 결의안 발표
  - △ 북한 정권의 인권 위반행위 즉각 중단, △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 중국의 김영환 등 4명의 북한 인권운동가 조속 석방, △ 향후 모든 종류의 EU-중국 간 고위회담에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제기 등
- (신속자 관련 조치) 2012.5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하고 신속자 송환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증언 청취

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EU 정상들은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도록 한국과 EU가 공동 노력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EU는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 인권을 기본원칙 중 하나로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명박정부와 공조 하에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EU는 EU-북한 간 정치대화 등 양자협의를마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2003년 이래 매년 북한 내 제반 인권침해의 즉각 중단,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납북자 문제 조속 해

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여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3일 칸느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EU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면서 EU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하여 좀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측과 접촉 시마다 인권상황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와 신숙자씨 모녀 문제 등 주요 관련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 한·EU FTA 발효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2010년 10월 6일 제5차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한·EU FTA가 서명되고 2011년 7월 1일 동 FTA가 잠정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EU와 자유무역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이 높아짐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대 EU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EU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EU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한·EU FTA를 통하여 에너지, 환경, 우주 등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들과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EU FTA가 신속히 체결되고 발효된 데에는 한·EU 차원의 정상회담과 EU 개별 회원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체결의 필요성과 조속한 발효를 강조하는 한편 2009년 7월 당시 EU 상임의장국이었던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여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와 한·EU FTA 협상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한 가서명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0년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에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빠떼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EU 회원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EU FTA의 조속한 서명을 위한 EU 회원국들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였다. 한·EU FTA 잠정발효 이후 EU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한·EU 간 교역은 일시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한·EU FTA 체결이전부터 무관세 품목이었던 선

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EU내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2011년 7월~2012년 9월 간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대EU 수출은 14.2% 증가하고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10% 증가하는 등 FTA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EU 입장에서 한·EU FTA는 역외 선진 경제권과는 최초로 체결한 FTA라는 점에서 EU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위상과 기대감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 5. 글로벌 이슈에서 EU와 파트너십 확대

한국과 EU는 국제 경제위기, G20 논의 진전 등 주요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글로벌 이슈 분야에 있어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네 차례의 한·EU 정상회담을 통하여 EU 정상들과 유로존 재정위기 및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적극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EU 정상들과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EU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과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EU 정상들에게 적극 설명하여 등 EU 정상들의 정책입안에 우리의 경험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2011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와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였다. 2011년 5월 13일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전·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G20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더욱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 제2절 주요 유럽국들과 협력체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차원의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유럽 개별 회원국들과도 적극적인 정상교류를 전개하며 주요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 55차례의 유럽 개별국들과의 적극적인 정상교류를 전개하여, 유럽 주요 지도층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들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하여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지역 핵심국(프랑스, 영국, 독일), 북유럽 주요국(덴마크(그린란드 포함), 스웨덴, 노르웨이), 유럽 주요국(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 주요국(폴란드), 유럽뿐 아니라 중동·CIS 지역 진출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터키 등 유럽 각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을 모두 방문하며,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양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교류 실적(2008-2012년)

2008 (8회)	6.5~7 핀란드 총리 방한, 9.10~11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10.24~5 ASEM(베이징) 계기 정상회담(덴마크, 폴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스페인), 12.5~7 폴란드 대통령 방한
2009 (12회)	1.18~21 라트비아 총리 방한, 5.22~24 체코 대통령 방한, 5.23 한·EU 정상회담, 7.7-14 G8 정상회의(이탈리아 라퀼라)계기 대통령 유럽 순방(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3.31 G20(런던) 계기 한·영국 정상회담, 9.24 G20(피츠버그) 계기 한·덴마크 정상회담, 9.13~16 이탈리아 대통령 방한, 10.27~30 슬로베니아 대통령 방한, 10.25~27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11.29~12.2 헝가리 대통령 방한
2010 (18회)	1.28 다보스 포럼 계기 정상회담(스위스, 스페인), 2.7~10 독일 연방대통령 방한, 6.14~16 터키 총리 방한, 3.10~12 덴마크 총리 방한, 4.5~7 벨기에 총리 방한, 4.28-29 네덜란드 총리 방한, 10.4~6 ASEM(브뤼셀) 계기 정상회담(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독일, EU) 및 영국 부총리 면담, 11.11~12 G20(서울) 계기 정상회담(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2011 (5회)	5.8~14 대통령, 유럽(독일, 덴마크, 프랑스) 순방, 11.3~4 G20(간느) 계기 정상회담 (EU, 터키)
2012 (12회)	2.4~7 대통령 터키 방문, 3.26~29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터키, 덴마크, 이탈리아, EU, 스페인, 헝가리, 우크라이나, 조지아), 5.29~6.1 스웨덴 국왕 방한, 9.9~12 대통령 그린란드, 노르웨이 순방

### 1. 유럽 지역 핵심국들과의 가치협력 외교를 통한 우리 국가의 위상 제고

프랑스, 영국, 독일은 모두 G8 회원국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질서와 규범 창출에 있어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UN, G20, OECD 등과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유럽 핵심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순 경제협력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범세계적 문제 해결과 국제 규범을 설정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2009년 의장국이었던 영국, 2011년 의장국을 수임한 프랑스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G20 개최를 통한 국제경제 패러다임 구축에 일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EU 핵심국이자 G8 회원국인 독일과도 통일, 사회통합 등과 같은 가치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핵심국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범위를 다자이슈로까지 확대시키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 (1) 프랑스

프랑스는 1886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한국전쟁에 연인원 3,241명을 파병한 전통 우방국이며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로서 GDP 세계 5위(2조 7,763억 달러)의 경제력을 보유한 프랑스와 우리는 2011년 교역규모가 12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하여 유럽의 중심국가이자 EU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12일 G20 서울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국을 방문한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도서를 우리 측에 일괄 대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외규장각 도서가 병인양요로 프랑스로 반출된 지 145년 만에 한국으로 이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양국관계의 해묵은 현안이었던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여 한·불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시키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프랑스 측이 자국 내 문화재 이관에 대한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규장각 도서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결과다.

### 외규장각 도서 반환 경과

- 1991년 11월 외교부는 프랑스 외교부 앞 공관을 통하여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공식 요구
- 1993년 9월 14일 미테랑 前대통령 방한 시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exchange and loan)' 라는 외규장각 도서문제 해결원칙에 합의하고, 양국 전문가 간 실무협의 개시
- 상기 이후 1993년 11월~1997년 11월간 양국 정부대표 간 협상에 이어 1999년 4월~2004년 8월간 민간대표 간 반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 결렬
- 2004년 12월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간 협상체제로 재전환
- 2010년 5월부터 주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외교부를 채널로 협상 개시
- 2010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년 단위 갱신가능대여' 방안의 해결 합의
- 2011년 2월 7일 정부 간 합의문 서명: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금년 5월 31일 이전 한국으로 이관한다는 정부 간 합의문 서명
- 2011년 3월 16일 기관 간 약정 서명: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실질적 이행 조치에 관한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 간 기관 간 약정 서명
- 2011년 4월 14일~5월 27일 4차에 걸쳐 외규장각도서 이관 완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13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10년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규장각 도서 이관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G20에 관한 한·프랑스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11년 11월 간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양자 현안에 국한된 양국 간 협력범위를 글로벌 이슈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 G20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

1. G20 트로이카 국가로서 한국과 프랑스는 G20 논의에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의 책임을 공유한다. 양국은 G20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2. 한국과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와 그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국은 2011년 프랑스 의장국 하에서 개최된 장관회의, 특히 2월 파리 및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과를 환영한다. 양국은 금년도 11월 3~4일 개최되는 칸느 정상회의까지 금년도 과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한다.
3. 한국과 프랑스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G20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칸느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한 야심찬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한국과 프랑스는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에서의 진전을 환영하고, 모든 G20 회원국들이 결정사항들을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양국은 2011년에 유사은행(shadow banking)과 원자재 파생시장 등 규제와 감독이 불충분한 분야로까지 작업을 확대하여 과제를 완료하여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 한국과 프랑스는 자본이동 및 글로벌 유동성 관리를 포함한 국제통화체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지한다. 양국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었던 20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를 비롯하여 2011년 주요과제로 합의된 9개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6. 한국과 프랑스는 1차 상품 시장에 우려를 표한다. 양국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특히 급격한 가격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양국은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등 현물 및 파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식량안보의 제고,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지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의 개선, 생산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단기·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변동성에 대응하는 G20의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7. 한국과 프랑스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양국은 특히 인프라와 식량안보 분야에서 2011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개발재원 특히 혁신적 자원조달에 관한 빌 게이츠의 G20에 대한 권고를 기대한다.
8. 한국과 프랑스는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한국과 프랑스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이은 칸느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이 G20이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이슈라는 점과 기업, 노동조합, 국제기구, 정부가 이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공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2) 영국

한·영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이념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국과 영국은 각각 2010년과 2009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였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 시 전년도 G20 의장국이었던 영국이 슈리티 바테라(Shirity Vadera) 전 기업혁신기술부 국무장 겸 총리실 국무상을 G20 준비지원 한국연락관으로 임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영국의 G20 개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과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영 양국 정상들 간 두 차례 상호방문 및 정상회담을 통하여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31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 참석 계

기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여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동 정상회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그간 취하여진 보호무역주의의 원상복귀 및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기부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원확보 등 중요한 결과들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개최 이전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11.4)를 하며, G20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측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으며, 카메론 총리 이에 대하여 '전폭적 지지'를 보내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와 같은 한·영 정상간 협력의지는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도 이어져 2010년 11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정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방한한 카메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경제 문제에 관한 핵심 거버넌스 체제로서 G20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카메론 총리와 G20 국가들이 환율 및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공조 의지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액션플랜'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장수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중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3) 독일

1883년 통상우호항해조약 체결로 외교관계를 시작한 한국과 독일 양국은 전쟁과 냉전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와 함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눈부신 경제발전 달성 등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8일 국민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Dr. Horst Kohler) 독일 연방대통령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유럽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제2의 투자국인 독일과의 경제통상협력의 심화·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역·투자, 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 분야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그간 한·EU FTA에 대한 독일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EU 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동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독일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쾰러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통하여 한·독 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여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010년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의 통일 및 사회통합 경험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쾰러 대통령의 방한은 독일 연방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공통관심사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8일~11일간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ulff)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Dr. Angela Merkel)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신재생에너지, 남북 문제, 한·EU FTA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이 분단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하여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뿐 아니라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부품소재,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분야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독일 박물관 소장 한국유물전시회 등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교류를 보다 강화하여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녹색성장과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구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여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독일이 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 관련 모든 계기마다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일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메르켈 총리는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독일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 제공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메르켈 총리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개발의제’가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켰다고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동 의

제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 중 독일 통일 당시 주역들과도 만나 통일의 경험과 지혜를 듣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통일 직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드 메이지에르를 비롯하여, 당시 통일 관련 문서에 서명하고 동·서독 간 국방·경제 분야 통합을 주도한 서독 측 주역들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관한 유익하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여주었다.

베를린 일정에 이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들로부터 한국과 독일 간 투자·통상 확대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독일 기업들이 한·EU FTA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신 북방 외교: ‘New Frontier’를 향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친환경 북극권 진출을 위한 ‘신 북방 외교’를 천명하고, 덴마크(그린란드 포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의 모든 정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자원개발·녹색성장 협력 및 북극 신항로 개척에 진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덴마크에 이어 2012년 9월 그린란드 및 노르웨이를 차례로 순방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을 북극권까지 넓혀 나갔다. 대통령의 북극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며, 이를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북극권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기회의 땅 북극에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덴마크와 기존의 안보동맹, 경제동맹 개념을 뛰어넘는 가치동맹인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하였다. 덴마크와의 ‘녹색성장 동맹’을 주축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과의 녹색성장 협력은 지난 5년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명박정부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국내 유치에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 덴마크

이명박 대통령은 2년 연속(2011-2012)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는 한편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59년 한·덴마크 수교 이래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덴마크를 국빈 방문(2011.5.11~12)하여 라스 라스무슨(Lars L. Rasmusse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반 협력분야를 포괄하는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덴마크 수교 50주년인 2009년부터 본격화된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에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감에 있어 강한 연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출범시켰다.

양국 정상은 녹색성장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상의 방안임을 인식하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은 한국 정부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하여 2011년 6월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덴마크 정부가 민·관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 발족시킨 글로벌 녹색성장포럼(3GF: Global Green Growth Forum)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덴마크는 GGGI의 설립협정 17개 서명국 중 가장 먼저 비준서를 기탁(2012.8.16)함으로써 GGGI가 2012년 10월 국제기구화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우리는 덴마크 주도로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및 2차 3GF에 이명박 대통령(2011년 10월 1차), 김황식 국무총리(2012년 10월 2차)가 참석하여 3GF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2010년 10월 서명된 ‘한·덴마크 취업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와, 2010년 3월 서명된 ‘한·덴마크 사회보장 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와 경제통상·문화 분야 협력 기회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국제금융, 기후변화협상, 비확산, 핵안보, 해적, 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헬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hmidt) 덴마크 신정부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여수박람회 참석차 방한한 프레데릭(Frederik) 덴마크 왕세자는 75개 덴마크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통상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 한·덴마크 기업인 세미나 ‘Inspiring Denmark’를 개최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녹색 성장 산업부문에 있어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김황식 국무총리가 2012.10.8~10.9간 코펜하

겐에서 개최된 제2차 3GF 참석 계기에 덴마크 헬레 토닝-슈미트 총리와 10.9 '녹색성장 동맹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 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로 한·덴마크 양국은 최상의 양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GGGI의 국제기구 공식 출범(2012.10.18), 인천 송도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2012.10.20)의 쾌거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 분야 First mover인 덴마크와 Fast mover인 한국이 협력하여 Smart mover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그린란드

그린란드(덴마크 自治領)는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량은 물론 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서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미래 자원 선점을 위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축장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린란드 서부 연안에 170억 배럴, 동북부 연안에는 314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안 지역 외에도 상당 규모의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및 광물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현재 10개의 희토류 산출 지역이 확인된 가운데 남부지역의 잠재량만으로도 세계 수요량의 25%를 충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헬레 토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덴마크 총리와 쿠픽 클라이스트(Kuupik Kleist)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공동명의 초청을 받아 2012년 9월 9일-10일간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방문하여 기후변화 현장을 시찰하고 친환경적 북극권 진출을 위한 '신 북방 외교'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일몰리사트에 위치한 빙하 피요르드 시찰에는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이다 아우켄 덴마크 환경장관,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수행하였다. 특히 덴마크 왕실을 대표한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와 덴마크 정부를 대표한 아우켄 환경장관은 캥겔루수야크 공항 영접에서부터 전 일정을 수행하였고,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는 '그린란드 역사상 최고위 방문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을 환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급격한 온난화 상황을 직접 보고, "북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음이 많이 녹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린란드가 겪고 있는 온난화와 해빙, 그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전통적 생활양식에 대한 위협은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의 면담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인 그린란드가 '환경적 위기'를 '경제적 기회'로 전환시키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간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압축된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덴마크·그린란드와는 녹색성장의 확고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한국이야말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린란드에 있어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클라이스트 자치정부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이 기후변화의 위기와 함께 그린란드에 찾아온 경제적 기회를 실현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린란드가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북극이사회 정규 옵서버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와의 면담 후, 그린란드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한·그린란드 정부 간 MOU를 비롯하여 그린란드 자치정부 및 덴마크/그린란드 유관기관과 총 4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 기회의 땅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린란드 정부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지식경제부-그린란드 산업자원부간 자원협력 MOU는 그린란드 공동 자리지질 조사, 자원탐사 기술개발, 투자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양국 부처 간 공식 협의채널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 광물기업인 누나 미네랄스(NUNA Minerals)社간에는 공동 지질연구 및 탐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광물자원협력 MOU가, 우리 지질자원연구원과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소(GEUS) 간에는 그린란드내 전략금속·희토류·리튬 등 유망 광산 탐사·개발을 위한 지질연구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 극지과학기술연구소는 덴마크 오후스(Aarhus) 대학교와 극지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극의 기후, 지질, 생물, 해양, 빙하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의 북극 연구 수준을 제고하여 나갈 예정이다.

북극지역 온난화로 미지의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협력의 외연을 그린란드에까지 확

대·발전시키는 한편 북극지역 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덴마크·그린란드와 북극 진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그린란드 간 협력 MOU

- 지식경제부-그린란드 자치정부 산업자원부, '자원협력' MOU
- 한국광물자원공사-누나 미네랄스(NUNA Minerals)社, '광물자원협력' MOU
- 지질자원연구원-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소(GEUS), '지질연구협력' MOU
- 한국 극지과학기술연구소-덴마크 오후스(Aarhus) 대학교, '극지과학기술협력' MOU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에 이어 2012년 12월 12~16일간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최초로 방한하여 한·그린란드 간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클라이스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예방 및 외교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 시 논의되었던 제반 협력사업들의 원만한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동 총리는 광물, 식품, 관광 등 분야의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방한하였는데, 양국 기업인들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3) 노르웨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 방문에 이어 2012년 9월 10일~12일간, 석유 약 25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80조m<sup>3</s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북유럽의 자원 대국이자 친환경 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한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이며 개발협력 분야는 물론 세계평화의 선도국인 노르웨이를 공식 방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슬로 대학교에서 '코리아루트의 새 지평'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12일 스톨텐베르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극의 친환경적 개발·보전 등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고, 해운협력 MOU와 친환경 조선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극 신항로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북극해 연안국의 하나인 노르웨이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판단, 노르웨이와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 및 화물 확보, 안전 운항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북극 항로는 기후변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경제적 기회로서 북극항로가 열릴 경우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

르담의 이동거리가 37%(20,100km에서 12,700km로), 운항일수는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 위치한 '다산과학기지'에서의 북극 기후변화, 지질, 생물, 빙하 관련 공동 연구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북극이사회에 정규 옵서버로 가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고, 노르웨이는 한국이 극지 연구분야에서 보여왔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주력분야였던 조선 산업의 협력 범위를 유조선 등 대형 선박 건조 중심에서 친환경 선박(녹색 해운), 해상크루즈, 해상인프라(항만, 배후단지) 구축, 해양플랜트, 쇄빙선 등 첨단 제품 생산 분야로 확대, 다변화하여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풍력,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스톨텐베르그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이명박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EU가 북한의 인권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노르웨이간 조선·해운 분야 협력 MOU

- 국토해양부-노르웨이 통상산업부, 『해운협력』MOU
  - 해운분야의 최신 정보와 기술·경험의 교환, 전문가의 파견 및 교육훈련
  - 정부 간 정례 해운 협의 및 세미나 개최
  - 노르웨이의 선진 선박금융제도, 크루즈 산업정책 관련 협력
  -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개척 지원, 해상인프라 협력 사업, 녹색해운 분야 등에 대한 상호 협력
- 지식경제부-노르웨이 통상산업부, 『친환경 조선 협력』MOU
  - 해양플랜트 심해기술 및 기자재 협조
  - 친환경 선박 분야 선진국인 노르웨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1일 경제인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한·노르웨이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고, 호콘 왕

세자의 여수 박람회 참석차 방한 시 개최한 노르웨이 수산물 판촉 행사를 거론하면서 노르웨이의 풍부한 수산자원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인라운드테이블 행사 종료 후 현대자동차와 노르웨이 HYOP사(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회사)간 협력하에 노르웨이에서 운영 중인 수소연료전지차를 탑승, 관람하였다. 현재 노르웨이에 대한 수소연료전지차 판매수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북유럽 친환경 차량 시장 진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르웨이 방문 중 2012년으로 개소 10주년을 맞는 북극 ‘다산과학기지’(윤영준 극지기후연구부 책임연구원)와 한국 최초의 극지연구소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신민철 극지연구소 월동대장) 그리고 북극해 연구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강성호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장)를 화상연결하여, 극한 상황에서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우리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New Frontier의 최전선인 미지의 세계 극지 개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극지연구소와 쇄빙연구선 연구원들이 전지구적·상시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극지 상황의 생생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리는 노력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1년 ‘아라온호’가 조난에 빠진 러시아 어선구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치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11일 오슬로 대학에서 노르웨이 학계, 정계, 관계 인사와 대학생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리아루트의 새 지평(Korea Route and its New Horizon)’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한국전쟁 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민은 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연에 참석한 닐스 에젤리엔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한 2002 ‘브라게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순 피에스, 2008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니나 솔하임, ‘라면왕’ 이철호 씨를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노르웨이가 전쟁고아를 비롯한 한국계 아동들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워준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교육이야말로 그러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고, 본인 스스로의 개인사 역시 그러한 성취의 역사이자 한국 경제발전 역사의 산 증거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제안하고, 2011 부산 세계원조총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원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개방의 문을 연 미얀마와 같이 북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여야 할 시점에 직면하여 있다고 하고,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평화 가 잇들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유럽 국가들이 각고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하여 일궈낸 ‘노르딕 피스(Nordic Peace)’라 일컬어지는 장기 평화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되짚어 보고 한국과 노르웨이가 평화 연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유럽의 역사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초이자 오늘날 유럽을 하나로 만든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동북아에도 이것(올바른 역사인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의 운명 의식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행동하여야 하며, 2009년 한·노르웨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녹색 파트너십’을 체결한 양국이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평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북극의 발전을 위하여 ‘세대를 뛰어넘는 장기적 안목’으로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으로 북유럽과 북극의 New Frontier를 향한 신 북방외교의 첫 장이 완성되었으며, 노르웨이와의 조선, 해양, 북극협력,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및 자원기술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발전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 (4) 스웨덴

스웨덴은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으며, 휴전 이후 현재까지 중립국 감독위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오고 있는 전통 우방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스웨덴과 정상간 상호 방문 실현을 통하여 2009년 EU 의장국이었던 스웨덴과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북핵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스웨덴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양국 수교 50주년 계기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여 ‘프레데릭 라 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EU 협력 증진, 북핵 등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EU FTA 체결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양측 간 교역,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유무

역을 통하여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당시 EU 의장국이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EU FTA가 조속히 타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경제·통상분야에 있어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등 첨단과학, 산업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특히 스웨덴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간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확대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의 국빈 방문(2012.5.29-6.1)으로 이어져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웨덴 국왕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구스타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기후변화 협력, 노인복지 및 양성평등 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강제 구금된 신숙자씨의 모녀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북한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중립국 감독위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웨덴 측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스타프 국왕은 이에 적극적 공감을 표명하였다.

## (5) 핀란드

자일리톨, 숲과 호수의 나라, 사우나와 산타클로스의 나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핀란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한·핀란드 직항노선이 취항(2008.6.5)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유럽국가가 된 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빠르게 증진되고 있다. 핀에어 직항노선 취항을 계기로 '마티 타넬리 반하넨(Matti Taneli Vanhanen)' 핀란드 총리가 공식 실무 방한(2008.6.5~7)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5일 반하넨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IT 및 조선·기계 공업 등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복지 분야에 있어 양국이 고령화 및 교육정책 등 주요 국정 이슈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양국 민·관 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국제투명지수, 교육 분야 등 OECD가 발표하는 각종 선진국 지수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의 정책이념과 행정경험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3.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며 국제무대에서 동일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양자는 물론 다자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주요 외교안보 및 경제개발 이슈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주요국으로 활동하여 나가고 있음을 감안 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여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선진일류국가 정책비전 구현을 위하여 이들 국가와 활발한 정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연대를 강화하고 최상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 (1) 벨기에

벨기에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수도로서 우리나라에게는 대유럽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국가이다. 무엇보다 양국은 동북아와 서유럽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있다는 지정학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대외관계 관리에 있어서 상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측면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하여 '이브 레테름(Yves Leterme)'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중요성 및 세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에 무역자유화 노력의 의미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하였다. 동 정상회담에 이어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고(2010.10.6), 다음해 FTA가 잠정발효(2011.7.1)된 바, 이로써 양국 정상회담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동 방문 계기에 벨기에 군사박물관 한국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벨기에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노병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5일 한국을 방문한 레테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총리 일행의 방한 첫 일정이 용산전쟁기념관이었음을 언급하면서 참전 희생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벨기에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레테름 총리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의사를 표하였다.

##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에서 간척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고, 간척사업이 가장 활발하였던 국가였던 만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 및 새만금 사업 등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얀 피터 발커넨드(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네덜란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수자원 관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수자원공사와 네덜란드 델타레스(Deltares)사 간 ‘4대강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협약’ 및 우리 국무총리실과 네덜란드 경제부간 ‘새만금 지역 개발 및 투자 쌍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발커넨드 총리는 또한 신재생에너지·조선·물류 등 분야에서 한·네덜란드 간 협력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양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 분야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총리 방한시 함께 동행한 네덜란드 8개 대기업과 26개 중소기업 대표들을 위하여 CEO Round Table등을 주선하며, 양국 기업들 간 교류 및 협력분야 모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스페인

스페인인 소프트파워 강국이자 중남미 및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요충지이며, 신재생에너지, IT, 물류, 통신, 관광, 건설 등 상호 강점을 지닌 다양한 분야에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9일 제40차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일명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에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빠떼로(Jos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하여 양 정상은 2010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격상의 포문을 열었으며, 2010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G20 의장국인 한국이 세계 경제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Mariano Rajoy Brey)’ 스페인 총리와 2012년 3월 28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을 표시하고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는 스페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인간 교류 증진을 적극 장려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라호이 총리는 취임 이래 첫 번째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동 회담은 스페인 신정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4) 이탈리아

한국과 이탈리아는 양국 간 교류뿐만 아니라 G8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이탈리아는 2009년 G8 의장국,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국제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였다.

G8 및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7월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라퀼라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긴밀히 이루어졌다. 당시 G8 의장국이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는 무역 분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보호무역 차단과 국제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WTO 사무총장 및 EU 집행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2009년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25주년 계기에 '조르조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 이탈리아 대통령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위한 양국 간 논의는 계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9년 G8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 간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탈리아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도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총리가 참석하여 동 방한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2012.3.27)하는 등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회의에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몬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2012 여수 및 2015 밀라노 세계박람회 개최국으로서 양국 간 경험 공유 및 무역 사절단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는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나가고 있다.

#### 4.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 터키와의 유대 강화

터키는 역사적·문명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왔으며, 오늘날에는 중동-CIS-중앙아시아-아프리카를 잇는 교류와 교역의 관문이자 허브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에르도안 총리 집권 이후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나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터키는 터키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이자 형제국가(터키어로 '칸 카르데쉬') 관계를 바탕으로 반세기 이상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15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압둘라 굴(Abdullah Gül)'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터키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터키 참전용사를 한국에 초대하고 달라진 한국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참전용사들에게 보여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한국과 터키의 혈맹관계는 새로운 양국관계 발전의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함께 왔다."라고 화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한·일 월드컵 3·4위전에서 우리와 터키 대표팀이 경기를 하였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결성한 터키 서포터즈가 터키 팀을 응원한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 자신의 나라와 경기하는 상대국을 응원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양국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한 데 대하여, 굴 대통령은 "2002년 당시 한국 국민들이 터키를 지지해주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터키를 국빈 방문하여 2월 6일 굴 대통령 및 에르도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터키의 6·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형제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문화, 관광,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UN과 G20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터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2012년 8월 한·터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터키 시뉘스 원전 건설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정상 방문 계기에 관련 기업들 간에 터키 압신 화력발전소 건설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터키 최고 명문대학인 앙카라 대학교에서 ‘터키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학생은 “한국어 보급 확대와 태권도 명품화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가 세계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제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과 한국기업에서 한국과 관련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기대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2월 터키 국민 방문 시 수립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 2011년 G20 간느 정상회의 시 양자 정상회담과 2012년 2월 터키 국민 방문 시 오찬에 이어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등의 만남을 통하여 형제국가로서 각별한 친분과 유대감을 구축하였다.

터키 정부는 공화국 출범 100주년이 되는 2023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목표 하에 ‘비전 2023’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구 등 인프라 건설과 항공기 및 자동차 자체 생산, 대형병원 건설 및 교육 전산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가기간 인프라 구축·확대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계속 발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5. 중·동부 유럽의 전략 거점 폴란드와 협력 관계 확대

EU 회원국 중 7위의 경제규모 및 3천 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폴란드는 중·동부유럽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여있는 핵심 국가이다.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폴란드는 우리의 중·동부유럽 주요 경제·통상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1989년 수교 이래 20여 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양국 교역규모는 6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우리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대상국 1위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관심을 갖고 기여하여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4년 양국 간 수립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Future-Oriented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민 방한한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ński) 폴란드 대통령과 12월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발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담은 유사한 역사와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 2009년 한·폴란드 수교 20주년을 맞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7월 8일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ński)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EU FTA가 양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산(T-50, 고등훈련기), 플랜트(원전 건설), 사회간접자본 및 문화 산업을 양국 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고,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개원한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양국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2년 9월 폴란드에서 최초로 개최된 'Korea Festival 2012' 행사에는 3천 500여 명의 폴란드 주요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폴란드 내 한국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폴란드는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위기, 기후변화 대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주요 국제사안에 대하여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고 있다.

## 제3장

#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 제1절 중동 ·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 1. 중동 · 아프리카의 부상

중동과 아프리카는 에너지·자원의 공급지이자 신흥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근세에 들어 세계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최근 들어 풍부한 자원과 인구, 그리고 역동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동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한 최대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2011년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약 87%, 천연가스 수입의 약 48.3%가 이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진출, 자원개발 참여 등 협력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동 간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동은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중동 산유국들의 국부펀드는 1조 7,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상회하는데 중동은 이러한 막대한 석유자원, 자금력, 그리고 개발수요 모두를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최

근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건설 등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지평이 확대될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1990년대 말까지는 종족간의 갈등, 내전, 극심한 가난 등으로 '위기의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 이래 분쟁 감소와 민주화 확산 등 전반적정세안정을 바탕으로 연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0개 국가 중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고, IMF가 2015년에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아프리카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시장의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가 약 10억 명에 이르는데다가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24세 미만 인구의 비중도 약 60%에 달하고 있어 미래의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0%, 가스매장량의 약 10%, 광물 자원의 약 40%가 매장되어 있는 등 '에너지·자원의 보고'로서도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동안 개발이 미진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탐사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아프리카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로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아프리카가 향후 중동에 버금가는 에너지·자원의 공급원이자 경제도약을 위한 잠재적 시장으로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의 약 28%인 54개국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공동행동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정세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다자외교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증진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지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았었는데, 중동과의 협력범위는 건설 등 일부 경제 분야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 협력관계와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대 아프리카 관계 강화에 주력하여온 반면, 우리나라에게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먼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협력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 2. 중동·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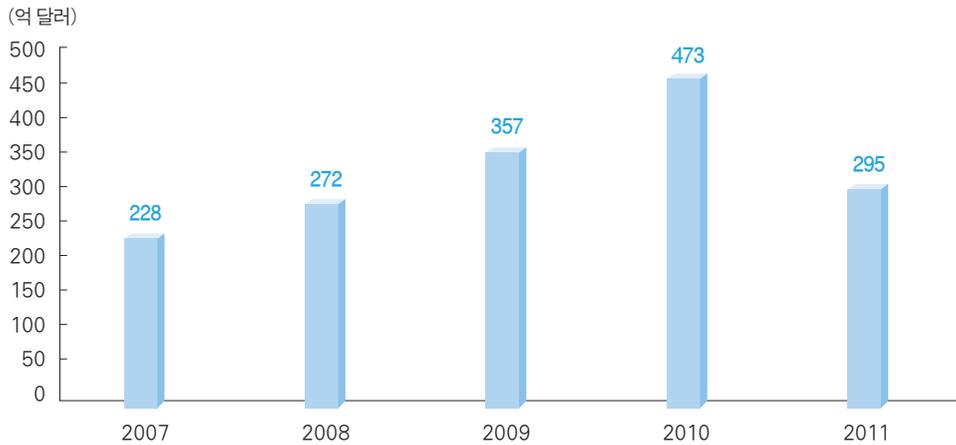
이명박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출범 초기부터 이들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들 지역의 국가를 단순한 에너지·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호혜적 협력이 가능한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보고 진정한 의미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대 중동·아프리카 외교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의 활용이나 개발경험의 공유 등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추구하여 상대국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교류 협력도 자연스레 지속적으로 강화·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총 31회의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 정상 간 교류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이러한 정상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과는 에너지·자원 및 건설 등 기존 분야의 경제협력은 계속 강화하는 한편 정치, 사회, 문화,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문화, IT 등 새로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중동지역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고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는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중동 국가에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여 두려는 노력의 결과로 UAE와 사우디로부터 비상시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세계 제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와 제6위의 매장량을 가진 UAE에서 유전개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전개발권의 획득은 이들 지역의 석유산업이 국가직영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구 기업들이 이미 선점한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들 나라를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로 여긴다는 이명박정부의 진정성과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건설분야에서 이명박정부는 고유가 호황과 걸프 산유국의 대형 건설사업 발주 증가 현상을 제2의 중동 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중동지역에서의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사상 최고인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8~2011년간에만 1,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중동지역 건설·플랜트 수주 총액



이명박정부는 또한 중동 국가들의 협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원유·가스, 건설 분야를 넘는 전방위적 협력을 모색·추진하였다. 특히 상당수 중동국가들이 화석에너지가 고갈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역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 시 이루어진 UAE 원전사업의 수주라고 할 수 있다. UAE 원전 수주는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걸프지역 자원부국이자 경제허브인 UAE와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

또한 사우디아와는 비상시 우리에게 대한 사우디 원유의 공급 및 사우디 내 주택건설 분야로의 우리 기업 진출 합의 등 기존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다. 카타르와도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 외에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공조가 이루어지는 등 중동 지역 국가와의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

### 최근 우리나라와 중동 간 교역량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675	1,016	616	808	1,192
수입	197	266	240	284	329
교역액 합계	872	1,282	856	1,092	1,521

비한 협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우리와 중동지역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 서 우리나라와 아랍 22개국 정부,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한·아랍 소사이어티가 창설된 바, 이를 통하여 한·아랍 문화축전, 한·아랍 우호친선카라반 등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고 사우디, UAE 등 국가들과 양자 차원의 청소년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국민의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동 간의 교류 협력은 다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측 간 교역액도 2011년 기준으로 1,52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출범 이래 꾸준히 진행된 이명박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월 국정 신년연설에서 대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11년 7월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계기에 2011년을 ‘아프리카 협력강화 원년’으로 선언함으로써 정점을 맞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아프리카 정상들의 방한, 기타 다자외교에서의 만남 등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개발 등 상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다져나갔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의 특징은 아프리카 지역을 단순한 자원 확보의 수단이 아닌 동반성장의 대상이자 전방위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바라보면서 개발경험 공유 등을 통한 호혜 협력을 적극 추구한 데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 아프리카 협력은 아프리카의 자립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와 아프리카 모두의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만나는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진솔하게 설득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쌓인 정상 간의 신뢰를 기초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주요 자원부국과 원자력이나 희토류, 크롬 등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필요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등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이렇듯 상생의 동반성장 추구라는 목적 하에 추진된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 양자 정상회담 성과

활동	방한 방문	성과
한·수단 정상회담(2008.5.26)	방한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 상호 협력 합의
한·지부티 정상회담(2008.5.26)	방한	양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한·르완다 정상회담(2008.5.31)	방한	IT산업 등, 관광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증진 논의
한·알제리 정상회담(2008.8.8)	방한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경제협력 분야 확대
한·요르단 정상회담(2008.12.1)	방한	프로젝트 참여 등 경제협력, 주한대사관 개설 문제 등 협의
한·이라크 정상회담(2009.2.24)	방한	유전 개발 및 SOC 참여 논의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세이셸 정상회담(2009.10.14)	방한	기후변화, 소말리아 해역문제 등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확대
한·세네갈 정상회담(2009.11.23)	방한	농업 및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논의 및 개발경험 공유
한·UAE 정상회담(2009.12.27)	방문	원자력, 통상 에너지, 건설플랜트, 투자협력 등 제반분야 협력 논의
한·요르단 정상회담(2010.1.28)	방한	연구용 원자로 등 에너지 분야 및 경제협력 논의(*다보스포럼 계기)
한·팔레스타인 정상회담(2010.2.10)	방한	대팔레스타인 개발협력 방안 논의
한·DR콩고 정상회담(2010.3.29)	방한	건설·인프라, 자원개발, 농업·교육·보건 협력, 개발경험 공유
한·이스라엘 정상회담(2010.6.10)	방한	경제, 에너지 분야 협력, 문화교류
한·적도기니 정상회담(2010.8.12)	방한	건설·인프라 및 자원개발, 국방·안보 협력
한·기봉 정상회담(2010.10.25)	방한	인프라·건설 및 자원개발, 국방·안보협력, 개발경험 공유
한·UAE 정상회담(2011.3.13)	방문	석유·가스 및 미래성장동력 협력, 경제·통상, 국방, 보건의료 등 제반분야 협력논의
한·이라크 정상회담(2011.4.28)	방한	경제협력 확대 및 개발협력
남아공·DR콩고·에티오피아 순방 (2011.7.2~10)	방문	(남아공) 에너지, 경제협력 방안 논의 우리기업 진출 지원 (DR콩고)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 문화교류 증진 (에티오피아) 교역 및 투자 확대, 개발경험 공유 및 상생협력 관계 구축, 글로벌 이슈 논의, 참전용사 후손 지원방안 협의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2011.11.28)	방한	개발협력, 교역·투자확대, 주한대사관 재개설
한·르완다 정상회담(2011.11.30)	방한	주르완다 대사관 개설, 개발협력
사우디·카타르·UAE 순방 (2012.2.7~11)	방문	(사우디) 에너지 협력,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문화교류 증진 (카타르) 에너지·산업 협력, 우리기업 진출 및 교류 지원, 포괄적 협력 확대 (UAE(왕세자 면담)) 에너지 협력
한·가봉 정상회담(2012.3.24)	방한	국제안보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포괄적 교류증진 협의
한·요르단 정상회담(2012.3.25)	방한	경제분야 협력 확대
한·남아공 정상회담(2012.3.28)	방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포괄적 협력 확대 논의
한·기니 정상회담(2012.5.23)	방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개발경험 공유
한·잠비아 정상회담(2012.10.17)	방한	통상·투자, 자원·건설, 개발 및 농업 분야 협력 강화
한·UAE 정상회담(2012.11.21)	방문	원전 등 에너지 및 녹색성장 분야 협력

### 3.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1) UAE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우리나라와 UAE 간의 관계는 정상 간 신뢰가 짧은 기간 내에 양국 관계에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6위인 UAE는 에너지·자원 부국인 동시에 중동지역의 금융, 서비스 분야 허브이며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프지역 핵심국가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양국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 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하여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이 그 전환점이었다.

UAE 원전사업 수주는 지난 1978년 미국 기술로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원자력 역사상 첫 원전 수출의 쾌거이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형 원전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특사과견과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원전사업 수주의 타당성을 진솔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이명박 대통령과 UAE의 칼리파 대통령, 그리고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왕세자 간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원전 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던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이 원전사업을 수주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UAE와 한국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바라볼 관계이다. 사실 원전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기 1년 전부터 여러 나라가 원전프로젝트를 신청하고 논의를 진척시켜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 된 노력이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한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나에게겐 쉬운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진실 된 노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정상차원에서의 진실 된 노력이 UAE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외교와 중동 외교 사상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AE 원전사업은 순조로운 진전을 보여 2012년 11월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라카 원전 본공사가 착공되었다. 원전사업 수주와 착공,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계기로 UAE 칼리파 대통령이 명명한 바와 같이 ‘형제의 나라’로

## UAE 원전 수주

2009년 11월 초 우리가 적극 추진 중이던 UAE 원전사업 수주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접한 직후 대통령은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차기 UAE 대통령이자 現실권자)와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총 6차례(11.5, 11.11, 11.20, 12.10, 12.15, 12.18) 직접 통화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에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한·UAE 간 협력 패키지를 발굴하도록 하여 결국 같은 해 12월 말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원전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형 원전의 최초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사업을 계기로 '백년지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모들의

영어통역 권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서 줄곧 아랍어통역을 고집하였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마지막 통화가 이루어진 12월 18일, 대통령은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하여 코펜하겐 출장 중이었으나, "언제 왕세자로부터 전화가 올지 모른다."면서 아랍어 통역 직원 및 특수 전화장비를 덴마크까지 대동, 예상대로 그곳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로부터 우리 측의 수주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다.

UAE 원전사업 수주는 우리의 세심한 준비와 우리 원전의 우수성에도 기인하지만, 동시에 국익창출을 위한 정상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였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거듭난 양국 간의 관계는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UAE는 2011년 우리와의 교역액이 약 220억 2,500만 달러(수출 72억 6,600만 달러, 수입 147억 5,900만 달러)로 중동 국가 중 두 번째의 핵심 교역상대국이자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며, 동시에 제2의 중동특수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 비상상황발생시 증산되는 아부다비 원유 중 일일 최대 30만 배럴까지의 최우선 구매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였고, 아부다비 지역내 3개 미개발 광구(육상2개, 해상1개)로 예상 합계매장량은 5억 7,000만 배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독점적 개발권 보장, 그리고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아부다비 생산 유전체의 우리 기업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하여 석유개발 진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하였다. UAE와 같이 투자 여건이 좋은 나라는 대체로 이미 서구 선진국들이 진출하여 후발 주자의 유전개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40여 년 만에 새롭게 중동 유전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상당한 성과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 간의 원유공동비축계약서 서명을 통하여 UAE 측은 우리나라에 최대 600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측은 비상 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여 비축원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UAE는 현재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고 경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 UAE 진출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에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하여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졌음은 물론 협력의 범위도 에너지, 자원, 건설 등 기존 분야뿐 아니라 국방, 보건, 청소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보건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4개 병원(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UAE 환자들의 방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의료원, 우리들병원(척추센터) 등이 UAE에 진출하는 등 교류 협력 증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보건기관 간에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지도자, 대학생 교류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아부다비 왕세자실이 직접 주관하는 유스 앰배서더(Youth Ambassador) 프로그램 1차 대표단이 2012년 6월 말에서 7월까지 한국을 방문, 한국정부 시스템 견학, 문화·역사현장 탐방 등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UAE 측은 포스트 오일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짧은 기간에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를 모델 국가로 보고 있어 이러한 청소년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류협력은 양국 간의 우호친선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마지막 해외순방지로 UAE를 선택, 칼리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만찬, 바라카 원전 기공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비약적 발전상을 점검하는 한편 원전·원유를 포함한 제반분야에 걸쳐 포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나간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UAE 우호관계의 견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그간 구축하여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미래발전 여건을 임기 내에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 (2) 한·사우디 협력 심화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수교 이래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 온 중동에서 가장 오랜 우방인 동시에 우리나라 총 원유수입량의 32.7%를 공급하는 최대의 원유공급국이며, 우리나라의 전 세계 건설, 플랜트 수주 누계의 21%(우리나라가 수주한 전체 4,807억 달러 중 1,011억 달러)를 차지함으로써 최대의 건설 협력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사우디와의 에너지, 건설 분야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문화,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다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사우디 수교 50주년을 맞은 2012년 2월의 중동 순방 계기에 사우디를 방문하여 압둘라 국왕과의 정상회담, 여타 주요 인사 접견 등 일정을 갖고 양국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축제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오랜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 당시 압둘라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관계 강화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데 이어, 알-나미미 석유광물부장관 면담 계기에는 “원유수급과 관련하여 한국의 어떠한 요청과 추가 수요도 충족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국제 원유수급 비상시에 대비하여 최대 원유 도입국로부터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에너지 안보 강화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 분야에서도 사우디 주택 50만 호 건설사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한·사우디 주택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양국의 관계당국 간에 체결됨으로써 우선 주택 50만 호 중 시범 1만 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양국 간의 건설분야 협력도 꾸준히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 간의 협력 범위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뿐 아니라 국방, 보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방분야의 경우 양국이 우방국으로서 상호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주한사우디 대사관에 무관부가 설치되었고, 보건 분야에서는 환자송출 협력 등을 규정한 보건 및 의료분야 이행계획서(Executive Program)가 체결되어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원자력발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방문 당시 개막한 자나드리아 축제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빈국으로 단독 초청되었다. 이 축제는 압둘라 국왕이 왕세제 겸 국가방위군 사령관 시절부터 26년간 관심을 갖고 직접 주관한 사우디의 최대 문화행사로서 한국이 처음으로 주빈국에 선정된 것은 1970년대 사우디에서 근무한 이명박 대통령과 사우디 간의 각별한 인연과 양국 간의 오

랜 우호협력 관계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자나드리아 축제 시 설치·운영된 한국관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한·사우디 관계는 물론, 우리의 최첨단 산업(IT, 로봇, 원전 등)을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사우디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국 간의 우호친선관계를 한층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2012년 6월 개최된 서울 국제도서전시회에 사우디가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등 정상교류로 공고화된 우호협력관계의 토대위에 양국 간 문화교류도 계속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 (3) 한·카타르 협력 구축

카타르는 인구가 180만 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그리 크지 않은 국가이나 세계 11위의 석유 자원 보유국이자 러시아와 이란에 이은 세계 3대 천연가스 대국으로서 안정적인 정세와 국민의 하마드 국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011년 17.6%에 이르는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한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카타르는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카타르는 현재 우리의 제3위 원유도입국이자 제1위 LNG 도입국으로서 중요한 에너지·자원 협력 파트너이고, 1976년 우리 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이래 2011년까지 약 140억 달러(2011년 약 18억 달러)를 수주한 제7위의 건설시장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카타르와 기존의 에너지, 건설 분야의 협력을 계속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중동 순방 계기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협력관계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하마드 국왕은 양국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협의회가 우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카타르 행정통제청 의장 주재로 201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고위급 전략협의회는 경제, 사회, 인력개발, 교육, 보건, 군사·안보, 기후변화,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국 간의 협의체로서 한·카타르 간 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견인하여 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기능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시에는 에너지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리 지식경제부와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간에 에너지·산업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2년 5월 서울에서 두 부처 간 협력위원회가 개최되어 에너지·산업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양국 가스공사 간에 향후 21년간 연간 200만 톤 규모의 LNG 수입을 위한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2년 10월 현재 카타르로부터 도

입하는 LNG 장기계약 물량만 900만 톤에 달하는 등 한·카타르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계속 긴밀하여지는 추세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카타르의 경제력, 그리고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및 2022 월드컵 등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 수요를 감안할 때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많은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카타르 고위인사들을 접견하는 계기에 우리나라 건설 기업의 카타르 내 활동 지원을 적극 당부하는 등 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상 차원에서의 관심은 향후 우리 기업의 대 카타르 건설 진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정부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카타르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사전각료급회의(Pre-COP18)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우리나라 유치가 최종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카타르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창립회원국이자 5개 기여국 중 하나로 전격 참여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협력강화 과정을 통하여 카타르는 우리에게 있어 사우디, UAE와 함께 걸프 지역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자리를 굳혀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한 아프리카 외교지평의 확대

한·아프리카 포럼은 대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하여 2006년을 시작으로 매3년마다 개최되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다자간 협의체로서 이명박정부는 우리가 단독 주최하던 동 포럼을 2009년 제2차 포럼을 계기로 아프리카 연합(AU)과 공식 파트너십 하에 공동주최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2차 포럼에서는 ‘2009 서울선언’과 ‘한·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구상 2009-2012’, ‘한·아프리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2009-2012’ 등을 채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ODA의 2008년 대비 2배 증액(2008년 1억 달러에서 2012년 약2억 달러로 증가예상), 해외봉사단 1,000명 파견, 아프리카 연수생 5,000명 초청 등 우리의 대 아프리카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새로운 분야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군축, 테러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하였다.

2012년에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2012 서울선언’과 ‘행동계획’의 채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 기여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포럼의 공동주최자인 아프리카 연합

###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최종문서 주요내용

- 2009 서울선언
  -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협력 틀 제시
  - 빈곤감축, 기후변화, UN 개혁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 한·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구상 2009~2012
  - 2012년까지 대 아프리카 ODA 2배(2008년 대비) 확대
  - 아프리카 연수생 5,000명 초청, 해외봉사단 1,000명 파견
- 한·아프리카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2009~2012
  -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 비전 공유
  -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기술·사업 분야 협력 추진 합의

###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 최종문서 주요내용

- 2012 서울선언
  -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기여 노력 평가
  - 아프리카연합(AU)의 통상·투자 관련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강조
  - 한국-AU 간 협의가능 강화, 차기 포럼은 2015년 아프리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행동 계획
  -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기여, 비구속성 원조 및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 추진
  - AU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AU 본부 내 Training Center 설립, AU와 한국의 유관 기관 간(KAFACI, KOPIA, KIDA 등) 협력채널 확대, 아프리카대학(Pan-African University)과의 파트너십 구축, AU 평화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 등)
  - 한·아프리카 간 중점 분야의 '이행 매트릭스' 작성

행사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회의
시작시점	2006년부터 시작(3년주기 개최)	2008년부터 시작(1년주기 개최)	2006년부터 시작(2년주기 개최)
주관부처	외교부(AU 공동개최)	지경부	기재부
목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기업 시장진출 지원	경제협력 강화
참가자	외교각료, AU 인사 등	정부, 기업 고위인사	경제부처 각료

과 우리나라 간의 협력기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평화와 안보의 확립 필요성을 감안, 평화·안보를 의제로 포함하여 논의하고 PKO 참여 확대, 아프리카 연수생의 국방교육기관 참여기회 확대, 아프리카 평화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평화·안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포럼 계기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포럼 시 세네갈 대통령(2009.11), 제3차 포럼 시 잠비아 대통령(2012.10)을 각각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한·아프리카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고위급 대표단원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우리의 대 아프리카 협력의지와 그 진정성을 친밀감 있게 전달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한편 2012년 10월에는 상기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3년 주기)과 함께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1년 주기)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2년 주기)가 동시에 개최되어 각각 에너지·산업분야에 대한 현안 논의와 기타 경제·금융관련 현안 논의가 이루어진 바, 정부는 상기 3개 포럼·회의가 개최된 해당 주간(10.15~18)을 한·아프리카 협력 주간으로 지정하고 외교·산업·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중 이들 3개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한 만찬 계기에 식민과 전쟁, 빈곤의 고통을 공유하는 우리나라가 누구보다 아프리카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개발경험과 기술을 함께 나누어 경제발전의 참다운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는 점을 감동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 (5) 아프리카 중심국가 남아공과의 관계 강화 노력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1/4을 차지하고 아프리카 내 최대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며 유엔탄, 크롬,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2010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BRICS 클럽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을 배출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아프리카의 정치적·경제적 대국이자 우리의 아프리카 내 최대교역국인 남아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남아공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에 위한 남아공 더반 방문(2011.7) 계기에 주마(Zuma)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진하고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상기 방문 시기에 광물자원공사는 남아공 광물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Mintek와 전문가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희토류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포스코는 연 12만 톤을 생산하는 '포스크롬'(포스코와 남아공 Samancor사 합작 설립 크롬회사)의 지분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광물자원공사

는 2011년 12월 연간 2만 톤 규모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광산개발 사업의 탐사권 지분 10%를 인수하는 등 양국 간 자원협력은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주마(Zuma) 대통령과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와 유연탄, 크롬,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증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는데, 이러한 정상 간의 협력증진에 대한 의지는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7월 정상회담 시 서명된 각종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협정 및 2010년 10월 서명된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원자력협력세미나’, ‘과기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하였다. 2011년 11월 ‘민관합동경제협력사절단’이 남아공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자력, 과학기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남아공 측의 요청에 따라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강화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남아공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남아공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다년간(2011~2013년) 국별연수과정을 실시하여오고 있으며, 주마(Zuma)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남아공을 ‘지식공유사업(KSP)’ 신규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남아공과의 개발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6) 한·에티오피아 협력

에티오피아는 찬란한 고대문명을 간직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격동기에도 대부분 독립을 유지한 국가로서 우리에게도 한국전쟁 당시 6,037명의 지상군을 파병한 전통적인 우방국이 기도 하다.

그러나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최근 수년간의 일로서 특히 이에 는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우방국으로서의 오랜 인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고 멜레스 총리 간의 돈독한 우의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멜레스 총리가 집권한 1990년 이래 정세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꾸준히 7%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아프리카의 떠오르는 선도 국가이며, 아프리카 연합 본부 소재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에티오피아의 이러한 정치적 중요성과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에 주목하면서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멜레스 총리의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과 2011년 11월 부산 개발원조총회 계기 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7월 국민방문, 그리

#### 대 에티오피아 주요 원조사업(2008년 이후)

##### • 무상원조

- 아르시 초등학교 건립사업(2008~2010년/227만 달러)
-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2008~2010년/340만 달러)
- 아르시 농촌개발사업(2010~2012년/200만 달러)
- 아디스아바바 아카키 초등학교 건립사업(2010~2011년/200만 달러)
- 에티오피아 태양광 사업(2010~2011년/300만 달러)
- 아드와시 중학교 건립사업(2011~2013년/300만 달러)
-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2차사업(2011~2013년/200만 달러)
- 아디스아바바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2011~2013년/280만 달러)
-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 사업(2011~2013년/200만 달러)
- 경제개발계획 상세실행전략수립사업(2011~2012년/150만 달러)
- 참전용사 후손 직업훈련 지원사업(2012~2014년/900만 달러)
- 보건·농업·수자원관리·직업훈련 국별연수(2012년/46만 달러(60명 대상))

##### • 유상원조

- 술루타-게브리구라차 송전 사업(2011.12.29 이명박정부 승인/7,840만 달러)

고 여타 다자회의 계기의 만남 등 정상 차원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국민방문은 우리 정부의 첫 에티오피아 방문이자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한편 참전용사 후손 30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과 각종 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대하는 가교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상기 방문 계기 빈민지역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등 아프리카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에티오피아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동질감과 친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양국 간의 우의를 한층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에티오피아가 탄탈륨, 동, 니켈,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점을 감안, 상기 이명박 대통령 방문 시에 양국 광물자원공사 간에 희유금속 공동탐사·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지질자원연구원과 에티오피아 지질조사소(GSE) 간의 희유금속

## 에티오피아 멜레스 총리 서거 시 애도 표명

1991년부터 에티오피아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온 멜레스 총리가 2012년 8월 20일 향년 57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멜레스 총리를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래 불과 3년 동안 여덟 차례나 만나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멜레스 총리 서거 소식을 접하고 에티오피아 기르마 대통령 앞으로 조전을 발송하여 애통한 심정을 나타냈으며 에티오피아 국민을 위로하였다.

멜레스 총리의 장례식이 9월 2일로 결정이 되자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가고자 하였으나, 당시 태풍 피해 해결 등

국내 현안으로 인하여 장례식 참석이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본인을 조문특사로 파견하였다.

대통령은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멜레스 총리와의 우정을 회고하는 내용의 장문의 친서를 본인을 통하여 미망인 앞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총리직을 승계한 하일레마리암 신임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현지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하여 그 누구보다도 각별한 애도를 표하였다.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공동탐사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자원 공동탐사 프로젝트 추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상기 방문당시 멜레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바, 이명박정부는 이를 계기로 에티오피아의 5개년 경제계획 세부 실행전략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2012년 2월 산업단지 멘토사업 실시, 2012년 7월 한·에티오피아 산업협력위원회의 개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개소 등을 통하여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상 간의 신뢰 위에 공고하여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는 멜레스 에티오피아 총리가 2012년 8월 20일 서거한 후에도 계속 유지·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멜레스 총리 서거 당시 조전과 애도 친서를 발송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조문사절로 파견하는 한편 고인의 뜻을 기리는 정상 명의 기고문을 에티오피아 현지 매체에 게재하고 후임 하일레마리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하여 재차 애도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친구를 잃은 슬픔을 진실 되게 표명하였다.

멜레스 총리의 후임인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기존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은 물론, 한국을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은 경제정책을 계승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에티오피아 국민방문 시 봉사활동

2011년 7월 에티오피아를 국민방문한 대통령 내외는 케베나 마을(7.9)과 가레아레라 마을(7.10)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기여외교를 몸소 실천하였다.

대통령은 직접 소독약통을 짊어지고 방역작업에 나섰다. 집초제거, 꽃심기, 쓰레기 수거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였다. 무거운 곡괭이를 들고 능숙하게 울타리를 보수하고, 손수 화장실 벽돌을 쌓아 술선수범하여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어린시절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과일장수를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할 만큼 가난하였지만 열심히 노력하여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현지주민과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현지 언론과 주민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봉사하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참으로 소박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며 크게 기뻐하였다. 한국 이미지와 위상도 크게 제고되어 동양인만 보면 '차이나'라고 하던 이곳 사람들은 대통령 방문 이후 '코리아'를 먼저 부르기 시작하였다.

- 천영우(외교안보수석)

이러한 우호관계 위에서 양국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유엔 안보리 진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사안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개발과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협정 채택 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서명하고 우리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프리카의 선도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동부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우방국이자 대 아프리카 외교의 든든한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 (7) 한·콩고민주공화국 협력

콩고민주공화국은 중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11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와 6,800만 명의 인구, 구리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풍족한 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이명박정부는 그 협력 파트너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호협력 관계 강화를 모색하여 왔다.

우선 이명박정부는 2008년 8월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재개설,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교류 증진 및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지정을 통하여 콩고민주공화국과의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명박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0년 3월 카빌라 대통령의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와 원조 제공을 통한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카빌라 대통령은 콩고 측의 국가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에 이루어진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에는 양국 정부 간에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콩고민주공화국과는 농촌개발 사업, 행정 전산화, 조세행정,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기 콩고 방문 계기 이명박 대통령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콩고와 한국이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카빌라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또한 바나나항 건설과 간선도로 정비, 상수도 건설 등 재건사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당부한 바, 이러한 정상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중남미 외교

### 1. 추진 배경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는 1960년대 중남미 국가들과 대거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로 정부 분야에서의 협력에 비중을 두어왔다. 특히 냉전시대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펼쳐진 남북한 간 경쟁에 있어 중남미국가들은 우리나라가 추구한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든든한 지원 국가였다. 따라서 한동안 한·중남미 관계는 정부 분야의 제반 협력이 중심이 되고 경제·통상 및 사회분야 등의 협력은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분야 위주의 협력관계 양상은 1990년대 이후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확대되고, 2000년대 들어 중남미국가들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이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 분야는 물론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롭게 다각적인 대중남미 외교를 추진하였다. 2012년 멕시코,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온두라스,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아이티, 파나마, 에콰도르, 자메이카, 과테말라 등 15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영화제, 전시회, K-POP 경연, 비보이 공연, K-Tiger 시범, Quiz on Korea(퀴즈쇼) 개최 등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에서의 한류열풍 확산에 기여하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0년 9월 중남미 대수 국가들의 독립 200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내면서 중남미를 'nobody's backyard'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과거 오랫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어 미국의 뒷마당으로 평가되었던 중남미 지역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진정한 독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1세기를 맞아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이은 제2의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가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주목받게 되는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고 심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먼저 정상외교를 대폭 활성화하여 주요국 정상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자관계에서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통상 및 에너지·인프라분야 협력 확대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기반을 구축하고, 중남미 역내 지역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중남미 역내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 2.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이들 중남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정상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및 파나마를 방문하였으며, 많은 중남미 주요국들 정상들이 방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남미 14개국 정상들과 33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가이아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나마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 이래 해당국 국가원수의 방한으로서는 최초였다.

또한 멕시코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콜롬비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브라

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는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페루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UN총회, 핵안보정상회의, G20, APEC, ASEM, 중미통합 체제(SICA: 파나마 등 중미 8개국 통합기구) 등 다자회의를 통하여서도 중남미국가들과의 정상급 협의를 강화하여 왔다.

### (1) 멕시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회의에서 깔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깔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회담장에 10분 먼저 나와 회의를 점검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국 대통령이 참가하는 축구팀을 만들어 경기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7월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양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으며, 멕시코가 비FTA 체결국에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 공공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FTA 협상 타결전이라도 멕시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 한국기업들의 멕시코 금융산업 진출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멕시코를 다시 한 번 방문하여 깔데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FTA 협상 재개 문제 및 양국 간 항공노선 개설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계기에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한·멕시코 원자력협정을 서명하여 향후 원전분야에서의 협력가능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브라질

브라질은 우리의 중남미 최대교역국(2011년 181억 6,000만 달러: 수출 118억 2,000만 달러, 수입 63억 4,000만 달러)이며, 풍부한 자원과 넓은 영토 그리고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하여 나갈 '미래의 강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하여 페루를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브라질을 방문하였다. 브라질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남미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요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

질 방문은 브라질과 우리와의 제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 한·브라질간 경제협력을 위한 첨단기술분야의 3대 융합협력체제(광물자원과 플랜트산업, 석유개발과 조선산업, 바이오연료와 자동차·녹색산업)의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양국 간 바이오연료, 광물탐사, 유전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틀라 브라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하였을 때 자신의 후계자이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우마 당선자와 함께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상호협력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배증하기로 합의하였다.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대회와 2016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캄피나스에서 출발하여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이어지는 총공사 규모 200억 달러, 총연장 510.8km에 달하는 고속철도 부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체들은 현지 기업들 및 참여를 희망하는 주요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동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 관련, 경기장·고속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3) 페루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우리나라와 페루 간 협력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2008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하였으며,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2009년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FTA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자동차 시장 개방 등 우리 측 제안을 과감히 수락하였다. 양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양국 간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2010년 8월 협상개시 1년 6개월이라는 기록적인 단시간 내 타결될 수 있었다.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FTA 가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한국을 다시 방문하였다. FTA 가서명 후 양국 대통령은 축배잔을 함께 원샷하면서 양국 간 FTA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양 정상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페루 FTA를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간주하여 FTA 조기발효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2011년 8월 마침내 양국 간 FTA가 발효되었다. 2011년 6월에는 남미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공장인 팜파 벨초리타 LNG공장(38억 달러)이 우리 기업의 손으로 준공되어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2011년 8월 취임한 우말라 대통령은 2011년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우말라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밤 중에 자녀가 아팠을 때 이웃의 도움으로 약을 구하였던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으며, 또 특유의 근면함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여온 한국인의 저력과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동 정상회담에서 우말라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국산자동차를 페루 경찰차로 수입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2012년 5월 이루어진 국민방한에서도 자신의 둘째 딸이 김치를 즐겨먹는 ‘한류팬’이라고 소개하여 정상회담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동 정상회담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경찰차 구매계약이 마무리 되어 국산차 1,200대(5,000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또한 양 정상 간에 노후화된 페루의 공군훈련기를 국산 KT-1 훈련기로 대체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양국 관계부처·기업 간 신중한 협상을 거쳐 2012년 11월 KT-1 20대(1억 9,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명의 페루 대통령과 6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페루 FTA를 체결하는 등 양국관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4) 칠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바첼렛 칠레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심화방안을 중점협의하는 한편 양국 대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1월 방한한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칠레방문을 초청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극방문을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남극을 안내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바첼렛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베네라 대통령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대칠레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베네라 대통령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을 시찰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6월 칠레를 공식 방문하였을 때 베네라 칠레 대통령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칠레 국가발전의 롤 모델이라 평가하고, 자신이 2012년 3월 서울 방문 시 목도한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 성과 및 국가발전 전략 등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양국 정상은 2012년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정상간 상호 교환 방문의 의의를 평가하고, FTA 체결,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및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특별한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동 정상회

담 계기에 해양에너지 발전 협력 및 그린에너지 기술 공동 R&D 협력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환경 등 첨단분야에서의 신규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칠레 유력 일간지인 El Mercurio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 계기에 한국 특집을 발간, '청계천 복원,' Time지 환경영웅 선정 등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 친환경 업적을 소개하고, 칠레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조력 등 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 (5)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보병 1개 대대, 프리킧함 1척 등 전투 부대를 파병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하여 준 혈맹이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기간 중 5,100명이 참전하여 16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내전으로 신음하였으나 우리배 대통령과 산토스 대통령의 강력한 게릴라 토벌, 치안안정 정책에 힘입어 내전이 안정되고 범죄율이 급감하면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인구 4,600만 명, 면적 114만 평방 km에 달하는 중남미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리마 APEC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배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10년 6월 한·SICA 정상회의 계기 파나마에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협상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협력 등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하였다.

2010년 8월 취임한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1년 9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였다. 산토스 대통령은 방문기간 중 UN군사령부, 전쟁기념관, DMZ 등을 시찰하고 양국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연내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선언하였다. 동 방문 계기에 양 정상은 콜롬비아 정부의 대아시아 에너지 수출 증진 계획인 'Look Asia Project' 정책과 관련한 대규모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콜롬비아의 미탐사 지역인 동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희유금속을 공동 탐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을 통하여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한·콜롬비아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21세기 양국 간 전

방위적으로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방문 기간 중 한국전 참전기념비 참배 및 참전용사·가족 초청행사 등을 통하여 전사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생존한 용사들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참전용사의 재방한 사업 및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한국유학과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참전용사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한·콜 우호재활센터(2013년 12월 개원예정)를 건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국빈 방문으로 역대 우리 정상들의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방문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 (6) 파나마 및 여타 중남미 국가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한·SICA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로 파나마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010년 10월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였다. 두 차례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파나마 유수의 광산인 꼬브레 동광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파나마 정부는 2011년 2월 광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온두라스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체포된 한지수씨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고, 로보 대통령은 협조를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지수 씨는 2010년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귀국하였다. 로고 온두라스 대통령은 2011년 2월 자국 내 특별자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모델로 송도 신도시를 시찰하기 위하여 방한하였다.

한편 중남미 국가 중 그간 우리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국가들의 정상이 방한하여 이들 국가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볼리비아는 남미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정글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 그러나 녹색성장, 녹색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 등 공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에 매장된 막대한 리튬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우유니 염호에는 전세계 매장량의 1/3에 달하는 540만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튬을 주원료로 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차세대 핵심 에너지 저장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적은 용적에 많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전기자동차의 필수 부품일 뿐만 아니라 노트북, 휴대폰 등 각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래의 석유'로 불리고 있다.

한·중남미 정상회담 현황

일자	국가명	정상	비고
2008.6.2	파라과이	Lugo	당선자 신분 방한
2008.7.8	멕시코	Calderón	G8 확대 정상회의 참석계기(일본, 삿포로)
2008.9.1	우루과이	Vázquez	공식실무방한
2008.11.19	브라질	Lula	브라질 공식방문
2008.11.21	페루	García	페루 국빈 방문
2008.11.22~23	콜롬비아	Uribe	제16차 APEC 정상회의 참석계기(페루, 리마)
	칠레	Bachelet	제16차 APEC 정상회의 참석계기(페루, 리마)
2009.11.11	칠레	Bachelet	국빈방한
2009.11.12	페루	García	국빈방한
2010.4.22	가이아나	Jagdeo	제4차 세계경제환경회의(B4E)계기 방한
2010.7.1	멕시코	Calderón	멕시코 국빈 방문(멕시코시티)
2010.6.28	파나마	Martinelli	한·SICA 정상회담 계기 파나마 공식방문(파나마시티)
2010.6.29	파테말라	Colom	한·SICA 정상회담 계기(파나마시티)
	코스타리카	Chinchilla	
	엘살바도르	Funes	
	온두라스	Lobo	
2010.6.30	콜롬비아	Uribe	
2010.8.26	볼리비아	Morales	공식방한
2010.9.8	에콰도르	Correa	공식방한
2010.10.20	파나마	Martinelli	국빈방한
2010.11.11	브라질	Lula	G20 정상회의 방한 계기
2010.11.13	칠레	Piñera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일본, 요코하마)
2010.11.15	페루	García	공식방한
2011.2.21	온두라스	Lobo	공식실무방한
2011.9.15	콜롬비아	Santos	국빈방한
2011.9.22	페루	Humala	66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미국, 뉴욕)
2012.3.26	칠레	Piñera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방한
2012.5.10	페루	Humala	국빈방한
2012.5.29	파라과이	Lugo	공식실무방한
2012.6.17	멕시코	Calderón	G20 정상회의계기(멕시코, 로스카보스)
2012.6.20	페루	Humala	Rio+20 정상회의 계기
2012.6.22	칠레	Piñera	공식방문(칠레, 산타아고)
2012.6.25	콜롬비아	Santos	국빈 방문(콜롬비아, 보고타)
2012.8.21	코스타리카	Chinchilla	공식방한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4차례 볼리비아에 파견하는 등 고위급 외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2010년 8월 방한한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성공을 볼리비아 국가발전에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방한한 계기에 볼리비아 우유니 옴호의 리튬자원 연구개발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심화되어 2012년 3월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와 우리 기업 컨소시엄 간 '양국재 사업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협약서'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볼리비아 리튬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되었다.

2010년 9월 방한한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받아 에콰도르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제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정계입문 전 저명한 경제학 교수였던 꼬레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여러 차례 극찬한 바 있었다. 꼬레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책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평양정유공장(30만 배럴/일, 12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였다. 동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금액 면에서는 2,400만 달러 규모였으나 첫 번째 납미수출이라는 점에서 우리 IT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집필한 계기가 되었던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한국의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2012년 5월 재차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투자 및 조림사업 협력, 수자원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3. 경제 · 통상 · 자원협력 강화

#### (1) 우리의 주요 무역흑자 지역인 중남미

1980년대 초 중남미 지역은 연이은 국가들의 외채상환 불능상태와 이어지는 경제 및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뒷안길에 뒤쳐져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권의 부상으로 곡물 및 에너지, 자원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수지

가 개선되고 국가수입 증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최근에는 아시아에 이은 제2의 고성장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2%의 실질 GDP 성장을 기록하였고 1인당 GDP도 2011년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4,0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였다. 특히 중남미 면적의 1/2와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2011년 GDP 2조 5,000달러로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GDP가 상승하고 역내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원자재·에너지·자원 가격이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및 에너지·자원 및 제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간 경제·통상관계도 지속 확대되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교역과 투자는 연평균 각각 8.5% 및 22% 증가하였다. 아울러 중남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무역 흑자가 연평균 13% 증가하는 등 주요 흑자 시장이기도 하다. 2011년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401억 달러, 수입은 202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19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한·중남미 경제·통상 관계 추이

연도	2002	2011
	132억 달러	603억 달러
교역고	수출 88억 6,000만 달러	수출 401억 달러
	수입 37억 4,000만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무역수지 51억 2,000만 달러	무역수지 199억 달러
대중남미 투자액	14억 달러	66억 달러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수주액	320만 달러	66억 4,000만 달러
대중남미 ODA 지원액	940만 달러	6,720만 달러
진출 기업수	383개	787개

#### (2) FTA 지평 확대를 통한 신흥시장 확보

이명박정부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양자차원의 적극적 정상 외교를 통하여 중남미 태평양 주요국들인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 중남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2008년 11월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페루 및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에 합의한 데 힘입어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정식 발효되었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국빈 방문 계기에 최종 타결되어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SICA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과나마를 방문하여 가진 한·과나마 정상회담에서 중미국가와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코스타리카, 과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과 FTA 공동연구를 시작되었으며, 2011년 4월 당사국에게 FTA 체결을 권고하고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한·중미 국가 간 FTA 협상은 실무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명박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하여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식량을 보유한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 핵심국들과도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3)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최근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자원의 국제시세가 급등하였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기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경제발전 경험과 선진 기술을 전수하고, 중남미의 주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정부는 이와 함께 중남미 지역과 에너지·자원·통상·투자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위하여 고위 대표단 교환, 포럼 개최 및 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여왔다.

중남미 지역은 석유, 가스 등 각종 에너지·자원의 보고이자, 인구 6억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다. 특히 주요 전략자원의 경우 전세계 매장량에서 볼 때 석유 15.9%, 리튬 85.8%, 동 48.3%, 은 41.5%, 철 28.1%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탐사 지역 또한 많이 남아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남미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비단 에너지·자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원자재의 가격 급등에 따라 세수가 풍부하여진 중남미 주요국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고속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건설 시장은 최근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동에 이은 제2의 인프라·플랜트 블루오션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외공관 및 해외건설협회를 주축으로 우리 건설 기업들의 현지 입찰 수주 전과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11년에 66억 달러의 대중남미 건설

수주액을 기록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액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89%에서 2011년에 11.23%로, 수주 건수도 2009년 15건에서 2011년 35건으로 급증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2월 국내 최초로 페루의 최대 민간 석유개발 회사인 페트로텍을 인수하여 우리의 자원 자급률을 높이고 중남미 석유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리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매장량의 1/3을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정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한 끝에, 한국광물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볼리비아 광물공사와 외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리튬 배터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밖에 중남미 지역에서 소위 좌파국가로 알려진 에콰도르(2011년 8월 방한), 볼리비아(2011년 9월 방한) 및 파라과이 정상(2008년 6월, 2012년 5월 방한)들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우리의 발전경험과 과학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인프라 투자 진출을 상호 연계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을 창출하였다. 이념을 뛰어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좌파국가들의 대한반도 문제관련 굳건한 지지를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4. 지역협력 외교

중남미 지역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역내 통합 노력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미통합체제(SIC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체(CAN),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역내통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11년 3월 남미국가연합(UNASUR) 출범, 2011년 12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출범, 2012년 6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출범 등을 통하여 역내 국가 간 통합 강화 및 지역기구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 의지가 관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참석하여 중미 6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정상회의 시 개발협력, 치안협력 및 전자정부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SICA 국가들은 천안함 사건 관련 이명박정부를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정상회담 참석계기 이루어진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미 5개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SICA 회원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치안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SICA가 주최한 ‘중미 치안전략지원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SICA 역외옵서버 가입을 추진하여 2011년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8월 역외국가 중 6번째로 SICA 옵서버국으로 가입하여 중미의 대표적인 지역협력체인 SICA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남미 역내 국가 중 대외시장 개방을 모토로 2012년 6월 공식 출범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과의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위하여 2012년 6월 칠레 및 콜롬비아 방문을 통하여 역동적인 한·중남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평양 동맹은 인구 2억 명, GDP 2조 달러의 경제통합지대로서 ASEAN(GDP 2조 달러)과 유사한 역내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남미 대표적인 ‘생각이 비슷한(like minded)’ 국가들로서 태평양연안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협력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남미에서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을 배제한 역내 결속 및 통합 노력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데, 2011년 말 출범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는 그간 중남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하고 중남미 역내 33개국만으로 구성하여 중남미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역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제1차 한·CE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CELAC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BRICS, IBSA(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아랍 정상회의(ASPA)를 개최하는 등 주요 역외 블록과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브라질 및 칠레의 최대 교역대상국 및 대중남미 3위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도 확대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중남미지역의 역내 통합 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태지역과 중남미 간 협력 확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카리브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신설하여 2011년 10월 제1차 고위급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12년 7월 제2차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카리브지역 국가들과 전자정부, 신재생에너지 및 ODA를 통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중남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중남미 협력 차원에서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의 비전그룹 설치를 주도하고 사이버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FEALAC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태지역과 중남미간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 양 지역 36개국이 참여하여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FEALAC의 3개 분과 실무그룹(경제·사회, 정치·문화·교육·스포츠, 과학·기술) 의장국을 수행하였다. 또한 상설 사무국이 부재한 FEALAC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이버사무국(Cyber-Secretariat) 설립을 제안하여 유치하였다. 사이버사무국은 2011년 공식 개소하여 웹사이트 운영, 정보센터 구축 및 FEALAC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양 지역 간 중장기 협력목표와 전략 수립을 위한 FEALAC 비전그룹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회원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비전그룹은 2012년 3월 우리나라의 주최로 제1차 비전그룹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 제4장

# 지역 협력 외교

### 제1절 APEC

APEC(아·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전세계 GDP의 56%, 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1989년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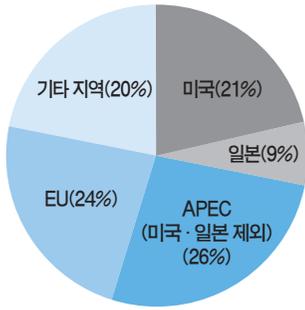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APEC회원국들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66%(2011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약 57%(2011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APEC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APEC은 출범 이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모토 아래 무역·투자 자유화와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WTO 출범을 비롯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대응 등 중요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APEC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재편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APEC이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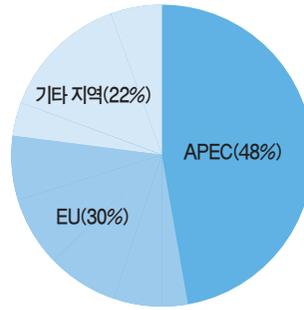
### 세계 GDP와 APEC

- 미국: 15,094(21%)    ■ EU: 16,531(24%)
- 일본: 5,896(9%)    ■ 기타 지역: 13,362(20%)
- APEC(미국·일본 제외): 18,0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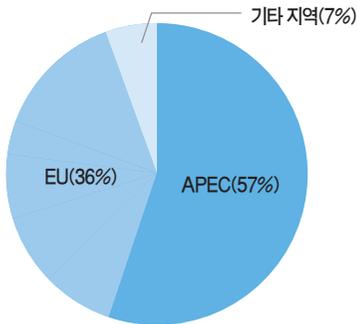
### 세계 교역량과 APEC

- APEC: 17,268(48%)    ■ EU: 10,899(30%)
- 기타 지역: 7,96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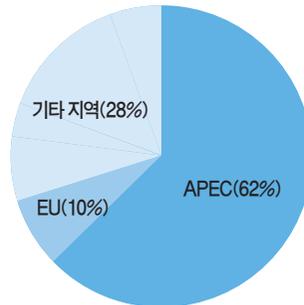
### 지역별 한국 수출액 비율

- APEC: 106,988(57%)    ■ EU: 65,950(36%)
- 기타 지역: 13,3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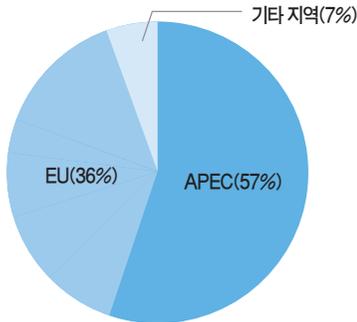
### 지역별 한국 수입액 비율

- APEC: 323,769(62%)    ■ EU: 55,019(10%)
- 기타 지역: 145,62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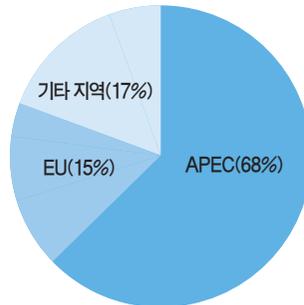
### 대한 해외투자액 비중

- APEC: 106,988(57%)    ■ EU: 65,950(36%)
- 기타 지역: 13,319(7%)



### 한국의 해외투자액 비중

- APEC: 194,137(68%)    ■ EU: 42,010(15%)
- 기타 지역: 51,142(17%)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PEC은 20년전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standstill)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연되고 있는 WTO의 DDA 모델리티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APEC 정상회의의 발언문(2008.11.22)



구하여 온 무역투자 자유화 및 비즈니스 원활화 작업을 선도하는 한편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APEC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첫째,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이 입증하듯 자유 무역과 구조개혁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APEC 회원국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호무역 조치 동결합의(standstill)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하여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아·태 지역의 권역별 통합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APEC은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제안에 따라 아·태지역의 자유 무역협정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FTA 허브국가로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아세안+3 등 역내 통합 움직임이 상호 조화롭게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FTAAP로 수렴되고 역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내 협력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FTAAP 경제적 효과 연구, 2010년 FTAAP 역량강화 역내 수요조사에 이어 2012년에는 역내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도국회원국 대상 FTA 역량강화사업을 주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역내 성장률이 급락하고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2009년 APEC 정상들은 역내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New Growth Paradigm)을 모색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추진하여온 ‘녹색성장 전략’,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그리고 혁신성장의 산실 역할을 하여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APEC 역내 성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도출에 기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동아시아와 미주, APEC과 G20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여 APEC 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1. 제16차 APEC 정상회의(2008.11.22~23, 페루 리마)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수출 및 해외투자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온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 등도 선진국 수출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15일 워싱턴 G20 세계금융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되었고, APEC 내부에서도 위기탈출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도 APEC 내부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기회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PEC은 20년 전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했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연되고 있는 WTO의 DDA 모델리티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APEC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협상의 기초로 하고,

그 당시 합의가 미진하였던 몇 개 과제, 즉 농업 분야의 SSM, 비농산물(NAMA) 분야의 부문별 자유화(Sectoral)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가능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페루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 발언(2008.11.22)



이러한 배경 하에 개최된 제16차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 (A New Commitment to Asia-Pacific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2008년 11월 22일-23일 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어, 세계금융위기, 지역경제통합,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2008년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한 ‘세계경제에 관한 리마 APEC 정상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 정상들은 동 성명서를 통하여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회원국 간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동결하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위하여서는 APEC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하여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제안하는 한편 DDA 협상 타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리마 성명서 채택에 기여하였다. APEC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역내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장기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회원국들에게 역설하였고, 이는 미국, 호주, 일본 등 APEC 주요국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 APEC 정상들이 2009년도 과제로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가장 중요한 한편  
양자적 FTA도 WTO를 보완해서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APEC 역내에서는 APEC 전체에서 FTA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금년 중 이루어진 사업의 하나가 한국과 페루, 인도네시아가 공동 실시한  
FTAAP 관련 기존 연구 분석 검토사업이었습니다.  
후속작업으로서 내년 싱가포르 APEC회의에서도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수국가 FTA와 관련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언급하신 대로 역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페루 APEC 정상회의 제2차 회의발언(2008.11.23)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한번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소개하여 역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을 통하여 세계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녹색성장의 선도국가임을 널리 인식시켰다.

## 2. 제17차 APEC 정상회의(2009.11.14~15, 싱가포르)

2009년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위기과정에서 드러난 시장만능주의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회원국들 간 공유되던 시점이었다. 또한 아·태지역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위기로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갔지만, 예전과 같은 성장전략 및 무역정책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회원국들 간에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역내 발전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17차 APEC 정상회의는 ‘지속성장과 지역연계 (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를 주제로 2009년 11월 14일-15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위기극복을 위하여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촉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균형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후 2010년 ‘APEC 신성장전략(APEC Growth Strategy)’을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G20의 역할을 소개하고, APEC 정상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G20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는 등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APEC CEO Summit’ 기조연설을 통하여 세계 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하여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G20 프로세스를 국제공조의 틀로 활용할 것을 역설하였다.

### 3. 제18차 APEC 정상회의(2010.11.13~14, 일본 요코하마)

2010년이 되면서 아·태지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는 '위기 이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10년은 1994년 제2차 APEC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밝힌 선진회원국들의 무역 자유화 달성시한이기도 하여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 성과 평가가 있던 해이기도 하였다.

####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연도를 설정 (정상선언문의 일부로 포함)
- 주요내용: 회원국 간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
- 보고르목표를 통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할화가 경제기술협력과 함께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APEC은 출범초기에는 경제협력사업을 중점 추진)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도 제18차 APEC 정상회의는 지역적 차원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을 주제로, 11월 13일부터 14일 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어, 신성장전략,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 지역경제통합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의장국인 일본은 이미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혁신적 성장, 안전한 성장을 골자로 하는 'APEC 신성장전략 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회람하여 2010년 'APEC 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마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였고, 의장국인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동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APEC 신성장전략은 G20의 합의사항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정책(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함께 전략적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PEC과 G20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2010년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임에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표준적합, 통관절차 등 9가지 분야에서 모범 국가로 평가받아 이명박정부의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역내 회원국들에게 재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 4. 제19차 APEC 정상회의(2011.11.12~13, 미국 호놀룰루)

2011년 APEC에서는 유럽재정위기, 저성장, 고실업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일련의 자연 재해 등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강하고, 지속적이고 균형된' 세계경제의 성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제19차 APEC 정상회의는 2011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성장과 고용(Growth and Job)' 그리고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안보(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ecurit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APEC이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APEC의 장기목표인 FTAAP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개도국들의 FTA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선진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개도회원국의 역량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선·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내 경제통합과 시장개방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선도발언을 통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APEC 홈페이지에 '개방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역내 기업인들에게 전하면서 한국의 투자여건과 투자국가로서의 매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 등을 소개하여 역내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 5. 제20차 APEC 정상회의(2012.9.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APEC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내 성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여 나가고 있었다.

제20차 APEC 정상회의는 통합 및 성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을 주제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식량안보, 혁신적 성장 촉진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동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데 있는데, 정상들은 환경상품 5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에 합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역내 경제회복을 위하여서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주도로 추진 중인 FTAAP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2015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동결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하여, 최근 곡물가 상승이 식량 수입개도국에게 유가상승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APEC 차원에서 식량위기 해결을 위하여 식량수출제한 금지에 대한 합의, 곡물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자제, 농업 생산성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인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추가발언을 통하여 혁신적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이 혁신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5차 APEC 경주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교육협력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혁신이야말로 혁신성장의 원동력임을 지적하고 우리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녹색혁신을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활동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이 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한국은 수십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고, 첨단 기술의 발전은 역내 혁신발전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제2절 ASEM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 20개국 및 유럽 29개국 정상들, 그리고 ASEAN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및 EU 상임의장이 만나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간 정상회의이다. 현재 ASEM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59.2%, 총생산(GDP)의 58.6%, 교역량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하여 아시아-유럽 간 긴밀한 협력 채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ASEM 정상회의 참석을 통하여 '다양화된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ASEM 회원국 정상들과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지지 및 협력기반을 공고화함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ASEM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 ASEM 회원국들과의 양자정상회담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신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1. 제7차 ASEM 정상회의(2008.10.23~25, 중국 베이징)

이명박 대통령은 제7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제7차 정상회의는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위기 극복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ASEM 회원국 간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요지의 '국제금융상황에 관한 ASEM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제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금융문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금융개혁 방안으로 사전 조기경보와 감독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도발언은 ASEM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주최국인 중국과 조정국인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ASEM 회원국들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위기 극복 방안 토

의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업무오찬 세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을 계속 설득시키고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일을 인내심을 갖고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ASEM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핵 포기를 권유하면서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상생공영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그 공영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안 철도를 연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ASEM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6자 회담의 유용성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박 3일의 짧은 베이징 방문기간 중에도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덴마크, 폴란드, 베트남 정상과도 연쇄 개별 회동을 갖고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ASEAN+3’ 조찬 회동에서는 역내 경제위기 발생가능성 감시 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제8차 ASEM 정상회의(2010.10.4~5, 벨기에 브뤼셀)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8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였다. 2010년 당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전 세계 교역량이 1/4분기 26.1% 증가에 이어 2/4분기 25.5% 증가하였고, IMF 및 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0.4%p와 1.2%p로 상향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변수,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면에 대두하였다.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여 △ 탄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균형 성장, △시장의 신뢰 회복, △금융시스템의 복원력과 투명성 강화, △금융 부문 개혁,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등을 위한 아시아-유럽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 11~12일까지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의제 및 기대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G20 국가간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MF 쿼터 조정 및 거버넌스 개혁을 촉구하는 등 세계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ASEM 회원국 간의 협조와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ASEM과 G20간의 협력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성명'을 통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등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회담이 열리기 전에 당사자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만 회담을 여는 효과가 있으며, 말로 하는 회담은 길어지고 그 동안에 핵무기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포기 및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ASEM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회원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하여 천안함 사태(2010.3)에 대한 깊은 우려 및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 및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 관련 '추가공격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촉구함으로써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ASEM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길라드 호주 총리, 클레그 영국 부총리, 사빠떼로 스페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밖에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EU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3. 제9차 ASEM 정상회의(2012.11.5~6, 라오스 비엔티엔)

2012년 ASEM 정상회의는 2012년 11월 5-6일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초 발리민주주의포럼에 공동주재자로 다시금 초청되어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하여야 되며 11월 중순에는 ASEAN+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국내외 일정이 산적함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존 위기로 인하여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및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가운데 2012년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다채무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국들

의 성장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하여 ASEM 회원국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세계경제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회원국간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평화와 번영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경제 및 금융’에 관한 제1차 본회의에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여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인천 송도에 유치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재원을 운용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회원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하여 GGGI 및 GCF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환영하였다.

ASEM 회원국은 2012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국들은 ‘의장성명’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ASEM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 투스크 폴란드 총리,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 제5편

# 글로벌 리더십 구현

- 제1장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
- 제2장 G20 정상회의 개최
- 제3장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 제4장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 제5장 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
- 제6장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G20 코리아의 미래 비전: 세계 공헌국가’

저는 ‘세계, 미래, 가치’라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는 물론 소프트파워, 즉 세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과 문화 또한 넘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의 의무도 다하여야 합니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협력이어말로 대한민국이 걸어갈 새로운 차원의 대외적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활약하고 있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개발의제는 신흥국,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G20 백서 발간 축하메시지(2011. 5)’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로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사회 변영은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국제환경 변화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제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5년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을 확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나 21세기에 새로운 국제 환경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은 첫째, 글로벌 질서 구축 및 규범 확립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둘째,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common good)의 확충에 기여하며, 셋째, 강압이 아닌 모범사례로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하여서는 군사경제력에 기초한 하드파워와 정치·사회·문화적인 매력에 바탕을 두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의 리더십 자산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강대국과 같은 하드파워는 없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보기도문 국가로 여러 개도국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였으며,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국익과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본격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에는 한국의 미래 비전을 '세계 공헌국가'로 설정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의제 설정과 규범 확립에 기여하는 지적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G20서울정상회의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또한 평화유지활동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공헌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핵테러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핵테러 방지 외에 원자력 안전, 방사능 물질 보안 등 추가적인 의제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이명박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공헌을 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 제1장

#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가 간의 상호의존은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초 냉전 체제 붕괴 이후 급진전된 세계화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하여 금융 및 안보위기의 여파는 더 이상 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차원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주권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 전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리즘, 해적, 전염병, 기후변화 등 문제가 우리 생활에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제질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분야별로 글로벌 차원의 신규협력체를 창설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차별화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프로세스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이다.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나란히 유치하고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우리의 국가위상과 글로벌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국제질서의 변화 추세, 그리고 우리의 국가정체성 및 국가이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왔다. 1970년대 초반 1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G7(이후 러시아 가입에 따라 G8)에 의하여 주도되어왔다. 그러나 신흥국이 이미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2050년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국이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G8만으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고 신흥국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G20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G20 정상회의를 통한 신속한 국제공조는 세계경제가 급격한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찾고 회복 추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G20의 등장은 주요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가 다극화된 데 따른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를 인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가 G8에서 G20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이 되고,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닌다. 불과 50년 전만 하여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식민지와 전쟁이 남긴 피해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가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일궈내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경제의 현재를 논의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러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는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복잡한 세계경제의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물리적 역량의 시험대라면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지적 역량의 시험대였다. G20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과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여냈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지적 리더십을 전 세계에 훌륭히 입증하였다.

이준 특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으나 회의장을 밟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외롭게 분사하였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하였던 아픈 역사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회원이 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은 건국 후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입하였다.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지구촌의 좌장으로 성장하여 G20 정상회의

까지 개최할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외교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G20서울정상회의의 개최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이명박정부가 거둔 대표적 성과였다면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 핵안보 논의의 주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국가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성(dual use)으로 인하여 국제안보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원자력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과 확산은 막으면서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1960년대 말부터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여지면서 특히 이동 중인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집단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각되면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 개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0년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테러집단의 핵무기 공격을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언급하였다. 한편 IAEA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1993년 이후 2011년 까지 총 2,164건의 핵·방사성물질의 도난, 분실, 불법거래 사례가 접수되는 등 핵테러 위협은 국제적으로 그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으로 창설된 핵안보정상회의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여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한 번의 핵테러만으로도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포함한 엄청난 정치·사회·환경·심리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만큼 핵·방사능 테러는 그 가능성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G20 정상회의가 이미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는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 같은 예방적 노력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가급적 최대 다수의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명박정부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58명의 세계 지도자들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을 이끌어냈다.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겠지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를 결과문서로 채택한 이후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을 ‘핵테러 없는 세상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평화 서밋’으로 규정하고 ‘안보를 넘어 평화로(Beyond Security Towards Peace)’라는 기치 하에 각국으로부터 총 100개가 넘는 새로운 핵안보 공약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이명박 대통

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이제 우리는 핵테러 없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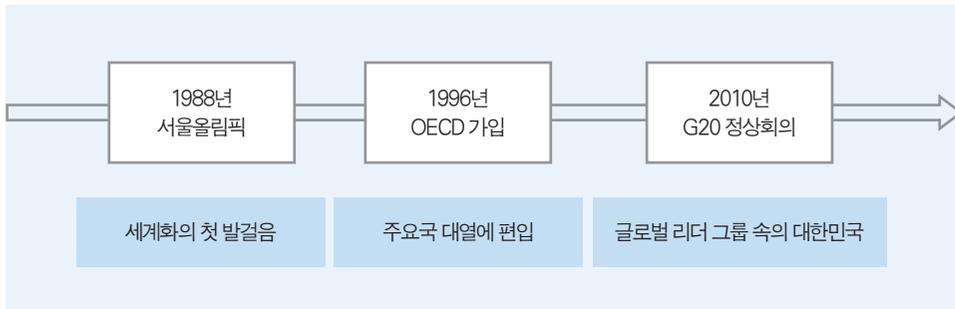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글로벌 문제 논의 시 ‘더 큰 대한민국’으로서 기여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제2장

# G20 정상회의 개최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010.11.9, Time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세계화의 첫걸음을 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OECD 가입을 통하여 주요국 대열에 편입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명박정부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그룹에 진입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규범을 준수하던 입장(follower)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글로벌 리더(rule-setter)로 변모하였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G20의장국으로서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1)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제 마련, 2)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3)녹색성장, 4)개도국 빈곤해소와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국제사회의 공통의 과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1절 G20 정상회의 출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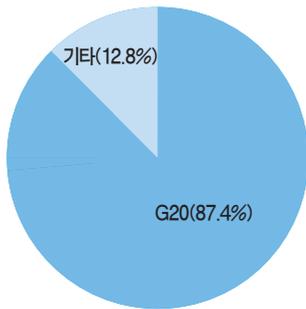
### 1. G20 정상회의 출범 및 한국의 참여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 및 금융권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하여 미국 은행권 전체를 뒤흔들고 이어 유럽 각국으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치닫게 되었으며 곧이어 실물 부문 의 위기로까지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각국 정부는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국제공조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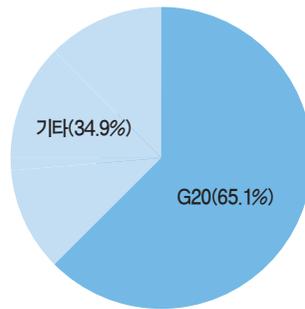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에게 전화 자문을 구하였다. 2008년 10월 21일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할 정상 차원의 모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당시 G8, G13, G20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하여서는 변화된 현재의 글로벌 경제 판도를 반영한 G20국가의 정상 모임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부터 G8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거버넌스 개편 시 대한민국이 참여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여 나갔다. 당초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G8과 BRICS를 중심으로 일부 신흥국만을 포함한 G13/14 형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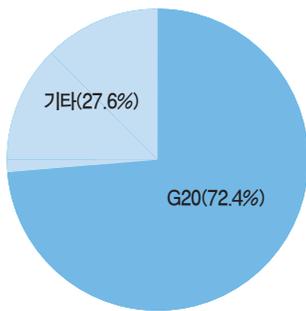
세계에서 G20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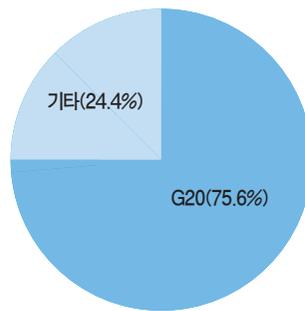
GDP



인구



수출



수입

있으며, 1997년부터 1998까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용한 정책적 경험을 획득하였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거버넌스의 주요 일원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며, 기존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여 국가를 중심으로 G8을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 G8 주한대사 초청, 재외 공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였다. 마침내 미국은 기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초청하여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향후 세계경제 질서를 좌우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떠오른

G20 국가별 주요 경제지표(2010년 기준)

구분	GDP (십억 달러)	인구 (백만 명)	1인당GDP (달러)	교역량 (십억 달러)	수출 (십억 달러)	수입 (십억 달러)
EU	16,242(25.8)	501 ( 7.3)	32,412	3,783(12.5)	1,790	1,993
미국	14,660(23.3)	310 ( 4.5)	47,233	3,246(10.7)	1,278	1,968
중국	5,879 ( 9.3)	1,341(19.5)	4,383	2,973 ( 9.8)	1,578	1,395
일본	5,459 ( 8.7)	127 ( 1.8)	43,144	1,462 ( 4.8)	770	692
독일	3,303 ( 5.2)	82 ( 1.2)	40,129	2,337 ( 7.7)	1,270	1,067
프랑스	2,558 ( 4.1)	63 ( 0.9)	40,744	1,114 ( 3.7)	513	601
영국	2,247 ( 3.6)	62 ( 0.9)	36,216	972 ( 3.2)	410	562
브라질	2,089 ( 3.3)	195 ( 2.8)	10,717	393 ( 1.3)	202	191
이탈리아	2,050 ( 3.3)	61 ( 0.9)	33,853	934 ( 3.1)	447	487
인도	1,722 ( 2.7)	1,225(17.8)	1,406	547 ( 1.8)	220	327
캐나다	1,574 ( 2.5)	34 ( 0.5)	46,280	777 ( 2.6)	386	391
러시아	1,480 ( 2.4)	143 ( 2.1)	10,351	673 ( 2.2)	400	273
호주	1,233 ( 2.0)	22 ( 0.3)	55,368	414 ( 1.4)	212	202
멕시코	1,040 ( 1.7)	113 ( 1.6)	9,166	615 ( 2.0)	298	317
한국	<b>1,014 ( 1.6)</b>	<b>49 ( 0.7)</b>	<b>20,753</b>	<b>892 ( 3.0)</b>	<b>466</b>	<b>425</b>
터키	735 ( 1.2)	73 ( 1.1)	10,106	300 ( 1.0)	114	186
인도네시아	707 ( 1.1)	240 ( 3.5)	2,946	290 ( 1.0)	158	132
사우디아라비아	435 ( 0.7)	27 ( 0.4)	15,836	348 ( 1.2)	251	97
아르헨티나	370 ( 0.6)	40 ( 0.6)	9,163	113 ( 0.4)	65	48
남아공	364 ( 0.6)	50 ( 0.7)	7,259	176 ( 0.6)	82	94
G20 전체	<b>55,004(87.4)</b>	<b>4,491(65.1)</b>	<b>12,247</b>	<b>22,358(74)</b>	<b>10,911</b>	<b>11,447</b>
세계 전체	<b>62,911(100)</b>	<b>6,896(100)</b>	<b>9,123</b>	<b>30,218(100)</b>	<b>15,077</b>	<b>15,141</b>

※ 주: 1) ( )내는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IMF, 유럽통계청

G20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던 G20 재무장관회의를 격상시킨다는 형식을 채택한 것이었으나 정상회의 수준에까지 한국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략을 동원한 치밀한 외교교섭이 필요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긴밀한 한미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 2.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2008년 11월)

G20 회원국 정상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화포럼(FSF), UN 등 국제기구 대표들은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원인과 각국의 기존 조치에 대한 평가, 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향후 국제금융 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 그리고 보호주의 저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고 금융 개혁을 위한 47개의 중·단기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을 제안하여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5일 Rudd 호주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과 G20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은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가 보호무역확산으로 인하여 대공황 때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G20 정상회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뽑히고 있다.

워싱턴에서 G20 정상들은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워싱턴 G20 정상회의는 기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차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신흥경제국들이 포함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향한 서막이 올라가게 되었다.

## 3.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2009년 4월)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때보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외에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과 시한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G20 정상들이 2009년 하반기에 제3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G20의 유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음을 뜻하며, 이는 G20이 핵심적인 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거시경제의 정책 공조, 그리고 보호주의 저지 등의

의제 설정과 조율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WTO, 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이 G20 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공조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1990년 말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원칙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나갈 것을 역설하였으며 이는 G20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 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G20 정상들의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하여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합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운 영국총리와, 오바마 미국대통령, 아소 일본총리, 러드 호주총리,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사안과 글로벌 경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데 주요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 4.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9월)

2009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점검을 통하여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구축하기로 하고,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47개 금융규제 개혁 과제를 2009년 말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IMF 쿼터 개혁, 재원확충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합의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신규장벽 금지, 보호무역 조치의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파이낸셜 타임즈 공동 기고를 통하여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거시경제공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특히 위기 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정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경제 정책을 감안한 유연한 협력 체제를 제안하여 합의 도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서는 IMF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IMF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보호주의 저지와 함께 2012년까지 DDA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여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주요결과로 반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G20 정상회의가 지속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여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 제도화와 국제금융체제 개혁, DDA 타결 등 세계경제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셋째, 대한민국은 201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넷째, 그 동안 G20 정상회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제는 아시아에서 개최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발언(2009.9.1)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 수임에 성공한 것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와 우의를 쌓아 온 외국 원수들의 지지에 힘입은 바 컸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호주, 일본,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들은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2010년 G20 의장국으로 확정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되었다.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한 것이다. 또한 G20 정상들은 G20을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결정하고 이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변화된 세계경제 판도를 반영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09년 11월 18일 '한국 기적의 비결'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심하여온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어 한 걸음 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신문은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한국경제의 기반이 단단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 치열했던 G20 정상회의 유치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주요국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제1차 G20 정상회의 중에도 영국과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정상회의 중간에 미국이 일본과 영국 정상을 따로 모아 향후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할 정도였다.

제2차 정상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에도 일본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벌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상회의 준비를 위하여 런던에 가보니 첫째, 일본은 2009년 하반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 총선을 앞두고 큰 국제행사를 잘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둘째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이 돋보인다면 한국 측의 개최 의사를 물어오는 국가들이 있었다.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DP 4% 규모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소개하고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부실자산 처리 경험을 공유하며, G20 국가들에게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2009년 9월 개최된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신흥국가이자 비서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G20에서 우리나라의 건설적인 기여와 이를 이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였다.

- 안호영(전 G20 워트파)

## 5.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2010년 6월)

2010년 6월 26일부터 27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4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효과적으로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하는 데 보다 치중하였다. 세계경제 현황,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Framework) 이행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 개혁, 무역 및 기타 이슈, 금융규제,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 등 기존 의제의 이행(follow-up)과 함께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fiscal consolidation) 확보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이행을 위하여 유사한 국가 그룹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둘째, IMF 쿼터 개혁 시한을 2011년 1월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까지로 단축하였다. 셋째, 무역·투자관

런, 보호주의 동결조치(standstill)를 3년 연장하고, DDA 협상 동향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넷째,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과제인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바젤 III)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 규제를 비롯한 주요 금융규제 개혁 방안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섯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역량 배양을 통한 경제성장 및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다년간 행동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간 균형을 도모하여야 하며 유럽재정위기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보호주의 저지 공약 연장, DDA타결 노력을 재차 촉구하여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차기 정상회의 의장자격으로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목표를 제시하고 비즈니스 서밋 개최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칸 나오토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과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정상선언문에 수차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합의하자." 혹은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구체 방안을 마련하자."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의지를 다짐한 회의로 평가할 수 있다.

## 제2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1. 정상회의 개최 준비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에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2009년 11월 창설하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계기에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기존 공약의 착실한 이행, 둘째,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신규의제의 도입, 셋째,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통한 비 G20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지확보를 제시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1개월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G20 회원국의 모든 정상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ASEM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일정상 양자회담이 어려웠던 정상들과는 전화 협의를 하였다. 10월 27일부터 G20 정상회의 전까지 전화통화를 통하여 G20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조율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IMF 개혁 워킹그룹(Working Group) 및 개발 워킹그룹(WorkingGroup) 공동 의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주마 대통령은 “개발의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G8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이렇게 회의를 열고 또 개발이 의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화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서신을 활용하여 G20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의 관련 대한민국의 추진 목표 등을 상세히 전달하기도 하였다.

## 2.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과

서울 G20 정상회의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양일간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 국가 이외에도, 5개 초청국,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각국 정부대표단 6,000여명, 언론인 약 4,000여 명 및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의 CEO 120명 등이 방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의제 및 행사 운영 모두 큰 성공을 거둔 회의로 평가되었다. 의제면에서는 기존 G20 정상회의 논의 의제인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마련’, ‘IMF 쿼터개혁과 이사국수 조정 합의’, ‘Basel III 및 SIFI 문제 합의’, ‘DDA 타결 의지 재확인’, ‘개발 G20 의제 포함’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제적 관심사였던 주요 국가 간 환율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나아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무렵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등 세계 주요 언론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이슈를 환율과 연계하여 주요 기사로 다루었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표출하였다. 특히 환율 문제는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보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여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여부가 여러분 손에 달려다고 생각한다. 환율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있지만, 세계경제의 미래를 위하여서 반드시 합의를 이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버스, 기차, 비행기를 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G20의 합의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정부의 간절한 노력이 G20에서 환율정책의 공조 방향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서울 G20 정상회의와 거시건전성 정책

G20 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의 관심사였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G20 서울선언문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하여 두 번 명시가 되었다.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는 나라로서 적절한 자본유입 제한나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서도 금융제도 안정과 과도한 자본유입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정책개발을 IMF, FSB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2010년 서울 선언문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한 대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IMF도 예전의 자본유출입 자유화를 주문하는 공식적 입장을 번복하고 금융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최근까지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던 IMF의 노선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IMF의 이런 입장 전환의 출발점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대하여 기업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제논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만 개의 기업의 파산과 200만의 실업자를 남긴 1997년 외환 위기의 국가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국제 경제 의제 논의의 외교적, 정치경제적 측면도 잘 이해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자칫 무역수지 개선 목적의 환율 개입으로 오인되고 외환 시장 개입을 일삼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선언문의 구절 하나하나를 챙겼다.

201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특별연설을 하였다. 이는 같은 해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정리할 기회였다. 다보스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은 당시처럼 뿌듯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다보스에서는 각 회의장마다 한국이 화제에 오르고 어디에서나 한국이 화두였다.

2010년 이후 세계 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유럽의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그 여파는 세계 전체에 미치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금융위기에 취약한 예전의 모습을 벗을 수 있었다. 2011년 유럽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외환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경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간의 정책 때문이었다. 2012년 12월 IMF의 자본유출입에 관한 공식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모범사례로 삼았다.

- 신현승(국제경제보좌관)

서울 G20 정상회의 일정

일자	시간	정상 일정	배우자 일정	비즈니스 서밋
11.10				CEO 개별 기자회견
				리셉션
				환영만찬
11.11	08:20~17:30			개막총회
				오찬
				폐막총회
				공식 기자회견
		18:00~19:00	환영리셉션	환영리셉션
11.12	19:00~21:00	업무만찬: 세계경제 및 Framework I	배우자 만찬	
	09:00~10:00	1세션: 세계경제 및 Framework II		
	10:00~11:00	2세션: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11:00~11:30	정상 기념촬영(Family Photo)		
	11:30~12:30	3 세션: 개발	배우자 행사 (10:00~11:40)	
	12:30~14:00	업무오찬: - 무역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14:15~14:55	4 세션: 금융규제 개혁	배우자 오찬 (12:00~13:30)	
	14:55~15:20	5 세션: 에너지, 반부패 및 비즈니스 서밋		
	15:20~15:30	폐회식: 정상 선언문 채택 및 폐회 선언		
	16:00~16:30	의장 기자회견		
	16:30~16:40	SME Finance Challenge Award 시상식		
	18:30~20:50	특별만찬(Gala Dinner)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로스 칸 총재가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매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한 신흥국 및 개도국으로의 IMF 쿼터(6%)이전에 합의하고 IMF 이사국수를 조정하였으며, 바젤 III 도입 등 지난 수년간 구체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되어온 현안들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해결하였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합의한 IMF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최소 5%이상 쿼터이전은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G20 국가간의 이견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IMF 쿼터 개혁안은 수치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G20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

## 주요국별 IMF 쿼터 비중

순위	국가	쿼터비중	2010년 합의 쿼터비중
1	미국	17.67%	17.43%
2	일본	6.56%	6.47%
3	독일	6.11%	5.60%
4	영국, 프랑스	4.50%	4.23%
6	중국	4.00%	6.39%
18	한국	1.41%	1.80%

준이 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정부는 G20의 신뢰성과 유용성 확보 차원에서 IMF 쿼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는 인식 하에 회원국 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피츠버그 합의를 뛰어 넘은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였다고 평가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의 수출 이익을 확보하고 보호주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무역분야의 합의에 공을 들였다. 각국 정상들은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실무 협상자들에게 지시하고, 막바지 협상(end-game)의 종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상선언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에 합의하였다. 특히 무역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조되어 반영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를 확대하여 신흥국의 관심 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의제로 논의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개도국의 역량 배양과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중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 합의가 ‘서울 컨센서스’이자 ‘아프리카 컨센서스’라고 발언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합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G20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탄력대출제도의 개선과 예방대출제도 및 복수국가에

대한 탄력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이룩함으로써 자본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들 분야의 성과는 국제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들의 관심사 안으로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이들 비G20 국가와 G20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G20의 정

##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한 개도국에 경제개발 경험 전파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 중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제는 단연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다. 서울개발컨센서스는 경제개발을 단순히 원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문제로 접근하여 인프라투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인프라 투자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게 된 것은 항상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의제야말로 원조를 주는 공금자적 인 시각이 아닌 개발 당사자들이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도국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지시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된 멜레스 제나위 에디오피아 총리는 “한국의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까? 세계은행과 선진국들이 지방도로 건설이나 우선시하라고 지원을 거부하였을 때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KDI는 왜 만들었습니까? 초등교육에나 관심을 두지 왜 고급연구기관을 미리 만드느냐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에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G20을 통하여 강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적극 호응하였다.

인프라 투자에 거액의 원조자금이 필요한데 한국만으로는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괜찮겠냐는 내 걱정에 대하여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한국에게서 큰 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며 한국의 경험을 통하여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만 강조하여준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G20 발표를 근거로 우리가 세계은행과 선진국들을 설득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호응하였다.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들의 방문을 통하여 개도국의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요자들의 관점이 적극 반영된 G20개발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자국 역사상 최대 외교행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하여 자국의 개발 모델을 내세워 선진국·개도국 간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아프리카 참가국들은 정상회의의 도중 ‘G20 서울 개발 Consensus는 서울 Consensus일 뿐 아니라 Africa Consensus’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이창용(전 G20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당성을 높이는 제도적·지적 기반이 될 것이다.

G20 정상들은 또한 정상선언문을 통하여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G20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회원국의 적극적 지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녹색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의 경우 이명박정부 제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부분으로서 회원국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합의하여 서울정상회의에서 처음 녹색성장 의제가 G20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R&D 및 규제분야 협력과 녹색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등 G20 비즈니스 서밋 기업인 보고서의 녹색성장 분야 권고사항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정부간 협력체인 G20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즈니스 서밋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CEO 서밋과는 달리 일회성 회의가 아닌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보고서를 내고 G20 정상들에게 보고하는 G20 정상회의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G20 정상들은 향후 비즈니스 서밋의 지속 개최에 합의하였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 개최는 G20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의장으로서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타협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합의도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한, 브라질, 중국, 영국, 호주,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양국 간 관계 증진 등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이 여러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효과성을 입증하여 국제사회의 신뢰가 커지고, 개발 등 비회원국의 관심יש도 적극적으로 다루어 정당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하여 G20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체제로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이명박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 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세계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카메론 영국 총리도 서울 G20 정상회의가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회의였을 뿐 아니라 변화된 세계경제의 힘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퍼

G20정상회의 참석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

국가 정상	성명
한국	이명박 (Lee Myung-bak) 대통령
미국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Jr.) 대통령
영국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일본	간 나오토(Kan Naoto) 총리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총리
캐나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Hu Jintao) 주석
인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호주	줄리아 Gillard( Julia Gillard) 총리
브라질	루이스 이나썬우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멕시코	펠리페 데 헤수스 칼데론 이노호사(Felipe de Jesus Calderón Hinojosa) 대통령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Cristina Fernandez) 대통령
남아공	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Jacob Gedleyihlekisa Zuma)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드 알-파이잘(Saud Al-Faisal) 외교장관
터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
EU	에흐만 반 롬푸위(Herman Van Rompuy) EC상임의장 호제 마뉴엘 두라오 바호조(Jose Manuel Durao Barroso) EC 집행위원장
스페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총리
베트남(ASEAN의장국)	응웬 쩌 중 (Nguyen Tan Dung) 총리
이디오피아(NEPAD의장국)	멜레스 제나위 (Meles Zenawi) 총리
말라위	빙구와 무타리카(Bingu wa Mutharika) 대통령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
국제기구 대표	성명
UN	반기문(Ban Kimoon) 사무총장
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총재
세계은행(WB)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총재
금융안정위원회(FSB)	마리오 درا기(Mario Draghi) 의장
세계무역기구(WTO)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소마비아(Juan Somavia)

캐나다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간 일본 총리 등 다수 정상과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국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G20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가 나아가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과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여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지적 리더십을 전 세계에 훌륭히 입증하였다.

## 제3절 서울정상회의 이후(제6차~7차 정상회의)

### 1. 제6차 간느 G20 정상회의(2011년 11월)

한때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목도한 채, 2011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간느에서 제6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금융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무역, 개발, 농업, 고용노동 등 이슈를 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정상 코뮤니케, 정상 선언문, 성장과 고용을 위한 간느액션 플랜 등을 채택하였다.

무역부분에서 정상들은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고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원상 회복하기로 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융시장 규제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개발 분야 인프라 사업 추진 등 기존 합의 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였다. 농업 등 신규 이슈에 있어 식량안보 행동계획 채택, G20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G20 트로이카 제도화, 운영지침 마련, 아웃리치 체계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G20 제도화에 진전을 이뤘다.

간느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이카 의장국(전(한국)·현(프랑스)·차기(멕시코)의장국으로 구성)의 일원으로서 G20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간느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과감한 구조개혁 경험을 소개하며 그리스 등

유로지역 당사국들의 단호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또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IMF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합의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 수록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G20회원국들이 보호무역조치 동결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상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9월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영국 등 5개국 정상과 함께 세계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G20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앞 공동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6개국 정상은 강한 성장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G20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G20이 흑자국 국내수요확대 및 환율의 유연성 제고, 적자국 구조개혁을 통하여 글로벌 수요를 진작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유로존 위기 해결, 다자무역협상 진전 등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여 간느 정상회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작업반 공동의장역할을 수행하며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개발과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청정에너지·에너지효율성 실무그룹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아 청정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기업인의 모임인 G20 비즈니스 서밋(B20)을 주도하여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일 프랑스 진경련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서 국가정상으로는 유일하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일 룩셈이 EU상임의장 및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한·EU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양자협력 증진방안, 유로존 위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2. 제7차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2012년 6월)

2012년도 G20 정상회의는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의장국인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로 앞당겨져 개최된 멕시코 G20 정상회의는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유로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지도자들은 구조개혁, 재정·은행 통합강화, 유로존 내 불균형 시정 등 유로존의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에 더하여 G20 정상들은 유로존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의 의지를 담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G20 모든 회원국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여 가면

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하여 구체 공조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4,560억 달러에 달하는 IMF 재원확충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재원확충에 150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여러 신흥국 국가들도 재원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IMF 대응 능력이 강화된 것은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G20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채택하고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7년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유럽의 위기 당사국들이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유로존의 불완전한 시스템을 개혁하여 나가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보호주의를 하면 세계경제를 더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많은 정상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여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이 2014년까지 연장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G20정상회의 시 도입한 개발의제 관련하여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개도국 개발의 근간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의 직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독일 파이낸셜 타임지 공동기고를 통하여 G20은 세계경제안정과 성장 회복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국과 멕시코는 '녹색성장'이 이러한 도전과제 극복에 기여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G20 국가와 협력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최선의 전략 마련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이 G20의 주요의제로 부각되는 데 기여하였다.

## 제3장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의(2010), 세계개발원조총회(2011)에 이어 국제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구분	국가
아시아(12)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대양주(2)	뉴질랜드, 호주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유럽(23)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3)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 GDP의 90%를 대표하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자외교, 양자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한 복합 외

교의 최상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자외교 측면에서는 금세기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 현안인 핵테러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양자외교 측면에서는 단일 행사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개최(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9회, 외교장관 회담 12회)하여 우리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정상회의 준비 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계·산업계·언론 등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제1절 개최 배경: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대한민국은 극빈 개도국에서 출발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달성한 모범국가로 꼽힌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적 기여를 적극 확대하여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보았다.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안보 무대에서도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핵안보란 원래 테러리스트 그룹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과 여타 방사성물질의 탈취 및 거래, 관련 시설에 대한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핵위 등을 예방하고,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핵안보는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핵테러가 국제안보의 주요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안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알카에다 조직이 핵물질 입수를 시도한 바 있으며, 항공기 테러 목표물로 뉴욕인근 핵시설을 고려한 바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핵무기 공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핵군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진전, NPT 등 핵비확산체제 강

### 핵안보의 개념

- 핵안보란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사보타지(sabotage), 무단접근, 불법이전 및 기타 악의적 행위의 예방·탐지·대응(prevention, detection, response)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의 가능성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핵안보 강화 등 군축·비확산 외교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5일 체코 방문 특별 연설을 통하여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2010년 중으로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국제사회가 호응함으로써 핵안보정상회의가 태동하게 되었다. 핵안보 강화를 위하여서는 개별국가들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은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초청국으로 핵물질 보유량, 원전 운영현황 및 도입 계획,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총 47개 국가를 선정하고, 핵안보와 연관이 많은 주요 국제기구인 UN, EU, IAEA 등 3개 국제기구를 포함하였다. 특히 미국, 중국 등 핵 보유국과 핵비확산조약(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커졌다.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핵심 멤버라는 것이 증명된 대한민국이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이지만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이며 원전 23기를 운영하는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동 회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다.

2010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 및 핵테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핵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였는데, 회의 결과문서로 정상 차원의 정치적 서약을 담은 커뮤니케와 구체적, 기술적 사안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채택하였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물질 방호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적·기술적 조치들을 소개하고,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및 발전현황을 소개하는 데 힘썼다. 또한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계획 발표를 비롯하여 우리의 선진 IT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물질 관리·통제 체제를 여타 참가국과 공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기여 계획을 천명하였다.

무엇보다 워싱턴 정상회의가 뜻 깊은 것은 대한민국이 차기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 1차 세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의 차기 회의 개최국 지명을 수락하였고, 참가국 정상들이 이를 만장일

치료 지지함으로써 공식 결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최지 확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안보 정상회의는 세계 핵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최상위 안보회의”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선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도 그 동안 핵비확산 의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하여 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될 정도로 대규모 정상 회의를 준비할 역량을 인정받고 있던 점도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한미 양국 간 신뢰 관계도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회동,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각종 국제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면서 형성된 정상 간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외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재학시절부터 꿈꿔오던 이상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역량과 신뢰도를 고루 갖춘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 최고회의라 할 수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안보 분야 최고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외교의 지평 확대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노력이 크게 한걸음 전진하게 된 것이다.

## 제2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과정

2010년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10년 10월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 준비를 총괄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경호안전통제단을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상회의의 준비 계획 수립, 준비상황 점검 및 평가,

정상회의와 관련된 기관간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구체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준비기획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성공적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초기 단계부터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가국 및 정상회의 의제 등을 결정하여 나가는 데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최대한 많은 정상들의 참석이 가능한 시기로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 상반기 중 주요 정상급 회의 일정과 참가국 국내 상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5월 참가국 정상에 대한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조기에 주요국 정상들의 일정을 확보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서울이 최종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중 50명 내외의 정상 및 각국 대표단, 수행 기자단을 불편함 없이 수용할 수 있고 국제회의장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국제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및 50여 개 대표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초청국은 의장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초청국 선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 이외에도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를 적극 희망하는 국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의 실질적 기여 가능성, 지역 균형과 아울러 우리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측면에서도 초청국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던 47개국, 3개 국제기구에 더하여,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가봉을 비롯하여 EU 집행위원장 및 인터폴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특히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INTERPOL), 우리와 녹색동맹을 맺은 덴마크,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봉을 초청국에 포함하였다.

북한 초청 여부에 대하여 국내외 언론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유럽 3개국 순방중 베를린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진정하게 확고히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3월 26~27일까지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거부와 제반 여건 미성숙 등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의제 선정을 위한 주도적 노력도 기울였다. 우선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제 핵안보 프로세스를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진전시킨

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변화한 국제환경을 논의 의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의 측면과 대테러 측면을 상호 강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업무 오찬 의제를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상호관계’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협의 초기에 일부 국가들은 핵테러 방지 문제에만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5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이를 의제화시켰으며, 실제 서울 정상회의 시 관련 토의에서 많은 발언자들이 원자력 안전 문제를 포함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외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간략하게 논의되었으나 소위 ‘더티 밤(dirty-bomb)’으로 대표되는 방사성 물질 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시킨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핵안보, 국제정치, 한반도 문제에 있어 영향력이 큰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주축으로 명예 자문그룹인 대통령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하였다. 현인그룹에는 헨리 키신저 前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고 추동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 칼람 전 인도 대통령,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한 외국 인사와 한승주 전 외교장관을 비롯한 국내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현인그룹 회의는 2011년 11월 및 2012년 3월에 두 번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서울 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제3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1년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개최되었다. 지난 2010년 11월에 세계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연이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때보다 두 배수 이상 증가한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여 UN 총회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가 되었다. 또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제회의 중 최대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및 국제안보를 주제로 한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대륙	국가
아시아(12)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카자흐스탄
유럽(23)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터키,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덴마크,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미주(6)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대양주(2)	호주, 뉴질랜드
중동(7)	알제리,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UAE, 오만, 모로코
아프리카(3)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봉
국제기구(4)	UN, IAEA, EU(롬피이 상임의장 · 바호주 집행위원장), INTERPOL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대표

국가 · 국제기구명	성명
알제리	압델카데르 벤살라 상원의장 (Abdelkader Bensalah)
아르헨티나	엑토르 띠티메르만 외교장관 (Héctor Timerman)
아르메니아	세르즈 사르시안 대통령 (Serzh Sargsyan)
호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 (Julia Gilard)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Ilham Aliyev)
벨기에	조엘 밀게 부총리 겸 내무장관 (Joëlle Milquet)
브라질	미셸 떼메르 부통령 (Michel Temer)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 (Stephen Harper)
칠레	세바스티안 삐네라 에체니케 대통령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Hu Jintao)
체코	카렐 슈바르젠베르크 제1부총리 겸 외교장관 (Karel Schwarzenberg)
덴마크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 (Helle Thorning-Schmidt)
이집트	모하메드 암르 외교장관 (Mohamed Amr)
핀란드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 (Sauli Niinistö)
프랑스	프랑수아 피용 총리 (François Fillon)
가봉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 (Ali Bongo Ondimba)
조지아	미하일 사카쉬빌리 대통령 (Mikheil Saakashvili)
독일	귀도 베스트erve레 외교장관 (Guido Westerwelle)
헝가리	팔 슈미트 대통령 (Pal Schmitt)
인도	만모한 싱 총리 (Manmohan Singh)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

국가·국제기구명	성명
이스라엘	단 메리도르 부총리 (Dan Meridor)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Mario Monti)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Yoshihiko Noda)
요르단	압둘라 2세 이븐 알 후세인 국왕 (Abdullah II Ibn Al-Hussein)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
리투아니아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Dalia Grybauskaite)
말레이시아	탄 스리 무히딘 야신 부총리 (Tan Sri Muhyiddin Yassin)
멕시코	조르디 에레라 에너지장관 (Jordy Herrera)
모로코	시아드 딘 엘 오토마니 외교장관 (Saad Dine El Otmani)
네덜란드	우리 로젠탈 외교장관 (Uri Rosenthal)
뉴질랜드	존 키 총리 (John Key)
나이지리아	굿럭 에벨레 조나단 대통령 (Goodluck Ebele Jonathan)
노르웨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Jens Stoltenberg)
파키스탄	사이드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 (Syed Yusuf Raza Gilani)
필리핀	제조마 비나이 부통령 (Jejomar Binay)
폴란드	마르친 코롤레츠 환경장관 (Marcin Korolec)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Lee Myung-bak)
루마니아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 (Traian Basescu)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Dmitry Medvedev)
사우디아라비아	하심 빈 압둘라 아미니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장 (Hashim Bin Abdullah Yamani)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Lee Hsien Loong)
남아공	제이콥 게드레이레키사 주마 대통령 (Jacob Gedleyihlekisa Zuma)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Mariano Rajoy)
스웨덴	칼 빌트 외교장관 (Carl Bildt)
스위스	디디에 부르크할터 외교장관 (Didier Burkhalter)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 (Yingluck Shinawatra)
터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 (Recep Tayyip Erdoan)
UAE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영국	닉 클레그 부총리 (Nick Clegg)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Barack Obama)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Viktor Yanukovich)
베트남	응웬 쩐 중 총리 (Nguyen Tan Dung)
UN	반기문 사무총장 (Ban Ki-moon)
IAEA	유키야 아마노 사무총장 (Yukiya Amano)

국가·국제기구명	성명
EU	헤르만 반 롬퓌이 정상회의 상임의장 (Herman Van Rompuy)
EU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José Manuel Barroso)
인터폴	로날드 노블 사무총장 (Ronald Noble)

※ 참가국, 국제기구명 영어 알파벳순

모의 정상회의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 세계 GDP의 94%, 인구의 77%를 차지하는 5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에서 총 58명의 수석대표가 참가하였다. 또한 수석대표와 함께 이들을 수행하는 각 국의 5,500명의 대표단도 함께 하였다. 한편 서울 정상회의를 취재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단도 약 3,700명 정도의 큰 규모로 구성되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1일 차 환영리셉션과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2일 차 오전 정상회의 1차 세션, 기념촬영, 업무오찬, 오후 정상회의 2차 세션을 가진 후 의장 기자회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회의 세션 종료 후에는 참가 정상 내외를 대상으로 한 특별만찬 및 문화공연이 신라호텔에서 실시되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58명의 정상들이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문을 낭독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자유 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세션별로 그간 핵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소수의 선도 발언국 이외에는 현장에서 발언 신청을 바로 접수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회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을 역임한 경험 및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각 세션별로 예상 가능한 다양한 논의 진행에 대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각 세션별로 발언 희망국들이 적절히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정상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업무 만찬과 업무 오찬을 포함 4회의 정상회의 세션을 모두 진행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상들의 발언 내용을 체크하고 요약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사를 통하여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한층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였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유지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엄숙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무기 확산과 핵테러 위험은 이러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테러 위협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러한 염원이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정상 여러분들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면, 이러한 꿈이 실현될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핵물질이 테러범들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류는 맞서기 어려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단체들이 핵물질을 획득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방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테러범들에게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자비나 타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10만 개 이상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렇듯 과도하게 존재하는 핵물질을 신속히 최소화 하여 나가고,  
궁극적으로 모두 폐기하여 나가는 것이 핵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그 때까지는 핵물질이 테러단체나 범죄단체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불법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해당 국가에게 있지만,  
테러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테러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공조가 긴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중간 생략)

나는 여기 모인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핵테러가 지구상에 설 땅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체적인 의지와 약속,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 정상회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기대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연설(2012.3.26)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종료 후 폐막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정상들의 합의 문서인 서울 코뮤니케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핵무기 10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핵물질이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 핵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와 함께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학계·산업계에서도 핵안보 논의에 참여하고 행사 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였다. 서울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3.23~24) 및 '2012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3.23)을 개최하여 세계 원자력 산업계 및 핵·원자력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관 하에 3월 23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원자력 산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세계 원자력산업계 최초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원자력업계 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2012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주관하에 3월 23일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대표, 학계 등의 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세계 핵안보 거버넌스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주요 핵안보 기관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핵테러 억제에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안보 기술역량과 IAEA 등 국제기구의 핵안보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기술전시회도 행사장 내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 제4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및 우리 기여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상행사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의 정상급 지도자 총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경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 안보분야에서도 우리의 총체적 국가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온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하여 단순한 행사 주최국이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과, 의전, 경호 등 진행 측면에서도 ‘역대 가장 잘 준비된 회의’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가 브랜드 및 한류 전파 기회로도 활용하였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높은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당시 당면한 북한 미사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 및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서울 G20 정상회의 및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코리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원활한 행사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주요 부문별 성과를 거론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의제 측면에서 서울 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 있던 핵안보정상회의를 실천의 단계로 진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 채택을 통하여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를 천명하였다.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é)는 11개의 핵심 분야에서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 실천조치를 담고 있다.

53개국으로부터 핵물질 제거, 핵안보 협약 비준 약속 등 100개 이상의 신규공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공약 분야로는 △핵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제거 및 최소화 노력,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비준,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감식, △핵관련 정보 보호, △핵안보 문화 증진, △IAEA 핵안보기금 기여 등 IAEA활동 지원, △세계핵테러 방지 구상(GICNT) 등의 다자협력체 활동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핵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의 감축 및 향후 행동계획을 제시하여 핵테러 위협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각국이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계획을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참가 국가들이 핵물질 감축에 관한 시간계획에 합의한 것은 서울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간 8개국이 약 53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추가로 10여 개의 국가가 핵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핵무기 3,000개 분량의 군사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 합의에 따라 핵무기 1만 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향후 추가로 제거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775개 분량의 핵물질을 안전한 보관시설로 이동함으로써 방호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 핵물질 제거에 더하여 연구용 원자로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 사용 필요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 연료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한 성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술을 토대로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기술 실증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발표되었다(한·미·프·벨 4국 공동사업). 또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2015년까지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발표되었다(미·프·벨·네 4국 공동사업). 이와 같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 세계 민수용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크게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다음 성과로는 핵테러 방지 국제규범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까지의 2년 동안 각각 20개국과 14개국이 개정핵물질 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을 추가 비준하였으며,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미발효 상태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 목표 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 정상회의 계기, IAEA의 핵안보활동 지원 강화라는 성과도 달성하였다. 10개국 이상이 IAEA 핵안보기금에 대한 기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 미국, 호주 등이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통하여 핵시설의 방호상태를 점검받기로 하였다.

다자 핵안보 협력 메카니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9개국(아르헨티나,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가입하여 참가국수가 85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안보리 1540 위원회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에는 IAEA의 주도로 핵안보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상호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안보·안전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IAEA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별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방사능 테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주로 핵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워싱턴 정상회의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다.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및 핵밀수 대처를 위한 구체 계획도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운송보안 및 핵감식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터폴을 매개로 한 국경에서

## 서울 코뮤니케 주요내용

- 불필요한 HEU의 제거 및 처분
-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 (2013년말까지 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시)
-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연료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노력 환영
  - 연구용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시설에서의 HEU 대체
-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노력
- 2013년 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 조정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IAEA 핵안보기금에 대한 국가들의 기여 장려
- IAEA 틀 내에서 고농축우라늄(HEU) 관리 방안 개발 추진
- 방사능테러 방지를 위한 국별 조치와 국제협력 장려
- 원자력 시설의 방호와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
  -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측면의 통합적인 고려
-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운송보안 강화
  - 각국의 효과적인 관리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장려
- 핵물질 불법거래 차단
  - 국경에서의 검색·탐지 역량 강화, 불법거래 연루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 장려
- 불법거래된 핵물질의 원 소재지 파악 위한 핵감식 능력 향상
-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환영 및 각국 센터들간 네트워킹 구축 지지
- 핵안보 문화 강화
  - 정부 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언론계, NGO 등 민간의 핵안보 논의 참여 확대
- 민감한 핵정보에 대한 보호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 국가들의 핵안보 역량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의 형사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핵 관련 정보보안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인적역량 배양을 통한 핵안보 문화의 증진에도 성과가 있었다. 서울 정상회의 계기 15개국 이상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중이거나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수차례의 교섭·부교섭대표 회의 주재를 통하여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주도하는 한편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핵물질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 원자력 시설, 사용후 핵연료까지 논의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 가능한 포괄적인 핵안보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차기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4년에 개최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핵안보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핵보유국, 핵비보유국, 비동맹국가 등 다양한 그룹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안보 분야 최대 규모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실질적 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회의의 기획 및 의전 등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치러 내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각국 수석대표 이외에 장관급 50여 명, 차관보급 이상 고위인사 200여명이 방한하였으며, 각국 대표단(5,500여 명), 기자단(3,700여 명)을 비롯하여 부대행사 참석자 등 정상회의 계기 총 1만여 명 가량의 외빈이 방한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정상회의를 운영하면서도 각국 정상, 대표단 및 기자단으로부터 역대 가장 잘 준비된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인 행사는 처음”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회의장 디자인이 환상적이며, 의전과 경호의 팀워크가 완벽”하다며 극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 취지에 따라 국민 참여형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였다. 로고·슬로건 공모, 홍보대사 선정, 피스송(peace song)·뮤직비디오 제작 등 정상회의 계기 마련한 행사들은 전 국민의 자발적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행사 준비 초기 단계부터 700여 명의 행사 지원요원들이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회의 기간 중 실시된 차량 2부제 및 행사장 주변 통제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의장구에 걸맞은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검소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국격에 맞는 선진국형 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하였던 가구 및 설비 등을 최대한 재 활용하고, 행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 기자재 및 설비의 재활용을 염두에 둔 친환경 회의를 실현하는 한편 정상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회의 중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의 보고를 통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최종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주요국 지도자들이 다수 서울에 모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양자 회담 계기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전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4개국(국제기구 포함) 25명의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국제회의 계기에 가장 많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참고로 이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자회담(10회)의 2.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상회의 상대국들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국제사회 지도국가(G8/G20), 신흥협력 파트너, 중견 국가 등으로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선정되었으며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국제 핵안보 거버넌스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북정책 협력, FTA 협력,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2012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또한 단일 국제회의에서 역대 가장 많은 총 24회의 양자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정상회담을 단기간에 이루어 내었다. 이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된 양자회담(10회)의 2.4배에 해당한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상들이 양자회담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국제사회 지도국가, 신흥협력 파트너, 중견국가 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24개 대상국 및 국제기구를 선정하였다.

계획된 양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었고 식사시간을 최소화하였다. 통역시간마저 아끼기 위하여 상대 발언은 가급적 통역 없

이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언에만 통역을 집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의중 잡시의 여유라도 있으면 근처에 있는 정상들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살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외교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사안별 세부사항과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다.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많은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통하여 통상·에너지·방산·개발·교육 등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하고 4.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질 경제협력,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이루어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 중국과는 임기 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미국의 경우 11번째, 중국의 경우 10번째), 러시아와는 역대 최다 정상 상호방문(5번째) 성과를 이루었으며, EU, 터키,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임기 중 4회 이상(연평균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들과의 정상 외교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총리급 인사가 정상을 대리하여 참석한 경우 또는 정상이 참석하였으나 대통령의 일정상 정상회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양자회담을 주재(9개국)하였으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정상을 수행한 외교장관 등과 12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국제 핵안보 논의 강화를 위한 모멘텀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아울러 국제 핵안보 분야에서 강화된 우리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양자회담 현황

회담 상대국	일자 (2012)	주요 결과
미국(오바마 대통령) ※ 공식방문	3.25	- 한·미 전략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방안 협의 - 한·미간 실질 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중국(후 진타오 국가주석)	3.26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방안 등 양국 간 현안 폭넓게 논의
러시아(메드베데프 대통령)	3.26	-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사업 증진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
UN(반기문 사무총장)	3.24	- 북한 장거리 미사일 계획 관련 대응방안, 북한 인권 논의 강화 필요성 등 논의 - 시리아 사태 동향 등 관련 의견교환
EU(반 룬푸이 상임의장 및 바호주 집행위원장)	3.28	-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EU 정책방향에 대하여 협의 - 한·EU FTA의 충실한 이행 및 교육·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확대에 합의
호주(길리드 총리)	3.27	- 한반도 정세, 한·호 FTA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뉴질랜드(키 총리)	3.25	-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인도(싱 총리) ※ 공식방문	3.25	- 우리 기업의 인도에 대한 방산·인프라 사업 진출확대 기반 조성 - 본격적 원전협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 국빈 방문	3.28	- 방산·경제·통상·투자 협력 평가 및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관련 구체협력 방안 논의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연내 조속한 협상 개시, 2015년 500억 달러 및 2020년 1,000억 달러 교역목표 설정 등에 합의
베트남(응웬 쯰 중 총리) ※ 공식방문	3.28	- 한·베트남 FTA 협상의 조속 개시에 합의 - 베트남내 우리 방산선위차 추적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추진하기로 합의
태국(잉락 총리) ※ 공식방문	3.24	- 향후 5년내 교역규모 300억 달러 목표 달성 및 한·태 무역공동위 활성화 노력 강화에 합의 - 양국 유관기관간 경험 및 기술 공유방안 등 논의(수자원 관리 등)
덴마크(토르닝-슈미트 총리)	3.27	- 한·덴마크 동반자관계 및 녹색성장동맹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
스페인(라호이 총리)	3.28	- 유럽재정위기 대처방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방산 협력 등 논의
이탈리아(몬티 총리)	3.27	- 유럽재정위기에 대하여 심층 협의 - 양국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및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정식 서명
터키(에르도안 총리)	3.26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FT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 방안 협의 - 원전 및 방산분야 등 양국 공동관심 현안에 대하여 의견교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3.26	- 전력·의료·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3.28	- 수교 20주년 계기 양국관계 발전방향 논의 - 통상·과학기술·방산·제철 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관계 증진하여 나가기로 합의
조지아(사키슈빌리 대통령)	3.29	- 수교 2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개발협력,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적극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
남아공(주마 대통령)	3.27	- 수교 20년 계기 양국관계 평가 - 우리 기업의 남아공 에너지·자원분야 진출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UAE(모하메드 왕세자)	3.26	- 급속히 발전하는 양국 협력관계 심화방안 등 논의
요르단(압둘라 2세 국왕)	3.25	- 수교 50주년의 양국관계 발전에 대하여 긍정 평가, 경제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층 논의
가봉(온데바 대통령)	3.28	- 수교 50주년 계기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심화·확대하기로 합의 - 우리 기업의 가봉 인프라 사업 진출여건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
칠레(삐네라 대통령)	3.26	- 한·칠레 FTA 심화 등 통상현안 심층 논의 -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증진 방안 협의
헝가리(슈미트 대통령)	3.29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전, 항공,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입지를 바탕으로 핵비확산·핵군축 등 핵에 관한 여타 이슈 논의까지 촉진시키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기여를 계속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회의 의제 및 행사 측면에서 1차회의 개최국인 미국과 차기 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였다. 네덜란드 측은 우리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여 왔으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한·네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양국이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우리의 핵안보 공약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신규 성과사업을 준비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간 합의문서인 ‘서울 코뮤니케’에는 주요 핵안보 국제협약 비준 등 핵심적인 핵안보 목표 달성과 관련한 시한들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는 각 참가국이 서울 코뮤니케상의 목표시한을 엄두에 두고 핵안보 관련 국내정책을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양자·다자협의 계기에 계속 독려하였다.

핵·원자력 관련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다각적인 협조관계를 지속하여 우리의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과시하고 국제 핵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안보를 포함한 군축·비확산 관련 의제에 대한 정책·기술 분야 기초연구 역량도 함께 배양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주도하여 온 핵안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확대시키고, 국제 핵안보 논의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핵안보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 각국 전문가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핵안보 분야 씽크탱크 활동을 장려하면서 국내 핵안보 역량 강화와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정상회의 취지 및 결과를 설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주요 국제세미나, UN, IAEA 등 주요 국제기구 회의 계기에 핵안보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였다. 정상회의 비참가국에 대하여 회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향후 핵안보 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IAEA, UN 회원국들에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금년도 UN 총회 계기 개최된 ‘유엔 핵테러 고위급회의’를 주재하는 등 서울 정상회의 이후 의미 있는 후속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핵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학회 및 씽크탱크 활

동도 눈에 띄게 활발하여졌다.

우리의 이러한 후속 노력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IAEA,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공식문서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언급하고, 각종 핵·원자력 관련 국제 세미나·워크샵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이은 충실한 후속조치를 통하여 세계 속의 ‘글로벌 코리아’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참가국 평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각국에 모범을 보임. 한국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에 대하여 재차 감사하며, 금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	- 한국 측의 따뜻한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 분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포럼이었으며, 특히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함.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 한국은 기지단만 하여도 4,000명이 넘는 많은 참석자에도 불구하고 각 행사장 입장을 위한 줄을 설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조치(ID 카드에 신분정보 내장)를 취하여 각국 대표단에 깊은 인상을 남김. -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높은 수준의 편의제공을 받음.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에 만족하며 핵안보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봄. - 그룹포토 등 행사 진행을 질서 있고 신속히 하여낸 아이디어에 감탄
프랑스 피용 총리	- 금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수준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한 정말 바람직한 회의였음.
핀란드 나이니스피 대통령	-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택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중요한 방문이었고, 유익한 경험이었음.
스페인 라호이 총리	- 한국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전세계에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고 자부하여도 좋을 것임.
이탈리아 몬티 총리	- 한국은 핵안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탄하였음.
네덜란드 로젠탈 외교장관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준비, 조직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기대 이상이었음. 한국에 이어 차기 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금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됨.
독일 베스터벨레 외교장관	- "너무나도 훌륭하고 완벽하였다(excellent, perfect organization)."라고 여러 차례 언급할 수밖에 없는 흠없는 회의였음. - 앞으로 핵안보뿐만 아니라 핵군축 문제 역시 핵안보정상회의의 틀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함.
UAE 왕실 담당자	- 금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과와 의견면에서 매우 완벽하여 '빛나는 성공(stellar success)' 사례로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 금번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져, 이제 한국은 모든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 그리고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의 성과임.

## 제4장

#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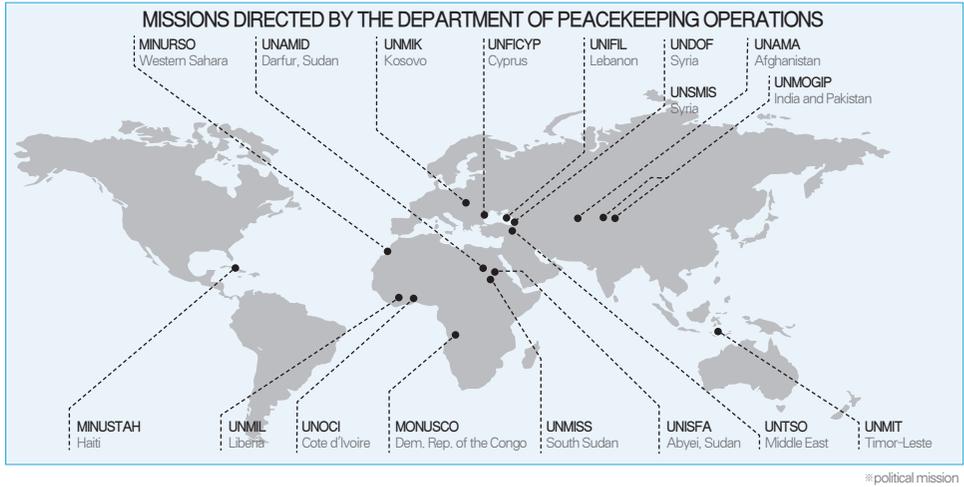
### 제1절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은 194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 64년간 유엔은 총 67개의 PKO 임무단을 창설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인 57개가 1988년 이후 창설되었다. 전 세계 120여개 국가 100만여 명이 참여하여 분쟁지역의 정전 감시 및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10월 기준 115개국으로부터 약 12만 명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엔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신장된 국력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지역분쟁, 테러, 해적행위 등 국제사회의 당면 안보 이슈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1991년 UN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II)에 공병부대를 최초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16개국에 5,000여 명을 파견하는 등 UN 평화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단 현황(2012년 10월 현재)



우리 군의 PKO 파견 실적(종료 활동)

구분	국가(지역)	임무	규모	파견기간
부대단위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UNOSOM II)	재건 및 대민지원	연인원 516명	1993.7~1994.3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MINURSO)	환자 진료	연인원 502명	1994.8~2006.5
	양골라 유엔평화유지단 (UNAVEM III)	복구 및 재건지원	연인원 600명	1995.10~1996.12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UNTAET)	동티모르 독립정부 수립지원	연인원 3,328명	1999.10~2003.10
개인 단위	유엔 조지아 정전감시단 (UNOMIG)	정전 감시	총 3명	1994.11~2009.7
	동티모르 지원단 (UNMISSET)	정전 감시, 참모활동	총 8명	2000.1~2004.6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FICYP)	평화유지군 사령관	총 1명	2002.1~2003.12
	부룬디 유엔임무단 (ONUB)	참모 활동	총 2명	2004.9~2006.12
	유엔 수단임무단 (UNMIS)	정전 감시, 참모 활동	총 7명	2005.11~2011.7
	유엔 네팔임무단 (UNMIN)	정전 감시, 참모 활동	총 4명	2007.3~2011.1
	총계			총 4,971명

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격상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아울러 21세기 들어 지리적·공간적 요인을 초월하는 안보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기업이 진출하여 우리의 국익과 네트워크가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관계로 직결된다는 점도 적극 고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계기 시 해외파병부대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더 큰 대한민국'의 선봉에서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박정부 초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인원은 390여명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630여명 선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레바논 동맹부대 및 아이티 단비부대를 포함, 전 세계 9개 임무단에 총 622명을 파견,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16개 유엔 회원국 중 3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동안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총 2개의 신규 부대를 파견하였다. 2010년 2월에는 아이티에 240명 규모의 공병부대인 단비부대를 신규 파견하였다.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발생 후, 유엔 안보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에 군인 2,000명, 경찰 1,5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의(안보리 결의 1908호)를 채택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아이티의 조속한 재건,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파견을 결정하고, 아이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 지진 발생 후 1개월 내 신속하게 단비부대를 현지에 파견하였다. 단비부대의 신속한 파견과 재해 복구 활동은 아이티 복구 및 재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비부대는 공병 임무 이외에도 의료활동,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방역 활동 및 아이티 지원 NGO 활동 지원 임무 등 민사활동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여타 파견 부대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300명 이내 규모의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UN Mission in South Sudan) 임무단 파견이 확정되어 2013년 중에 배치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독립한 남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국가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써 유엔은 아이티 파견 단비부대의 우수한 활동성과를 고려하여 남수단에 우리 공병부대의 파견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남수단 국가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

우리 군의 PKO 파견 현황(2012년 12월 현재)

국가(지역)	임무	규모	최초파견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동명부대	군 348명 (보병)	2007.7
	사령부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참모장교 4명	2007.1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MINUSTAH)	단비부대	치안유지 및 아이티 지진	군 240명 (공병)
	사령부	피해 복구 및 재건 지원	참모장교 2명 2009.11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GIP)		카시미르지역 정전 감시	군읍저버 7명 1994.11
라이베리아 임무단 (UNMIL)		정전감시	군읍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2003.10
남수단 임무단 (UNMISS)		평화정착 지원 및 연락업무	연락장교 2명 참모장교 6명 2011.7
수단다르푸르 임무단 (UNAMID)		평화협정 이행 지원	참모장교 2명 2009.6
동티모르 임무단 (UNMIT)		치안유지	경찰 3명 2006.12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UNOCI)		정전감시	군읍저버 2명 2009.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MINURSO)		평화협정 이행 지원	군읍저버 4명 2009.7
총계		622명	

하기 위하여 우리 군부대 파견을 결정하고, 현재 남수단 현지 전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군은 남수단 국가 기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임무 이외에도,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활동과 친화 활동 등을 통하여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를 통하여 형성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우리의 유엔 PKO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PKO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동 법률은 병력규모 1,000명 범위 내(기 파견 병력 규모 포함)에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법안 제6조 제1항) 유엔과 파견지, 파견부대의 규모, 파견기간 등에 대하여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잠정합의’ 조항으로 유엔과의 협의, 행정부 내 절차 및 부대편성 소요시간의 상당 부분을 줄여, 실제 파병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의장으로 국방부, 합참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설치, 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정책 방향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

였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도 설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세부사항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제정을 통하여 과거 정책적 차원에서 운영하여오고 있던 유엔 PKO 참여 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잠정합의' 규정 등 신속한 유엔 PKO 파병 메커니즘을 통하여 유엔 PKO 참여 확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 1. 레바논 동명부대

레바논은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온화한 지중해 기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국가이다. 그러나 1976년 시리아군이 내전 수습을 명분으로 레바논에 주둔하고 이에 대하여 197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군대를 주둔시킴에 따라 레바논에서는 기독교 민병대, 이슬람 민병대, 레바논 정부군, 시리아군, 이스라엘군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유엔은 1978년 3월 유엔 안보리결의안 제425호 및 제426호를 채택하여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을 설치하고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레바논 남부지역에서의 테러 및 공격행위가 계속되고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으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2006년 8월 11일 안보리결의안 제1701호를 통하여 UNIFIL 규모를 2,000명에서 1만 5,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회원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를 통하여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 350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파병하여 레바논 남부 티르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정전 감시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UNIFIL에 파견된 동명부대는 이명박정부가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에 이어 5번째로 파견한 유엔평화유지군이며, 보병부대로는 동티모르에 이어 2번째 파병이다.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는 최초 파견 이후 4차례의 파병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동명부대는 주로 리타니강 진입지점을 감시하고 작전지역을 감시정찰하며 레바논 군과 협조하여 로켓발사 탐지작전, 임시검문소 운용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리타니강 감시정찰은 동명부대 작전활동의 핵심으로, 테러용의자나 불법무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4시간 검문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초 파병 직후 임무를 부여받은 이래 현재까지 완벽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명부대는 UNIFIL 내 타국 파병부대와의 연합훈련 실시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파견국과 공고한 작전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활발한 민사작전은 작전지역내 안정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UNIFIL, 레바논 정부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계속적인 주둔과 각종 작전 확대 요청은 물론 추가 파병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명부대는 '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사작전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 및 방역활동, 도로 포장, 학교 및 관공서 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태권도, 한국어, 컴퓨터교실을 열어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및 주민들에게 긴요한 시설이나 쓰레기차, 발전기 등 현지 여건상 필요한 장비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성에 부합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부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활동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동명부대에 대한 새해 인사를 통하여 “동명부대가 레바논 평화유지군중 가장 모범적이고 지역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를 듣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고 치하하고, “평화유지군이 필요한 곳에 참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압바시야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군은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로 인식되었고, 파병국에 대한 거부감이 친근감으로 변하게 되었다.” 라며 동명부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라치아노 UNIFIL 사령관은 2009년 1월 26일 유엔 메달 수여식에서 동명부대를 ‘가장 모범적인 부대’라고 치하하였다. 동명부대는 이처럼 UNIFIL 책임지역 내 주민과 사령관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는 모범부대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아이티 단비부대

2004년 2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에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치안이 불안정하여지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2호를 통하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2004년 6월부터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을 설치하여 치안회복을 통한 정세 안정화, 행정·치안능력과 정부기능 강화,

아이티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인근 지역이 폐허로 변하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08호를 통하여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의 병력규모를 6,940명에서 8,94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월 19일 유엔의 공식 파견 요청을 접수한 후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병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2월 9일 국회의 결의를 받아 2월 27일 240명 규모의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병하였다. 이는 소말리아(1993년 7월~1995년 2월)와 앙골라(1995년 10월~1997년 2월)에 이은 우리나라의 3번째 공병부대 파병이었다.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기반시설이 거의 붕괴되었으며, 대부분의 가옥이 파손되어 아이티 국민들은 난민촌을 형성하여 생활하였다. 단비부대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약 40km 떨어진 레오간(Leogane)시에 주둔, 아이티의 재해복구 지원, 재건 및 인도적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주둔지 경계 및 재해복구 인원보호 및 필요 시에는 구호인원 호송과 주요시설 경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비부대는 본연의 공병임무 외에도 의료 지원, 난민촌·학교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이티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재건에도 참여하였다. 최신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활용하여 현지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7월 유엔임무단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우범지역 갱소탕 작전 이후 소탕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티 치안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난민촌과 고아원 등을 대상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인근지역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의식개혁 계몽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립심, 준법정신 등을 고양시키는 등 장기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단비부대는 유엔아이티임무단 파견 국가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단 한건의 적대행위도 없는 가운데 최고의 찬사를 받는 모범부대로 평가받고 있다. MINUSTAH의 마리아노 페르난데즈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단비부대가 사기와 헌신,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본인이 여타 PKO 부대에서 경험하여 보지 못한 남다른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새해 인사를 통하여 “단비부대가 황무지에서 기적을 일궈내는 공병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면서 한국 부대가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임무 수행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비부대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파병 연장 동의를 받아 2012년 12월말까지 파병을 연장하였다. 최근 유엔안보리는 아이티 지진 복구 작업 진전과 정세 안정화를 감안, MINUSTAH 군병력 규모를 현재 7,340명에서 6,27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결의(2070호)를 채택하였다(2012.10.12). 이러한 병력 감축 계획과 지진 복구 작업 진전, 그리고 유엔 남수단임무단 파견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비부대는 2012년말 아이티에서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하였다.

### 3.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2011년 7월 남수단 독립과 함께 안보리 결의 제1996호를 통하여 남수단 국가건설 지원과 분쟁 예방 및 민간인 보호노력 지원, 남수단 정부의 안보·사법 능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이 설치되었다.

유엔은 아이티 파견 단비부대의 우수한 임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이명박정부에 공병부대를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에 파견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남수단 국가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우리 군부대 파견을 결정하고, 현재 남수단 현지 전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군은 단비부대 활동 경험을 통하여 공항 활주로 및 도로 등 남수단 국가 기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신생 독립국 남수단의 국가건설에 기여할 예정이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국가 기반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군의 인프라 건설 지원이 국가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군은 본연의 공병임무 이외에도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활동과 주민 친화 활동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활동도 전개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를 통하여 형성된 남수단 내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이 기대된다.

### 4. 유엔 임무단 옴저버 및 참모장교 파견

정부는 유엔의 요청에 근거하여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UN 임무단에 옴저버 및 평화유지군 참모장교를 파견하였다. 군옴저버는 현지 임무단 통제 하에 정전협정 위반여부 감시와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 참모부에 소속되어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분야의 참모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에서 파견된 장교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한국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아이티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단비

부대가 신속하게 파병된 것도 아이티 안정화지원단(MINUSTAH)에 파견되었던 한국군 장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국군 장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지아, 인도/파키스탄, 라이베리아, 수단/다푸르, 남수단, 레바논, 네팔, 코트디부아르, 서부사하라, 아이티 등지의 유엔 임무단에 연인원 160여 명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최영범 육군소장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밖에 최영진 현 주미대사가 유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활동(2007년 10월-2011년 8월)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국제평화 활동의 성과 및 기여를 유엔이 높이 평가한 것이다.

## 제2절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참여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더불어 분쟁지역 안정화와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국적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부터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해상·청마부대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동외부대, 2003년에는 다산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2007년 12월 철수)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 사단을 파견하여 4년 3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2008년 12월에 철수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유엔평화유지 활동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도 기여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 기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 아프가니스탄에 PRT(지방재건팀) 방호부대 등 총 668명을 파견하여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협력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군을 파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병이 있다. 2011년 아랍에미리트(UAE)에 150명이 파견되어 한·UAE간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국익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아크부대가 이러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라고 하겠다.

## 1. 아프가니스탄 PRT 및 오쉬노부대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탈레반의 무차별적인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유엔은 2001년 유엔안보리 결의 제1383호를 의결하여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을 설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및 재건활동을 지원하였다. 유엔은 매년 유엔안보리 결의를 의결하여 회원국들에게 국제안보지원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2009년 10월 제1890호 결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안보지원군에게 인력, 장비 및 기타 자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말 우리나라 지방재건팀(PRT) 운영계획과 방호부대 파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합동실사단의 현지 조사활동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과 2010년 2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2010년 7월 우리 PRT가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프간 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 350명을 파견하여 PRT 요원의 안전한 호송과 PRT 시설보호를 위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건팀(PRT)은 2010년 7월 바그람 기지에서 차리카군 위주로 재건지원활동을 실시하였고, 2011년 1월 차리카 기지로 이전하면서 인근 5개 군으로 활동지역을 확대하여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재건사업은 농업, 교육훈련, 행정제도, 보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찰훈련센터, 교육문화센터, 병원, 직업훈련원 등 시설 운영과 학교, 보건소, 시범농장 등 건축, 연수생 초청사업, 물자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직업훈련원을 졸업한 아프간인 200여명이 전원 취업하고,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아프간 환자들이 바그람과 차리카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120명의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는 등 아프간 내 재건사업은 아프간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위한 역량배양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PRT 재건사업은 아프간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능력배양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아프간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아프간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오쉬노부대는 우리 PRT 주둔지 경계와 PRT의 활동을 위하여 위협 정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방호 개념을 적용한 가운데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병력과 첨단 장비를 통합하여 24시간 운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한 건의 피해도 없는 완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작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재건팀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적인 재건지원 및 친한화 활동을 수행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안보지원

우리 PRT 주요 사업 추진현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르완주 학교 건립: 5개소</li> <li>• 차리카 교육문화센터 운영(문예, 아동 등 6개분야)</li> <li>• 바그람 직업훈련원 운영(자동차, 전기, 용접 등 5개분야)</li> <li>• 교육환경 개선(기존 학교시설 보수, 기자재 지원, 교과서 보급 등)</li> <li>• 교육행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등</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병원 운영: 2개소(차리카/바그람)</li> <li>• 신규 보건소 건립: 3개소</li> <li>• 기자재 지원 및 보건행정 역량강화 초청 연수 등</li> </ul>
행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단 파견(교육, 보건, 농촌개발, 행정제도)</li> <li>• 경찰훈련센터 운영: 2개소(차리카/바그람)</li> <li>• 행정제도 분야 초청연수 등</li> </ul>
농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랑지역 인도교 건설: 7개소</li> <li>• 시범농장 / 두유공장 건립: 각 1개소</li> <li>• 차리카 기지 주변 마을 주민 친화사업 등</li> </ul>

군(ISAF) 동맹군, 아프간 정부, 현지 주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국가들과의 연합 기동정찰 및 통합 기지방호훈련 등을 통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파견국과 공고한 작전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선수로서의 국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오쉬노부대는 PRT를 보호하는 기본임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차리카기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한국군에 대하여 우호감을 갖도록 친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필요한 세면 및 세족대와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고, 실내 도색과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주었으며, 주변마을의 학교에 책상, 의자 등 비품류를 지원하고 있다. 파르완주 축구팀과 자매결연을 하는 등 스포츠 교류로도 우정을 쌓고 있으며 지역 10개 마을 원로들을 수시로 부대에 초청하는 등 현지 정세를 고려한 친선활동을 전개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부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 PRT의 책임지역에 있는 파르완주 살랑기(Salangi) 주지사는 “한국 PRT가 미래에 파르완주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역량 강화·발전·번영을 위한 장기적 재건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한국 PRT가 파르완주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국제사회가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치안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PRT도 점진적 철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차리카 기지를 아프간 측에 이양하였다. 현재는 바그람 기지에서 병원, 직업훈련원 운영, 영외사업 등 잔여사업을 수행 중이며, 오쉬노 부대도 2012년 12월부터 규모를 70명 이내로 축소하여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와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충실히 하여나갈 것입니다.  
그 최일선에 유능하고 잘 훈련된 우리 군이 있습니다. 해로 안전 보장을 비롯하여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대형 재난 대비 등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맡아야 할 우리군의 국제적 책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소말리아 파병은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우리 해군 전투함으로서의 첫 해외파병입니다. 여러분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대양해군의 이름을 널리 떨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해부대 환송격려사(2009.3.13)



## 2. 청해부대

소말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목축업, 수산업 등 전통적 산업이 붕괴되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흉작 등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해적활동이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경찰, 민병대 등으로 활동하던 젊은 층들이 대거 해적에 합류하면서 최근 해적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소말리아는 총 3,400km에 이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말리아 정부는 이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2008년 이후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활동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해적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이 급증 하였으며, 이는 국제해양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2008년 6월 2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1836, 1846, 1851호 등을 통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국내적으로는 2006년 4월 동원호, 2008년 9월 브라이트 루비호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 아덴만 여명작전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 수행을 결심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창군 이래 해외에 피병된 군이 군사작전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구출한 최초의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출작전 하루 전인 1월 20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작전을 승인하면서 "어려운 작전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꼭 하여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 장병들은 훌륭하게 하여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번 작전을 승인한다."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출작전을 명령한 직후에도 참모들에게 "나라고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라며 "머칠 동안 마음이 많이 복잡하였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월 20일 오전 구출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는데..."라며 걱정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공적으로 작전이 종료된 후, 우리 선원과 대원 모두가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UAE 원전 주주 때보다

더 기쁘다."고 하였다. 이어 청해부대 최영함 함장인 조영주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하였다. 모든 장병들에게 나의 격려를 전하여달라.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젠 잠을 푹 자라."고 치하하였다. 또한 3월 5일에는 부상으로 입원중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군 선장을 병원으로 찾아가 위로하면서 "석 선장이 걸어서 퇴원하여야 작전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작전 후에도 각별한 관심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구출작전 이후 생포된 해적을 국내로 압송하는 방법을 구하지 못하여 참모들이 난관에 빠졌을 때에도 직접 UAE 왕실에 전화하여서 그간 쌓아온 외교적 교분을 통하여 UAE 왕실 전용기를 확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전 이후 담화에 서 밝힌대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세계 해적 퇴치사에 남을 완벽한 작전이었다.

- 한민구(전 합참의장)

항해 중 해적에게 피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아덴만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선박은 연간 500여 척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운 물동량의 2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선박과 선원 보호활동의 필요성과 국제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청해부대가 창설되어 창군 이래 최초의 전투함 해외파병이 이루어졌다.

청해부대의 주된 임무는 우리국적 선박 및 우리국민 승선 외국국적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호송작전을 수행하고, 국제 해상 안전 및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합해군사령부와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며, 합참으로부터 수명되는 기타 작전임무를 수

행하는 것이다.

선박호송작전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우리 선박 330여 척을 포함, 총 1,400여 척에 대한 근접호송과 3,600척에 대하여 안전항해를 지원하였다.

해양안보작전은 연합해군사령부가 수행하는 해양안보작전 중 대해적작전에 집중하였고 임무 기간 중 총 153회의 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연합전력과 공조체계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사외교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전에 참여 중인 연합해군사 예하 함정과 EU·NATO·중국·일본함정 등을 방문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실제 여러 작전(아덴만 여명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연합전력과 상호교류를 통한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특히 2010년 4월~9월까지 우리 군 최초로 이범림 제독이 CTF-151 지휘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및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 청해부대 성과 1: 아덴만 여명작전

- 아덴만 여명작전은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 의하여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를 피랍 7일 만인 21일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출한 작전이다. 작전 결과 무장한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피랍된 선원 21명은 선장(석해군)이 해적의 총에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사하였다. 우리 군의 피해도 전혀 없었다.
- 작전 중점은 인질 선원 및 구출작전 요원들이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게 작전을 종결하고 피랍선박을 안전해역으로 호송하는 것이었다. 청해부대는 1월 15일 선박 피랍 상황을 접수한 후 피랍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1월 17일 피랍선박을 발견한 후 감시 및 심리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1월 21일 구출작전을 시행하여 5시간 만에 작전을 종결하였다.
- 상세 작전 경과
  - 1월 15일 오전 7시 45분 UAE를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향해 중이던 삼호 주얼리호에 해적이 난입하였다. 선원들은 즉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였으나, 해적들은 안전구역의 해치를 부수고 오전 11시경 선원들을 인질로 하여 삼호 주얼리호를 장악하였다.
  - 이러한 상황은 군수적재차 지부티항으로 이동 중이던 해군 청해부대 6진 최영함에 전파되었다. 청해부대는 상황을 접수하고 신속히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바레인에 위치한 연합해군사령부에 피랍상황을 전파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 최영함은 지부티항에서 긴요물자만 신속하게 적재한 후 피랍 7시간 30분 후인 15일 오후 6시 30분에 지부티항을 긴급 출항하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해상에서 미 PAYUXENT함과 조우하여 해상 유류수급을 실시하고 사건해역으로 이동하였다.
- 청해부대는 17일 밤 11시에 피랍선박 작전구역 내 위치하여 감시 및 심리전을 수행 후 21일 새벽 4시 58분에 구출작전을 시행하였다. 먼저 링스헬기와 고속단정을 출격시킨 후 해적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링스헬기와 함정에서 제압사격을 실시하여 해적의 시선과 관심을 유인하였다. 이어 고속단정 공격팀이 등반을 한 후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하고 인질을 구출하고 구출작전은 5시간 후인 오전 9시 56분에 종료하였다
-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요인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치밀한 사전준비이다. 청해부대는 파병 전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동일유형의 선박 영상을 청해부대에 전송함으로써 선박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도상훈련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오통이 심한 함정에서 사격을 할 것에 대비하여 흔들리는 그네를 타고 사격훈련을 하는 등 치밀한 맞춤형 훈련을 한 것도 작전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는 연합해군사 및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었다. 연합해군사의 항공기를 이용한 정보수집과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파키스탄, 오만 함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선장의 후송 시 미군 헬기의 지원은 선장이 완쾌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작전에 임한 청해부대원들의 불굴의 용기였다.
- 아덴만 여명작전은 창군 이래 해외에 파병된 군이 군사작전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구출한 최초의 사례이자 역사적인 사건이며, 세계 어디에서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작전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의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군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납치와 몸값 지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해외 불법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원칙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청해부대 성과 2: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 2011년 3월 리비아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치달아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청해부대는 리비아 우리 교민 철수작전을 단행하여 리비아의 우리 교민 37명을 안전한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철수시켰다.
- 작전 중점은 리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단 한명의 사상자 없이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철수작전을 위하여 2월 24일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리비아로 신속히 기동하였고, 3월 3일과 3월 14일 총 2차례 걸쳐 리비아 교민 37명을 몰타와 크레타섬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후 3월 19일 아덴만으로 복귀하였다. 성공적인 교민 철수 작전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국민과 함께하는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국격을 선양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 청해부대 성과 3: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 2011년 4월 21일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안전 격실에서 피신 중이던 '한진텐진호' 선원 20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였다. 작전 중점은 선박 내 위협을 제거하고 선원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었다. 우리 군은 4월 21일 5:20 상황접수 후 14:30분 현장에 도착한 후 구출작전을 실시하여 19:30 선원 모두를 안전하

게 구출하였다. 해적은 청해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교전은 없었다.

- 작전의 성공요소는 선원들의 신속한 안전격실 대피 및 구조요청, 연합해군사와의 긴밀한 협조, 터키 함정의 신속한 현장 급파와 정보제공,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하여 숙달된 청해부대의 작전 능력과 자신감이었다. 정부는 해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책임지역 상선의 안전한 통항권 확보를 통하여 지역 해양안보의 증진과 국제평화 유지의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준 작전이었다.

### 3.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한 아라비아 반도 동부 연안에 위치한 7개의 토호국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UAE에 무관부를 개설한 이래 양국 간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11월에는 ‘한·UAE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국방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2009년 12월 한·UAE의 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국방분야 교류협력도 확대되었다. 특히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UAE 왕세자가 우리의 특전시범훈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UAE 특수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전부대를 파견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0월 UAE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훈련여건을 확인하고, 2010년 12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UAE 아부다비의 ‘알 아인’에 파견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시 우리 해군 특수부대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훈련요원을 추가 요청하여 2진부터 해상작전팀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아크부대는 비교적 적은 규모인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하여 맨투맨식 집중교육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양국의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UAE군은 훈련계획 등을 외국인 용역업체에 의존한 소극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아크부대와의 훈련을 통하여 적극적·긍정적 훈련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크부대 장병들의 전투기술 및 훈련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로서는 사막, 산악지역, 해상 등 지형별 특성화 훈련과 다양한 작전환경 아래에서의

극복 훈련, UAE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대테러·특수전 장비와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실전과 동일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한·UAE간 연합훈련 과정에서 아크 부대는 UAE군도 견디기 힘들다는 5일간의 사막지역 생존훈련 시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여 우리 특전부대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UAE는 중동·아프리카 교통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유사사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UAE 교민과 근로자들은 “최근 중동정세가 불안하여도 아크부대가 있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중동 각지에서 거주하는 교민과 근로자들에게 유사시 신변보호가 가능하다는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 시 생포한 해적들을 UAE측이 왕실 전용기와 호송인원을 제공하여 UAE군과 국내로 연합 호송작전을 수행으로써 우리 국민보호라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 제5장

# 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

인권신장에 대한 노력과 민주주의의 전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소명이자 당면과제이다.

이명박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로 추구하면서 전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시리아, 리비아 등 세계 인권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탈북자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심각한 국제적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 및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서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소수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 의하여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모범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함하는 세계인권상황의 개선과 소수자,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그리고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민주주의의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 제1절 국제인권메커니즘 강화에 대한 기여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11년까지 이사국을 역임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국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HRW)는 주요 28개국의 2011년도 인권이사회 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균형된 입장에서 일관성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향후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였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출범 이후 5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는 바, 이명박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제도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랑스, 멕시코, 스위스, 코스타리카, 나이지리아 등 20여 개국으로 구성된 범지역적 ‘인권이사회 강화를 위한 검토그룹’에 가입, 2010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검토그룹 회의를 주최하는 등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7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들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 그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2절 북한인권 및 세계인권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인권 논의에 있어 우리 입장의 가장 큰 변화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대하여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유엔은 출범 이후 국제 인권협약 등 인권규범의 제도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 및 총회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북한인권의 실상이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03년 최초로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

되었다. 이후 북한인권 결의는 매년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전에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위한 표결 시 대부분 기권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는 분리하여서 인권문제 그 자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북한인권 결의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북한인권 결의 문안 협의 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2009년 이후 유엔총회 결의부터 ‘모든 한민족의 시급한 인도적 관심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정부가 이렇듯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 것은 인권옹호국가로서 우리의 입장에 따른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인권존중 정책과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외에도 이명박정부는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 때마다 시급한 대북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민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2011년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최초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피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였으며, 제66차 유엔총회 시에는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역류자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정치범수용소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09년 12월 7일에 실시된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시에는 다른 51개 주요 회원국들과 더불어 정치범 수용소, 국내외 이동과 표현·집회·결사·종교의 자유 제한 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의 실질적 보장,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우리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시급한 인도적 관심사이자 인권문제임을 강조하고 이산가족간의 생사확인, 접촉, 상봉 정례화를 위하여 북한 당국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동등하게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기초로 각 회원국의 인권 관련 책무 및 공약사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북한에 의하여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문제 및 '신속자 씨 모녀' 문제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개인진정 제기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여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국, 캐나다, EU 등 우방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국가로 하여금 신속자 씨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 촉구 등 행동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특정 주제 혹은 국별 인권상황에 대하여 인권이사회 결의로써 임명되며, '1969년 KAL기 납치 피해자' 문제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신속자 씨 모녀' 문제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에 나서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2년 9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상의 강력 비난 발언, 2012년 4월 캐나다 하원의 신속자 씨 모녀 생사확인 및 구출 결의안 채택, 같은 해 9월 캐나다 외교장관의 북한 인권 규탄 성명 발표, 유럽회의의 북한에 대한 신속자 씨 모녀의 조속한 송환 촉구,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의 신속자 씨 모녀 사건 언급 및 북한 내 연좌제에 의한 자의적 구금 비판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원칙에 충실한 인권외교'라는 기조 하에 세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특히 이란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2011년 제16차 유엔인권이사회 이래 이란 인권 결의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충실하여야만 한다는 우리 입장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 제3절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

냉전 종식 이후 인간의 자유와 평등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제도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경제발전과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증진 및 강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중요한 외교 어젠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의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이명박정부는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 및 공고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정부는 취임 이래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아·태민주주의협력체(Asia 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및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 등 전 세계적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 포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민주주의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력체인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집행위원회 위원국이자 운영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공동체 산하 실무그룹중 하나인 ‘지역협력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2011년 4월 ‘민주주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는 등 민주주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증진에 기여하여오고 있다.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아·태민주주의협력체(Asia Pacific Democracy Partnership)’의 ‘제1차 고위급회의’를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의장국을 수임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방글라데시, 마이크로네시아 및 솔로몬 아일랜드 등에 선거참관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2008년 아태지역 국가들간 민주주의 모범관행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가 창설한 고위급 지역협력 포럼인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유도요노(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정상 토의를 공동주재함으로써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격과 위상을 제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개방성, 공정성 및 민주주의 국가들 간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세 가지 측면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에

#### 범세계문제 해결에의 기여 사례: 발리민주주의 포럼 참석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가하여 공동의장직을 수행한 것은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킨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협력 실현을 위한 한국의 의지의 표명이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에서 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영감을 얻어야 한다. (Jakarta Post, 2010.12.13)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실증적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정보통신시대에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운영이 더욱 중요하여지며, 속도와 변화가 지배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빨리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럼 다음날인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인 KOMPAS 등 주요 언론은 1면 머리 기사로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개최 및 이명박 대통령의 포럼 공동주제 사실을 보도하였다. 특히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최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동 포럼에 참석하여 공동의장직을 수행한 것은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킨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 기반한 지역협력 실현을 위한 한국의 의지표명이라고 평가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서 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발리 민주주의 포럼 개최 현황

회차	기간 및 장소	회의 주제	공동주제국	우리 참석
제1차	2008.12.10~11, 발리	민주주의 수립과 공고화	호주 (Kevin Rudd 총리)	외교부 제2차관
제2차	2009.12.10~11, 발리	민주주의와 경제개발 간 시너지 효과 증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주인니 대사
제3차	2010.12.9~10, 발리	민주주의와 평화·안정의 증진	한국(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제4차	2011.12.8~9, 발리	변화하는 세계에서 민주적 참여 강화	방글라데시 (Sheikh Hasina 총리)	외교부 제2차관
제5차	2012.11.8~9, 발리	글로벌 측면에서 민주적 원칙 증진의 적절성	한국(이명박 대통령)/ 호주(길라드 총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2012년 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도 공동주제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으며, 11월 8일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언급하면서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착실히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인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북아 과거사, 특히 2차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공동주제자로서 두 차례 초청된 것은 포럼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서 아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앞장서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4절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우리나라는 전후 반세기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가치 아래 과거 경제발전기, 관심을 소홀히 하여왔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권리신장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 바, 이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대응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적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우리는 유엔 여성통합기구(UN Women), 여성지위위원회(CSW), 사회개발위원회(CSocD),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주요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이사국으로 진출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우리의 입지와 위상을 강화하였다.

2011년 출범한 UN Women은 유엔체제 내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관련 4개 기구의 기능을 통합·강화한 여성 문제 전담기구로 최근 유엔개혁 노력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여성 인권 선도국으로서 UN Women 창설 과정에서부터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이러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2010년 UN Women 초대 집행이사국(2010~2013)으로 선출 되었으며, 2012년에는 UN Women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 미셸 바첼렛 UN Women 총재는 UN Women 집행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대표적 인 신홍공여국으로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는 등 UN Women 내 우리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집행이사국으로서 매년 UNICEF 집행이사회와 양자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 22일에는 한·UNICEF 기본협정(ROK-UNICEF 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어 우리나라와 UNICEF 간 예측가능하고 조직화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의 아동인권 보호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명박정부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간, 종교 간 이해증진 노력에 대한 건설적 기여도 계속하여 왔다. 최근 이슬람과 서구 간의 극심한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문명, 문화, 종교 간 오해와 불신에 기인한 긴장과 분쟁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문명, 문화, 종교 간 관용과 상호이해 증진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문명 간 연대(AoC: Alliance of Civilizations)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다양성 존중, 차별 금지 등의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동양과 서양의 종교가 평화적이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통을 지켜온 국가이자, 문명 간 연대 지지그룹(Group of Friends)의 일원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참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문명 간 연대는 각 국가 차원에서 문명 간 연대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이행계획(National Implementation Plan) 수립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명박정부는 2011년 5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문명 간 연대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동 국가이행계획을 통하여 교육, 청소년, 미디어, 이민 등 4대 주요 분야의 다문화 관련 정부 정책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많은 인권전문가를 배출하였는 바, 2008년 8월에는 정진성 교수가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동년 12월에는 이양희 교수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2009-2013년)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신혜수 교수와 김형식 교수가 각각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위원회 위원(2011-2014년)과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2011-2014년)으로 당선되어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 제6장

#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유엔안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다. 현행 유엔헌장 체제 하에서 무력의 사용은 자위권(self-defense)을 제외하고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조치가 유일하며, 또한 조약이 아님에도 각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평화에 대한 파괴와 침략행위로 결정하고 연합군의 파견을 결정한 것도 안보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유엔 안보리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18일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2013-2014년 임기의 유엔 안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주그룹 소속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수임에 이어 두 번째 안보리 진출이다.

이명박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되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상 회담, 외교장관 회담, 재외공관 접촉, 특사 파견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고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갔다. 특히 선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현황(2013년 1월 기준)

지역	임기 2012~2013(5개국)	임기 2013~2014(5개국)
아프리카	토고, 모로코	르완다
아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동구	아제르바이잔	-
중남미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서구 및 기타	-	호주, 룩셈부르크

가 임박한 2012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는 막후에서 40여 개국 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의 진솔한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회원국의 표심을 움직이고 지지표를 결집하였다.

경쟁국인 캄보디아는 2005년부터 입후보를 선언하고 준비하여 왔고 2012년 동남 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ASEAN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고정 지지표를 상당수 확보하였으며, 부탄도 1999년에 입후보를 선언하여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RRC) 회원국들의 고정표 및 오랜 캠페인 기간 동안 교환지지를 통하여 지지표를 확보함에 따라 후보주자인 우리로서는 낙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는 부탄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가운데 열린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유효 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압도적인 차이로 캄보디아를 제치고 이사국에 당선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번에 당선된 르완다,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는 앞으로 2013년부터 2년 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제1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당초 예상되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압도적 지지를 얻어 안보리 재진출에 성공한 것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의지 하에 냉철하고 치밀한 선거활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것인 동시에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수년 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경제, 개발, 안보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는데 이번 안보리 재진출은 이를 통하여 축적된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자 이명박정부가 꾸준히 추진하여온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안보리 재진출은 북핵 문제가 지속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안보리 토의 시 당사국이자 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방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부분에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어떠한 사안도 논의하고 구속력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이나 산하의 제재 위원회와 산하기구 운영을 통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보리 산하에는 안보리가 결정한 강제제재 조치의 실질적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13개 제재위원회(알-카에다, 이란 및 북한 제재위원회 등 포함)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방지를 위한 WMD 위원회, 대테러위원회 등의 산하기구도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산하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특히 비상임이사국들은 이러한 산하기구의 의장, 부의장을 나누어 수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는 산하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지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2001년 유엔 총회의장 선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2011년 재선 등 유엔 무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양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국력신장과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번 안보리 재진출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튼튼히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있어 우리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하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통하여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양자적, 지역적 외교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분쟁,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가 국제평화안보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야를 넓히고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 제6편

#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 제1장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 제2장 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제3장 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
- 제4장 핵심성과

## 제1장

#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이명박정부는 국제관계의 다원화와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부각, 그리고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이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출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건설하고자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익을 우선하되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외교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 최빈개도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이야말로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개도국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세기 국제 원조와 협력의 성공모델이자 21세기 개발도상국가들의 등대’라는 인식 하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국제적인 책임도 다 하여야 한다.”(2009.11.30 제2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대외원조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갔다.

이명박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먼저 개발원조 분야의 국제 환경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새롭고 강화된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이행되었다. 국제사회는 그간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를 통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

올여 왔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즈음의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국제개발원조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술 진보와 함께 급격히 진전된 세계화로 인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개발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문제에 대한 해법은 결국 개발문제들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경우 에너지, 인구변화, 기후변화와 환경 등이 연계된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역시 이러한 각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개발협력 참여자가 확대되고 다양하여졌으며, 비전통적인 새로운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 주체인 국가만 보더라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게이즈 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각종 민간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와 참여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경제위기의 여파로 대외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원조예산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2011년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실질 대외원조 규모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이처럼 개발문제의 성격이 변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함에 따라 개발협력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규범과 원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발협력 양상(modality)이 등장한 것이다. OECD DAC은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4개 공여국들(EU 포함)의 모임으로, 그 동안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규범과 원칙을 만들고 회원국들도 이들 규범과 원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여 가고 있는 새로운 개발협력 참여자들은 이들 전통 공여국들의 규범이나 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도국의 빈곤, 식량, 에너지, 재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국익과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과, 개발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몇몇 국가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여 나가야 할 범세계적 이슈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개발협력

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숙한 중견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의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협력의 법적·정책적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다자 측면에서 개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우선 개발협력의 법적·정책적 추진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장기 ODA 전략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ODA 중점협력국 선정, 한국형 ODA 모델 구축, 해외봉사단 파견 통합 프로그램인 World Friends Korea 출범 등을 통하여 개발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어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8억 200만 달러에서 2011년 13억 2,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한편(2012년에는 약 16억 달러로 증가 예상),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수원국의 수요와 현지 환경을 감안한 효과적 지원을 추구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등 진정성 있는 원조를 통하여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아울러 UNDP 등 개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다자측면에서의 국제 개발협력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나아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 시 개발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는 2003년 이래의 원조 효과성 제고에 관한 그간 논의를 결산하고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의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비전을 제시한 부산 파트너십을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총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주도하고 선진 공여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부산 파트너십의 채택과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 재확인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 제2장

# 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

이명박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지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OECD DAC 가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ODA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2010 제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의 수립 등 ODA 선진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 제1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국제 개발협력의 철학과 목적,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랜 기간 이에 관한 국내적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2010년 7월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정신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발효되었다.

기본법은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목적, 기본정신 및 목표,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

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관한 명실상부한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본법을 통하여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두 주관기관 체제 하에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던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국제 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한 것도 기본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이다. 기본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

## 제2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5개년 계획 수립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중장기 ODA 전략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 ODA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 보고서는 효과적인 국제 개발협력 시행을 위하여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 활동 참여 강화라는 3대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유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26개국)을 지정, 이들 국가에 대하여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향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낸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전략 문서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2010년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동 분야별 기본계획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중기 개발협력 이행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하여 오고 있다.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 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수원국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 결합

국가전략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추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통합체제 구축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개발경험 분야
  - 개발경험 정리
  - 정책 컨설팅
- 사업기술 분야
  - 경쟁력 기술(ICT, 농업 등)
  -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 감성 분야
  - 감동사례 발굴·공유
  - 한국적 미와 정감

원조 시스템 효과적 개편

- 국가전략 부문
  - 지역별 기초
  - 중점협력국, 통합 CPS
- 사업수행 부문
  - 사업발굴 및 선정
  -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 수원국과 협력 강화
- 평가 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결과

국제 활동 강화

-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 다자원조 전략
  - 선진공여국 협력
- 국제기구 참여확대
  -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 ODA 조달시장 참여
- 국제규범 준수
  - 국제규범 형성 참여
- 인도적 지원 강화

원조 소외국(1개)을 선정, 총체적 접근을 통한 개발협력의 성공사례 도출

국제개발협력 기반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전문인력 양성

### 제3절 정책 이행체제의 선진화 및 공고화

2005년 이후 우리의 ODA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ODA에 관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현재의 주요 기능과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무·유상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ODA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DAC 가입 추진 결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무·유상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개발협력 관련 핵심 사안들을 의결하여 왔다.

또한 무상원조의 경우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 등 30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2010년부터 개최하여 사업 분절화와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무상원조와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중 분과위원회의 경우 농업, 보건, 교육, 개발건설 등 주요 ODA 사업 분야별로 수시 개최되고 있는데, 특히 ‘봉사분과 협의회’는 해외봉사단 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제3장

# 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

### 제1절 양자 개발협력 전략적 체계적 추진

이명박정부는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여 나간다는 방침 하에 ODA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진하였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의거하여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양자 ODA 규모의 경우 2008년 5억 8,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10억 3,000만 달러로 3년간 약 1.8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DA 공여를 위하여 노력한 바, 우선 지역별 ODA 추진전략과 재원배분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한편 MDGs 달성현황과 협력대상국의 빈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여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중점협력국에 대한 양자 ODA비중은 약 45%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약 61%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앞으로 중점협력국에 대하여서는 2013년까지 무·유상 통합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원조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2012년 12월 현재 26개국 중 9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특히 우리만의 독특한 개발경험을 반영하고 개도국의 수요와 현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한국형 ODA 모델은 원조분업화와 개발의 실질적 효과 증대에 초점을 두는 선진적인 ODA 정책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 CPS 수립이 완료된 9개 중점협력국 현황

국가	중점 협력분야
베트남	지속가능성장,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가나	인프라(전력), 보건위생·의료환경, 기술교육
솔로몬군도	수산업, 산림녹화, 보건의료
볼리비아	농업, 보건의료, 교통
아제르바이잔	산업에너지, 공공행정
에티오피아	보건, 농업개발, 직업훈련, 인프라
DR콩고	보건환경, 보건의료, 농촌개발
스리랑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인프라, 환경·자원관리

## 1. 지역별 ODA 지원 전략

### (1) 아시아 지역: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최우선 중점지원

아시아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우리 ODA의 최우선 지원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빈곤정도와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에 양자원조의 55%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아세안 개발협력분야 정책문서’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한 ODA 규모를 2015년까지 2008년 대비 2배(무상 3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지원,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뿐 아니라 신아시아 외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최빈국·취약국에 대한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8년 7월 일본 토야코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나 역시 이러한 삶의 한 복판을 지나며 시대가 던져준 도전을 열정과 의지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100 달러 남짓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 살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 던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젊은이에 대한 당부-꿈을 향하여 달려라'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연설(2011.7.9)



강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지원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계획을 천명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 아프리카 지역: 인도적 지원 강화 및 자립과 성장기반 확충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순방한 후, "아프리카는 더 이상 빈곤과 내전 등으로 낙후된 대륙이 아니다."라는 말로 아프리카의 거대한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발원조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2011.7.13 대국민 라디오·인터넷 연설)

이명박정부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최빈개도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더불어 우리의 중요한 협력 대상 지역이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과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자원조의 20% 내외를 아프리카에 배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시 이명박정부는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을 발표, 2012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2008년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스코카 이니셔티브(Muskoka Initiative), 혁신적 개발재원 등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3) 중남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과 소득불평등 개선

중남미 지역은 약 80%의 국가가 중소득국 또는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나 인구의 1/4이

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빈곤층에 속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여타 지역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국별·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자 원조의 10% 내외를 중남미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 재건·복구를 위하여 1,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 (4) 중동·CIS 지역: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

이명박정부는 중동·CIS 지역의 개도국에 대하여 정부역량 강화 및 시장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화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양자 무상원조의 약 10%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역내 취약국가들에 대하여서는 전후 재건복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2.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범정부 통합 지원전략 수립

이명박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ODA 집행을 위하여 과거 무·유상 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있던 중점협력국을 통합하고, 수원국의 소득수준, MDGs 달성도, 거버넌스, 원조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10월 26개 중점협력국을 최종 선정(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하였다.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하여서는 양자원조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ODA 지원 지침으로서 국가협력전략(CPS)을 통합 작성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에 대한 중점 협력분야 선정 및 설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등 CPS 수립의 전 과정에 있어 국내 관련부처·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CPS가 수원국의 원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의 개발환경 변화 및 개발전략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 주기를 3~5년으로 설정하고, 중기지원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개발협력의 체계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원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입장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활용할 필요

이명박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2012.1.14)



### 3. 한국형 ODA 모델의 구축

우리나라는 수원국이었을 당시 원조를 개발 촉진제로 활용,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G20 서울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함께 도와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원조’에서 ‘개발’로 국제 개발협력의 초점이 옮겨 짐에 따라 단기간에 경제·사회 발전 및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는 개도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체계적 정리 및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ODA 추진방식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한국형 ODA 모델’을 도출하여 수원국의 빈곤퇴치·자립역량확보와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되,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수원국의 수요와 현지 환경을 감안한 진정성 있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개발협력 실천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형 ODA 모델에 따라 ‘한국형 ODA 사업 프로그램’이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진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ODA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 한 것으로, 경제(71개 프로그램), 사회(52개 프로그램), 행정제도·거버넌스(10개 프로그램), 미래·범분야 이슈(26개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에 걸쳐 총159개의 ODA 프로그램 pool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한국형 ODA 모델은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이라는 4가지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ODA 제공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b>기본목표</b>	수원국 빈곤퇴치·자립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역량 배양을 통하여 수원국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형성 지원
<b>추진방법</b>	국제규범 존중 및 우리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활용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ODA 프로그램과 추진방식을 수원국 상황과 국제규범에 맞게 적용
<b>추진기조</b>	수원국 중심주의와 원조 효율성 제고
	수원국 수요와 현지 환경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원조

- ①(선택과 집중) 집중성·연계성·일관성·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ODA 재원의 효과적·효율적 활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②(현장과 성과) 사업 발굴·형성→사업 결정·집행→평가·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현장과 성과’ 중심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한다.
- ③(참여와 협력) 국내외의 다양한 ODA 주체 간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개발 효과 및 협력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 ④(ODA 인프라 지속 확충) 정보제공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참여기업 확대 등 ODA 공급 역량 제고를 통하여 한국형 ODA의 지속가능 기반을 확충한다.

## 제2절 UNDP 등 개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개발기구는 이명박정부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협력 채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포함, 빈곤·기아·기후변화·재해 등 범지구적인 과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은 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정부가 직접 이행하는 양자원조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MDB)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가,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유엔 개발 시스템은 다자개발협력 채널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는 그중에서도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UNDP는 유엔의 개발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UNDP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UNDP와 우리나라와의 종전 관계는 우리나라가 원조수혜국이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대한 원조제공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던 기존 UNDP 국가사무소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식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UNDP 서울정책센터’를 설치하고 UNDP와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UNDP MDG 신탁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UNDP와 대등하고 나아가 우리가 UNDP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도록 하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2012~2014년 UND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유엔 개발시스템에서의 우리의 참여와 기여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긴급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WFP도 우리나라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2011~2012년간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1년에는 WFP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업(Food-for-Work)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농촌 개발 사업인 ‘Food-for-New Village’ 사업을 추진, 시범 대상국으로 네팔과 르완다에 각각 100만 달러를 지원 중이다. 아동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UNICEF도 중점협력기구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UNICEF와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2~2014년 임기의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3대 중점협력기구(UNDP, UNICEF, WFP)의 집행이사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s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에 2008년 12월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진 평가기법을 대내적으로 공유하고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의 다자원조 정책 수립 및 재원 배분에 활용하고 있다.

### 제3절 해외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피해자들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여 또한 확대하여 왔다.

#### 1.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적 지원 원칙의 준수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법적기반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2008.7 제정)’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질병, 인재, 정치적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인도주의,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등 선진 인도지원 공여국 간 협의체인 GHD(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서 인정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ODA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채택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도 해외긴급구호체제 선진화 및 긴급구호예산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기반에 근거하여 채택된 ‘2011~2015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인도적 지원 관련 목표가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 강화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재해 관련 유엔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취약·분쟁국가의 거버넌스 강화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GHD의 핵심원칙 중 하나인 ‘수원국의 인도적 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유엔합동지원요청(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등 국제적으로 조율된 공동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또한 양자사업의 경우에도 수원국의 수요와 상황을 최우선 고려하면서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국제기구나 NGO를 활용하였다.

2009년 7월 선진 인도 지원 공여국 간 협의체인 GHD에 가입하고 ‘유엔 OCHA 공여국 지원 그룹’(ODSG: OCHA Donor Support Grou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여국 간에 인도지원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유엔뿐 아니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기타 국제기구와 NGO에 대한 기여를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 해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왔다.

## 2. 긴급구호 등 인도지원 활동의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2008년 5월 중국 국민방문 계기에 약 3,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좋은 이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나 함께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위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 피해 현장과 이재민촌을 둘러보며 피해를 입은 중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명박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 인도지원 메커니즘 참여, 긴급재난 발생 시 양자차원의 긴급구호 제공, 재난의 예방과 대비강화, ARF, ASEAN+3 등 지역적 차원의 재난대응 협력과 UNICEF를 포함한 주요 인도적 지원 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 왔다.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중동 가자사태, 2010년 아이티 및 칠레 지진, 2011년 일본 지진 및 리비아 사태 등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긴급구호대 파견, 구호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구호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해외긴급구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로 2011년 11월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외부 등급 분류 심사(IEC)에서 ‘Heavy 등급(상급)’을 획득하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의 구호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선진 구호 장비(이동식 병원 등)를 확충하고, ARF 재난 구호 훈련(DiREx)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재난구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 제4절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하여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하여야 할 구체 목표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제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그간 국제사회는 MDGs 달성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성과의 분야별·지역별 불균형, 새로운 개발 이슈의 등장 및 국제 개발협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곡물가격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2009년 G8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라퀼라 식량안보선언(AFSI: 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재정 기여와 행동공약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후에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정책일관성 및 조율 강화, 식량가격 변동성 위험 완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G20 농업장관회의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이는 칸느 정상회의에서 농산물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System) 및 신속대응포럼(RRF: Rapid Response Forum)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 이명박정부는 G20,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식량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여타 분야에 비하여 특히 성과가 저조한 모자보건 분야의 MDGs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2010년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채택된 '모자보건 세계전략'에 지지를 표명하고, '무스코카 이니셔티브(Muskoka Initiative: G8 캐나다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모자보건 증진 이니셔티브)'에 참여, 2011~2015년간 모자보건 분야에 1억 3,0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5년 이후 개발협력프레임워크 구축 논의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2012년 8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구성한 Post-2015 고위급 패널 위원으로 임명되어 2013년 상반기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체제를 형성하여 나가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겠다.

## 제4장

# 핵심성과

### 제1절 선진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OECD의 3대 핵심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여국들의 모임이다. 엄격한 가입조건과 회원국이 부담하는 다양한 의무사항들로 인하여 34개 OECD 회원국 중 23개국(EU 제외시)만이 DA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1년 출범한 DAC를 통하여 선진공여국은 다양한 개발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공통의 원조규범을 만들뿐 아니라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기여 확대와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DAC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1월 DAC 가입 신청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6월 우리나라 원조정책에 대한 OECD측 실사단의 방한을 계기로 OECD 사무국과 DAC 회원국들의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11월 25일 OECD에서 개최된 가입 심사 회의 시 DAC 의장의 가입 권고 및 DAC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09년말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데 적극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0.1.11)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전후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개발의 역사는 운명과도 같은  
빈곤의 굴레를 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땀흘려온 수많은 한국인들의 생생한 체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산총회 기조연설(2011.11.30)



DAC 가입은 원조규모가 최소 1억 달러 이상이거나 GNI 0.2% 이상이어야 하고 효율적이고 통합된 원조체계와 조직, DAC에 부합하는 원조정책과 전략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원조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의 구비와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이면서 DA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운 DAC 가입에 성공한 것은 원조수혜국에서 선진원조 공여국으로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며 또한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그리고 남남협력의 형태로 출발한 우리의 개발협력력이 그만큼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그간 이명박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온 기여 외교 및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로 정체된 DAC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DAC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원조 공여국 외에도 non-DAC 공여국,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 공여국, 게이트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과 수많은 NGO, 시민사회, 기업들이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개발협력 참여자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DAC이 내세우는 원조규범이나 원칙도 새로운 원조 주체들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DAC에 가입한 것은 10여 년 이상 신규 가입국 없이 정체상태에 있던 DAC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간 가입을 주저하고 있던 여타 OECD 회원국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다차 측면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모멘텀을 살리고, 원조공여국 그룹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

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DAC 회원국 확대 과정

1961년 (창립연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1974년 탈퇴 후 1991년 재가입), 영국, 미국, EU 집행위원회
1960년대	노르웨이(1962), 덴마크(1963), 스웨덴(1965), 오스트리아(1965), 호주(1966), 스위스(1968)
1970년대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1980년대	아일랜드(1985)
1990년대	포르투갈(1991), 스페인(1991), 룩셈부르크(1992), 그리스(1999)
2000년대	한국(2010)

## 제2절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한 개발의제의 확산

### 1. G20 개발의제의 대두 및 ‘서울 개발 컨센서스’ 채택

G20 개발의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하여 서는 국가 간의 격차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신흥 경제국 및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개발의제의 도입이 G20의 정통성 강화와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개발의제를 서울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적극 제안하였다. 2010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새로운 의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이후 수차례의 세르파 회의를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개발의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개도국 지원을 논의하는 개발의제가 원조 재원 논의로 귀결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G20 개발의제가 기존의 원조 논의와는 다르며, 선진국들이 이전과 같이 전 세계 경제성장 견인에 기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총수요는 신흥국 중산층의 소비 증가와 저개발국으로의 투자 확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하였다. 즉 개발의제가 단순히 저개발국의 빈곤해

소를 위한 원조 논의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재균형(global re-balancing)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 결과 개발의제가 G20 공식 의제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이 채택되었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LIC: Low Income Countries)의 능력배양을 통한 자생력 확충과 경제성장 제고에 목적을 두고,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원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아래 6대 개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경제성장 중심) MDGs 달성을 위한 역량과 함께 저소득국의 건설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inclusive) 경제성장을 지향
- ②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주인의식 존중,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 ③ (세계적·지역적 제도 문제) G20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제도 문제에 집중
- ④ (민간 참여) 민간부문의 개발분야 참여와 혁신 촉진, 민간자본 유입·활성화 노력
- ⑤ (보완성) 기존 개발노력과 중복을 피하고, 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
- ⑥ (성과지향)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성장 가능성 제고 관련 장애요소 제거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점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은 개도국 성장에 핵심적인 다음 9개 분야(pillar)별 성장 장애요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이행주체와 시한을 명시하고 있다.

- △인프라, △인적자원개발(HRD), △무역,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growth with resilience),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국내자원 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개발경험 공유(knowledge sharing)



G20 국가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G20 비회원국은 170여 개국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 회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으로 삼고,

그간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G20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여 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2010.11.12)



G20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 개도국을 세계 경제의 파트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발의제 형성 과정에서 아프리카 등 비회원국들과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일부 아프리카 정상들은 G20 개발의제가 '서울 컨센서스'이자 '아프리카 컨센서스'라고 할 정도로 개도국의 필요와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 2. G20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기여

G20 개발의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명박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G20 개발그룹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2010년 이래 2012년까지 연속 3년 G20 개발그룹 공동의장을 수입하였으며, 인프라, 개발경험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공동조정국으로서 G20 개발 논의 및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여러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분야에서 성장 장애요인이 규명되어 장애 요인 해소방안을 담은 간느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2012년 의장국 멕시코가 '포용적 녹색성장'을 G20 개발의제로 포함할 당시에는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포용적 녹색성장 워크숍 및 제2차 G20 개발그룹 회의 개최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 G20 개발의제의 외연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 제3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한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 1. 부산총회 개최 배경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 간 컨센서스에 의하여 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국으로 결정되었다. 원조 효과성 제고는 핵심 원조공여국 그룹인 DAC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 중의 하나로서 그 논의를 위하여 2003년부터 원조 효과성 제고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2011년 제4차 회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선정된 것이다.

개최지 선정배경에는 단기간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갖는 상징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통하여 증진된 우리의 기여와 역할 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행사준비 및 의제·결과문서 관련 일련의 교섭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1950~1960년대 국제원조물자의 주요 하역지였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국제적인 물류항만관광도시로 탈바꿈한 부산의 상징성이 감안된 것이다.

### 2. 부산총회의 성과

#### (1)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

부산총회에는 전 세계 160여 개국 대표단뿐 아니라 각국의 시민사회, 기업, 의회 등 비정부 부문의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들을 포함하여 총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부산총회는 MDGs 달성 시한을 4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결집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총회 주요 공약

내용	공약	상세내역
정치적 전문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 및 개발협력의 공동원칙 및 행동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원칙: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li> <li>• 공통 행동: △개발 정책과 프로세스에서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성과를 위한 노력 강화, △남남/삼각 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li> <li>• 남북협력과 남남협력의 차별성 및 보완성 인정, 공통의 원칙 및 차별화된 행동 인정</li> <li>•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 및 이를 통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의지 표명</li> </ul>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li> <li>•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li> <li>•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관련 통계 활용 및 책임성 체제에 통합</li> <li>• 의회/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원</li> </ul>
원조 효과성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li> <li>• 표준화된 정보 공개 표준 활용(12월까지 전면 이행 목표)</li> <li>• 2013년까지 수원국에 3~5년 연동 지원계획 제공</li> </ul>
	취약, 분쟁 상황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를 취약국가 지원기준으로 활용</li> </ul>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에 투자</li> </ul>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 (개발효과성)	효과적 제도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주도의 제도·정책 변화 및 역량 지원</li> <li>•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상호 지식과 경험 공유 심화</li> </ul>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각협력 확대 및 남남/삼각협력 적극 활용</li> <li>• 지식공유, 동료 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li> </ul>
	민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개발 관련 정책형성 과정에 민간분야 참여</li> <li>• 무역을 위한 원조 증진</li> </ul>
	반부패 및 불법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척결에 관한 기존 공약 이행</li> <li>•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를 위한 장치 마련 등</li> </ul>
	기후변화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기후변화 정책과 계획을 지원</li> <li>• 기후변화활동에 개발효과성에서 얻은 교훈 공유</li> </ul>
Post-Busan 이행체제	수원국 현장 중심의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li> <li>•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li> <li>• 2012년 중반까지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합의</li> <li>•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기능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li> </ul>

(2) 포괄적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인 '부산 파트너십' 출범

부산총회에서는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체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운영체제	① 장관급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담당</li> <li>• 부산총회 결과문서를 승인한 모든 국가 또는 기관이 참여</li> <li>※ 현재 약 160여 개 국가, 50여 개 국제기구 및 기관이 부산총회 결과문서 승인</li> <li>• 18~24개월 주기로 개최, UN 개발협력포럼(DCF) 등 여타 고위급 회의와의 연계 개최 검토</li> </ul>
	② 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급 회의 의제 준비 등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 운영 담당</li> <li>• 글로벌 파트너십의 참여 주체 대표 18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공여국 대표로 선출</li> <li>(임기: 최대 2년, 장관급 회의 개최 주기 18~24개월과 연계)</li> </ul> </li> </ul>
	③ OECD-UNDP 공동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파트너십의 사무국 역할 담당</li> <li>- OECD(글로벌 모니터링 및 정책분석)와 UNDP(개도국 현장 사무소)의 비교우위를 살려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지원</li> </ul>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총회 주요 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 점검</li> <li>-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별</li> </ul>
	실시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을 기준 연도로 2015년을 목표로 rolling-base로 시행</li> <li>※ OECD-UNDP 공동 사무국에서 지원</li> </ul>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부산 글로벌 지표 선정</li> <li>- 원조효과성 심화 지표: 수원국 시스템 활용, 비구속화, 원조 예측성(중·단기), 투명성 등</li> <li>- 개발효과성 신규 지표: 개도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시민사회 참여, 민간분야 역할, 양성평등 등</li> </ul>
	참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 및 공여국에 따라 이행지표 구분</li> <li>- 특히 남남협력국(중국 등)은 자국의 능력 및 선택에 따라 점진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가능</li> </ul>

택하고,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부산총회 결과로 채택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은 선진 공여국과 수원국으로 양분되는 기존 개발협력의 틀을 확대하여 국제 개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emerging economies)과 민간, 시민사회 등 새로운 개발주체들을 모두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이들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개발협력, 결과 중심, 포용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투명성과 상호책임성의 4개 원칙을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의 원칙으로 수용하였다는 것도 주요내용이다. 이외에도 취약국,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반부패, 기후변화 재원 등에 관하여서도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부산총회에서 국제경제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남남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인



나와 우리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가야 할 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개도국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개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제사회도 공생 발전을 위하여서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뜻을 함께 하고, 공동 과제를 꾸준히 실천하여 나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산총회 기조연설(2011.11.30)



도와 같은 신흥국들이 결과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이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장점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표와 원칙 하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개발협력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원조 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로의 패러다임 확대

부산총회 결과문서는 개발을 위하여서는 원조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남북협력을 넘어 다양한 개발주체와 협력방식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발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약을 담았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남남/삼각협력과 민간 분야의 역할을 인정하고, 반부패 및 불법재원 흐름 방지와 기후변화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하였다.

'2005년 파리 원조 효과성 선언' 이후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논의는 원조 전달과정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 이외의 다양한 자원, 협력방식, 여타 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개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는 보다 포괄적인 패러다임이 마련되었다.

### (4)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부산총회 참석자들은 결과문서 합의사항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포스트 부산 이행체제에 관한 기본 틀에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수원국 현장 중심으로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OECD와 UNDP 간 협력 하에 가벼운 거버넌스 체제(global light, country focused)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출범시켜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기로 하

였다. 2012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원조효과 최종회의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다.

### 3.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역할

우리나라는 부산총회 주최국으로서 ‘효과적 개발’ 의제를 주도하는 한편 우리의 성공적 개발경험의 소개와 공유, 실질적 논의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하여 유엔과 OECD 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 부산파트너십 출범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1년 11월 30일 개최된 부산총회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한국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발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제개발협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급 인사와의 양자회담, 주요인사 초청 업무오찬 주최 등을 통하여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논의 초기 단계부터 기존 원조효과성 중심의 논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발 논의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조를 넘어서는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주최국으로서 총회 기간 중에 시민사회 포럼, 의회 포럼, 민간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 특별세션을 공동 주관하여 ‘양성평등 및 개발에 관한 부산 공동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과문서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당초 국제 원조개발 규범 논의 과정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부산총회 참여 및 결과문서 승인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결과문서 문안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개발의 주요 동인인 효과적 제도, 민간분야 참여 확대 등의 요소를 반영시키고 한국 원조역사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하여 개도국 개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의 보완적·차별적인 성격 및 글로벌 원조개발 규범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설득과 교섭을 통하여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선진공여국과 신흥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제4절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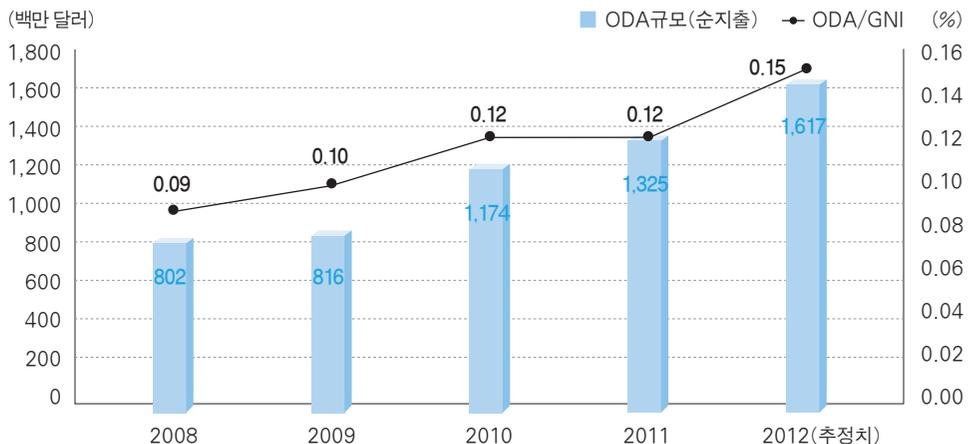
### 1.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GDP 규모 15위권(2012년 기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국가 이미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을 국정목표로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에 부합하는 기여외교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돕기 위한 ODA 예산은 한 국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2010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연설 등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약 8억 200만 달러(GNI 대비 0.09%)에 불과하였던 ODA 규모가 2010년 약 11억 7,000만 달러에 이어 2011년에는 약 13억 2,000만 달러(GNI 대비 0.12%)로 대폭 확대되었다.

#### ODA 규모 확대 추이



※ 자료: OECD DAC 통계보고, 2012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

## 우리나라 ODA 규모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빌 게이츠(Bill Gates)는 G20 간느 정상회의(2011.11.3~4)에 제출한 특별 보고서에서 'Korea has been a standout, pledging to almost triple its percentage of GNI devoted to ODA by 2015' 라고 명기
- '2011년 OECD DAC 회원국 ODA 잠정통계 보고서(2012.4.5)'는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일부 공여국이 ODA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5.8%)를 포함, 이탈리아(+33.0%), 스위스(+13.2%), 뉴질랜드(+10.7%), 스웨덴(+10.5%), 독일(+5.9%), 호주(+5.7%) 등 7개국이 ODA를 확대한 것을 높이 평가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ODA 규모 확대는 G20 개발의제 주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 국제 개발협력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최근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일부 공여국이 ODA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지지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우리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ODA 통합홍보 T/F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www.odakorea.go.kr) 구축, 통합 브랜드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ODA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사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돕는 일에 정부가 나서느냐” 라는 질문은 정부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이며,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로서 향후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 국제적인 책임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2009.11.30 라디오·인터넷 연설)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던 나라(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공여국)로 발전한 유일한 사례로 크게 회자되면서 ODA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부심 고양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이명박정부는 다양한 국민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ODA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왔다.

실제로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데 찬성 혹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2005년(62%)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간 약 2만 8,000원(2010년 국민소득 대비 0.11% 수준)에 달하는 1인당 부담액에 대하여서도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44%에서 2011년 63%로 증가하여 ODA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시민사회의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이명박정부는 국제 개발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NGO 등 시민사회를 실질적 개발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의 주체이자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 인적 자원 등의 측면에서 ODA에 대한 강점을 갖추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ODA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을 위한 씽크 탱크(Think Tank)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채택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NGO 역량강화 사업 등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사업비를 2015년까지 2010년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ODA의 전 과정에 걸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ODA 관련 연구조사 업무(개발경험 정리, 타당성조사, 평가, 개발컨설팅 등)를 대학과 연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학·연구소와 정부기관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론과 실체가 결합된 ODA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2012년 8월 국내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외교통상부, KOICA)와 시민사회·NGO·민간기업·학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민간 협력체로서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를 출범시켰다. '개발협력연대'에는 약 1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2012.9), 개방성·자율성·동등성·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참여기관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협력연대'는 국내차원의 협력에만 머물지 않고 유엔, USAID 등 국제 개발원조 관련 기관들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파견

이명박정부는 협력과 상생의 원칙 하에 단순한 물질적 시혜가 아닌 개도국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새로운 개발협력을 지향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개도국에 도움을 주면서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봉사단 파견 사업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의 봉사단 사업은 5개 기관별로 7개 봉사단 파견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명박정부는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으로라도 개도국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7개 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합한 해외봉사단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가 2009년 5월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은 매년 4,000명의 봉사단원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우리의 협력 파트너인 개도국들에 파견하고 있으며, 정부파견 봉사단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World Friends Korea는 이전의 7개 봉사단 프로그램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봉사단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명칭(World Friends Korea)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들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World Friends Korea 발대식 연설에서 도움을 주러 왔다는 자세가 아니라 수원국의 관습과 법규를 지키고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주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2011년 7월 에티오피아 방문 시 직접 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더 큰 대한민국의 희망과 선진 인류국가의 미래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하여서 조금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들을 도우러 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도와주러 왔다, 도움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여러분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그 나라 관습을 지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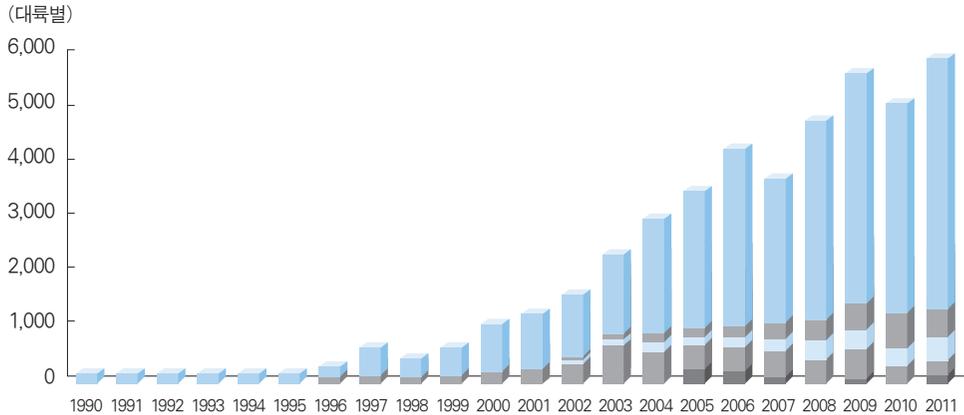
그 나라 법규를 지키며, 그 나라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매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할 때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상대 국가의 국민들도 여러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World Friends Korea' 발대식(2011.5.23)



이와 같이 World Friends Korea는 새로운 개발협력 정신을 구현하여 나가는 첨병으로서 우리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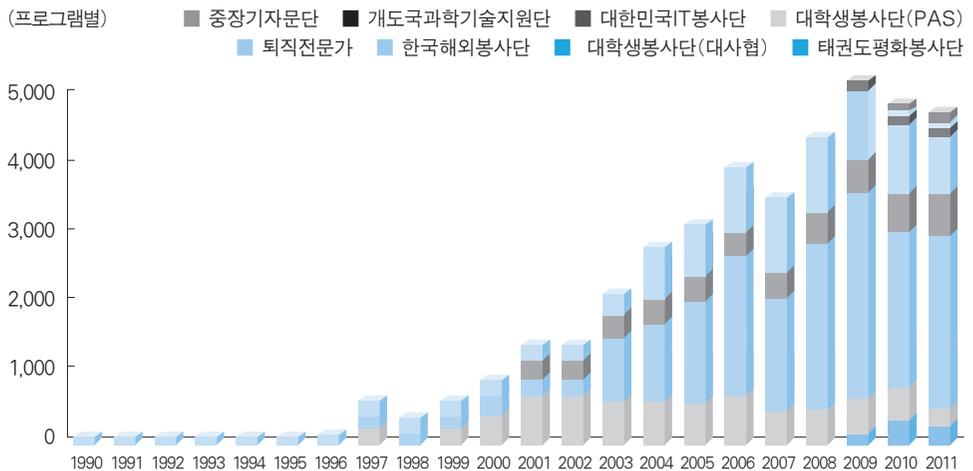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지역별 봉사단 파견 추이



■ 아시아	44	37	52	51	59	81	79	386	204	412	620	774	999	1401	2041	2240	2990	2437	3359	3876	3556	3583
■ 아프리카	0	0	0	0	0	6	18	17	7	11	17	35	58	101	116	197	173	287	321	385	583	499
■ 중남미	0	0	0	0	0	4	15	13	10	10	13	19	33	59	78	102	149	185	311	272	270	392
■ 동구 CIS	0	0	0	0	0	15	19	65	48	75	139	163	222	495	434	383	385	377	302	487	211	201
■ 중동	0	0	0	0	0	0	0	0	0	0	3	4	4	0	30	6	23	7	35	11	35	
■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4	126	72	24	27	17	10	
총합계	44	37	52	51	59	106	131	481	269	508	789	994	1316	2060	2742	3096	3829	3381	4324	5082	4648	4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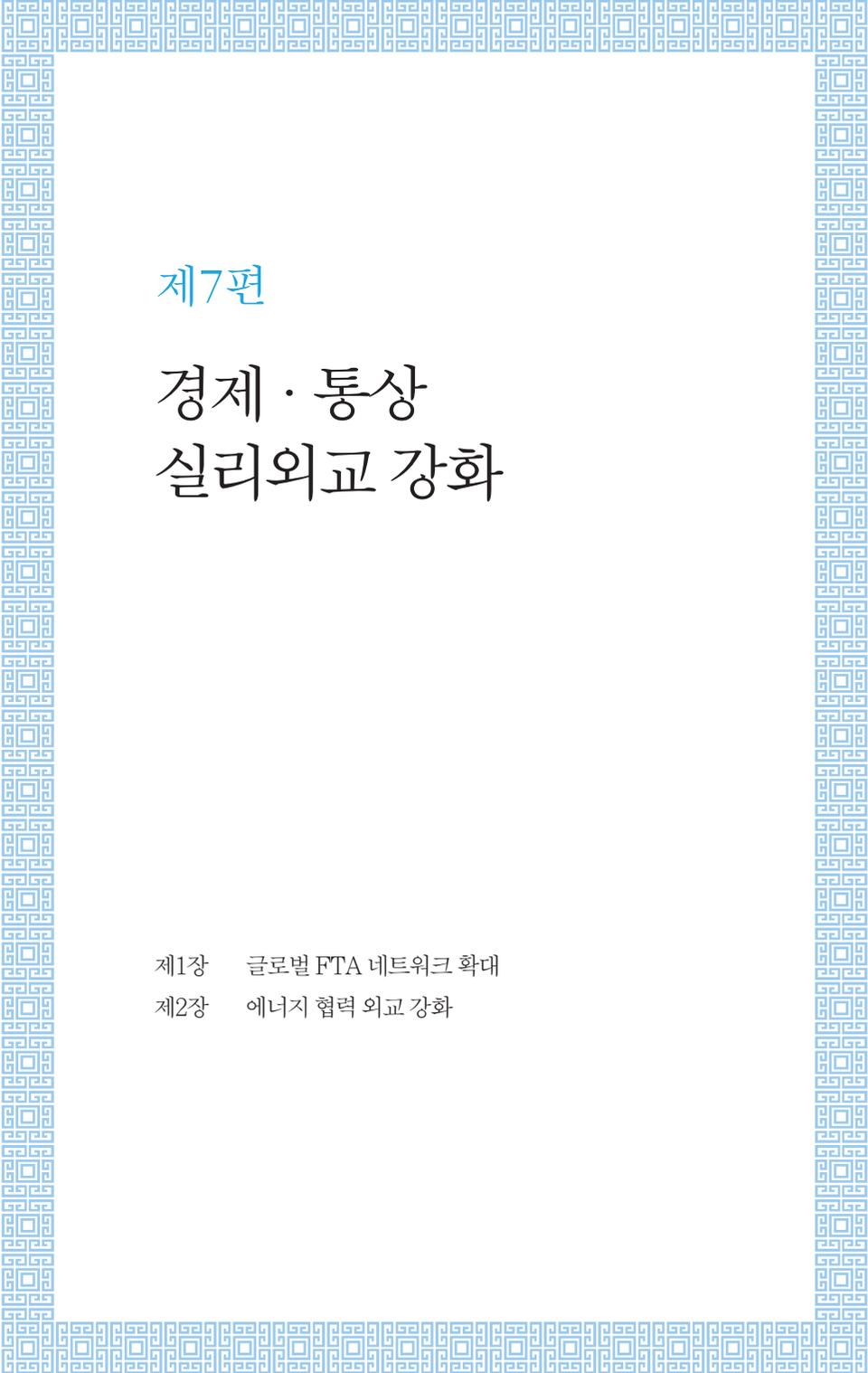
※ 기준일: 2011.12.31

###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별 봉사단 파견 추이



※ 기준일: 2011.12.31





## 제7편

# 경제 · 통상 실리외교 강화

- 제1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제2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 제1장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1950~1990년 사이 고작 70여 개의 FTA가 발효한 반면 2012년 8월 현재 338개가 발효 중이다. 현재 몽고를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이 최소한 1개 이상의 FTA에 가입하여 있으며, FTA 체결국가 간의 교역액은 1990년 전 세계 교역액의 18%에서 2012년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 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FTA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세계 시장의 1% 밖에 되지 않으나, FTA로 인하여 세계 GDP의 56.2%라는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이라는 양대시장과의 FTA를 통하여 우리 수출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FTA를 통하여 우리 시장에 들어온 상품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혜택을 늘리고 있다. FTA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들이 원자재와 중간



‘21세기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좁은 우리로서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FTA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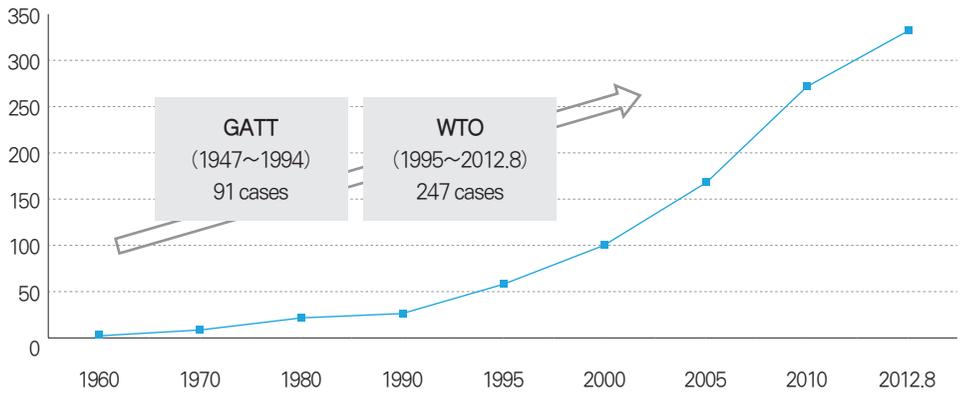
옛날에는 전쟁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혀왔지만,

21세기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2011.10.17)



DDA 협상이 정체되면서 특혜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구분	2012.8	특혜무역하 교역비중
발효중인 FTA	338	50% 이상

※ 자료: WTO

재를 서로 의존하며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망(global value chain)으로 밀접히 연결된 상황에서 보호무역은 상대국뿐 아니라 결국은 자국에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수출을 통하여 국내 경제의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당초 대외 무역에 대하여 소극적이던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1월 6일 국정연설에서 “5년 내 미국의 수출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

우리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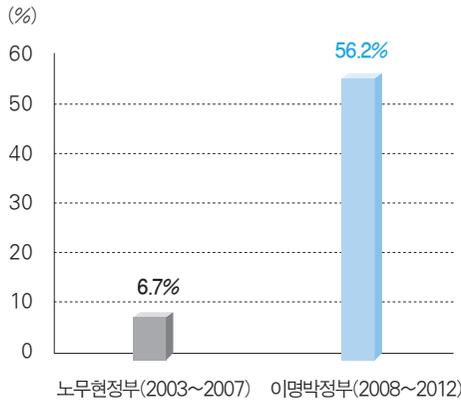
구분	국가	GDP비중(%)	인구비중(%)	세계교역비중(%)	우리양자교역 비중(%)
발효·타결	미국	21.4	4.5	10.3	9.3
	EU	25.1	7.2	12.3	9.6
	EFTA	1.6	0.2	1.9	0.7
	인도	2.6	17.8	2.1	1.9
	아세안(싱가포르 포함)	3.0	8.6	6.6	11.6
	페루	0.3	0.4	0.2	0.3
	칠레	0.4	0.3	0.2	0.7
	터키	1.1	1.1	1.0	0.5
	콜롬비아	0.5	0.7	0.3	0.2
	한국	1.6	0.7	3.0	-
	소계	<b>57.6</b>	<b>41.5</b>	<b>37.9</b>	<b>34.8</b>
협상중	호주	2.0	0.3	1.4	3.2
	캐나다	2.5	0.5	2.5	1.1
	뉴질랜드	0.2	0.1	0.2	0.2
	일본	8.4	1.8	4.6	10.0
	중국	10.5	19.3	10.0	20.4
	소계	<b>23.6</b>	<b>22.0</b>	<b>18.7</b>	<b>34.9</b>
	누계	<b>81.2</b>	<b>63.5</b>	<b>56.6</b>	<b>69.7</b>

※ 자료: World Bank / WTO / 관세청(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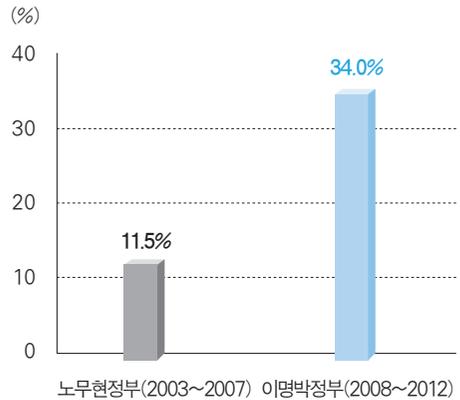
다.”라고 발표하였으며, 일본정부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개국으로 일컬어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허브국가로 부상한 이명박정부의 선견지명과 FTA 정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초기인 2008년부터 우선적으로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 끝에 이를 달성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인도,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 신흥경제국과의 FTA 추진을 병행하여 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 구상의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한·중, 한·일 및 한·중·일을 포괄하는 동북아 FTA가 타결될 경우,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무이한 FTA 허브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를 본격적으

### 우리 FTA발효국의 GDP비중



### FTA발효국과의 특혜무역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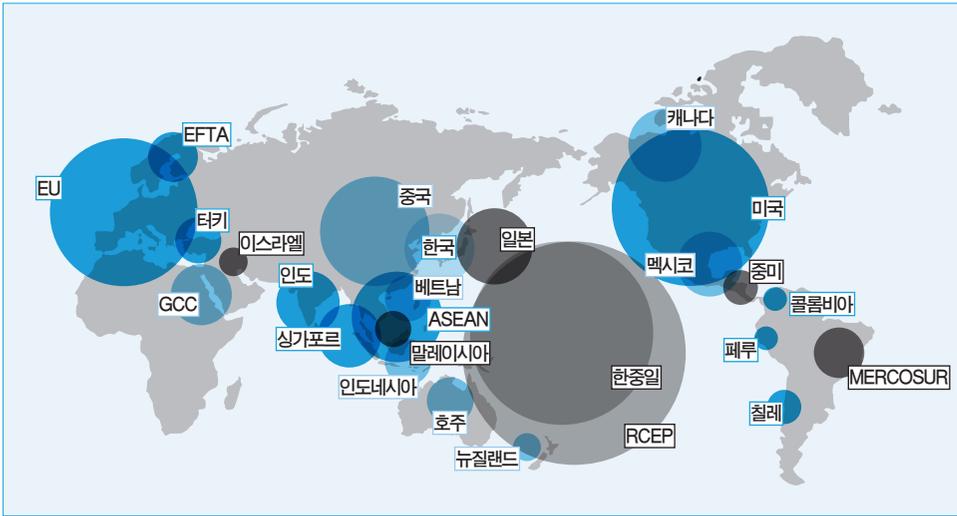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2.4)기준

로 추진한 결과, 2012년 12월 현재 미국, EU, 인도, ASEAN, 칠레, 싱가포르, EFTA, 페루 (총 8건, 45개국)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한·페루 FTA가 2011년 8월 1일,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각각 발효되었다. 이러한 FTA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영토는 2007년 세계 경제규모 대비 6.7%에서 2012년 56.2%로 확장되었다. 이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경제영토가 세 번째로 넓은 국가로 도약한 것으로, 미국, EU 등의 경제영토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경제영토의 약 4배 수준이다. 터키와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분야협정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콜롬비아와도 2012년 8월 31일 FTA 협정에 가서명하는 등 신흥경제국과의 FT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제1위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FTA 협상도 이명박정부 하에서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개시되어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11월 초까지 4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2년 7월 및 12월 2차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개최된 바 있으며, 2012년 9월 3~4일에는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되는 등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FTA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캄보디아) 계기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출범하였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이 출범한 바, 진전을 이룰 경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지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불리며 체결 국가간 상호 무역상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현행 WTO 체제의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에 어긋나나 GATT24 조/GATS 5조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은 협정을 의미한다. WTO는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이 전 세계적인 경제 후생 증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국이 양자 또는 복수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1)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타국의 시장을 선점하거나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한 경쟁자에게 시장을 잃지 않으려 한다. 2) 생산과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망/공급망(global value chain/supply chain)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다자간 무역협상(DDA)은 이러한 국제적인 생산 분업을 보호하는 내용(투자자 보호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3) 양자간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류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명박정부의 FTA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공사례로 한·미 FTA의 발효를 우선 꼽을 수 있다.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던 한·미 FTA가 본협상 못지않게 어려웠던 추가 협상 및 양국 내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선점하여 안정적 수출시장을 확보하였으며, 협상 타결 직후 일본을 포함한 우리 경쟁국들이 보인 지대

한 관심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하여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가져와 미국과의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과 편익을 증가시키고 우리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최상의 한·미 동맹관계를 증명하는 사례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리 주변국의 언론에서도 계속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1. 한·미 FTA 추진 경과

양국 정부는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7년 6월 30일 서명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국 내 비준 및 발효가 계속 지연되었다. 당시 정부는 2007년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지속과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8년 우리나라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2008년 대선과정에서 부시행정부 시기에 타결된 한·미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의 비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으나, 2009년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회복을 위한 대외무역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4월, 6월 및 11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FTA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호혜적 협정이며, 양국 동맹관계 강화 및 양국 경제 성장에 물론 전 세계 보호주의 확산 방지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하게 설득하였다. 특히 2010년 이

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있었던 2차례의 정상회담(6월 26일, 11월 11일)은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의 진전을 위하여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양국 통상장관은 2010년 10월 26일(샌프란시스코)과 11월 8~10일(서울)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양국 간의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 이후 2010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다. 추가협상은 이미 맞춰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제한된 분야에 한하여 진행되었다.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철폐 부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우리 측이 요구한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의 연장, 기존 합의문에 수록된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유예 등 내용을 협상 결과에 반영시켜 합의를 도출하였다. 추가 협상 타결 결과를 각국 언론들도 집중 보도하였는데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영 FT 2010.12.4),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적 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일 산케이, 2010.12.7)하는 등 타결 결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 문서를 서명·교환하였다. 추가협상 합의 도출은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결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이 경제적·전략적인 의미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로서는 장기간 지연되어온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하고, 한·미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한·미 양국 간 전반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6월 3일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동의안은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직후 당시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3일 역사적인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비준됨으로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며, 한·미 FTA를 통하여 두 나라는 모두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우리 양국의 기업인뿐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창조적 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언론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두 나라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2011년 11월 말부터 2012년 2월 21일간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행점검 협의 결과 양측은 협정의 이행 준비 상황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2012년 2월 21일(서울 시간) 한·미 FTA 이행점검협의를 마무리하였다. 이행점검협회가 마무리된 후 한·미 FTA는 양측 간 합의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이어 2012년 5월 16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 간 회의를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운영방식, 심리절차, 비밀정보 취급방식 등의 내용을 규정한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도 채택하였으며, 공동위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2012년 6월 7~8일간 서비스투자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7월 5일에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측은 동 회의를 통하여 한·미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교환하였다. 이어서 2012년 11월 7~8일간 농업무역 위원회, 섬유위원회, 정부조달작업반 회의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 2. 한·미 FTA의 주요내용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이다. 양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공산품의 경우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여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영향이 없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15년 이상 관세 존속기간을 확보하는 등 민감도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단계	품목 수 (총 8,434개)	주요 품목 (관세율, %)		
즉시	7,160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기어박스(8), 전자계측기(8), 헬륨(5.5), 할로겐 전구(8), 도난/화재/가스경보기(8), 카본블랙(5.5), 광섬유(8) 등	원목(2), 기타 비금속광물(3~8), 벼루(8) 등	브라인슈림프알(8), 냉동굴(20), 검정대구(10, 냉동), 연어(10-산것, 냉동), (20-신선·냉장, 훈제) 등
3년	719	폴리카보네이트(6.5), 오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골프채(8), 콘택트렌즈(8), 냉각기(8), 삼푸(8), 향수(8), 알칼리망간 건전지(13), 제초제(6.5) 등	제재목류(5), 단판(5~8)	해삼(20), 왕게(20), 먹장어(10, 산것), 등
5년	228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헤어린스(8), 치석제거기(8) 등	창문/틀(8), 로진(6.5), 코르크(8), 바구니(8), 등	명란(10, 냉동), 대구(10, 냉동), 바다가재(20), 새우살(20, 냉동), 은대구(10, 냉동) 등
10년	323	아크릴니트릴(6.5),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자기공명 촬영기기(8), 볼베어링(13), 폴리에틸렌(6.5), 복합형 확성기(8), 아세톤(5.5), 안전벨트(8), 내시경(8) 등	목제식탁용품(8), 목재틀(8), 마루판(12) 등  (10년 비선형)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홍어(27, 냉동), 임연수어(10, 냉동), 문어(20, 냉동) 등  (10년 비선형) 명태어육(10, 냉동 필레트), 오징어(24, 냉동), 콩치(36, 냉동), 등
12년 (비선형)	1			고등어(10, 냉동)
12년 (TRQ)	2			민어(63, 냉동), 기타 넙치(10, 냉동)
15년 (TRQ)	1			명태(30, 냉동)

차별화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포괄적 유보를 통하여 정책 자율권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전문직 서비스 및 금융 등 분야는 단계적·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미국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단계	품목 수 (총 7,094개)	주요 품목 (관세율, %)
즉시	6,171	캠코더(2.1), TV카메라(2.1), 자동차 부품(2.5), 엔진(2.5), 헤드폰(4.9), 폴리아세탈수지(6.5), 에폭시수지(6.1), 피아노(4.7), 핸드백(3.3~20), 매트리스(3~6), 유리거울(6.5~7.8), 제트유 및 등유(배럴당 10.5~52.5센트) 등
3년	356	실리콘수지(3), 콘택트렌즈(2), 금속절삭가공기계(4.4), 유기계면활성제(4), 10인 이상 승용자동차(2) 등
5년	206	승용차(2.5), 레디알타이어(4), 실리콘망간철(3.9), 폴리에스테르(6.5), 면직물(0~12.5) 등
10년	344	가정용 전자레인지(2), 폴리에스테르수지(6.5), 베어링(2.4~9), ABS수지(6.5),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 10년 비선형: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초과	17	특수신발(20~55.3, 2012년 비선형)

### 3. 한·미 FTA의 발효 후 효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한·미 FTA 발효 이후 7개월간(2012.3.15~10.31) 한·미간 교역은 총 644억 달러로, 대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데 반하여, 대미 수출은 373억 달러로 2.1% 증가하였다. 반면 대미 수입은 6.2% 감소한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자동차부품(15%), 고무제품(14%), 섬유제품(8%)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오렌지(32.4%), 호두(50.1%), 아몬드(71.1%)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한·미 FTA는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하고 주요 소비재 가격도 인하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2012.3.15~8.31)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전년 동기(8억 9,300만 달러) 대비 72.8%가 증가(15억 4,400만 달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미 FTA 비준 후 기존의 FTA 대책을 추가 보완한 종합대책을 2012년 1월 마련하였다. 보완된 대책안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10년간(2008~2017) 24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전을 지원하고,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분 포함하여 29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는 R&D 지원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약산업의 경우 2007년 6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10년간(2008~2017) 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

구분		효과
수출(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2.1
	혜택 품목	12.9
	비혜택 품목	△4.3
수입(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계	△6.2
	혜택 품목	2.8
	비혜택 품목	△13.9
활용률(%)	수출	66.0
	수입	59.1
외국인 투자유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72.8
소비자가격 인하		9개 품목/10개 품목 중

※ 자료: 관세청, 지식경제부, 공정위

※ 통계기준: (교역)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2012.3.15~10.31)

(투자) 한·미 FTA 발효이후 최근까지(2012.3.15~8.31)

분야에서는 실직 전·후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마련 및 우수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하였다.

## 4. 한·미 FTA의 향후 과제

이명박정부는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거쳐 한·미 FTA가 발효된 만큼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 기준 활용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물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 증대 등 혜택이 소비자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미 FTA에 의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개발하고, 수출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중소기업 무역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한·미 FTA 주요 수혜품목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수출 선도기업 20개를 선정하여 컨설팅부터 마케팅까지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는 수출 선도 기업 선정 대상을 대폭 늘려 100개까지 집중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 FTA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FTA를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며,  
특히 FTA로 인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방문 시(2011.10.17)



2008년부터 집행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내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비롯,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분야별 위원회, 작업반, 협의회 등(총 19개) 창구를 적절히 활용하며, 한·미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향후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나가야 한다.

## 제2절 한·EU FTA 발효

한·EU FTA 협정은 2010년 10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반 롬푸이(Herman Van Rompuy) EU 상임의장 간의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정식 서명되었으며, 이어 우리 국내절차와 EU 내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되었다. (잠정 발효로 관세인하 등 EU 집행위가 관장하는 협정 대부분의 내용이 즉시 발효되나, 지적재산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조항 등 EU 공동체와 회원국의 공동 권한 사항은 각국별 비준이 완료된 후 발효된다).

동 협정의 서명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한·EU FTA 협정 서명으로 인하여 무역자유화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EU FTA 서명에 대하여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한·EU FTA 체결은 미국기업들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국 업체의 대유럽 공세가 강하여질 것이며, 일본 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요 경쟁국 언론의 반응은 동 협정이 EU 시장에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경쟁국 기업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며 우리의 제3의 교역상대국이자 제1의 대한 투자국이다. EU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순간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5.6%)는 미국(3.5%)보다 평균관세율(2008년 기준)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 1. 한·EU FTA 추진 경과

한·EU FTA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공식협상, 통상 장관회의 11회, 수석대표 간 협의 13회 등의 협상이 진행되다가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 계기에 실질적으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당시 유럽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대상국이자 EU 의장국인 스웨덴에 도착한 후 7월 13일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서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한·EU FTA가 타결되면 유럽 27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여온 어떤 FTA 보다도 우리 무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9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법률검토회의를 거친 후 2009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시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6일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스티븐 바나케르(Steven Vanackere) EU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과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FTA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는 EU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한·EU FTA 동의안은 2011년 2월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 국제통상위원회를,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우리의 경우,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간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 과정 중 제기된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문에 대한 전면적인 한글본 재검독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한·EU

FTA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한·EU FTA에 대한 비준 준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2011년 4월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2011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EU 양측은 한·EU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정비 등을 마치고 2011년 6월 21일 한·EU 수석대표 간 이행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 2. 한·EU FTA의 주요내용

한·EU FTA는 한·미 FTA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비롯하여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적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공산품(임산물 포함) 관세의 경우, 전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이며, 교역액 기준으로 우리 공산품에 대한 EU의 관세는 5년 내에 100% 철폐되고, EU 공산품에 대한 우리의 관세는 5년 내 97%가 철폐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EU FTA는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을 개방하는 포지티브 양허 방식(GATS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EU 집행위의 관할권 부재로 포함되지 않았다.(한국과 EU 각 회원국 간의 개별 투자 협정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분야에 있어 우리는 WTO 서비스 분류 기준 155개 섹터 중 총 115개 섹터를 개방하였으며, EU 측은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전문직(법률, 회계, 세무 등), 사업(조사 및 경비, 부동산 등), 육상 운송, 우편·쿠리어,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하였으며, 방송통신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한·EU FTA는 별도의 문화협력의정서를 두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이 공동제작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EU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한·EU FTA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외에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식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을 WTO TRIPS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총 64개 및 EU의 지리적 표시 162개가 한·EU FTA 잠정 발효와 함께 양측에서 지리적 표시로서의 보호를 향유하게 되었다.

양허 단계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 수	비중	대EU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대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철폐(A)	8,535	90.7%	180	69.4%	7,201	97.3%	318	76.7%
3년 철폐(B)	478	5.1%	58	22.4%	151	2.1%	68	16.6%
조기 철폐(A+B)	9,013	95.8%	238	91.8%	7,352	99.4%	386	93.3%
5년 철폐	346	3.7%	18	6.9%	46	0.6%	28	6.7%
7년 철폐	45	0.5%	3	1.3%	-	-	-	-
총합계	9,404	100.0%	259	100.0%	7,398	100.0%	414	100.0%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우리 측	EU 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 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투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속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오염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계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 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 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 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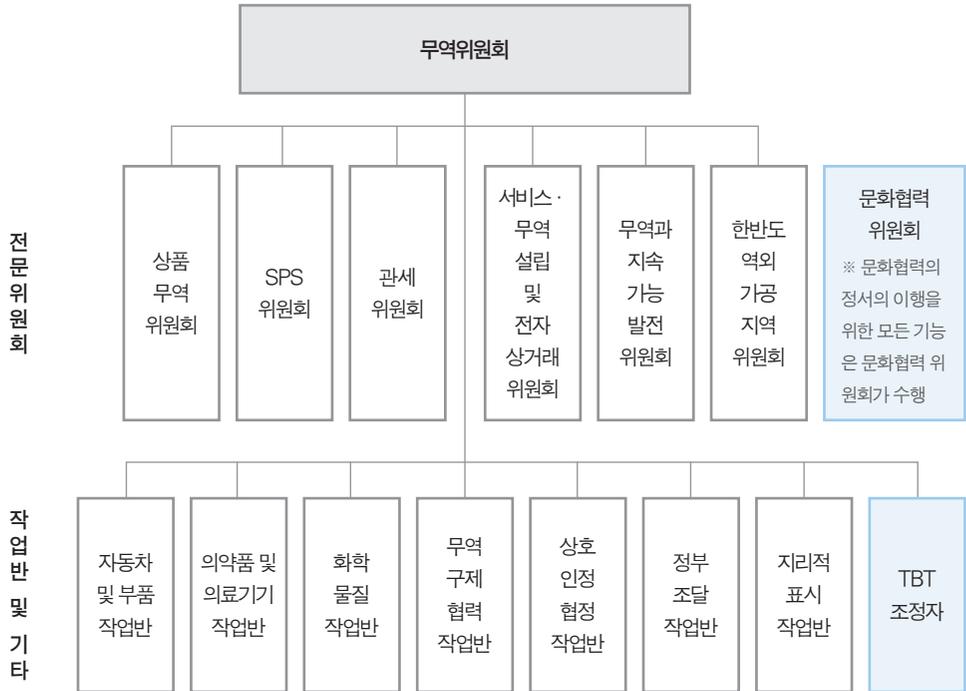
※ 우리 측만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 3. 한·EU FTA 이행

2011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한·EU 통상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EU 무역위원회가 개최되어 한·EU FTA의 이행체제 수립 및 운영방안, 협정 이행 관련 한·EU 간 주요 관심사항, 한·EU간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어 한·EU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의사 규칙 및 일반분쟁해결

패널 명부를 채택하였으며, 한·EU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의 전문위원회 및 7개의 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한·EU FTA 이행체계



※ 문화협력의정서를 제외한 협정의 모든 분야가 무역위원회의 관할 대상

제2차 한·EU 무역위원회 회의는 2012년 10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한·EU FTA 발효 1년간의 효과와 산하위원회·작업반 활동상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통관 등 무역원활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4. 한·EU FTA 발효 후 효과

한·EU FTA 발효가 이루어진 2011년 7월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가 유로지역으로 전이되면서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촉발하고 유럽이 유례없는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유럽지역의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한·EU FTA 발효 1년

구분	2010 하반기~2011년 상반기	2011 하반기~2012 상반기	증감률
전체	14,102	15,416	9%
EU (비중,%)	3,836 (27)	4,385 (28)	14%
미국	2,697	2,517	-7%
일본	2,353	4,034	71%

※ 자료: 지식경제부

(2011.7.1~2012.6.30)간 한·EU 간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509억 달러, 수입 490억 달러로 흑자 기초를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국가는 국내수요 감소 및 수입급감으로 인하여 흑자가 발생하고 상대국이 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 한·EU FTA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역 흑자폭의 감소(전년 동기 145억 달러→19억 달러)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입 위축 및 우리나라의 선박수출 감소(△46.6%) 등에 기인한 결과인데,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 품목이자 기존 무관세 품목인 선박,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의 대EU 수출이 30.7% 감소하였고, 한·EU FTA와 무관한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의 대EU 수입이 11.7% 증가하였다. 반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대EU 수출(16.3%)이 수입(13.6%)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29.4%), 자동차부품(14.7%), 석유제품(29.7%) 등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EU산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한 원유(전년 동기 0→17억 9,000만 달러) 및 석유제품(110.1% 증가)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가방(33.8%), 신발(30.2%), 시계(48.7%) 등 소비재의 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한·EU FTA의 효과는 투자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한·EU FTA 발효 1년(2011.7.1~2012.6.30)간 EU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43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스웨덴(580.9%), 룩셈부르크(460.1%), 몰타(290.6%), 스페인(216.8%), 오스트리아(159.9%) 순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몰타(5억 5,000만 달러), 룩셈부르크(2억 5,000만 달러), 스웨덴(2억 3,000만 달러), 스페인(8억 달러), 네덜란드(8억 달러) 순으로 대한국 투자가 집계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세가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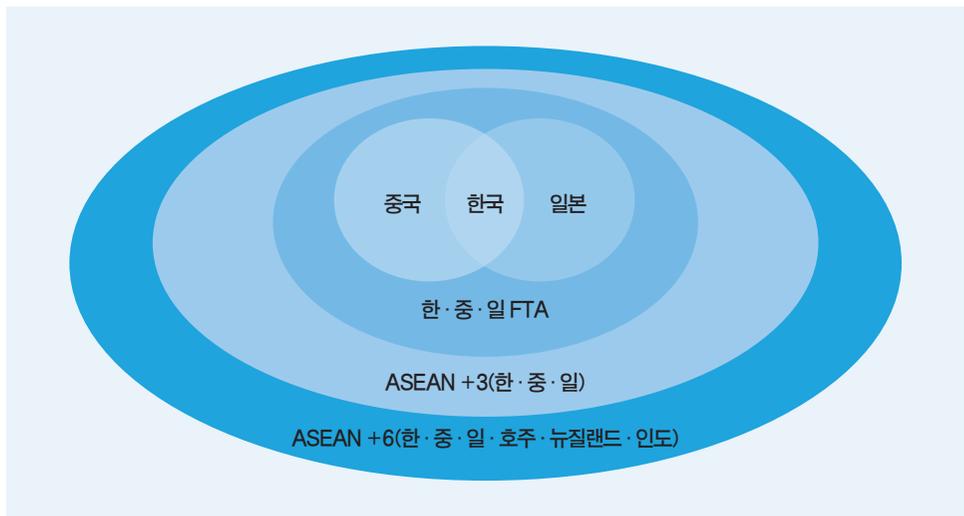
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은 35.5%, 서비스업은 24.9% 증가하였다.

물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의 무역수지와 투자 동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효 후 1년간의 효과는 한·EU FTA가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과 EU의 대한투자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EU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

한·중·일 3국과 ASEAN을 합한 동아시아 경제권은 전 세계 인구의 30.6%, GDP의 23.6%, 무역 규모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NAFTA 및 EU에 필적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을 바탕으로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한·일/한·중·일 FTA 및 ASEAN+6 국가 간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경제통합을 위한 여러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통상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경제발전 단계의 이질성, 정치적 갈등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한·중 FTA로 양국관계 발전 추진

... 앞으로 한·중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협력이 제조업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에너지, 환경, 서비스 등 신흥산업으로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 더 많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동참하고  
 또 중국의 많은 상공계 인사들이 한국에 투자하길 희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중 상공계 기업가 오찬회 (2012.1.10)



## 1. 한·중 FTA 협상 진행

1992년 수교 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 한·중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5배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우리 대외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2008년 한·중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배경으로 한·중 간의 FTA 체결 가능성이 2005년부터 양국 정부 및 업계, 학계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희망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 미국, EU와의 FTA 체결과 비교하여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농업과 공업 양면에서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오랜 준비기간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2012년 5월 출범한 한·중 FTA 협상은 다른 여타의 FTA 협상과는 달리, 자유화 수준과 민감성 보호방안이 합의에 이른 후(1단계)에야 본격적인 분야별 양허 협상(2단계)으로 넘어가는 2단계 추진 방안을 취하고 있다.

과거 한중간의 교역은 가공 무역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우리가 수출한 중간재와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서고, 이미 자동차 등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미국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우리는 상품은 물론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나라를 대중국 진출 기지화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용과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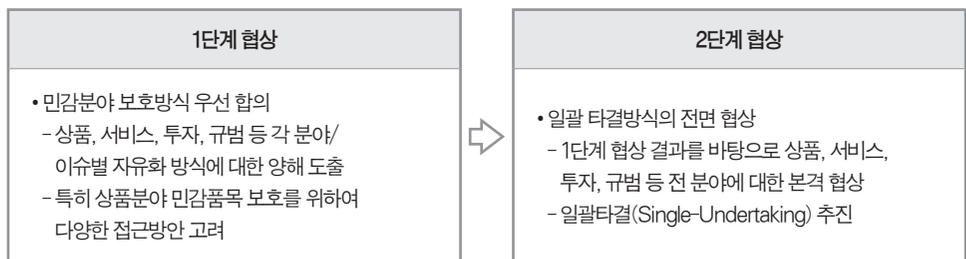
이명박정부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위하여 △자유화 수준, △협정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중국 측과 협상하여 나가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민감성을 보호하면서 핵심 분야별 이익 간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등의 민감성 보호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지속적인 아웃리치 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하여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하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1) 협상 경위

한·중 양국은 2005~2006년간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양국은 2007년부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한·중 FTA의 대상 범위와 민감 분야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서는 △포괄성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과의 합치성 △민감 부문에 대한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등 5개 원칙에 대한 공통 이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국은 한·중 FTA상 민감성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2010년 9월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외교장관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한·중 FTA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좁혀 나갔다.

2012년 1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FTA 추진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FTA 출범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통상절차법 발효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국회 협조 확보를 위하여 4월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중 FTA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이러한 법정 절차 이외에도 한·중 FTA 협상추진 타당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세미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약 120회에 걸쳐 국민적 여론 수렴활동 및 대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7년여에 걸친 신중한 접근을 바탕으로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상무부장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단계별 협상, △민감 분야 보호방식, △서비스·투자분야 포함, △역외가공 지역 등의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는 1단계 협상 완료 후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협상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제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분야별 협상 지침(modality)을 도출함으로써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등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보호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협상에서 전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이 사전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조항 포함에 합의하여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공단 생산제품이 한·중 FTA의 특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한·중 양측은 2012년 5월 14일 한·중 FTA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을 개최, 향후 협상의 기틀이 될 행정적·구조적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협상 운영 세칙(TOR)을 확정하고, △협상을 지휘할 무역 협상 위원회(TNC)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협상에 기초로 활용될 통계 자료 등을 교환하였다.

이어서 2012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중 FTA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동 계기 TNC 산하에 서비스·투자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는 한편 협정 대상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각 분야별 협상 지침(modality)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중 FTA 제3차 협상은 2012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웨이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품목군별 정의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서비스·투자·원산지·무역 및 통관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

다. 또한 정부조달·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 FTA 제4차 협상은 2012년 10월 3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민감품목의 비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 (2) 한·중 FTA의 의의

한·중 FTA의 가장 큰 의의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무역 구조 형성을 통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 추진 등을 2012년 경제분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곧 중국이 그간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對中 수출 중 중간재 수출 규모는 67.2%인 반면, 최종재 수출 비중은 31.2%에 불과함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종재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로 관

### 가공단계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구분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1차 산품	0.6	0.6	0.8	1.7	1.8	1.5	
중간재	84.9	82.0	76.8	70.0	68.3	67.2	
계	19.7	17.3	22.3	28.4	29.9	31.2	
최종재	자본재	16.2	14.0	19.4	24.7	26.1	26.9
	소비재	3.5	3.3	2.9	3.7	3.8	4.3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중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건), 총신고수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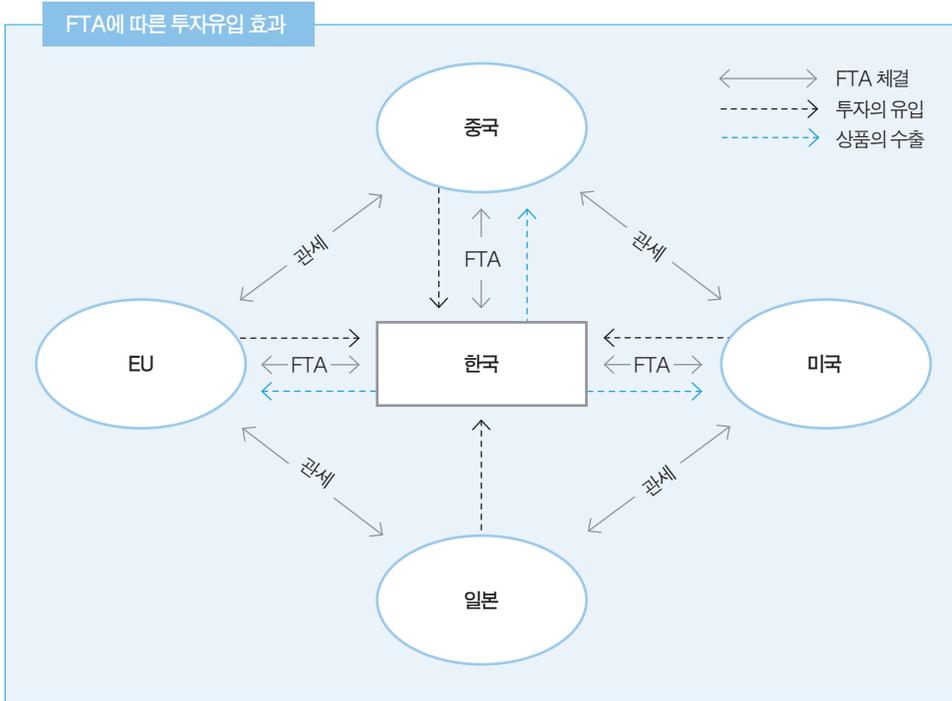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누계
대중국 (건수)	3,663 (4,647)	4,530 (4,686)	7,116 (4,594)	4,861 (3,270)	2,647 (2,110)	3,931 (2,262)	4,352 (1,698)	49,184 (44,026)
대한민국 (건수)	68 (672)	40 (334)	385 (364)	336 (389)	161 (538)	414 (616)	253 (260)	3,339 (7,387)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 대중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8년부터 2011년 1~9월까지

※ 대한민국투자의 총 누계는 1962년부터 2011년 1~9월까지

※ 한국의 대중투자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건수가 포함



세가 인하·철폐된다면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중국 내수 시장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중 FTA는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약 2만 2,0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중국 내수 시장 성장 추세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보호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포괄적 FTA를 추진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의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2012년에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격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과

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한·중 FTA 체결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한·중/한·일/한·중·일 FTA 및 RCEP·TPP 등 다양한 경제 통합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중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중 FTA가 역내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의 기초가 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미국·EU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 완료 시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적극적인 FTA 추진 전략을 통하여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적 의미의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은 김대중 정부시기부터 양국 간 화해를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 2차례의 심의관급 실무협의, 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일본 내 비관세장벽(NTB) 문제 등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및 시장개방 수준 등 협상재개 시 예상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양국 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2012년 2월 일본 측의 과장급 실무협의 개최 제의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의 한·일 FTA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하여 협상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상재개 추진을 고려할 예정이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일 FTA추진에 있어 현재 한·일간 상당한 규모의 무역역조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하여 양국 간 상호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일 FTA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 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한·중·일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동반 성장을 달성 한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개시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시 3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3국은 2010년 1월 준비회의를 거쳐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2010년 5월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시 3국 정상은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 한·일·중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한 3국 간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향하여 지속 노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2011년 5월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당초 2012년 정상회의의 개최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던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1년 말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4~16일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FTA는 실현가능(feasible)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



한·중·일 3국이 FTA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세계의 자유무역 의지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상의 자유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다자무역협상체제인 DDA가 국가마다 사정이 어려워 합의가 잘 안 되어 양자 FTA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2012.5.13)



적 혜택을 가져올 것(beneficial)으로 전망하면서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는 2012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 보고되었으며, 3국은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19-20일간 도쿄, 2012년 8월 21일 청다오,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중·일 FTA 사전 실무 협의를 통하여 협상 기본원칙, 협상 방식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국은 연내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이어 2012년 10월 24일 한·중·일 FTA 공청회, 11월 19일 국회보고 등 우리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프놈펜) 계기 개최된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다. 한·중·일 FTA가 3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데 3국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로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개시 선언

아·태 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확대 추진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양자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짐에 따라 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ASEAN은 2011년 11월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작업계획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ASEAN 10개 국가와 6개 ASEAN-FTA 파트너국가(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총 16개 국가 간 경제통합체를 체결하기 위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RCEP 체결 시 무역규모 기준 10조 달러가 넘는 거대 경제통합체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 전체 교역액의 47.3%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작업반을 빠른 시일 내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차례의 상품작업반회의(2012.6.26~28, 8.13~15) 및 1차례의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2012.10.9~12)회의를 통하여 상품·서비스·투자 협상지침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ASEAN-

FTA 파트너 국가 간 경제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지침 문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RCEP 체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 등을 고려하여, RCEP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고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16개국 정상 임석하에 RCEP 협상개시선언이 이루어졌다.

## 제4절 신흥경제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 1. 한·인도 CEPA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5일 인도 국빈 방문 직전의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7% 가까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인도 경제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현재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가 머지않아 두 배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인도 CEPA가 발효를 통하여 일자리가 늘고 수출이 증가하며, 양국 간 젊은 인재들의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도는 2000년대 들어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12억의 인구 대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맹자 관계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동 협정은 12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거쳐 2009년 8월 정식 서명되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의 대인도 수출의 85%를, 우리는 품목 수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3%, 수입액 기준으로 대인도 수입의 90%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상품시장 개방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 및 평균 관세율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DDA 협상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외국 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인력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자유화하는 한편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



...한·인도 CEPA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인도와 상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직 인도는 중국과 FTA를 하지 않은 만큼

이미 발효된 한·인도 CEPA는 국제문제에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도 국민 방문 시 수행경제인들과의 조찬(2010.1.25)



### 한·인도 CEPA 주요 성과

- 한·인도 간 교역액은 2009년의 122억 달러에서 CEPA가 발효된 이후인 2010년에는 약 1.4배 증가(171억 달러),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1.2배 증가(206억 달러)하여 발효 이전에 비하여 양국 간 교역은 1.7배 증가
- 한·인도 CEPA 발효이후 2010년~2011년 2년간 수출은 80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41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증가
- 석유화학합성연료, 선박, 가열난방기,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알루미늄, 아연, 합금철, 나프타 등 원재료 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

### 2009-2011년간 한·인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對인도 수출	對인도 수입	교역액		무역수지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2009	8,013	4,142	12,155	-21.9	3,871
2010	11,435	5,674	17,109	40.8	5,761
2011	12,686	7,893	20,579	20.3	4,793

※ 자료: 한국무역협회

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교역·투자·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등 실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수출은 43%가 증가하고, 수입은 37%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인도에 대한 수출이 11%, 수입이 39% 증가하여, 양국 교역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한·인도 CEPA 발효 전인 2009년보다 69.3% 증가한 것이다.

한편 한·인도 CEPA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양국 통상장관(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가 2011년 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양국은 한·인도 CEPA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1차 한·인도 CEPA 개선 작업반 회의가 2012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한·인도 CEPA는 향후 인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효과만 계산하여도 앞으로 10년간 대인도 수출은 17억 달러, 무역흑자는 1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 속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및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 한·페루 FTA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중남미와의 경제통상 외교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페루는 아연, 주석, 납, 동 등 전략적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신흥산유국 및 천연가스 공급기지로서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우리 기업이 남미 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다. 또한 페루는 200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건설한 경제 정책을 취한 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이 큰 나라로서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15%에 불과하지만, 2006~201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 국가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명박정부는 급성장하는 페루 시장과 페루 정부의 경제 발전 의지에 주목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동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결과,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Perez) 대통령 간의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보완적 성격이 강한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회기 간 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10년 8월 30일 페루 리마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한·페루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이어 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페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국이 조기 비준 및 발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년 6월 29일 한·페루 FTA 비준 동의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하였다.

한·페루 FTA는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였고, 페루는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보다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우리 투자자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대페루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FTA가 2011년 8월 1일 발효한 이후 2012년 7월까지 1년간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한 반면 수입은 소폭(7.6%) 감소하였다. 발효 1년간 양국 교역액은 3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양국이 한·페루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2008년 교역량(16억 2,000만 달러)에 비하여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페루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우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고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페루 FTA로 페루는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협력 파트너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3.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급성장하는 ASEAN 시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정상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ASEAN과의 교역 관계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여 왔다. 이명박정부는 2006년 체결된 한·ASEAN FTA의 이행을 촉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ASEAN 국가들과 보다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중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별도의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한·ASEAN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러한 교역 확대에 한·ASEAN FTA가 기여하여 왔습니다.  
 향후 양측간 교역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한·ASEAN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3차 한·ASEAN 정상회의(2010.10.29)



### 한·ASEAN FTA 주요 성과

- 한·ASEAN간 교역액은 FTA 발효 전년도인 2006년의 618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
- 동 기간 수출은 321억 달러에서 71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297억 달러에서 531억 달러로 증가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경질석유제품, 철강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매니옥, 무연탄, 동제품 등 원재료 관련 품목의 수입 증가

### 2006~2011년간 한·ASEAN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對ASEAN 수출	對ASEAN 수입	교역액	무역수지
	금액	금액	금액	
2006	32,066	29,743	61,809	2,323
2007	38,749	33,110	71,859	5,639
2008	49,283	40,917	90,200	8,366
2009	40,979	39,053	75,032	1,926
2010	53,195	44,098	97,293	9,097
2011	71,915	53,111	125,026	18,804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4년 11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측은 한·ASEAN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였다. 이후 한·ASEAN FTA 협상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국과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대부분의 FTA 협상에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Single Undertaking) 대신에 순차적인 협상방식을 적용하였다.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되었고, 서비스무역

협정과 투자협정은 이명박정부 하에서 적극적인 협상 교섭을 진행한 결과 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상품무역 협정과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에 불참하였던 태국이 2009년 2월 27일 2개의 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한·ASEAN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직후에는 ASEAN 측의 협정 이행이 원활치 않았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나 활용도도 높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노력으로 이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이 진행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양측 간 교역액은 협정 발효 이전인 2006년 618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102%가 증가하여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2009년 10월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7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FTA의 이행현황 점검,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관세율 정보 확산, 원산지 서식 간편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수출입 기업이 한·ASEAN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구체 방안이 논의되었다.

#### 4.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또한 유럽·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중요성·시장잠재력·거대시장 인접성 등 신흥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post-BRICs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양국 수교 이후 터키에 대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여오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흑자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교역량도 1977년 3,200만 달러에서 2011년 59억 달러로 약 18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양국 간의 교역수준은 그 경제규모에 비하여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한·터키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



...터키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근 연 8~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터키는  
 오는 2023년까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한·터키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였는데,  
 다행이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관련 민감한 품목이 적어서 조속히 타결된다면 양국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2.20)



**한·터키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는 증감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3,036 (9.1)	4,087 (34.6)	3,773 (△7.7)	2,661 (△29.5)	3,753 (41.1)	5,085 (35.5)
수입	194 (52.5)	282 (44.9)	362 (28.5)	434 (20)	516 (18.8)	804 (55.8)
무역수지	2,842	3,805	3,411	2,227	3,237	4,281
총교역액	3,230	4,369	4,135	3,095	4,269	5,889

※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 터키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는 신고건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터키의 대한국 투자	224 (3)	362 (5)	1,308 (7)	205 (4)	1,977 (10)	916 (7)	<1996~2011> 10,463 (65)
한국의 대터키 투자	40,031 (14)	131,150 (28)	89,797 (30)	247,104 (45)	66,636 (30)	135,842 (39)	<1987~2011> 916,089 (253)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FTA체결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2010년 3월 1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이 선언이 된 이래 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네 차례의 공식

협상과 소규모협상을 통하여 한·터키 FTA를 한·ASEAN FTA 방식에 따라 1)기본협정, 2)상품무역협정, 3)여타 협정(서비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잠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2년 8월 1일 박대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서명(signing) 하였고, 상기 협정 발효를 위한 양측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11월 22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우리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터키 측 국내절차 진행동향을 감안시 2013년 상반기 협정발효가 예상된다.

## 5. 한·콜롬비아 FTA 협정 가서명

2012년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 계기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을 공동선언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제3위의 소비인구(약 4,600만 명)와 제4위의 경제규모(약 3,200억 달러대의 GDP)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최근 들어 치안안정과 더불어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콜롬비아는 또한 중남미 5대 유망산유국이자

###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913	1,121	1,091	797	1,389	1,615
수입	206	116	143	125	432	381
무역수지	707	1,005	948	672	957	1,234
총교역액	1,119	1,237	1,234	922	1,821	1,99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콜롬비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콜롬비아의 대한국 투자	건수	-	1	1	1	-	-	3
	금액	-	107	54	450	-	-	611
한국의 대콜롬비아 투자	건수	3	3	3	7	6	16	70
	금액	4,859	21,925	1,034	34,075	38,606	118,609	260,426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세계 10위 광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콜롬비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FTA 체결을 통하여 협력강화를 추진하였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Uribe 대통령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년 6개월간 총 7차례의 공식협상과 7차례의 소규모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2012년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 간 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을 공동선언하였으며, 동 협정문에 대하여 2012년 8월 31일 가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앞으로 정식 서명 및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협정의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6.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진행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ASEAN 거점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파트너이다. 특히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8대 교역국이자 ASEAN 국가 중 제1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일본 등이 인도네시아와 양자 FTA를 체결함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요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16일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고, 2011년 중 3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진행·완료하여, 2012년 3월 28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오노 대통령 간의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2012년 7월 12일 한·인도네시아 CEPA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4,874 (△3.4)	5,771 (18.4)	7,934 (37.5)	6,000 (△24.4)	8,897 (48.3)	13,563 (52.4)
수입	8,849 (8.1)	9,114 (3.0)	11,320 (24.2)	9,264 (△18.2)	13,986 (51.0)	17,216 (23.1)
무역수지	△3,975	△3,343	△3,386	△3,264	△5,089	△3,653
총교역액	13,723	14,885	19,254	15,264	22,883	30,779

※ ( )는 증감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투자	25,743 (11)	336 (4)	150 (1)	11,891 (12)	2,133 (12)	752,097 (17)	6,240 (11)	<1990~2011> 888,824 (106)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137,392 (175)	257,898 (277)	618,882 (294)	658,399 (397)	526,623 (312)	1,792,579 (331)	1,369,103 (442)	<1968~2011> 9,867,923 (3,941)

※ ( )는 신고건수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 7. 한·베트남 FTA 협상 진행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 후발국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으로, 우리의 제6위 투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은 한·ASEAN FTA상 상품시장 자유화 일정이 여타 ASEAN국가에 비하여 늦을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MFN 관세가 한·ASEAN FTA 특혜관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우리의 이익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한·베트남 FTA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응우옌민 쩌엣 국가주석 간의 한·베트남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 총 6차례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0월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1년 11월 8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28일 서울

한·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3,927 (14.5)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13,551 (40.4)
수입	925 (33.3)	1,392 (50.5)	2,037 (16.3)	2,370 (16.3)	3,331 (40.5)	5,084 (52.6)
무역수지	3,002	4,368	5,768	4,779	6,321	8,467
총교역액	4,852	7,152	9,842	9,519	12,983	18,635

※ ( )는 증감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對베트남 투자	388,407 (377)	1,793,470 (572)	2,779,433 (838)	1,910,214 (823)	964,070 (640)	2,147,621 (758)	1,502,116 (715)	(~2011) 14,376,893 (6,033)
對한국 투자	1,065 (3)	401 (5)	542 (7)	432 (9)	1,004 (13)	792 (15)	4,986 (15)	(1997~2011) 9,985 (83)

※ ( )는 신고건수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쓰영편상 국가주석 간의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종료 되는대로 양자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는 협상개시 선언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2012년 9월 3~4일 한·베트남 FTA 제1차 협상을 개최하고, 향후 협상의 범위, 구조, 일정 등의 지침이 되는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채택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및 기타 규범 분야(무역구제, 지적권 등)를 포함하여 한·ASEAN FTA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8. 기타 FTA 협상 진행 상황

### (1) 한·캐나다 FTA 협상 진행

2005년 7월 11일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이 선언된 이래 양국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한 양측 간 입장차이로 인하여 제1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공식협상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멕시코)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캐나다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우리 민감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한·미 FTA, 한·EU FTA 등 우리의 기체결된 FTA에 반영된 제도·규정을 반영하는 FTA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캐나다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 간 교역이 한층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호주 FTA 협상 진행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자원 수출국이자 선진적 농업정책과 기술을 갖춘 농업선진국으로서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공산품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호주 FTA 협상 논의는 2007년에 실시한 FTA 민간공동연구, 2008년 4월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2008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한 예비협의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그 간의 협의 결과, 일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고, 상품양허 분야에서도 양국의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으로 논의가 압축된 상태이다.

한·호주 FTA는 우리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농업분야 협력을 비롯한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진행

한·뉴질랜드 양국은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상호 투자 및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한·뉴 FTA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 정부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가졌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일에 개최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5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여 원산지, 서비스, 투자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품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이익균형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공식협상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후 한·뉴 정상회담(2010.7), 한·뉴 통상장관 회담(2011.2, 12)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하여 한·뉴 FTA 진전 방안에 대하여 모색 중에 있다.

### (4) 한·중미 FTA 공동연구 완료

2010년 6월 개최된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회의 시 FTA 추진 논의에 따라 양측은 추진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동 공동연구에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외에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중미국가가 합류하였다. 2011년 5월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5개국과의 공동연구가 완료되었다.

공동연구 결과 한·중미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양측 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중미 간 FTA 체결이 권고되었다. 공동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중미 국가들 간 FTA 추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추진가능성 검토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의가 진행중이다.

### (5)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 완료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나집 총리간의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체결 가능성을 포함, 양자 교역·경제관계 심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1년 4월 타당성연구 운영지침(TOR)에 합의하고 2011년 5월 한·말 FTA 타당성연구를 개시하였다. 양측은 개별적으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상호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양측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2012년 4월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협상개시 추진여부에 대하여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 제2장

#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 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이명박정부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은 취약한 자원 수급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1조 달러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강국이나 석유 및 가스 등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철과 니켈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략 광물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우리와 비슷한 자원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해외자원 개발의 역사가 길고 자원의 자주개발률이 높은 일본과 비교하여서도 두드러진다.

선진국들은 거대한 자원 메이저 기업 및 오랜 자원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막대한 규모의 무상 또는 유상 원조 정책을 결합하여 해외 자원 개발에 진력하여 왔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가지고 국제 자원의 외교에 뛰어 들었다. 이명박정부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자원 확보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자원 외교 협력국들과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협력과 상생을 추구한다는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였으며,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의 핵심 철학이자 성공 요인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확고한 에너지 안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35%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 오늘날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새로운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자원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 상황이 불안정하여서 공급마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를 찾기 힘듭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자 제10위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였듯이, 자원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자주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4%대에 머물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지난 4년 사이 14%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일쇼크 같은 에너지 위기에 충격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에너지안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 오는 2020년에는 35%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3.6)



##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여건 및 국제에너지·자원 시장 현황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며,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총 에너지 소비의 96.5%에 달한다. 특히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87%에 달하였다. 2011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총 1,713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총 수입의 32%를 차지한다. 석유·가스는 물론 철, 니켈 등 일반 광물 수급도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바, 우리의 금속광물 소비량은 세계 6위로 철강,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 주력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금속자원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산업의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와 에너지 다소비 경제체제는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2008년 세계은행 보고서도 조사대상 16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가변동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은 외화수입 비용

### 석유소비 세계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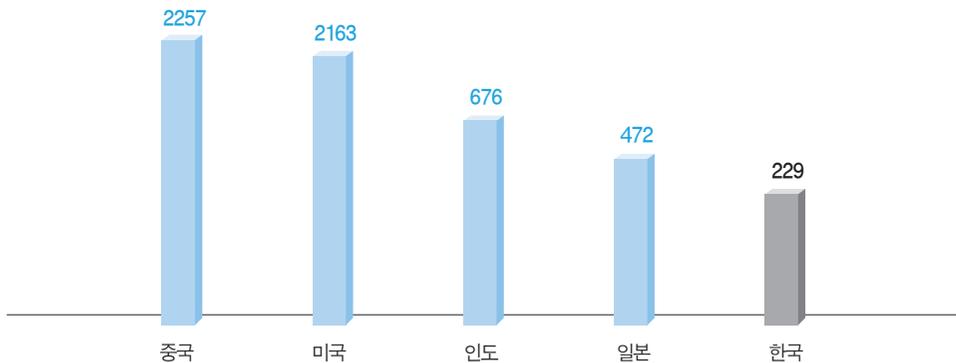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 자료: 지식경제부(2011)

###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단위: 백만 toe)



※ 자료: 지식경제부(2011)

급증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 경쟁력까지 저하시킬 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대국들의 고도성장으로 금속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자원을 주요 외교 수단화하는 '신자원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하여 지고 있다. 일부 자원 부국에서는 에너지개발에 대한 자국 국영기업의 권한 확대, 세금·로열티 인상, 우량 광구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 등의 정책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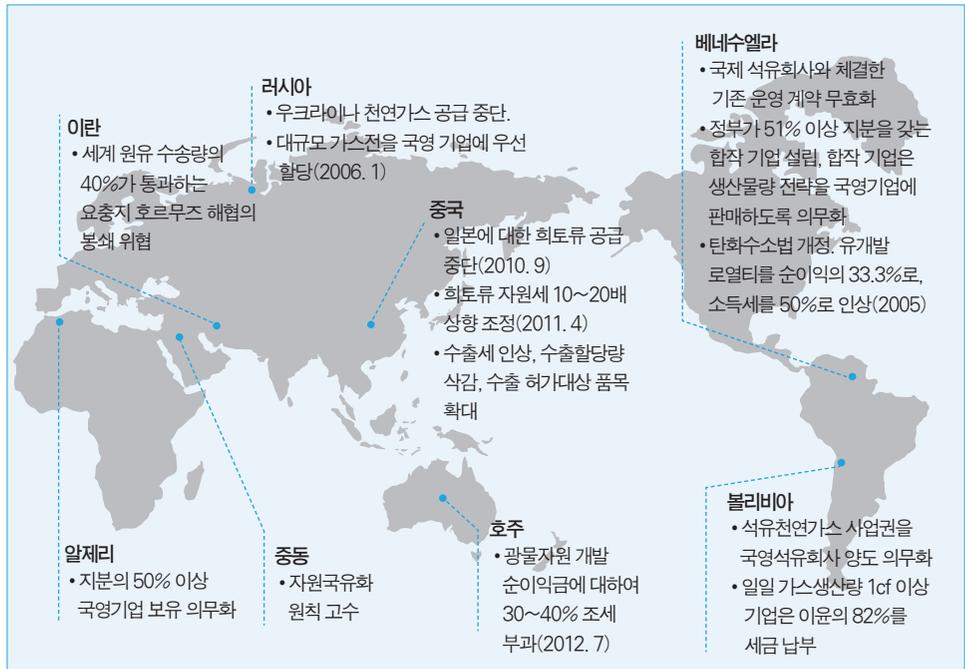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 유출

유가 배럴당 10달러 상승 ⇒ GDP 1% 규모의 무역수지 악화 발생  
(2010.12 모건스탠리)

수출 경쟁력 약화

자원 수입가격 10% 상승 ⇒ 전 산업 생산비가 평균 1.2%, 제조업은 1.7% 증가  
(2011.5 산업연구원)

자원 민족주의 현황



시하여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여건은 자원개발의 후발 참여국이라는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사업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악화되고 있다. 개발이 용이한 육상 지역 및 천해 등의 지역의 전통 석유자원이 소진되어 극지·오지로까지 사업이 확대되는 시대를 향하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도 치열하여져 탐사를 통하여 개발·생산하는 방식에서 M&A를 통하여 기술력과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 2.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확대하였다. 자원수급 문제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여 자주개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1970년대에 석유과동 직후 전방위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가동하였지만 국력의 한계로 주로 물량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략적인 자원확보 노력은 저조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결합하여 전략적인 에너지·자원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향상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자원 공급선의 다변화 및 기술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유망 진출 지역을 5대 권역(러시아·중앙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대양주, 중남미)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각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 개발과 산업 투자의 패키지형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사회 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하여 자원 개발 진출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과 연계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기술 연수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ODA 제공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중남미 지역에는 고위급 방문을 통한 협력 채널 강화, 중동 지역은 현지에서 국영회사 중심의 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틈새 전략을 추구하였다.

외국, 특히 개도국에서의 자원 개발사업은 상대국 정부와의 협력이 관건인 만큼 개별기업의 능력 외에도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공급계약은 주로 중장기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상 외교나 고위급 외교계기에 상대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자원 협력 대상 국가와 장기적인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상이 직접 자원 부국 현장을 방문하는 정상외교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러시아·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점 진출 대상으로 정하여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를 추진하였다. 또한 정상외교 이외에도 고위급 사절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외

교 역량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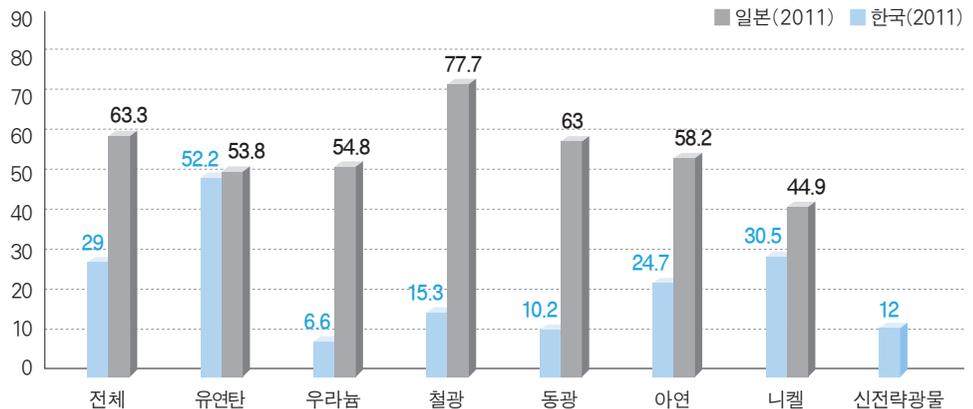
### 3. 이명박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 성과

에너지 협력 외교의 적극적 전개로 이명박정부 하에서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자주개발물량(일일 34만 배럴)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에 확보된 물량(일일 12만 5,000 배럴)의 3배 수준이다. 50년 이상의 해외 자원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음을 비교할 때 커다란 성과임을 알 수 있다.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규모는 2007년 39억 3,000만 달러에서 2011년 121억 달러로 3배가 증가하였으며,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2007년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증가하였다.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은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12년 목표치인 12%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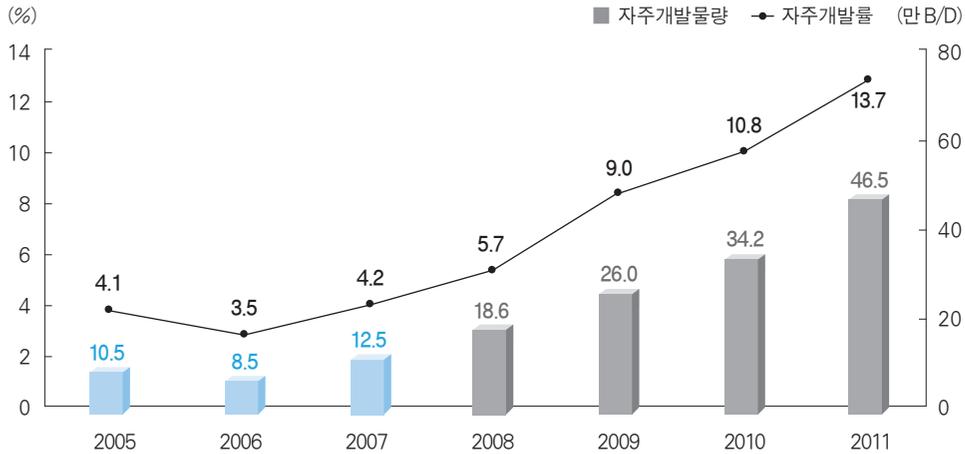
이는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자산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최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원조 선진국 클럽(OECD/DAC) 가입 및 금융 위기 극복, G20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글로벌 리더십 자산을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해외 거대 메이저 기업들도 탐사성공률이 20%대에 불과하

한국, 일본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현황(2011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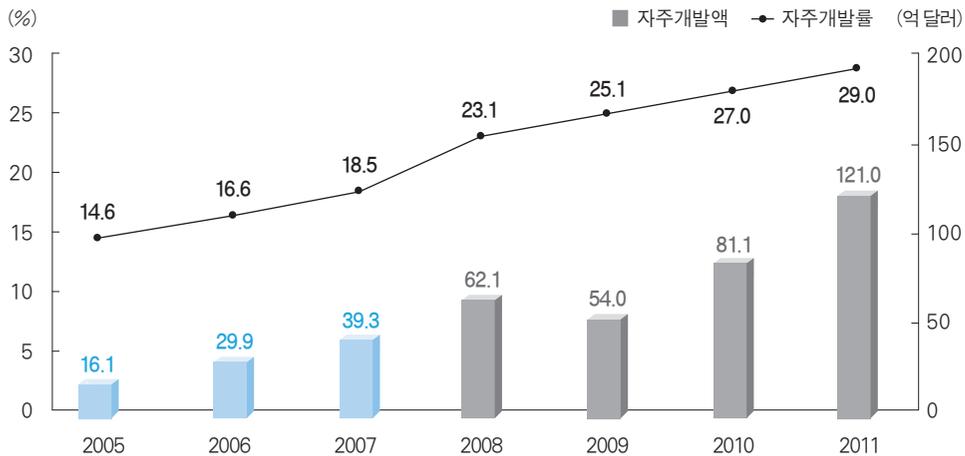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2011)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2011)

며, 경험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으로서는 더욱 투자성공 확률이 매우 불확실한 사업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때에 따라서는 투자 대상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무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은 앞으로도 긴 호흡을 가지고 자원 부국들과 오랫동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상급 에너지 협력 외교의 주요 성과

### 1. 중동·아프리카 지역

#### (1) UAE 원전 사업 진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방문 계기에 양국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1400MW급 상업용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한·UAE 원전사업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동 프로젝트는 원전건설 후에도 60년간의 보수 유지 계약을 통하여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어 총 40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종 소나타 승용차 100만 대 수출 효과에 비견되고는 한다.

무엇보다 이는 한국형 원전이 해외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기업이 향후 중동 지역을 포함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UAE 원전 수주 성공의 이면에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측면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히타치)은 전통적으로 UAE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아부다비의 정치외교 분야는 물론 에너지, 산업에도 뿌리 깊게 관여하고 있었고 2009년 1월에는 미-UAE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원전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UAE의 제1의 원유 수출국이며 오래 전부터 UAE 유전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최종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한국과 경합을 벌였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5월에 UAE를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수행하였고, 방산, 군사 협력 부문에서 과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들 경쟁국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수주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원전건설과 함께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패키지화하여 고위급 외교에 나섰다. 2009년 6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UAE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면담하고 한·UAE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수주경쟁의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는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UAE 간 정부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특히 입찰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과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한국과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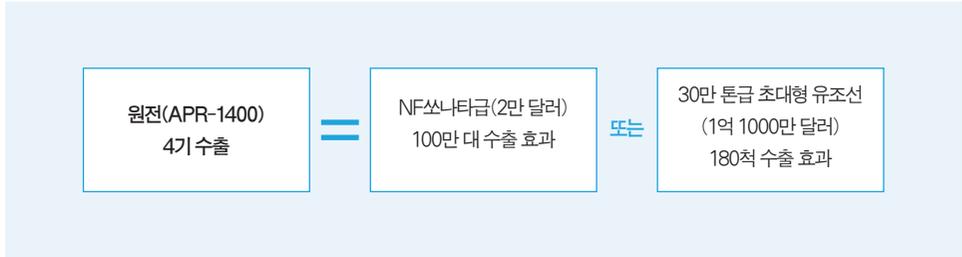
한국이 그 철옹성을 뚫고 40여년 만에 새롭게 중동 유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 어제,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어 '우리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UAE 유전 세 곳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3월 UAE 순방 중 양국이 주요 조건에 관한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이 묻혀 있는 핵심 유전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쿠웨이트와 같은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국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진출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참여가 열려 있는 경우에도 일부 열강들이 일찌감치 개발권을 선점한 이래  
 다른 국가가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UAE는 특히 고품질의 원유와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출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1930~194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진출한 이래, 1970년대 일본 진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국이 그 철옹성을 뚫고 40여년 만에 새롭게 중동 유전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석유개발 메이저리기에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상외교를 벌이고, 다각적 노력을 통하여 UAE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3.6)



양국 간의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패키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련된 부처에게 실행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7일 계약 당일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칼리파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를 기초로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0년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 회담 직후 한전과 UAE 원자력 공사(ENEC) 간의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일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발전 시설 수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지만 원천기술 부재, 해외수주경험 전무를 이유로 실패를 거듭하여 왔으나 UAE원전 수주로 세계원자력발전 시장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회를 술회하였다. 한국이 해외 첫 원전 수출의 신화를 창조하는 순간 국내외 언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 모든 언론은 수일에 걸쳐 한국의 UAE원전 사업수주를 톱뉴스로 내보냈다. 국가 대항전에서 우리의 외교적·기술적·



상업적 승리라고 격찬하였으며, 역사상 최대의 단일사업 수주라고 보도하였다. 해외의 반응도 뜨거웠다. 프랑스 정부는 UAE 측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르몽드는 충격에 빠진 프랑스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200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켜 한국으로 돌아갔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성이 보장된 시장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 (2) UAE 석유·가스 개발 사업

이명박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UAE 유전 개발에 한국기업이 진출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09년 아부다비 원전 수출을 계기로 상호신뢰가 돈독하여지면서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상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우선 2011년 3월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개발과 관련 MOU를 체결하고 이어 2012년 3월에는 3개 광구 개발에 관한 본계약(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3개 광구 사업’은 이미 1960~1980년대 시추를 통하여 원유부존이 확인된 유망 탐사광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공동운영권을 확보하여 중동지역 광구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GS에너지와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10억 배럴 유전사업’은 생산중인 육상 대형유전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부다비 정부는 석유 공사를 포함한 전 세계 약 10여 개 석유기업을 초청하여 유전 참여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3년 중 상업, 기술평가 완료 및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6위인 UAE는 중동의 핵심 산유국으로 다수의 대형 광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득권을 확보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 메이저 기업 이외에는 외국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 전무한 자원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로 그간 우

리나라에는 참여 기회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전 세계 메이저 기업들만 진출하여 있는 UAE에 자원개발 역사가 짧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에너지 협력 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그 동안 정부는 유전계약 성사를 위하여 대통령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두고 1년여 동안 아부다비 당국에 집중적인 외교 공세를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9년 원전 수주를 계기로 형성된 우호 관계와 한국의 인프라 기술에 대한 신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8년 일본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던 외국인에 대한 유전개발 투자를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세계 77위의 석유기업을 가진 한국에게 허락한 것은 한국의 집중적인 외교 노력이 아니었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초 아부다비 정부는 한국의 석유개발 기술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여조건 협상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전화 통화 및 회담을 통하여 최고위급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수차례의 특사 파견, 수 십 차례의 협상팀 파견을 통하여 실무협상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부-석유공사 합동팀의 수년간의 노력과 준비는 UAE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단순한 유전 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아부다비의 진정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이 주요하였다.

### (3) 남아공과 광물자원 협력 강화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1/4을 차지하는 경제대국으로 유연탄·크롬·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남아공의 중요성을 인식, 자원협력 증진을 위한 정상간 우호관계 강화에 가일층 노력하였다. 2011년 7월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남아공 방문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주마 대통령 간의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어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 원자력 등의 에너지 분야와 유연탄·크롬·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양국 자원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힘입어 이명박정부는 남아공과의 광물개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12월 연간 2만톤 규모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광산 개발사업의 탐사권 지분 10% 인수에 성공하였으며, 2011년 7월 남아공 Mintek(광물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희토류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2011년 7월 연간 12만 톤의 크롬을 생산하는 ‘포스크롬’(포스코와 남아공 Samancor사 합작 크롬회사)의 지분을 100%로 확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보유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존하여왔던 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공급원이다. 이명박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하여 이들 자원 부국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실질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1) 러시아 가스관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8년 9월 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빠르면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국영가스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정상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최소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며, 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러시아 국경에서 한반도 북측지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으로 오는 가스배관을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천연가스 750만 톤은 우리나라 총수요의 20%에 달하는 물량으로서 1,250만 가정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규모이며 축구장 크기의 2배에 달하는 LNG 선박 125척이 운송가능한 대규모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극동지역에서 LNG 액화플랜트 사업,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논의하였다. 동 가스 도입을 위하여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사 간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2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철도, 가스관, 송전선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2)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과도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5월과 2011년 8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방문하고, 중앙아시아 정상들과의 두터운 신뢰 구

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분야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는 데 기여하였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카리모프 대통령은 고향인 사마르칸트 방문을 포함하여 전 일정을 동행하였다.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2년 9월 방문 시 “그 동안 한국을 여섯 번 방문하였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이렇게 자주 방문한 나라는 없었다.”며 친밀감을 표시하고 특히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 방한하여 서울 명예 시민증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스전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관련 수르길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사우나 정상외교’를 통하여 우리 정상과의 절친한 개인적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재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플랜트 및 자원·원전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정상회담 직후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식에 참석하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잠빌 광구 개발, 아티라우 석유화학 단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합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3. 중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은 석유, 가스 등 각종 에너지자원의 보고이자, 6억 인구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최근 10여 년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남미 14개국 정상들과 33회에 걸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가이아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 이래 최초로 방한하였다.

2010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모랄레스(Evo Morales Ayma) 대통령 간의 양국정상회담 직후 양국 광물공사는 우유니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리튬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볼리비아와 리튬 합작사업 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다. 정부는 리튬의 최대 매장국(540만 톤)인 볼리비아 진출을 위하여 특사외교와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리튬 배터리 합작사업 MOU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리튬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앞으로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전기자동차와 첨단산업 분야에 쓰이는 리튬 이온전지의 핵심 소재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리튬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고갈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개발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녹색산업 등 미래 산업 창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진정성을 앞세운

에너지 협력 외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대통령은 “자원특사가 세 차례나 볼리비아를 찾아와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며 MOU 체결 배경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하여 볼리비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줬으며 이런 노력은 볼리비아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개발경쟁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우리가 최종적인 개발권을 따내려면 추가적인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찾아와 MOU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 4. 아시아 · 대양주 지역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에너지 · 환경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년 11월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2009년 3월에는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뉴질랜드에서는 대체에너지 공동연구, 바이오에너지 조립 산업 등 한 · 뉴질랜드 간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녹색성장 등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등 한 · 호주 간 협력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 바이오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한 · 인도네시아 간 공동협력에 합의하였다.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 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역내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처를 비롯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아시아 대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 3대 정책문서(개발협력, 저탄소녹색성장, 문화인적교류 분야)를 발표하였다. 또한 본회의 계기 베트남과 원자력 분야 협력 토대를 강화하고, 필리핀과 청정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라오스와는 수력발전소 건설,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산림분야 등 녹색성장 관련 공동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는 제3국 공동개발 등 에너지협력 강화, 원자력, 수자원 분야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미얀마 떼인세인(Thein Sein)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자원개발과 발전소 건설 분야에 한국기업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떼인세인 총리는 한국의 개발경험이 더욱 공유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009년 10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참가국 정상들과 바이오 에너지 협력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싱가포르와 에너지, 저탄소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양국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APEC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가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임을 강조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동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파푸아뉴기니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양자 회담에서는 자원·에너지 분야의 구체적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이대통령은 2012년 5월 미얀마를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10월 미얀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5. 북미 및 유럽 지역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 산업·에너지 협력 확대 및 투자 유치를 논의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미래자동차, 섬유·전자 등 주요 업종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부처·해당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충실히 실천하여온 국가로서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비전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제시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 초청으로 국민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고용 창출 촉진 협력을 위하여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관

한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그린란드,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새로운 에너지 협력 외교 루트를 모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클라이스트 총리는 “그린란드 역사 상 최고 위급 귀빈이 방문하였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대통령은 동 방문을 통하여서 그린란드와 녹색성장·자원 개발·북극항로 개척 등 실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였다. 특히 양측은 자원개발, 지질연구, 광물자원, 극지과학기술 등 총 4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석유 탐사·개발 및 공동비축 등 자원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해양플랜트, 녹색, 북극자원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북극의 친환경적 개발·보전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해양자원 및 북극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 제8편

# 선진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 및 외교역량 강화

- 제1장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제2장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
- 제3장 국립외교원 출범

## 제1장

#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21세기는 문화가 국격을 좌우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문화의 힘이 국가브랜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소프트파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한류의 확산과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민통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제1절 한류 확산 및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 강화

### 1. 지속적인 한류 확산 지원

1990년대 후반 점화된 한류는 드라마, 영화에 이어 최근 K-POP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그 범위와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방문객 1,000만 시대를 앞당겼고 한류의 다양한 장르를 접한 외국인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브랜드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지성 기 소르망은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여 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뿐”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제 한류는 한국 경제의 소프트 파워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



제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도 단지 소득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수준을 가진 문화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먹을거리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또하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음식문화가 세계에 자랑할만한 나라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경제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우수한 국가임을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야 경제수준에 걸맞게 나라의 품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2009.10.19)



며,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문화컨텐츠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드러나고 있고,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2010년 7조 원에서 2020년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한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전쟁, 분단 등 부정적 이미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파워로서의 한류 문화가 국가브랜드 가치의 위상을 점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한류의 범위는 드라마, 영화, K-POP 등에서 머물렀으나, 이제는 한식, 한국제품, 프랜차이즈, 패션,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인기는 한류의 가장 최근 성공사례로, 이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남스타일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명박 정부에게 반가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 이후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경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Financial Times(2012.10.9) 기사 '강남스타일 성공으로 높아지는 한국 브랜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류의 발전과 확산을 측면 지원하는 것은 공공외교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알리려 하는 '코리아' 일변도식 접근이 오히려 상대국의 견제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혐한류'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족, 국가를 넘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어우러

지고 소통할 수 있는 한류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는 ‘한류 확산’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정부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한류 콘텐츠 개발 및 한식 홍보 행사, 문화전시장화 사업, 한국영화·드라마 진출 지원 등 각 국가별 실정에 맞는 문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류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통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여 나가기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에 한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글로벌 문화외교에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 2. 한식세계화

한류의 바람은 우리 음식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뉴욕의 경우 한식 선호도가 2009년 9%에서 2010년 3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음식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에서 우리의 전문 한식당들이 잇달아 최고의 식당으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봄을 이끌어왔다. 2011년 10월 뉴욕의 퓨전 한식당 ‘단지’가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비’, ‘모란봉’ 등이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음식 한류는 이명박정부 들어 한국의 독창적이면서도 우수한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식세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은 바 크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 하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재단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식문화 홍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세 가지 기본 전략 하에 시행되었다.

첫째, 재외공관을 ‘한식세계화 및 한식고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정부, 글로벌 기업, 동포역량 등 해외역량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은 주요 외교행사 계기에 현지 주요정부인사, 언론인, 여론주도층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식문화를 홍보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한식소개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식세계화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해외 한식당 진출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식당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수출 촉진 활동, 수출상담회 지원 등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내에서의 한식 세계화 활동이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에 다양한 한식문화를 소개하고 웰빙식품으로서 한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한국에 모인 세계 정상급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해외 주요 음식·요리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거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여론주도층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식을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유명 음식·요리 축제 계기에 한식과 우리 식품들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를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스페인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요리 축제 ‘2012 마드리드 퓨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발효음식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에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9월에는 콜롬비아 ‘뽀빠얀 음식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한국문화와 음식의 조화로움을 선보였다. 또한 미국 PBS 김치연대기 제작방송(2011), CNN 광고 등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내실 있는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추장, 된장, 인삼, 김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록(2009), 김치연구소 신설 등을 통하여 한국음식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을 계속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즐겨 찾는 한식이 되도록 하였다.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은 한식에 대한 폭넓은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효과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례로 체코 프라하 메리어트 호텔에는 한식이 메인메뉴에 포함되었고 미국, 중국, 일본 요리학교에 한식강좌가 개설되는 성과도 이루었다.

### 3.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국가 간 문화교류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문화적 소통과 나눔이 국가 간 언어적 장벽, 인종적 차이, 지리적 원격성 등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게 하여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한류확산 추세에 맞추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공유하여 나가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역에서도 수출과 수입이 적정 무역수지를 유지하여야 양국 간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듯이 외교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우리 문화의 우

수성이 지구촌 곳곳에 알려지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즈음하여 상대방의 문화도 포용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여 나가기 위한 '문화적 소통과 나눔'의 자세를 함께 키워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다문화 사회시가 도래함에 따라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은 국내적 사회통합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중남미, 아프리카, ASEAN, 중앙아시아, 아랍, 흑해 등 그동안 우리와의 문

#### 쌍방향사업 주요 추진실적(2008~2012)

2008	<p>'아랍문화축전(6.5~8/국립극장)' - 참가국(5개국):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모로코 - 행사내용: 공연(알제리 민속무용단, 리비아 국립민속예술단,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전통검무단, 모로코 안달루시아 오케스트라 등), 아랍음식체험행사 등</p> <p>'실�크로드문화축전(11.10~30/아르코예술극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등)' - 참가국(6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 행사내용: 공연(투르크메니스탄 민속무용단, 키르기즈스탄 국립아카데미 무용단, 우즈베키스탄 민속실내악 오케스트라, 카자흐스탄 민속앙상블 등) 사진전, 복식교류전 등</p>
2009	<p>'한·중앙아 문화교류축제(5.15~20/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 참가국(3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행사내용: 공연(우즈베키스탄 오페라 무용단, 투르크메니스탄 초나르 무용단, 카자흐스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영상전, 사진전</p> <p>'중남미 문화축전(7.17~8.8 / 국립극장, 부산문화회관, 전주전통문화센터)' - 참가국(16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 행사내용: 공연(콜롬비아 바랑끼아카니발 무용단, 우루과이 빠샤렐라 듀오, 칠레 올웨이즈 서프라이징 무용단, 페루 라파엘 몰리나), 미술전, 영화제</p> <p>'2009 아세안문화축제(9.23~27/용산역 아이파크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등)' - 참가국(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 - 행사내용: 무용(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태국), 음악(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수공예전시, 차 시음회 등</p>
2010	<p>'2010 인도영화제(1.20~23/롯데세네마 건대입구점)' - 행사내용: 옴 샤틀 오ム(Om Shanti Om) 등 영화 8편 총 11회 상영</p> <p>'흑해문화축제(8.5-8/ 국립극장)' - 참가국(6개국): 불가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루마니아, 한국 - 행사내용: 공연(불가리아 필립쿠테프 국립민속공연단, 우크라이나 비르스키 국립무용단, 그루지아 라사리 민속무용단, 터키 굴친야히카차르 앙상블 등), 전시체험 및 음식체험, 문화강좌</p> <p>'한·몽골 예술교류축제(12.17~30/제주현대미술관)' - 행사내용: 전시(몽골작가 9인, 한국작가 9인 합동전시), 공연(몽골 알탄우라그 전통음악 앙상블, 한국 감미리 '할' 무용단), 퍼포먼스(몽골 ENKHBOLD Togmidshirev, 한국 신용구</p>

2011	<p>'2011 아프리카문화축제(6.30~7.3/국립중앙박물관)</p> <p>-참가국(12개국): 카메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p> <p>-행사내용: 공연(카메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토고, 코트디부아르), 영화제 등</p>
	<p>'2011 아세안 문화관광축제(10.1-3/디큐브파크)</p> <p>-참가국(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p> <p>-행사내용: 무용(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음악(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관광홍보부스, 시식행사, 체험행사</p>
	<p>'2011 브라보 아세안 in Korea(11.19/악스 코리아)</p> <p>-참가국(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p> <p>-행사내용: 한국 거주 아세안 10개국 국민의 자국 전통 음악·무용 및 한국가요 콘테스트</p>
	<p>한·쿠바 공동 창작공연(12.26/ 올림푸스홀)</p> <p>-행사내용: 쿠바성악과 클래식 협연, 4인조재즈그룹(Group Aire de Concierto) 단독공연 및 우리 국악(판소리, 경기민요), 클래식과의 협연 등</p>
2012	<p>'중남미문화축제-라틴의 열정, 한국을 만나다(5.15~6.9/국립중앙박물관)</p> <p>-참가국(7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자메이카, 페루</p> <p>-행사내용: 공연, 중남미사진작가전, 중남미관광사진전, 음식체험전 등</p>

화교류가 다소 부진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여왔다.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타국의 전통음악과 무용, 공연, 영화, 미술 등을 접하고, 세계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 4. 외교관계 수립기념 문화행사

우리나라는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과 매 10주년 단위로 외교관계 수립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수교기념 행사를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행사로 기획하여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11개국, 2009년 13개국, 2010년 24개국, 2011년 20개국과 외교관계수립을 기념하고, 2012년에는 무려 50개 국가와 외교관계수립을 기념하였다. 5년간 전 세계 과반수가 넘는 118개 국가와 외교관계수립 행사를 가지면서 해당 국가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증진하였다. 특히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복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전통을 중시면서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전통 국악이나 무용공연단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음악

외교관계수립기념사업 주요 실적

계기	사업명	공연
한국-중국 수교 20주년 (2012)	개막식 및 축하공연	한중 춘향전 합동공연
	당나라 명품전, 신라왕릉 보물전	중국 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나라 보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신라 보물 전시
	제6회 한중서예명가전	한중 서예 작품 전시
	오페라 라보엠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공연
	창작오페라 봄봄	그랜드 오페라단 창작오페라 봄봄 공연
	페라 시집가는 날	뉴서울오페라단 시집가는 날 공연
	백남준 특별전	백남준 작품 전시
한국-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2012)	베이징국제도서전 연계 축하공연	주빈국 사전 축하공연 '춤추는 관현악' 공연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공연 수교 50주년 기념 연주회	소프라노 조수미와 아르헨티나 테너 및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김선욱 연주회
한국-사우디 수교 50주년 (2012)	자나드리야 문화축제 주빈국 (한국관 운영)	- 전시장: 한·사우디 교류사, 3D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 소개, 미래첨단기업 홍보 등 - 실의무대: 사물놀이, 로봇댄스 공연 등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2011)	우정의 해 개막/ 시드니한국문화원 개원기념 문화행사	판소리, 전통무, 크로스오버양상블 등 한국문화 종합공연
	우정의 해 폐막공연	크로스오버 양상블
한국-벨기에 수교 50주년 (2011)	수교 110주년 기념 브뤼셀 악기박물관 특별전 기념 공연	청성곡, 가전희상, 남도민요, 판소리 등 6작품 공연
	2011 세계 국립극장페스티벌 벨기에 공연단 초청공연	블라스극장 '파지나 비앙카' 공연
한국-러시아 수교 20주년 (2010)	이상봉 패션쇼	한·러수교 20주년행사 개막식 전야패션쇼
	서울시향(정명훈) 기념 공연	한·러수교기념 유럽투어 공연 - 6.8: 모스크바, 6.11: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연
	모션그래픽스 전시전	한국의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 전시회
	한·러 공동 오페라 공연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이올란타' 공연
	한·러 국제 미술전	한·러수교 20주년기념 국제 미술교류전
	한·러 연극 공동제작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한·러 공동 제작 연극 '벚꽃동산'
	한·러 사진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 서울, 모스크바 전시
	국립발레단-볼쇼이발레 합동공연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 볼쇼이발레단 합동공연
한·러 문학교류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학교류	
한·러 연극 공동제작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한·러 공동 연극 '크로이체르 소나타'	
한·러 문화포럼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한·러 문화포럼	

계기	사업명	공연
한국-브라질 수교 50주년 (2009)	국립무용단 순회 공연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 공연
	브라질 공연단 초청 공연	브라질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Fashion Art Exhibition	한국 패션디자인 문화 전시 및 패션쇼 개최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 (2009)	수교기념 행사 및 전통예술 공연	전통 무용 '춤 춘향' 공연
	전통음악 공연(사물놀이)	한국 주간 행사 일환 신사물놀이 공연
	필리핀 예술단 방한 공연	필리핀 전통 공연

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 국악팀이나, 세계 최고수준의 대한민국 비보이들을 해외에 선보였다. 특히 비보이 댄스공연팀이 사물놀이팀과 협연을 통하여 전통가락에 맞춰 비보잉을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많은 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신한류 콘텐츠(K-POP이 접목된 태권도 퍼포먼스, 비보이, 너버벌퍼포먼스 등)를 소재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교기념 대상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과 함께 개최되는 한식리셉션과 한국영화제, 미술전시회, 한국상품전 등을 통하여서도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한국의 이미지를 아낌없이 과시하였다.

아울러 외교관계 수립기념행사를 통하여 상대국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 교류로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가 단순히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전파나 침투가 아닌, 양국 국민 간 소통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갔다. 정부가 직접 기획, 운영한 외교관계 수립기념 문화행사는 수교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동시에 '문화 강국 한국'의 국가브랜드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절 UNESCO 외교 강화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 1. 대UNESCO 외교 강화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새롭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소개와 교류는 물론, 세계의 유·무형유산의 보호, 문화적 정체성,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와 규범 형성 움직임도 갈수록 활발하여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란 단지 소득 수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 수준을 가진 ‘문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정권 출범 초기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의 ‘문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문화바우처 제도 시행 등 문화 나눔, 문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밖으로는 ‘문화 파워’를 한 단계 높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갈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정부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질과 저력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성숙한 세계 국가,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를 통한 문화 외교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정부는 우선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폐쇄되었던 주UNESCO 대표부를 2010년 2월 재개설하면서 대UNESCO 외교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제34차 UNESCO 총회와 2011년 제36차 총회에서 2차례 연속 5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당선되면서 UNESCO 주요 사업과 행정, 재정 관련 논의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국제수문학정부간위원회(IHP), 국제해양학위원회(IOC), 불법소유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등 총 5개 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이명박정부는 교육, 과학, 문화 등 UNESCO의 권능 분야에 있어 한·UNESCO 간 협력을 확대하였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UNESCO 문화예술 분야 최대행사인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110개국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195개 UNESCO 회원국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아젠다’는 △ 예술 교육의 접근성 확대, △ 양질의 예술교육 시행, △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예술 교육을 목표로 12대 세부전략을 제시하면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각국의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11년 11월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서울 아젠다’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International Week of Arts Education)’으로 선포하는 의제가 우리나라의 주도로 유네스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 있어 이명박정부는 유네스코 주도로 2015년까지 빈곤국가의 아동을 위한 보편적 초등교육, 영유아 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네스코 신탁기금 공여 확대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한국을 교육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에 성공한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보고 국제 교육 협력 및 개발 경험 전수 등에 있어 한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는 정부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계기에 UNESCO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의 UNESCO관 설치 및 우리 기상청, 세계기상기구(WMO), 국제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 주관하는 ‘제4차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JCOMM-4)’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 세계화로 인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전 지구적 윤리(global ethics)를 모색한다는 UNESCO의 비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2011년과 2012년 ‘세계인문학포럼’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UNESCO의 195개 회원국 중 11위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명실 공히 핵심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져가고 있으며, 문화 분야 이슈 및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면서 다자 차원의 기여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 2. UNESCO 유산 등재 확대 및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촉진

UNESCO는 세계유산과 기록유산의 등재에 대한 국제적 인증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등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의 풍요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 (1) 세계유산

이명박정부는 한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 왕릉이 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 조영되었으며, 엄격한 질서에 따라 내부공간을 구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신성한 공간을 창출하였고, 봉분과 조각, 건축물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탁월한 사례로 동아시아 묘제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선정사유였다.

2010년 7월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한데 묶은 ‘한국의 역사마을’이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4~15세기 조성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마을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유교적 사상을 잘 반영한 경관 속에 전통 건축양식과 유교적 삶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1995년 석굴암·불국사를 시작으로 UNESCO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유산 목록은 총10개로 늘어났다.

세계유산 등재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우리의 문화유산이 △유산의 진정성, △가치의 탁월함, △ 국가의 관리 상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명박정부는 문화재청 산하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등재 가능한 국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이와 함께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자문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을 위하여 2000~2011년간 총 160만 달러의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 신탁기금’을 유네스코에 공여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5개년 동안 총 200만 달러 규모로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 신탁기금’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6~2009년간 세계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수입하면서 ‘세계유산협약’ 운영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 및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 (2) 무형문화유산

우리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보여주는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도 20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처용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등 5건, 2010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3건, 2011년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등 3건, 2012년 아리랑 1건이 잇달아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 등재제도가 2003년 ‘인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채택

되면서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2012년 임기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동 협약 초기 기반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9~2011년에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심사 보조기구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에는 의장직을 역임하였는데, 무형유산 분야에서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기여와 리더십을 인정받아 2011년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당초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등재보류’ 권고를 받았던 ‘한산모시짜기’가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교섭을 통하여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2년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아리랑’의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2012년 12월 제7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아리랑의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한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에서 제시한 기술적인 조건(△ 세계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여, △ 국내 보호 조치 확립, △ 지역공동체의 참여, △ 국내 목록 등재 등)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국내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을 제정하였으며,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내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관련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1년 7월 UNESCO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하였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0년 5월 UNESCO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아태지역 48개 UNESCO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무형유산 분야의 정보 수집 및 협력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동 센터 설립은 무형유산 관련,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선진성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3) 세계기록유산

이명박정부 임기 중 2009년 동의보감, 2011년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이 세계기록유산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또한 저개발국 기록유산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세계기록유산목록에 자국 기록유산을 아직 한건도 등재하지 못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등재 신청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세계기록유산등재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UNESCO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동 워크숍을 2009년 최초로 실시하여 2011년 아태지역, 2012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 아랍, 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UNESCO 지정 우리나라 유산 현황(2012년 12월 기준)

구분	현황(등재년도)
세계유산 (10건)	(자연)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2007) (문화)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무형유산 (15건)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기록유산 (9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민주화운동기록물(2011)
생물권보전지역 (4곳)	설악산(1982), 한라산(2002), 신안다도해(2009), 광릉숲(2010)

### 3. 국외 문화재 환수 노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92년 이명박정부가 프랑스 측에 반환을 요청한 이래 20여 년간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2010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간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296책이 145년 만인 2011년 다시 우리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정부 간 협상과 민간 간 협상을 넘나들며 해결책을 모색하였지만 상호 입장이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그렸다. 그러다 2010년 3월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규장각 자문포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영구대여 방식의 반환을 프랑스 측에 전달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는 주 프랑스대사관을 공식적인 협상 창구로 활용하며, 프랑스 내 외규장각 반환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두고 프랑스 ‘외규장각도서 반환지지 협회’는 르몽드(Le Monde)지 기고를 통하여 “양국 외교의 큰 성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직후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의 반대 성명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듯 공고한 양국 정상 간 협력 의지가 귀중한 우리 문화재 환수라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로서 이명박정부는 2010년 8월 과거사 반성을 담은 ‘칸 총리 담화’를 발표를 이끌어내는 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한·일 도서반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1년 10월 노다 총리 방한 계기에 5책(대례의궤 1책, 왕세자가례도감 2책, 정묘어제 2책)을 반환하였으며, 12월에는 잔여도서 1,200책을 반환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에 약탈당한 조선왕조도서 총 1,205책(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이토 히로부미 반출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을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반출 도서는 1906~1909년간, 의궤류는 1922년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100여 만에 반환된 것으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문화재 환수 사례와 역할은 국제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명박정부는 국제 기여 강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2011년과 2012년 문화재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 환수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새로운 국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재 환수 협상에 적용될 국가 규범과 행동 원칙을 선언한 ‘서울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제18차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 간 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제3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외교 강화

이명박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특히 스포츠는 영화, 드라마, K-POP 등 한류와 더불어 ‘공공외교’ 즉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큰 틀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브랜드 가치 효과가 큰 국제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3 동계스페셜올림픽,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 유치가 성공하였으며,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스포츠 외교 역량을 과시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통하여 받은 것을 전 세계와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유치 프리젠테이션 연설문(2011.7.6)



특히 2011년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으로 노력하여 성공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도전 실패 끝에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은 전 세계에 한국의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2011년 7월 4~9일까지 6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 2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김진선 특임대사는 IOC에 대한 약속이행을, 김연아 선수는 '성과를 부른 희망, 인류 유산'에 대하여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총 95표 중 평창 63표, 뮌헨 25표, 안시 7표 획득).

무엇보다도 평창의 승리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시설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강원도, KOC, 재계 등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유치활동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더반 현지 활동은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막판 유치 지원활동에 혼신을 다하면서 가끔씩 식사도 빵으로 대신하였는데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유치위 관계자들조차 이명박 대통령의 열정적 유치 지원활동에 대하여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등 IOC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제 스포츠계에 깊은 신뢰를 주는 한편 평창 개최의 당위성과 명분이 IOC위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92%에 달하는 국민들의 유치 열망과 한결같은 지지가 경쟁도시를 압도하였으며, 동계스포츠 저변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2010 밴쿠버에서 빙상종목 등의 쾌거가 2018평창의 슬로건인 'New Horizons'와 맞물려 아

시아대륙에서의 동계스포츠 확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도전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효하였으며, 또한 유치성공을 위한 인내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 것을 성공요소로 꼽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88올림픽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돌파하는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으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2002년 월드컵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역량과 발전상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요인은 끈질긴 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한국정부의 강력한 뒷받침”(Washington Post)

“평창의 성공은 잘 준비된 경기시설 및 인프라, 풍력발전으로 올림픽 에너지 수요를 전부 충당한다는 친환경적인 계획 때문”(Wall Street Journal)

## 제2장

#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

재외국민과 동포들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역량을 제고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정부는 포괄적 실리외교를 지향하면서 중점과제중 하나로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의 활동지원을 설정하였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동시에 이들이 해외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익을 제고하고 국격을 신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망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절 재외국민 보호 강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여행지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사건·사고의 형태가 대형화·재난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재외



외교관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재외국민보호 의무'입니다.  
외교·영사 업무 영역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시



국민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게 되었다.

2001년 608만 명이었던 우리 국민 출국지수는 2011년 1,269만 명에 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1,400만 명, 2019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 역시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하여지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도 2001년 554명에서 2011년 4,458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의 테러리즘, 내전·종교분쟁, 경제위기 등 인적 요인과 지진, 쓰나미, 전염병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사태도 빈발하게 되었다. 2011년 2월 발생한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사태와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해일 사태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명박정부는 재외국민보호 업무 강화를 핵심적인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확대하는 한편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갔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이명박정부는 해외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1)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

정부는 예방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해외여행 정보 제도 및 여행금지 제도를 강화

하여 나가는 한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해외안전여행 SNS 계정, TV 및 라디오 방송, 여권발급지자체·여행사·항공사 등에 홍보물 배포, 해외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출국단계 별 홍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해외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해외 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의식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정보 전달을 추진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해외안전여행 인지도를 조사하여 홍보효과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행정보제도와 각종 해외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인지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홍보 대상의 다양화를 본격 추진하였다. 특히 배낭여행 수요는 높으나 해외에서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층에게 안전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였다. 2010년 30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포터즈 제2기(2011.4), 제3기(2011.9), 제4기(2012.5), 제5기(2012.10)를 각 60명씩 선발하였다. 서포터즈들은 영사콜센터 견학,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외안전여행 체감교육을 받고, 스스로 해외안전여행정보를 확산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는 대학생 서포터즈 자신들이 각종 재외국민보호 제도 및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습득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다시 이들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정보가 확산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포터즈들은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운영, △배낭여행객을 겨냥한 안전여행 UCC 제작, △안전여행 CM송 제작, △여행박람회에서 안전여행 퀴즈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층에게 다가가는 해외여행 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서포터즈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수시로 정기모임을 가지며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위한 전략을 토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포터즈들에게 재외국민 사건사고 사례를 주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표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도록 하여 정부-국민 간 쌍방향 소통 증대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활동우수 서포터즈는 지역별 사건·사고 영사회회에 참석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정책 개선·수립 과정에 참여시켜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이해증진 및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 사건·사고 대응 시스템 강화

정부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신속대응팀의

적극적인 파견 및 모의훈련 확대, △영사협력원 역할 강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등 각종 제도를 강화하였다.

### ① 신속대응팀 활동 확대·강화

이명박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운영하여 오던 신속대응팀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2008년부터는 선박 피랍, 테러 등 사건·사고와 대형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올림픽·월드컵 등 우리 국민이 많이 모이는 국제행사에도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8년 9월 중국 해상 제우스호 침몰사건, 2009년 3월 예멘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2011년 1월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2011년 2월 뉴질랜드 지진 및 리비아 내전 사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사태 등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계기에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 신속대응팀 파견 현황(2008~2012)

시기	지역	사유	주요 활동내용	파견인원(명)
2008.8	중국	베이징 올림픽	• 사고 예방 및 안전지원활동	12
2008.9	중국	Zeus호 침몰	• 구조·수색작업 및 유가족 지원	8
2009.3	예멘	예멘 아국 관광객 테러	• 사상자 및 유가족 지원	3
2009.5	멕시코	멕시코 신종플루 발생·확산	• 현지 교민 감염예방 및 의학적 안전조치	3
2010.6	남아공	남아공 월드컵	•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활동	5
2011.1	오만	삼호주얼리호 피랍	•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지원 • 부상자 후송·치료, 선원귀국 및 생포된 해적 국내압송 등 지원	10
2011.2	뉴질랜드	뉴질랜드 지진	• 실종자 수색현황 확인 및 유가족 지원	1
2011.2	튀니지 이집트 그리스	리비아 사태	• 리비아 탈출 우리 국민 출국지원, 안전지대 이동 등	5
2011.3	일본	일본 지진·해일 사태	• 우리 국민 안전지역 이동·소재 파악·사망자 확인 및 구호품 지원 등	10
2012.7	영국	런던올림픽	• 사고예방 및 안전지원활동	11
2012.12	케냐	제미니호 피랍선원 석방	• 선원들의 석방과정 지원 및 안전한 귀국 지원	3

## ② 영사협력원 제도

이명박정부는 공관이 없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을 하도록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최초로 100명의 영사협력원이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사협력원 제도의 유용성은 2010년 1월 우리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당시 현지 영사협력원이 우리 국민 피해현황을 최초로 파악·보고함으로써 우리 교민 안전을 점검하는데 크게 기여한 데서 잘 드러난다. 2012년 10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총 109명의 영사협력원이 교민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 ③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확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3,000미불 한도)를 송금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이명박정부 들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동 제도 운영 실적은 2008년 329건 총 3억 6,000만 원, 2009년 362건 총 4억 2,000만 원, 2010년 405건 총 5억 8,000만 원, 2011년에는 526건 총 7억 3,000만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해외에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꽤 유용한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 2.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 (1) 미국 허리케인 구스타브 피해동포 지원(2008.9)

2008년 9월 허리케인 구스타브(Gustav)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해안지역에 상륙하여 동 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 우리 동포들에게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뉴올리언스 거주 한인 동포 약 1,500여 명 중 대부분은 애틀랜타, 잭슨, 알라바마주 등지로 대피하였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현지직원들을 즉시 파견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초기긴급 지원에 나섰으며 연방재해관리청본부에 우리 국민 피해상황파악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신속대응팀을 파견, 영사콜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상자 및 시신안치소를 방문하였으며 비상연락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인근지역에 대피 중인 교민들에 대하여서는 한인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생수·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하거나 임시거처를 주선하고 미국 내 여타지역 공관 및 한인회, 한인교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현지지원팀을 지원하였다.

## (2) 예멘 테러사건 지원(2009.3, 2009.6)

2009년 3월 15일 예멘남부 ‘시밤’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우리 관광객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3월 18일 신속대응팀을 예멘에 급파하였으며, 이들이 탑승한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신속대응팀은 무사하였다. 뒤이어 6월 12일 예멘 북부 ‘사나’에서 외국인 일행 8명과 함께 실종된 우리 국민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역시 긴급대응팀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3월과 6월 예멘 테러사건 발생 즉시 국외테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3.16, 6.14)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예멘 현지에서 파견된 신속대응팀(3.6월)은 생존자 귀국과 희생자 시신의 국내운구를 지원하고 예멘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우리국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로 예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비필수 체류교민의 철수를 권고하였다. 2009년 예멘테러는 우리 국민도 더 이상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발족, 해외 위험지역진출 NGO·선교단체·여행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있다.

## (3)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2010.1)

2010년 1월 13일 아이티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20여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진발생 직후 외교통상부 내 사건대책본부와 주도미니카대사관 현지대책반을 설치하였다. 아이티에는 대한민국 공관이 상주하지 않아 우선 현지 영사협력원을 통하여 우리 국민 피해현황을 1차로 점검한 후 아이티 인근국민 주도미니카대사관 직원이 육로로 아이티를 직접 방문하여 아이티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70여 명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이티 현지 치안사정 악화와 여진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1월 14일부로 아이티의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고 비필수 인원의 철수를 권고하였다. 1월 25일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 우리 국민에게 1만 달러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아이티 강진 대응은 공관 미상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사협력원의 효용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삼호주얼리호 구출선원 지원(2011.1)

2011년 1월 15일 우리 국민 8명이 승선한 케미칼 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피랍선박에는 우리 국민 8명 외에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삼호주얼리호는 1월 21일 청해부대의 구출작전으로 피랍선원 전원이 구출되었으며, 정부는 선사 측 및 선원국적국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대응팀을 오만 현지에 파견하여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해군 작전 중 부상자가 발생하여 가까운 오만 살랄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현지 병원을 접촉하여 치료 및 협조를 요청하고, 가족의 현지 방문 및 한국의료진 파견과 수술을 지원하였다. 이후 환자의 한국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국제 SOS 앰블런스 항공기 지원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정부는 피랍선원들의 안전한 귀국 및 부상 장병의 현지치료 및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고, 취재과정에서 부상당한 우리 기자의 현지치료 및 귀국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생포된 해적들의 국내 압송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생포된 해적의 국내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현지 관계당국과 협의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다.

#### (5) 리비아 민주화사태 시 교민 보호 및 철수 지원(2011.2)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카다피 정권이 유혈진압을 시도함에 따라 연일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우리기업 건설현장에 현지 주민이 난입,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시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리비아 일부지역(벵가지, 알베이다, 테르나, 토부룩 등 동부지역)을 여행경보단계 3단계로 지정하고 여타 지역을 2단계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사태 악화에 따라 리비아 전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전세기 2대와 전함 1척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세기 및 선박을 알선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이집트, 그리스 등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신속대응팀 2개조를 각각 이집트 및 튀니지로 급파하여 국경지역에서 육로로 철수하는 우리 국민과 이집트행 전세기로 철수하는 우리 국민의 여권, 여행지증명, 비자 등 입국 관련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 및 식사 제공 등이동을 지원하였다. 급하게 철수하느라 현금이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하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통하여 급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약 2주라는 단기간 내에 전세기·선박·육로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지 체류 우리국민 약 1,400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리비아 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1만 5,000명에 달하는 우리 기업 소속 제3국인 노동자들의 철수에 대하여서도 제3국 관계당국 및 국제이주기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인 1명과 일본인 6명의 철수를 지원하여주는 등 국제적으로 재외국민보호역량을 인정받았다. 2011년 4월 방한한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인 철수를 도와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 (6) 동일본 대지진·해일 사태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원(2011.3)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나 정전·화재·해일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서울에 '일본 지진·해일 비상대책본부'를, 일본주재 전 공관에는 현지 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여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향을 협의하였다. 일본 정부 및 현지 교민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 SNS를 통하여 대응상황을 수시로 공지하고,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및 후쿠시마 원전 인근 거주 우리 국민 대피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쓰나미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하와이, 동남아 등 태평양 연안 국가 주재 대사관에도 비상근무 및 교민대피를 긴급 지시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전 일본지역 공관은 공관 상호 간 및 신속대응팀과의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고, 교민단체, 지상사, 유학생 단체 및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현황 파악 및 긴급 구호를 제공하였다. 특히 주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성 전문가를 일본 경상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에 파견, 2차례 양국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원전사고 정보 및 관련 동향을 신속히 입수하여 전파하였으며, 원전사고 직후부터 원전사고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공유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직접 지원하도록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피해 교민 구조(23건 38명), 우리 국민 안전지역 이동조치(31회 642명), 사망자 확인 및 지원(3명), 구호품 지원(90건) 등의 활동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영사콜센터에 2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폭주하는 민원에 24시간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고 인근지역인 주센다이 총영사관에 접수된 1,043건의 신원확인 민원 중 1,039건이 확인 해결되었고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제2절 해외진출 국민의 편익 증진

### 1. 영사서비스 강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영사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은 영사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명박 정부는 해외진출한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체류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과 사증면제 협정 또는 간소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상대국의 면허증으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8년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2008년 10월 17일 우리나라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지정되고, 11월 17일부터 우리 국민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은 한·미 양국관계의 외연을 확대하여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을 충족시킨 선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미국 무비자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자 수가 2009년 90만 명에서 2011년 14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 수도 2009년 22만 명에서 2011년 6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2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어 협정체결국이 총 9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사증절차 간소화, 복수시증 발급확대, 사증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지원은 물론 해외체류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러시아, 인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신흥국가와 사증절차 간소화 협정 또는 한시적 근로협정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보다 편리하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가 12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이 다수 체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주와 각각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 되었다. 현재 파라과이, 페루 등 15개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2.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의 주요 실천 방안 및 역점 사업으로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를 추진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통하여 상대국가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청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협정체결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1개 국가와 신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명박정부 이전 4개국에 불과하던 대상국이 15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총 18만 6,517명의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는 기존 협정체결국인 일본과 7,200명으로 제한된 연간 쿼터를 1만 명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였다. 2012년 10월 현재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과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은 2015년까지 20개국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2008.2.25)

선진국에도 할 일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5만여 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WEST 프로그램, 대학생 해외 인턴십, 대학생 해외봉사단도 숫자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산년 국정연설(2012.1.2)



####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 현황

구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체결시기	1995. 3	1996. 1	1999. 4	1999. 4	1998. 10	2009. 4	2009. 12	2010. 9	2010. 10	2010. 11	2010. 11	2011. 12	2012. 4	2012. 6	2012. 7
체류기간 (개월)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24	6
연간쿼터	무제한	4,020	1,800	10,0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200	400	300	500	1,000	300

## 제3절 재외선거제도 실시

### 1. 추진 배경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2008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2. 추진 성과

이명박정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재외국민 선거권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후 정부는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홍보와 공관별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외선거홍보 및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2010년 11월에는 실제 재외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하여 모의 재외선거를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 6월에는 107개국 157개 공관으로 확대하여 공관 및 국내 관계기관의 전반적인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5명을 재외유권자수 5,000명 이상 공관 및 거점공관(28개국 55개 공관)에 파견하여 재외선거관으로 파견하여 선거관리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재외선거 관련 범죄 예방 및 현지 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5개 공관에 검사를 파견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실태조사단 파견을 통한 국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동포 간담회 및 순회영사 활동 계기 등을 활용하여 선거 설명회 및 공명 선거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에 맞춰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58개 재외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10월 14일부터 설치되었고,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등) 등록신청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예상선거인 수 223만여 명의 5.5% 수준인 12만 3,571명이 신고·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어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역사적인 첫 재외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재외유권자 5만 6,456명이 참여하여 등록 유권자 대비 45.69%의 투표율을 보였다.

##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결과

대륙별	예상선거인수	등록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전체	2,233,193	123,571	56,456	45.69
아주	1,086,412	68,712	28,218	41.07
미주	1,032,402	34,749	17,053	49.07
구주	93,429	13,397	7,642	57.04
중동	12,523	4,533	2,305	50.85
아프리카	8,427	2,180	1,238	56.79

제19대 총선 재외선거 결과 나타난 낮은 등록률 및 투표율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가족 대리등록, 순회 등록, 전자우편 등록을 허용하여 재외유권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개정, 2012년 10월 2일부터 발효시켰다. 아울러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공관을 164개로 확대하였다. 2012년 7월 22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91일간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예상선거인수 223만여 명의 10%인 22만 2,389명이 신고·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어 2012년 12월 5~10일간 실시된 재외투표결과 재외유권자 15만 8,235명이 참여하여 등록자 대비 71.2%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결과, 향후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및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제4절 호혜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 1. 추진 배경

2011년 조사결과 전 세계 재외동포는 726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재외동포 사회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의 거주국 내 영향력 신장과 주류사회 진출 증가 등 질적 변화는 재외동포가 모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한인사회의 성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세계의 중심에서 다른 나라를 선도하여가는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 인류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는 그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지 주류 사회에서 우리 동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동포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LA 동포간담회(2008.11.24)

이명박정부는 재외동포 사회 및 차세대 동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모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으며  
 700만 재외동포를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하와이 동포간담회 등에서(2011.11.12)



진일류국가 구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을 재외동  
 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재외동포 현황

대륙별	2007	2009	2011	증감률(%)
전체	7,044,716	6,822,606	7,268,771	6.54
아주	4,040,376	3,710,553	4,063,220	9.50
미주	2,341,163	2,432,634	2,521,470	3.52
구주	640,276	655,843	656,707	0.13
아프리카	8,485	9,577	11,072	15.61
중동	9,440	13,999	16,302	16.45

## 2.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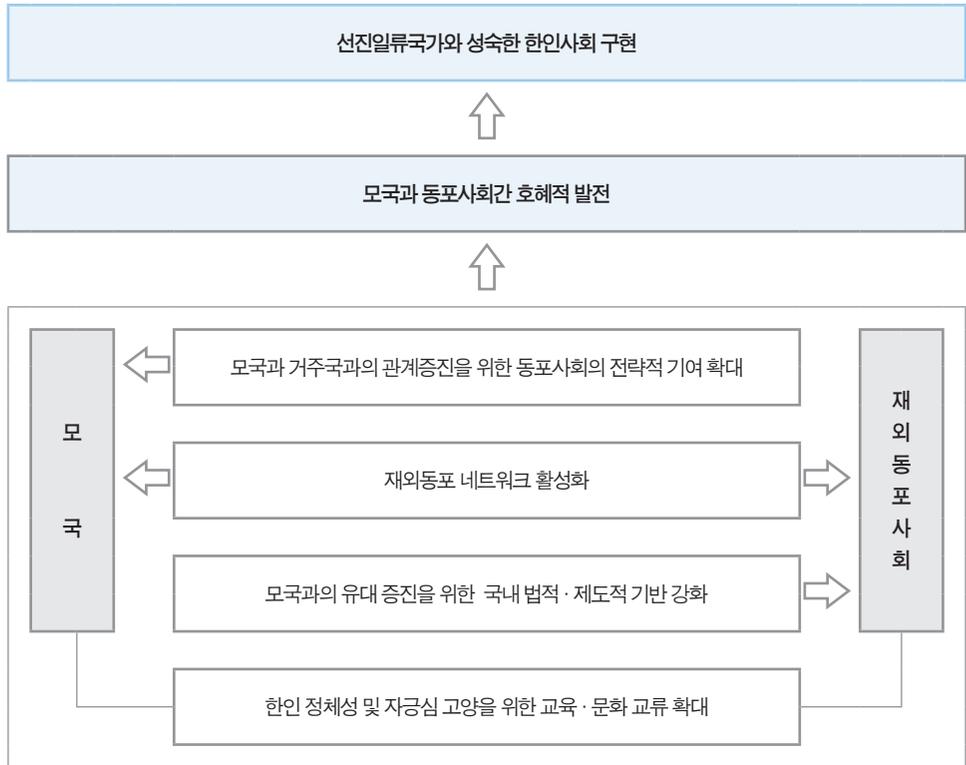
이명박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구체적 추진방향으로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동포사회의 전략적 기여 확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를 설정하였다.

특히 재외동포 사회의 횡적·종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공유·확산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이는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GKN: Global Korean Network) 구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2010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726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동포사회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 대표사이트인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하여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시 교류와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외동포 통합 인물/단체 DB를 구축하여 이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사업은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함양, 모국에 대한 이해·관심 제고,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발굴을 통한 재외동포의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재외동포의 생활세계와 정체성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성을 띄게 되었고,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차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모색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의 관련 콘텐츠를 계속 보완, 운영하여 나감으로써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 국립외교원 출범

### 제1절 배경 및 추진과정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외교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외교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위상제고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교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외교관 충원제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관 충원 및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외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보임 등 전반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우선 2009년 10월 국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및 정부 관계부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이상우 한림대 前 총장)를 발족시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가 원하는 외교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 외무고시는 필기위주의 시험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 년에 수십 차례 개최되는 양자 및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들에게는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능력, 전략적 사고, 협상능력, 의사소통능력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외

무고시 합격생들이 약 4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입부 후 실무를 배워가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기존의 방식 역시 재고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첫째, 업무를 파악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둘째, 외교무대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임용 전 단계에서 발굴하고 선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당시 위원회는 다각도에서 현 외교고시 제도와 외교관 충원 방식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국의 외교아카데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외교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자들 가운데 적정 인원을 외교관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외교관들을 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방안으로, 외교고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한국형 외교인재 선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선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의 도입과 함께 외교관에 대한 기본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하면서 신규 선발제도는 시험방식의 개혁과 교육훈련의 강화라는 두 가지 커다란 틀 내에서 추진되었다. 즉 1단계에서 외교관 선발시험으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2단계로 이들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최종 임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신설될 외교인재 선발·교육기관은 우리 신입 외교관 양성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 재교육, 주재관 교육, 외국 외교관 교육 등 외교 관련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훈련과 전략·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선진 외교역량을 갖추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입교생 인사 관리, 학위수여 문제, 개원 시기, 임용 방법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협의 또한 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정부시안(試案)을 발표하였다. 외교고시를 폐지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국립외교원에서 1년의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무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정부는 2010년 6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으며, 동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예외교관의 선발과 교육을 전담하는 국립외교원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국회에서의 최종 논의를 거쳐 2011년 7월 특별법인 ‘국립외교원법’이 공포되고, 이어 2012년 2월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 발표됨으로써 국립외교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2년 3월 1일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이 확대 개편된 ‘국립외교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 제2절 국립외교원의 역할과 기능

국립외교원 출범 이후에 진행된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선발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선발시험을 통과한 외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는 선교육 후임용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하여 정예 외교관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응시자들은 먼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 후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간의 외교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들만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외무고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선발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9일과 2012년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차 설명회에는 총 6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였다. 한편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안전부는 2012년 5월 학제통합논술 예제풀이(2차 필기)를 실시하였고, 2012년 6월에는 2013년에 실시될 최초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안내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임용에 관련된 법령 정비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국립외교원 출범 후 선발제도를 확정함과 동시에 실제 교육을 담당할 국립외교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선발시험에 합격한 외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직측면에서 2013년 12월에 시작될 새로운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을 확대·개편하여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여 나간 바, 2012년 8월에 국립외교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신규 교수요원 채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 대한 개발 및 연구를 담당하던 기존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부속기관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새로운 전략지역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하여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업무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현재 국민봉사·국익우선·인류공헌·최고지향의 가치를 구현하여 나갈 글로벌 외교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외교안보환경 및 중견국가로서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21세기 한국의 선진

### 새로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정부는 다양한 외교인재 충원을 위하여 선발시험 단계에서 전형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은 일반전형,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 전형으로 나뉜다.

<b>일반전형</b>	•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외교인력
<b>지역전형</b>	•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
<b>전문분야 전형</b>	•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

지역 및 전문분야 전형의 세부분야는 외교수요에 따라 추가, 삭제 등 변경이 가능하며, 전형별 선발비율 역시 외교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외무공무원법 제9조)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 전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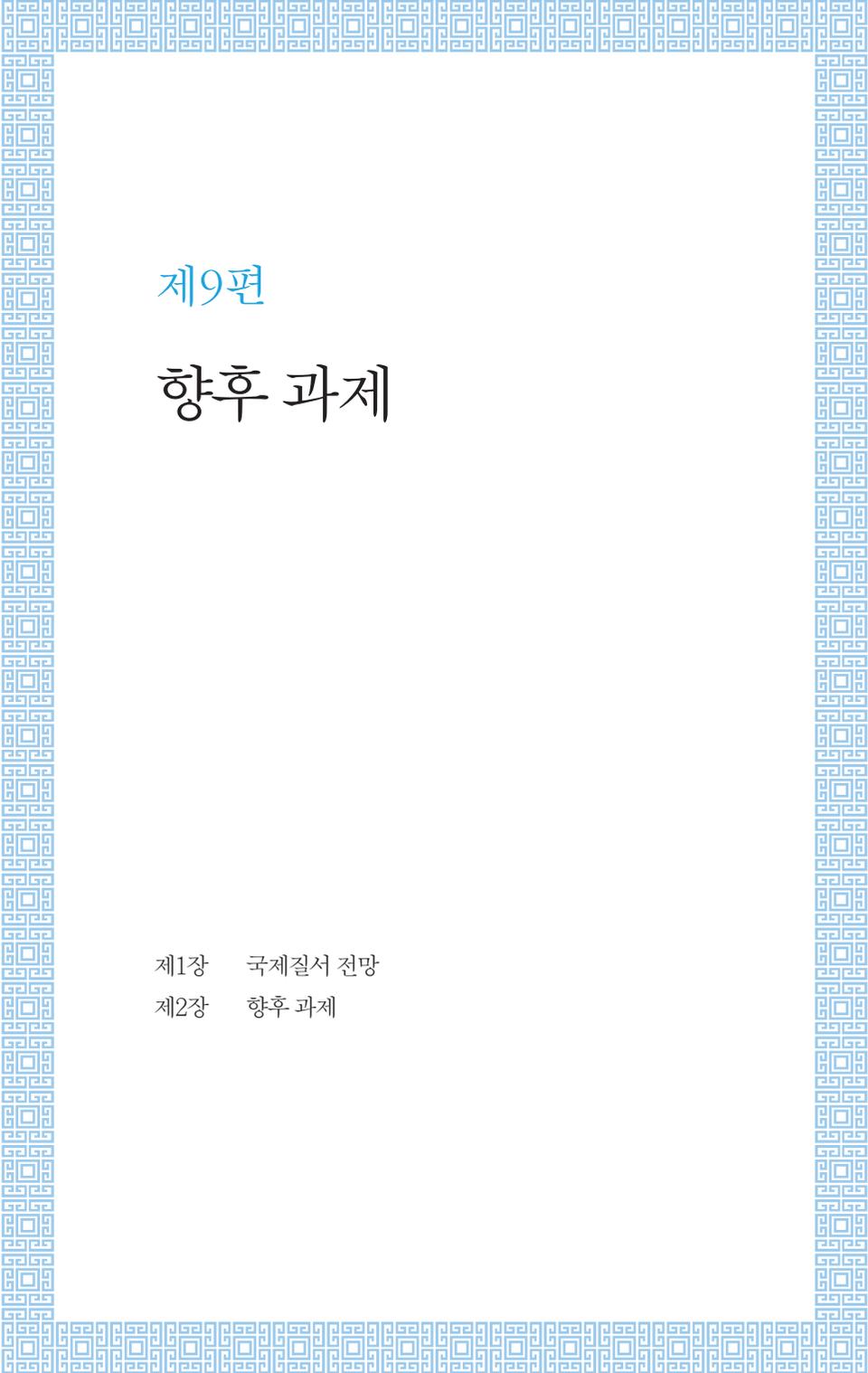
1차에서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와 한국어, 영어 및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점수로 합격여부를 가리게 된다.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이다. 1차 합격자들은 전 전형 공통요건으로 학제통합 논술시험을 보게 된다.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등 3과목을 통합하여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얼마나 다각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정세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된다. 일반전형의 경우, 학제통합 논술시험 외에도 전공평가시험을 보며, 과목별로 약술형 문제가 출제된다. 2차시험 시험성적 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내 합격자가 결정되게 된다.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3차에서는 인성면접과 역량면접을 보고, 지역 및 전문분야 전형에 한하여 전문성 면접을 본다. 3차 합격자들은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입교, 1년간의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외교를 이끌어갈 외교인재에게는 복합적 외교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치(Value), 지식(Knowledge), 역량(Competence)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로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여나가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며, 특히 재외공관과의 화상토론 및 원격강의 시설 등 새로운 개념의 강의시설도 구비하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면 새롭게 출범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교육, 외교관에 대한 직무교육, 공무원, 민간인, 개도국 외교관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외교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선진외교를 수행하는 정예 외교인재 양성기관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립외교원에 소속된 외교안보연구소는 국가의 중장기 외교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씽크탱크(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9편

# 향후 과제

제1장 국제질서 전망

제2장 향후 과제

## 제1장

# 국제질서 전망

향후 국제질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신흥국가들의 부상과 이로 인한 역학관계의 변화, 지역주의의 심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정·변화, 새로운 질서와 규범 모색을 둘러싼 주요 국가 간 경쟁 심화, 비전통안보문제의 증가, 외교 행위자들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을 당시의 상황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경쟁과 견제가 더욱 증가하고 도전이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G2시대가 보다 현실화되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소위 말하는 BRICS의 부상은 물론 여타 신흥국가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주요지역에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국가와 지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인하여 당분간 유럽의 동향은 상대적으로 내부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속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외교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력은 증가하고 그 결과 명실상부한 아·태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던 국

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구조와 균형의 변화는 규범과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구조와 질서는 이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고, 구조적 변화와 조정의 과정에서 국가 간 이익의 충돌은 물론 관점·인식·철학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인식과 철학의 충돌은 상호 전략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하다. 나아가 물리적 충돌을 촉진하고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합집산의 ‘편 가르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합집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지역에서는 지역을 통합하고 주도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역외국가들의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며 상호 견제를 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시장은 물론 에너지와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게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에 진입하게 되고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가시권 내에 들어옴에 따라 그간 석유를 매개체로 하여 결정되어 왔던 지정학적·지경학적 접근과 전략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민족주의의 경향도 심화될 것이다.

환경, 기후변화, 재해 및 재난, 테러(사이버 테러 포함), 조직범죄, 마약, 빈곤과 질병, 인권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안보문제가 국제정세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제사회의 성원들에 대하여 책임공유 및 참여와 기여의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느 수준과 어떠한 성격의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해당 국가가 갖는 영향력과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는 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사회·개인 간 갈등의 증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산재하여 있는 영토·영해문제가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결합하여 국가·사회·개인 간 갈등과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통합 및 사회결집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정보화로 인하여 사회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 및 국가차원의 결집을

위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이용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도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는 물론 미사일 문제도 지속되는 한편 재래식 군사위협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북한도전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의 가능성이다. 김정은 체제에 잠복하여 있는 불안정 요인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 질병, 기근, 재해 및 재난과 같은 북한 내 인간안보문제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외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외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전파의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정책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국내적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도전은 다양성, 복합성, 연동성, 시급성, 확장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성은 도전의 종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합성은 도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영향이 정치, 경제, 군사 등과 같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산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연동성은 어느 한 가지 도전이나 문제가 다른 도전이나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진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와 확산의 속도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은 시간과의 경쟁도 포함할 것이다. 또한 확장성은 그 파급영향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지역·한반도 차원에서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있어서 한반도적 시각을 넘어 지역·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장

# 향후 과제

이명박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외교를 추구하여 왔다. 외교의 지평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하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기여외교를 추구하여 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정부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외교에서 새로운 물고를 트고 지평을 확장하여 왔다. 이제는 그 물고를 더욱 확대하여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향후 외교여건과 도전을 고려하여 이명박정부가 추구하여 왔던 성숙한 세계국가와 창조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외교를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기반 구축을 지향하는 안보·통일 외교
- ② 주변 여건의 안정화 및 예측성 제고를 위한 안정·번영 외교
- ③ 보편적 가치와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층적 협력망 외교
- ④ 국민적 이해와 지지·신뢰 확대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 1. 안보 · 통일외교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는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통일외교를 추구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왔다. 한미동맹은 이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여하는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근본에 충실하도록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북억제를 위한 한미 간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과 세계차원의 안보도전에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전략동맹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신뢰를 더욱 증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야 한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국들의 협조와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다.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해법에 있어서는 이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견은 근본적으로 북한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련국들 사이에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정세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책을 면밀히 가다듬고 주변국들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나가려는 노력이 좀 더 본격적인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주변국들을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미래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평화통일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통일 그 자체는 물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중간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와 이를 출발점으로 한 통일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설득하여 통일의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실천 가능한 통일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전파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통일 그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통일이 가져다 줄 가치적이고 실질적

인 이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더욱 넓히고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여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적 장애를 극복하고 우호적 분위기와 지지를 거양하여 나가야 한다.

## 2. 안정·평화외교

이명박정부는 ‘신아시아 외교’를 주창하고 지역통합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 분야에서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견제와 갈등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해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 지역 안보구도와 관련된 견제, 민족주의적 분위기 확산과 지역정체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의 확산을 차단하고 협력의 분위기를 고양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의 번영과 밝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소다자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구성국가들 간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음에 따라 이슈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소규모 협력 동심원을 만들어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FTA를 포함한 한·중·일 3국 협력을 격상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한·미·일, 한·미·중, 남·북·러, 한·중·러, 한·일·러 등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소다자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과 산업화 등 국가건설과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강화하는 실질 협력을 추구하여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 안보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추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현재까지 안보 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협의는 양자 간 대화나 ARF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논의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포괄안보시대에 있어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안보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지역에서 협력과 포괄안보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간 한반도에 국한되어 왔던 안보협력을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안보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행동중심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의 안정과 평화

를 거양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새로운 여건 하에서 APEC, ASEAN+3, EAS 등과 같은 기존 다자대화 및 협력체를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지역협력과 안정을 위하여 역외국가들의 참여와 기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통합과 협력이 단순히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보다 강력히 수행하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라 ‘열린 지역주의’의 선봉에 서는 것이 요구된다.

### 3. 번영 · 기여외교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세계 각 지역과의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힘써 왔으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이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세계와 기타 지역으로 확장되고 연계성이 증대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협력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여 동반성장의 기틀을 공고히 하여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지금까지 추구하여 왔던 에너지 및 자원외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에너지와 자원이 갖는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많은 국가들과 합의한 사항을 꾸준히 실천하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여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 통합차원의 접근과 아울러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하는 포괄적인 이행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 EU, 페루, 인도 등과 FTA를 합의하고 발효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국가와 지역과의 FTA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층적인 성장과 안정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물론,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추진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ODA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와 참여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많은 국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성공사례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하여 갖는 기대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완성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발협력과 병행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전쟁의 위협에서 유엔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온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여타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이자 국위를 선양하는 중요한 일이다. 동명부대와 단비부대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유지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인권 등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기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 초국가적 안보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발생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초국가적 안보문제는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GGGI를 국제기구화하고 유치한 국가, GCF사무국이 위치한 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방안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국가이미지와 국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한국은 G20, 핵안보정상회의, 개발협력회의, 기후변화회의 등과 같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의장국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일과성적인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기여하는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묶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여 나가야 한다.

#### 4. 민·관 협력 강화

앞서 언급한 과제를 수행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관련 부처 간 그리고 민과 관이 협력하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규범, 초국가적 안보도전, 개발협력 등은 전문성과 포괄적인 시각, 다양한 수단이 요구되므로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결합하고 활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처 간 경쟁이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고와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민과 관이 소통하며 협력하는 정책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나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예를 들어 문화, 스포츠, 기업 등)을 활용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의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을 받아내기 위한 자세와 태도를 배양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해외 여행객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여행지역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사후대처와 처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외동포의 활동과 진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해당국가와 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여야 하며, 횡적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지원도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의 중요한 외교자산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스마트 파워 시대에 있어서 공공외교 역시 중점을 두어 육성하여야 할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주로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담론을 형성하여 나가는 공공외교로 성격을 변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떠한 외교적 역량과 자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간분야가 외교에서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며 국가이익을 구현하는데 함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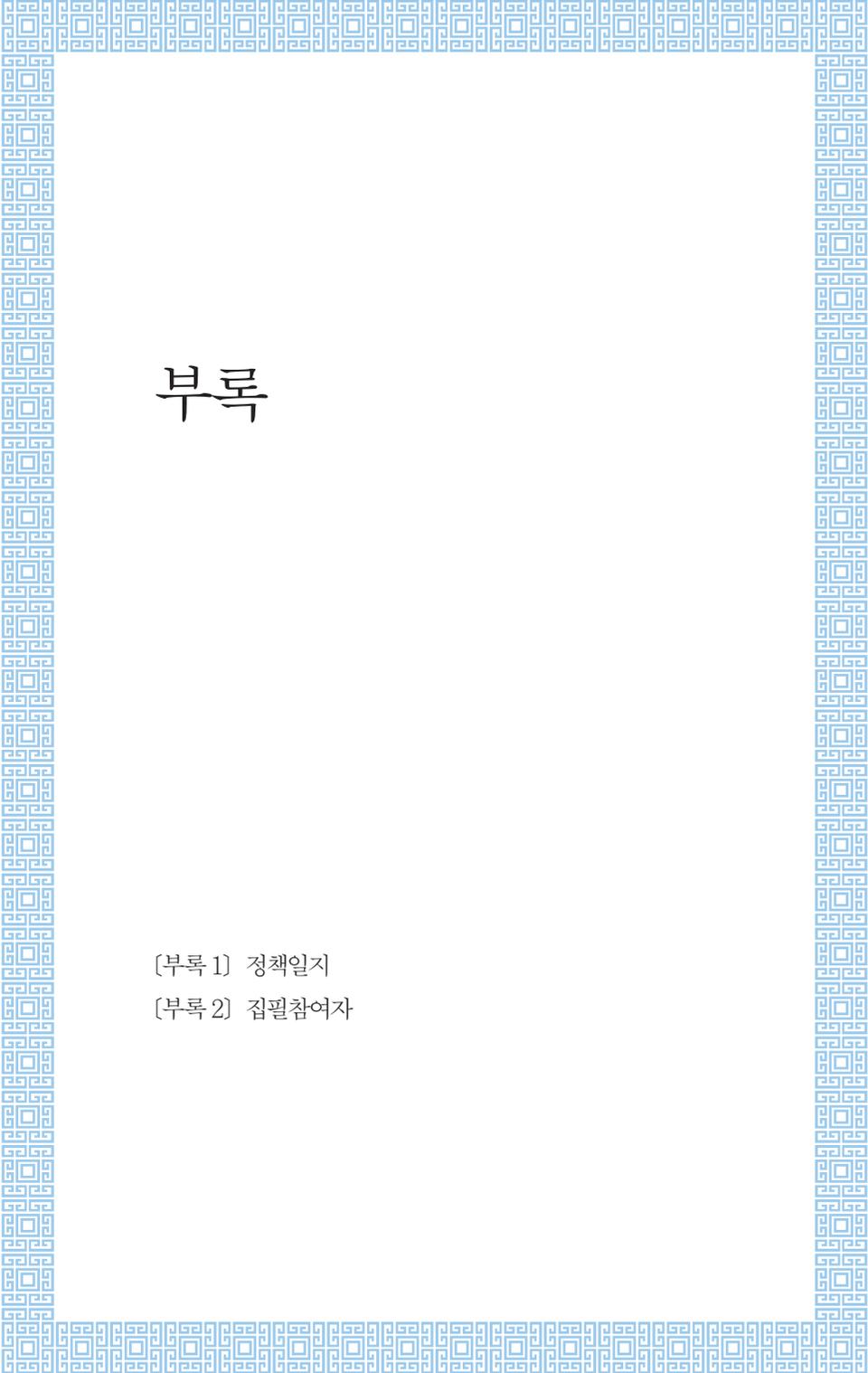
## 5. 맺음말

지난 5년간 이명박정부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우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변화였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입각한 성숙한 세계국가의 서막에 불과하다. 세계와 우리와의 연계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물길을 잘 관리하고 확대하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다.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거두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맺은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협력기반이 더욱 확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 자원 등과 같은 개발과 성장을 위한 협력, 환경,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참여와 기여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꾸준히 우리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선도국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국가, 인류공통의 이익과 가치 구현을 위하여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공유국가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여 나가야 한다.





#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 부록 1

# 정책일지

###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정책 일지]

2008년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4.15~21	미국 방문/일본 방문
5.27~30	중국 국민방문(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7.8~9	G8 확대정상회의(일본 도야코) 참석
8.8~9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9.28~10.1	러시아 공식방문(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0.23~25	제2차 ASEM 정상회의(베이징) 참석
11.14~26	제1차 G20 정상회의(워싱턴) 참석/브라질 공식방문/제16차 APEC 정상회의(리마) 참석 및 페루 국민방문
11.17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개시
12.13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일본 후쿠오카) 참석

2009년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3.2~8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국민방문/'신아시아 외교' 구상 발표
3.31~4.4	제2차 G20 정상회의(런던) 참석
4.10~12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태국 파타야)
5.10~14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민방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6.15~18	미국 방문(한·미 동맹 미래비전' 채택)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6.28	일본 방문
7.7~14	G8 확대정상회의(로마) 참석/폴란드, 스웨덴 공식방문
9.20~26	유엔총회(뉴욕), 제3차 G20정상회의(피츠버그) 참석
10.9~10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중국 베이징) 참석
10.20~25	베트남(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캄보디아 국민방문/ASEAN+3·EAS 정상회의(태국) 참석
11.13~15	제17차 APEC 정상회의(싱가포르) 참석
12.17~19	기후변화 정상회의(덴마크 코펜하겐) 참석
12.26~28	UAE 공식방문(한·UAE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및 한국형 원전 첫 수출)

## 2010년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1.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24~30	인도 국민방문(한·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다보스포럼(스위스) 참석
4.11~14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참석
4.30~5.1	2010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
6.4~5	상그릴라 대학 기초연설/싱가포르 공식 방문
6.26~28	제4차 G20 정상회의(토론토) 참석
6.28~7.3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참석/파나마, 멕시코 방문
9.9~11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모스크바) 참석
10.3~7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벨기에 브뤼셀)/벨기에 공식방문
10.6	한·EU FTA 서명
10.28~30	ASEAN 관련 정상회의(베트남 하노이) 참석(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1.11~12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11.13~14	제18차 APEC 정상회의(일본 요코하마) 참석
12.8~11	제3차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말레이시아 국민방문

## 2011년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3.12~15	UAE 공식방문
5.8~15	덴마크 국민방문(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및 '녹색성장 동맹' 출범)/독일, 프랑스 공식방문
5.21~22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도쿄)
6.20~21	제1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 개최
7.1	한·EU FTA 잠정 발효
7.2~11	남아공 IOC총회 참석/DR콩고, 에티오피아 국민방문
7.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8.1	한·페루 FTA 발효
9.1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서울)
8.21~26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민방문/카자흐스탄 공식방문
9.20~24	유엔총회·원자력 안전 고위급회의의 참석 및 시애틀 방문
10.11~16	미국 국민방문(미 상·하원 합동연설)
11.1~5	제2차 한·러 대화 참석(상트페테르부르크)/깐스 G20 정상회의(깐스) 참석
11.12~14	제19차 APEC 정상회의(미국 호놀룰루) 참석
11.17~22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인도네시아 발리)/필리핀 국민방문
11.29~2.1	부산개발원조총회(HLF-4) 개최
12.17~18	일본 실무방문

## 2012년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1.9~11	중국 국민방문
2.4~11	터키 국민방문(한·터키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중동순방(사우디, 카타르, UAE)
3.1	국립외교원 출범
3.15	한·미 FTA 발효
3.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5.10~11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
5.12~15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베이징) 참석/미얀마 국민방문
6.17~27	제7차 G20 정상회의(멕시코 로스카보스), RIO+20(브라질 리오) 참석/칠레, 콜롬비아, 샌프란시스코 방문
8.7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일자	대통령 해외순방 및 주요 정책
9.7~14	제20차 APEC 정상회의(블라디보스톡) 참석/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방문
10.5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10.18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2014 임기) 진출
10.20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10.2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 총회
11.7~11	제18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태국 공식방문(한·태국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1.18~22	ASEAN+3/EAS 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참석/UAE 방문

---

## 부록 2

# 집필참여자

**대통령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장호진	외교비서관
윤영범	국방비서관	서상범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이희섭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이동렬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김정한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홍영기	대외전략기획관실 행정관
이문배	외교비서관실 행정관		
신옥철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현송	前 국제경제보좌관	김태효	前 대외전략기획관

**부처관계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안호영	외교부 1차관
이창용	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민구	前 합참의장

**외부전문가**

최 강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	------------

